

351.08233

L-0

허상만 농림부장관 연설 대담집

GOVP1200519582

01086260

未來를 여는
새로운 農政





허상만 | Huh Sang Man

학력

1967	전남대학교 농학과 농학사
1979	건국대학교 대학원 농학석사
1986	전남대학교 대학원 농학박사 일본 미야자끼대학 명예박사

주요약력

2003. 7 ~ 2005. 1	농림부장관
2003. 3 ~ 2003. 7	순천대학교 연구교수(1년간)
1998. 10 ~ 2002. 10	순천대학교 3대 총장
2000	몽골농업국립대학 명예교수
1996 ~ 1997	순천대학교 교수회 의장
1992 ~ 1994	순천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장
1989. 2 ~ 1989. 8	순천대학 교무처장
1988 ~ 1989	순천대학 농업과학연구소장
1997	미국 미조리대학 초청교수
1986 ~ 1988	순천대학 학생생활연구소장
1985	일본 쓰쿠바대학 초청교수
1983	일본 구주대학 초청교수
1982 ~ 1998	순천대학교 교수
1972 ~ 1982	순천농림고등전문학교 · 순천농업전문대학 교수

※ 상훈, 주요저서, 학회·사회활동은 뒤표지 속지면 참조

상훈

근정포장(2001)

국민교육유공자표창(1994)

교육공로표창(1987)

주요저서

新稿 水稻作(항문사, 공저)

식물보호명칭사전<한·중·일·미 4개국어>

(중국요령성민족출판사)

쌀의 품질과 맛(전남대출판부, 공역)

학회·사회활동

한국잡초학회 상임이사

호남식물보호연구회 부회장

한국작물학회 상임이사

일본잡초학회 회원/일본작물학회 회원

한국지방정보학회 이사

대한교육연합회(현 한국교총) 중앙이사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중앙위원

순천경실련 공동대표

순천시지역정보센터 설립, 이사

우석김중익선생기념사업회 집행위원장(동상건립)

전국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 부회장

전라남도농업발전협의회 위원

전남해양개발위원회 / 총괄기획분과위원

Green순천21협의회 상임의장

전라남도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

섬진강권물연구소 창립, 이사

푸른전남21 추진협의회 이사

(사)나무를심는사람들 공동대표

우리농업에 대한 대·내외적인 도전과 새로운 발전가능성이 맞물려 있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농업·농촌이 재도약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때일수록 선도농업인 여러분들이 70년대 우리 농촌의 원동력이 된 푸근한 농심, 근면하는 정신과 자조노력을 되살려 국민 정신자원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할 것 입니다.

전국 농업인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농도불이의 국민적 화합을 통해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장을 열어 나간다면 현재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본문-제44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 격려사, 2003.11.12)에서 발췌



농림부장관 취임을 기념하며 대통령과 함께 (2003. 7. 24, 청와대) ◀



Ⓢ 장관 취임식 (2003. 7. 25, 대회의실)



Ⓢ 대중국 수출홍보대사 위촉식 (조수진「중국에어로빅스타」 - 2003. 8. 5, 장관실)



사과작황 시찰 (2003. 8. 27, 거창군 주상면 완대리) Ⓢ



친환경채소 재배농장 (2003. 8. 28, 경북 청화산농장) Ⓢ



④ 2003 러브미 홍보대사 위촉식
 (「음악가」김대환, 「의류디자이너」이영희, 「무용가」정재만 - 2003. 9. 5, 장관실)



④ 농협 직거래장 개장식 (2003. 9. 5, 서울농협지역본부)



소망재활원 방문 (2003. 9. 6, 성남) ↕



칸쿤 농림장관회의의 참석 (2003. 9. 11, 멕시코 칸쿤) ↕



☉ 수해현장 방문 (2003. 9. 17, 울산)



☉ 보성茶 발전간담회 (2003. 9. 27, 보성)



장관배 축구결승 (2003. 10. 14, 과천) ㉠



수해 복구 현장방문 (2003. 10. 23,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



④ 추곡수매 현황점검 (2003. 10. 23, 사천농협RPC)



④ 러브미 마라톤 (2003. 11. 9, 월드컵경기장)



농업인의 날 행사 (2003. 11. 11, 농촌진흥청) Ⓞ



농업인의 날 행사 (2003. 11. 11, 농촌진흥청) Ⓞ



① 벤처농업 박람회 (2003. 11. 27, aT센터)



② WTO 사무총장 수파차이 면담 (2003. 12. 1, 제네바)



WTO 일반이사회 카스티요 의장면담 (2003. 12. 1, 제네바) Ⓢ



FAO(세계식량기구)총회 기조연설 (2003. 12. 3, 로마) Ⓢ



📍 소비자단체와 닭고기 · 오리고기 시식행사 (2003. 12. 22, 방배동 영양센터)



📍 국무총리와 가금인플루엔자 방역 현장점검 (2003. 12. 22, 천안)



2004년도 농업인 신년교례회 (2004. 1. 5, 교육문화회관) ↕



캐나다 농업식품부장관 면담 (2004. 1. 12, 장관실) ↕



📍 뉴질랜드 농림통상교섭장관 면담 (2004. 2. 13, 장관실)



📍 KBS1-R 「생방송 오늘」 닭고기 시식행사 (2004. 2. 17, 영등포역)



강서도매시장 개장식 (2004. 2. 25, 서울 외발산동) Ⓢ



신지식농업인장 수여식 (2004. 3. 5, 농업연수부) Ⓢ



① 산불방지 관계기관 대책회의 (2004. 3. 26, 삼척시청)



② 빌딩숲 보리밭 축제 (2004. 4. 4, 여의도공원)



제14회 우리꽃 박람회 (2004. 4. 10, aT센터) ↕



고양꽃박람회 (2004. 4. 22, 고양) ↕



① 친환경농업 선포식 (2004. 4. 30, aT센터)



② 도농교류센터 개소식 (2004. 5. 6, 농업기반공사)



제주대학교 특강 (2004. 5. 7, 제주) ㉠



제 27차 아·태지역 FAO 총회 및 ACD 농업장관 워크숍 (2004. 5. 23, 북경) ㉡



① 칠레 농업장관 면담 (2004. 5. 25, 장관실)



② 세계 쌀의 해 기념식 (2004. 5. 27, aT센터)



바이오장기신약개발산업단 현판식 (2004. 6. 1, 축산기술 연구소) ↕



1사1촌 자매결연 발대식 (2004. 6. 8, 흥천) ↕



⊕ 쇠고기소비촉진 시식행사 (2004. 6. 18, 양재동 농협유통)



⊕ 농정 현장방문 (2004. 6. 30, 화성 21C영농조합법인)



농산물순수입국 G-10 각료회의 (2004. 7. 3, 제네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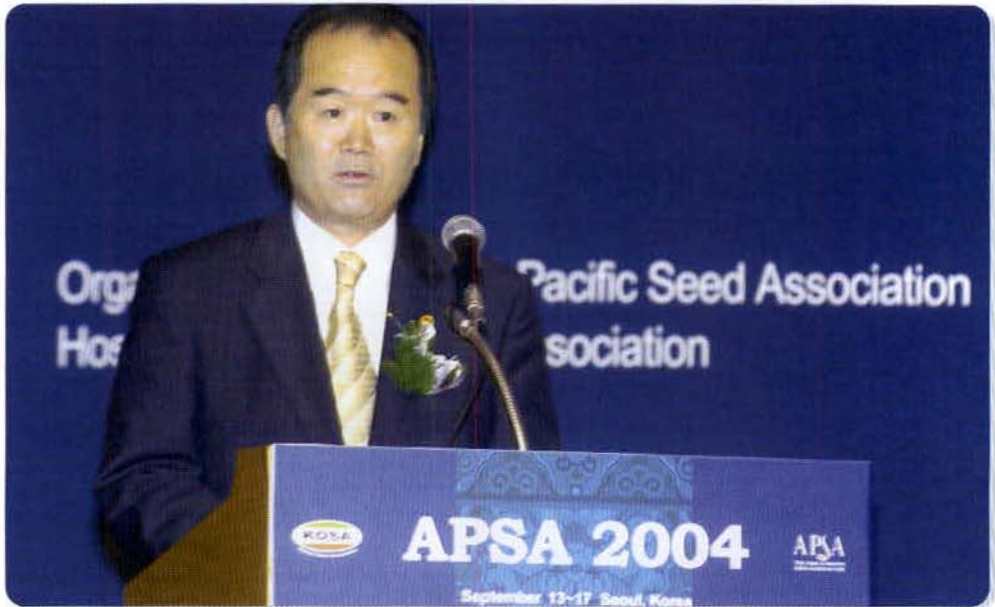
KDI 초청특강 (2004. 7. 15, 메리어트 호텔) Ⓢ



① 제1회 우리술 페스티벌 (2004. 8. 27, 인사동 아트센터)



② 아테네 장애인올림픽 선수단 격려 (2004. 9. 2, 성남)



APSA(아시아·태평양 종자협회) 서울총회 (2004. 9. 14, 잠실 롯데호텔) ↻



농림과학기술대전 (2004. 9. 16, aT센터) ↻



Ⓢ 농어촌사랑 국회장터 (2004. 9. 17, 여의도)



Ⓢ 잠사박물관 개관식 (2004. 10. 15, 청주)



우수축산물 브랜드전 (2004. 10. 21, aT센터) ↕



한국전통식품 Best5 선발대회 (2004. 10. 21, aT센터) ↕



📍 2004년 돼지고기 축제 (2004. 11. 3, 잠실체육관)



📍 서울 국제농업기계 박람회 (2004. 11. 12, 코엑스)



농촌지역개발 자문위원 현장방문 (2004. 11. 14, 이천) Ⓣ



파주 장단콩축제 (2004. 11. 19, 파주 임진각) Ⓣ



📍 전국 시장·군수 초청토론회 (2004. 11. 23, 정부 대전청사)



📍 전통식품 명인(오숙희)지정서 수여식 (2004. 12. 4, 장관실)



국군장병위문 (2004. 12. 8, 해군 인천방어사) ◀



2004 농림축산물 수출20억불 달성 기념식 (2004. 12. 29, aT센터) ◀



① 쌀 관세화유예 관련협상 발표 (2004. 12. 30, 과천청사)



② 장관 이임식 (2005. 1. 4, 대회의실)

차 례

I. 취임·신년·이임사	1
1. 제54대 농림부 장관 취임사 (2003. 7. 25)	3
2. 2004 신년사 (2004. 1. 2)	7
3. 2005 신년사 (2005. 1. 2)	11
4. 농림부 장관 이임사 (2005. 1. 4)	19
II. 연설문	21
1. Further strengthen cooperation to bring about prosperity and development in agriculture	23 (제3차 아세안+3농림장관회의 기초연설문, 2003. 8. 22)
2. 여성농업인이 우리 농촌과 농업의 명실상부한 주역임	27 (제2회 한국여성 농업인 전국대회 격려사, 2003. 8. 27)
3. 쌀은 민족의 문화와 역사가 담겨 있다	31 (쌀 홍보대사 위촉식 인사말씀, 2003. 9. 5)
4. 신뢰받는 도매시장이 되도록	33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 방문 인사말씀, 2003. 9. 5)
5. A balance of interests among the Members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35 (칸쿤 농림장관회의 기초발언, 2003. 9. 11)
6. 축산신문은 축산농가와 축산정책의 반력자이자 비판자	39 (축산신문 창간 18주년 기념축사, 2003. 9. 25)

7. 농업은 생명을 지켜주는 산업, 농촌은 우리 삶의 뿌리	42
(제12회 대산 농촌문화상 시상식 축사, 2003. 10. 15)	
8. 전통과 과학의 집목인 발효를 통해 농업 부가가치 창출	45
(2003 제1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축사, 2003. 10. 25)	
9. 우리 농업인 스스로도 경영자가 되어야	48
(최고농업경영자과정 10주년기념 국제심포지엄 축사, 2003. 11. 7)	
10. 서로 묶이고 어깨 걸어서 더 큰 희망으로	51
(Love米 농촌사랑 마라톤대회 축사, 2003. 11. 9)	
11. 농업·농촌사랑! 우리의 미래를 열어 가는 힘	53
(제8회 농업인의 날 기념 행사 경과보고, 2003. 11. 11)	
12. 농촌이 살아야 농업이 산다	55
(제44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 격려사, 2003. 11. 12)	
13. 국제경쟁력 문제는 우수한 농업기술개발에 달려	59
(제6회 대한민국농업과학기술상 시상식 치사, 2003. 11. 13)	
14. 농업·농촌지역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62
(제23회 농어촌청소년대상 시상식 치사, 2003. 11. 14)	
15. The Right to Food, International Trade and Role of FAO	65
(제32차 FAO 총회 기조연설, 2003. 12. 2)	
16. 시대가 요구하는 이 변화와 혁신에 주역	70
(2004년 시무식 인사말씀, 2004. 1. 2)	
17. 우리 스스로가 개혁과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74
(2004년 농업인 신년인사회 인사말씀, 2004. 1. 5)	
18. 농촌 향수 오래도록 꽃피고 열매 맺는 '여성농촌문학'誌이길	76
(농어촌여성문학 제9집 발간 축사, 2004. 1. 30)	
19. 한국농업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	79
(농업발전전략 세미나 및 거북선농업 출판 기념회축사, 2004. 2. 19)	
20. 미래 농업·농촌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82
(한국농업전문학교 제5회 학위수여식 격려사, 2004. 2. 20)	

21. 우리 수의사들의 역할과 책임 또한 막중해	86
(대한수의사회 2004년 정기총회 축사, 2004. 2. 24)	
22. 선진형 직거래를 강력히 추진	89
(강서농산물도매시장 개장식 격려사, 2004. 2. 25)	
23. 농협이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92
(2004년도 농협정기대의원회 치사, 2004. 2. 26)	
24. 농어업인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방송이길	96
(KBS-1TV 「6시 내고향」 3천회 기념 축사, 2004. 3. 26)	
25. 소비자를 감동시키는 시장이 되어야	98
(광주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식 치사, 2004. 4. 20)	
26. 제2의 녹색혁명을 한다는 각오로	102
(환경농업선포식 인사말씀, 2004. 4. 30)	
27.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해 나가야	105
(지역농업클러스터 협의회 인사말씀, 2004. 5. 4)	
28. 1사 1촌 결연운동은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상생	107
(도·농교류센터 개소 및 1사 1촌 결연식 격려사, 2004. 5. 6)	
29. FAO have to take a more active role	110
(제27차 아시아·태평양 FAO 총회 기조 연설, 2004. 5. 20)	
30. Achievements of agricultural reform in Korea and future plan	115
(ACD 회의 기조연설, 2004. 5. 23)	
31. 쌀은 우리민족과 함께 해온 생명의 원천	119
(세계 쌀의 해 기념사, 2004. 5. 27)	
32. 농산물수출물류센터는 개방화시대 우리 수출농업의 첨병	122
(광양 농산물수출물류센터 개장식 치사, 2004. 5. 29)	
33. 도시와 농촌이 균형 있게 성장	126
(농촌사랑 협력조인식 및 1사1촌 자매결연 발대식 격려사, 2004. 6. 8)	
34. 여성농업인도 의사결정 과정에 전문성 확보와 리더쉽을 증진	129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인사말씀, 2004. 6. 9)	

35. 농업인들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131
(농협통합 제4주년 기념식 치사, 2004. 7. 1.)	
36. 우리농업을 지키고 농촌을 가꾸는 견인차이자 주역	136
(제9회 한국농업경영인대회 축사, 2004. 8. 4)	
37. 농업분야 정론지로 더욱 발전해가기를	140
(농민신문 창간 40주년 축사, 2004. 8. 11)	
39. 공감대 형성의 출발과 최종 결정은 국회를 중심으로	141
(농어촌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 총회 축사, 2004. 8. 16)	
39. 농업분야 남북경협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	143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 발족 인사말씀, 2004. 8. 20)	
40. 전통술은 품위 및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의 하나	146
(제1회 우리 술 페스티벌 기념행사 인사말씀, 2004. 8. 27)	
41. 한 알의 종자가 세계를 바꾼다	148
(2004 아시아·태평양종자협회(APSA) 서울총회 축사, 2004. 9. 14)	
42. 경마산업의 저변 확대와 국민의 건전한 레저스포츠로 정착	151
(한국마사회 창립 제55주년 기념 축사, 2004. 10. 1)	
43. 선도자와 숨은 일꾼을 발굴, 격려하는데도 전력을 다해 주길 기대	154
(제13회 대산농촌문화상 시상식 축사, 2004. 10. 12)	
44. 농업과 농촌에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실 것	158
(나의 농촌문화답사기 시상식 축사, 2004. 10. 14)	
45. 우리 꿀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야 함	162
(제32회 양봉인의 날 기념 축사, 2004. 10. 17)	
46. 축산신문은 우리 축산업에 나침반이 되고	166
(축산신문 19주년축사, 2004. 10. 18)	
47. 농산물가공 및 식품산업이 발전되어야 농업도 성장 가능	169
(한국전통식품 BEST 5 선발대회 수상제품 시상식 축사, 2004. 10. 21)	
48. 소비자의 믿음을 확고히 하는 지름길은 바로 브랜드 육성	172
(2004축산물브랜드경진대회 및 전시회 치사, 2004. 10. 21)	

49. 악성가축전염병의 청정화와 세계 수의축산업계의 발전을	176
(제13차 아시아·태평양수의사회 서울총회 개막식 축하, 2004. 10. 25)	
50. 우리 농업·농촌 재도약에 전국의 농촌지도자가 앞장서 줄 것	179
(제36회 전국농촌지도자대회 치사, 2004. 10. 28)	
51. 미래 우리 농업의 주역이며, 농업·농촌 발전을 책임질 지도자	183
(한국영농학생전진대회 축하, 2004. 10. 29)	
52. 개방화시대를 이겨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186
(제3회 LOVE米 농촌사랑 마라톤 대회 축하, 2004. 10. 30)	
53. 21세기 선진농업·복지농촌을 실현을 위한 다짐의 자리	188
(한국4-H본부 창립 50주년 치사, 2004. 11. 9)	
54. 우수농업기술 개발과 농업인의 사기진작에 큰 힘	192
(제10회 세계농업기술상 시상식 축하, 2004. 11. 9)	
55. 우리 농토를 건전하게 보전하는 것은 농업의 기초	196
(제5회 흙의 날 기념식 치사, 2004. 11. 9)	
56. 향후 10년은 우리 농업의 귀중한 시기가 될 것	198
(제9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 축하, 2004. 11. 11)	
57. 농업이 인류의 생명산업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205
(제24회 농어촌청소년대상 시상식 치사, 2004. 11. 12)	
58. 농업분야 수출, 우리 농업의 가능성과 가야 할 방향	209
(농림축산물 수출 20억불 달성 기념식 축하, 2004. 12. 29)	
Ⅲ. 기고·담화문	213
1. 농업인과 정부가 손을 잡고 슬기롭게 극복	215
(쌀 관세화 관련 협상 농민단체협조 서한문, 2004. 9. 23)	
2. 안심하고 쌀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쌀소득보전방안을 마련	217
(쌀 관세화 관련 협상 대국민 담화문, 2004. 11. 15)	

3. 1社1村운동 농촌사랑-나의 농촌사랑記	220
(2004. 12. 29, 문화일보 기고)	
4. 관세화 유예를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연장	222
(쌀 관세화 유예 관련 협상 농림부장관 발표문 2004. 12. 30)	
IV. 신문 인터뷰	227
1. 농업 중시하지 않고 잘된 나라 없다	229
(월간정경뉴스, 2003. 10. 30)	
2. 농업도 결국 수출이 살 길이다	238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 2003. 11. 15)	
3. 농업·농촌 종합대책 개혁안 관련 네티즌 토론	248
(중앙일보 조인스 닷컴, 2004. 3. 24)	
4. Minister vows to revamp farms	280
(코리아헤럴드, 2004. 4. 6)	
5. 농촌을 살리기 위해 성공 가능성 있는 농민 지원	287
(경향신문, 2004. 5. 13)	
6. 식량 안보위해 쌀자급률 90%이상 유지	293
(조선일보, 2004. 5. 14)	
7. Wrapup 1-Interview-Market forces priority for S.Korean farming	296
(로이터통신, 2004. 6. 10)	
8. 개방피해 최소화 만전·농협개혁 제대로 할 것	306
(농업전문지 합동인터뷰, 2004. 8. 9)	
9. 쌀소득직불제 도입으로 농가소득안정	316
(광주일보, 2004. 8. 26)	
10. 관세화유예 연장 목표...농협개혁 주목	321
(코리아플러스·국정브리핑, 2004. 9. 10)	

11. 농지제도 바뀌 도시자본 농촌 유치	329
(중앙일보, 2004. 11. 1)	
12. 농민 농지구입 금리 1.5% 검토, 소득보전 연계 개혁	333
(한겨레, 2004. 11. 13)	
13. 농업경쟁력 위해 10년정도 더 필요	340
(서울경제신문, 2004. 11. 29)	
14. 전업농 육성 못하면 농촌 붕괴한다	346
(시사저널, 2004. 12. 30)	

V. TV · 라디오 인터뷰

1. 4대 농업지원특별법 만들어 FTA 대비 가격지정정책에서 시장지향 농업으로	355
(K-TV, 국정브리핑, 2003. 10. 30)	
2. 한·칠레 FTA 체결관련 농업농촌종합대책 마련	372
(KBS-1R, 「강지원입니다」, 2003. 11. 12)	
3. 개방화시대 농촌의 생존전략	379
(KBS-1R, 「시사플러스」, 2004. 2. 5)	
4. 한·칠레 FTA 비준 관련 농업종합대책 마련	388
(SBS-R, 「정진홍의 전망대」, 2004. 2. 6)	
5. 개방시대, 우리 농업 미래는	396
(KBS-1TV, 「일요진단」, 2004. 2. 8)	
6. 한·칠레 FTA 비준에 따른 지원 대책 추진	420
(KBS-1R, 「강지원입니다」, 2004. 2. 20)	
7. 농협개혁은 자율적인 구조조정으로	427
(KBS-1R, 「백지연입니다」, 2004. 3. 9)	
8. 쌀 관세화 재협상 관련 유리한 조건 최대한 확보	435
(PBC-R, 「열린세상 오늘」, 2004. 4. 26)	

9. 쌀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세화 유예 협상	442
(KBS-2R, 「열린아침 정용석입니다」, 2004. 6. 2)	
10. 쌀관세화 유예와 쌀 직불제 도입키로	447
(KBS-1R,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 2004. 10. 7)	
11. 농업인의 날 의의 및 쌀농가소득방안	458
(KBS-1R, 「박에스더입니다」, 2004. 11. 11)	
12 쌀소득보전대책 및 새만금 사업 등	467
(KBS-1R, 「안녕하세요 손관수입니다」, 2004. 12. 1)	
VI. 농정철학	475
□ 신뢰농정·참여농정·현장농정 구현	477
□ 농업·농촌 종합대책 추진	480
□ 농촌마을개발 및 농촌관광 활성화	483
□ 친환경농업 및 농식품안전	486
□ 농촌인력육성	488
□ 협동조합 개혁	490
□ 농지제도 개선	492
□ 농업클러스터	494
□ DDA 농업협상 및 FTA 추진	496
VII. 농정일지	499
☐ 2003년	501
☐ 2004년	516

▣ 2005년	539
---------------	-----

<참고 : 농림부장관 주요 자문위원회 >	541
------------------------------	-----

1. 농정개혁자문단	543
------------------	-----

2. 농촌지역개발 자문위원회	544
-----------------------	-----

3. 지역개발실무자문위원회	545
----------------------	-----

4. 우슬모 공동위원장	546
--------------------	-----

5.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	547
----------------------	-----

6. 중앙농정심의회	550
------------------	-----

7. 양곡유통위원회	551
------------------	-----

8. 여성정책자문회의	552
-------------------	-----

9. 농민단체	553
---------------	-----

10. 전국농과대학 주소	555
---------------------	-----

I. 취임 · 신년 · 이임사

여 백

제54대 농림부 장관 취임사

(2003. 7. 25)

전국의 농업인과 농림공직자 여러분!

우리 농업과 농촌이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시기에 농림부 장관의 중책을 맡게 되어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단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 여름 피약벌 아래서 구슬땀을 흘리며 농사일에 여념이 없는 농업인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평소에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오면서 항상 농업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살아 왔습니다.

우리의 농업이 이 정도로 성장할 수 있고 오늘의 농촌사회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농업인 여러분들의 노력 때문이었다고 생각하며, 이제 농정책임자로서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저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농림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업이 선진농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노고 덕택으로 생각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5개월 동안 노심초사하시면서 산적한 농정현안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신 김영진(金泳鎭) 전 장관님께도 이 자리를 통해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우리 농업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참여정부는 12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미래를 열어 가는 농어촌”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장관인 저를 포함한 모든 농림공직자들의 시대적 소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산업으로서의 농업은 시장을 중심으로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농촌개발과 복지수준 향상에 보다 중점을 두어 농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촌형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교육·의료·주거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정목표에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참여정부의 중점시책중 하나인 “중앙과 지방의 균형발전” 개념에는 반드시 “농촌과 도시를 연계하는 균형발전”개념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농정도 이에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농업은 21세기형 농업으로 가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차 산업에 지식과 정보와 기술이 접목된 2차, 3차 산업으로 연결되는 고부가가치 농업을 실현해야 하며,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농촌사회 유지를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현안이 되어 있는 새만금사업, 도하개발아젠다(DDA),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관계전문가, 이 자리에 계시는 농림공직자들은 물론 농민단체 및 시민단체 등 모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의 이익과 농업인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업인들께서도 이제 도시 소비자의 식탁위에 환경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해야 하는 시대적 책임이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의 농림공직자 여러분!

이러한 새로운 농정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충분

한 검토와 정확한 판단에 의한 정책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 공직자 여러분의 고견과 제안을 바탕으로 농정을 펼쳐 나갈 생각입니다. 정책을 펴나가는 과정에서 또 책임자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원칙(原則)과 정도(正道)'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원칙을 지키고 정도를 지켜 나가면 좀 늦더라도 문제가 풀릴 것이며, 설령 풀리기 어렵다 할지라도 관계 당사자의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평소에 생각 해 왔습니다.

직장에서는 '공정성'을 통해서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있는 분들이, 또 열심히 일한 분들이 앞서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농림가족들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 농정과 농림부 입장에 대한 이해를 항상 공유하며, 농업인을 포함한 국민들을 자신 있게 설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갖추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전국의 농업인과 농림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농업은 의미 있는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FTA, DDA 등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도 충분한 준비와 대화 그리고 필요한 경우 대타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체 경제가 성장해야 농업도 발전하고, 농업이 활성화되어야 경제성장도 건설해진다는 경험적 사실을 바탕으로 상생(相生)의 원칙, 윈윈(Win-Win)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서구 선진국이 50~100년 정도 긴 시간을 갖고 추진한 농업 구조조정과 도·농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하루아침에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현시점에서 우리는 DDA 이후 우리 농업·농촌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 농촌사회를 안정시키고, 도·농 균형발전의 기초를 굳건히 다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우며 이 자리에 계신 농림공직자 여러분들은 물론 농민단체·소비자단체들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길이 열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4 신년사

(2004. 1. 2)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

농림관련 단체 임직원과 농림공직자 여러분 !

희망과 도약의 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하시는 일마다 큰 결실을 이루시고, 여러분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는 잦은 비와 태풍 매미 피해, 연말에 발생한 가금 인플루엔자 등으로 어려운 한해였습니다.

정부는 올해를 『새로운 농정의 원년』으로 삼아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사회 유지를 위해

첫째, 개방화 시대에 우리 농업이 선진국들과 경쟁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규모화된 전업농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의 우리 농업을 선도할 6ha수준의 쌀 전업농 7만호를 육성하고 이들이 우리 쌀 산업의 근간을 담당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산업은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수출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한편, 축산업은 가축질병의 사전예방, 품질고급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둘째,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식탁에 고품질·안전 농산물을 공급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정부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와 생산이력제를 도

입하는 등 「농장에서 식탁까지」 투명하고 안전한 생산·유통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셋째, 규모화가 어려운 고령·영세농에 대해서는 생활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은퇴를 희망할 경우, 안심하고 재촌탈농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경영이양직불제를 매월 연금지급방식으로 대폭 개선하여 은퇴 고령농가들의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농촌에 살더라도 교육과 의료, 기초생활 걱정을 해결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경쟁력의 원천은 사람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농업과 농촌을 이끌어갈 농촌지도자와 유통 전문인력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지방대학·기업·연구기관이 상호 협력해서 지역특화발전을 주도하는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농촌을 자연환경과 농촌다움,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농촌의 고유한 전통문화와 사라져 가는 공동체적 기풍을 되살려 언제든지 농촌에 가면 전통의 숨소리를 느끼고 도시에서 지친 심신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 그리고 국민여러분 !

정부는 이러한 농업의 비전과 의지를 바탕으로 농업인과 농민단체는 물론 소비자, 지자체,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앞으로 10년간 우리 농업·농촌의 청사진이 될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종합대책을 뒷받침할 119조원의 중장기 투융자 계획도 만들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모두 국고지원액이기 때문에 지난 11년간에 비해 지원규모가 2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그 중에서 농업·농촌 종합대책 시행 첫해인 올해는 농정변화를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직접지불과 농가 부채경감, 복지분야에 새로운 시책

들을 중점 발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친환경축산직불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경관보전 직불제 등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포도·단감·복숭아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도 전국으로 확대해서 시행하고 일시적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경영회생지원제도를 상설화합니다.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영유아양육비도 신설했습니다. 농촌복지와 지역개발문제를 체계적으로 추진 하기 위해 『농림어업인 삶의 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특별법』을 만들어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를 신설합니다.

또한, 부채경감특별법을 개정하여 중장기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5년 거치 15년으로 연장하고 금리도 4%에서 1.5%로 낮추겠습니다.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과 농업경영개선 자금의 금리도 6.5%에서 3%로 내리고 신규 정책자금의 금리도 3%로 인하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잇따른 가축질병 발생으로 육류소비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불안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모두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감염된 고기는 원천적으로 시중에 유통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가금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실의에 빠진 농업인들이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과학적인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전국의 농업인, 그리고 국민여러분 !
변화에 끌려가기보다는 먼저 준비하고 혁신하는 자세로 시대를 앞서가야 합니다.

지역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농업인,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함께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UN이 정한 「세계 쌀의 해」를 맞아 쌀 문화 종주국으로서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갑신년 새해는 과거 어느 해보다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인 여러분과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은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정부는 농업인 여러분의 자발적인 노력을 최대한 뒷받침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농업인과 소비자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농정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입니다.

농업과 농촌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농촌을 만들어 갑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 신년사

(2005. 1. 2)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

농림관련 단체 임직원과 농림공직자 여러분 !

희망의 2005년 을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온 누리에 서기가 가득합니다. 새해에도 하시는 일마다 큰 결실을 이루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되돌아보면 지난 한해도 농업분야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년에 비해 태풍 피해는 거의 없었지만,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오리와 닭 등의 소비가 감소하였고, 일부 품목의 가격하락으로 인한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농업인 여러분 모두가 함께 슬기와 의지를 발휘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걱정을 했던 한-칠레 FTA도 슬기롭게 대처하여 우려했던 만큼의 피해는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한해 최대의 현안이었던 쌀 관세화 관련 협상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부의 노력이 하나가 된 결과, 향후 10년간 관세화유예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부로서도 지난 한해는 우리 농업·농촌의 비전을 새롭게 하고, 틀을 짜는 한편 당면한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해 2월 향후 10년간 우리 농업과 농촌 발전의 길잡이가 될 『농업·농촌종합대책』과 이를 뒷받침할 119조원 투융자계획을 확정·발표했습니

다. 지금까지 농업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세부계획을 완성하였고, 농업 현장에서 차질이 없는 대책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금년 투융자사업비도 연차별 계획에 포함된 9조8천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쌀 협상 이후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쌀 농가 소득보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3년간 가마당 17만원의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그 해 쌀값과의 차이의 80%를 직접지불로 지급합니다. ha당 60만원은 가격과 관계없이 고정형 직불금으로 지급하고, 그리고도 모자라는 부분은 변동형 직불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가격이 전년대비 5% 하락할 경우 98.2%를 보전 받게 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이 지난해 정기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농협개혁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었습니다.

유통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법인의 틀이 마련되었고, 중앙회와 일선조합이 더욱 전문화되고 규모화 되어 농업인을 위한 경제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업인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문제도 앞으로 1년 내에 농협이 자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도 지난해 사상 최초로 20억불을 달성함으로써 앞으로 DDA,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우리의 전통식품인 김치가 한류열풍을 타고 처음으로 1억불을 수출하여 우리 식문화가 세계로 확산되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지난해 제정된 『농어촌 삶의 질 향상에 관한 특별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금년 초에 이를 확정된 후 범정부적으로 본격적인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

금년 한해도 우리 농업을 둘러싸고 많은 도전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DDA협상의 기본원칙을 도출하기 위한 WTO 홍콩 각료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FTA도 계속 확대될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아직 영농의 규모화·전문화는 미흡하고, 농가의 고령화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도 점점 고급화되고 다양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이 아니면 시장에서 외면당하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업의 성장가능성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 처음 우리나라가 경제개발을 시작하던 시절에 우리에게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국민과 정부의 『하면된다』는 의지, 양질의 노동력만이 우리의 자산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세계시장에 뛰어들어 우리 물건을 판 결과, 그 후 4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농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농업인들은 냉엄한 시장질서 속에서 어떻게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제값 받고 팔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춘 성장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의 성패는 농업인의 지식경영 능력, 기술의 활용능력과 정보의 이용능력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새해에는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우리 농업이 21세기에 국민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농촌은 환경을 잘 보전하여 국민의 삶의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농업과 BT산업을 접목하여 산업으로서 농업의 미래를 대비하고, 농업의 전문인력 양성과 농촌의 교육여건 개선도 준비하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작년에 마무리된 쌀 관세화 협상의 후속조치를 추진하여 쌀 산업의 체질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쌀 협상이 앞으로 10년간 관세화 유예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만, 저율관세 물량이 증량되고 밥쌀용 공급도 확대됩니다. 국내 시장에서 외국 쌀과의 경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앞으로 쌀 농가와 정부는 이번 유예기간 10년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소득을 안정화시키면서, 고품질 쌀 생산과 구조조정을 통해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쌀소득보전기금법』을 개정하여 이미 마련한 소득보전방안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목표가격도 3년 단위로 고정하여 소득의 안정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쌀 소득보전대책을 전제로 현행 추곡수매제를 시가매입·시가방출 방식의 공공비축제로 개편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양곡관리법』도 개정하겠습니다.

소비자가 요구하는 고품질 쌀 생산을 촉구하기 위해 미곡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품종 통일과 브랜드화를 강력히 추진하여 『얼굴 있는 쌀』이 생산되고 높은 값을 받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경영평가를 기초로 지원금리를 차등화하여 경영이 우수한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서는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농업·농촌종합대책에서 확정된 바와 같이 6ha 규모의 전업농 7만호가 쌀 생산의 절반수준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지법』을 개정하여 농지의 유동화를 촉진하기 위한 농지은행제도를 새로이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향후 농업의 성장과 혁신을 담당할 영농주체의 육성이야말로 금년

농업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앞으로 10년 내에 쌀을 포함한 전업농 20만호를 키워 생산의 절반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5만 명 정도는 금년에 새로이 도입되는 농업인턴제, 대학생 창업연수, 창업농 후견인제 등을 통해 육성될 것입니다.

창업농이 손쉽게 전문경영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사업의 보조율을 50%에서 70%로 늘렸습니다.

또한, 중소농에 대해서도 친환경농 등 특색 있는 상품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농촌사회유지를 위해 전업농의 앞선 기술과 보유농기계를 통해 중소농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급변하고 있는 새로운 유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마케팅 능력을 높이는 것이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는 지름길입니다.

산지유통의 주체인 일선농협 등이 공동 마케팅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미 축산분야는 전업화·브랜드화가 많이 진행된 만큼, 다른 품목도 브랜드화와 마케팅 능력강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농협법이 개정되어 영세한 일선농협이 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여 경제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동사업법인이 산지유통센터(APC)를 중심으로 산지유통 및 물류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발적인 품목조직이 자조금을 조성하여 자율적인 수급조절과 판촉·홍보활동을 능동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작년부터 불고 있는 한류열풍을 농식품 수출과 연결하여 금년에 22억불 수출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동대표 브랜드인 휘모리(Whimori)를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해외마케팅 활동도 전개하겠습니다.

넷째, 『농장에서 식탁까지』 원칙에 의거하여 고품질·안전농산물을 공급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국토환경 보전을 위해 자연순환형 친환경농

업에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생산이력추적제 등 소비자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장치를 확대·시행하겠습니다. 2013년까지 화학비료·농약사용량을 40% 줄이고, 친환경인증농산물비중을 현재의 2%수준에서 10%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을 통해 수계단위로 광역화된 지역에 대한 친환경농업사업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분야는 구제역과 같은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할 경우 전체 기반마저 위태롭게 되므로 방역체계를 개선하고 조직과 인력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인력으로 232명이 확충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농가의 소득안정과 경영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시행중인 조건불리·경관보전·친환경축산직불제의 본사업을 2006년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직접지불제를 체계화·확충하여 현재 농가소득의 2% 수준인 직불제 비중을 2013년까지 10%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도 거대재해에 대비하여 금년부터 국가재보험제도가 도입되고, 이를 위한 『농작물재해보험기금』이 설치됩니다.

여섯째,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촌이 온 국민의 휴식공간이자 삶의 터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습니다.

금년 1월이면 그동안 준비해 왔던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범 정부차원의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10년간 연장된 농어촌특별세가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집중 투입될 것입니다.

금년부터 건강보험료의 40%를 정부가 지원하며, 고교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도 전 농가로 확대되고, 영유아 자녀에 대한 양육비도 2ha미만 농가까

지 지원됩니다.

농어업인 자녀로서 농업계열 대학에 진학중인 학생에 대한 학자금 전액 지원도 계속됩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 등 농촌경관을 가꾸어 도시와 공존하는 삶의 터전이 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사업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미래 우리 농촌마을의 모습을 그리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앞으로 10년 후에는 우리 농촌마을의 1/10에 해당하는 1,000개 권역을 새롭게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일곱째, 지방화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년에 새롭게 120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우리 농정의 틀을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정부 중심으로 바꾸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지자체 · 지역의 농업인 · 지방대학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농업의 발전방안을 찾고 계획하면, 정부는 이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결과는 지방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농업의 혁신은 지역기반위에서 출발해야 하고, 결과를 얻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년에도 계속 진행될 DDA와 FTA협상에서 우리 농업 · 농촌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

현재 농업 · 농촌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년 한해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힘과 슬기를 모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변화에 끌려가기 보다는 먼저 준비하고 혁신하는 자세로 앞서가야 합니다. 정부는 농업인 여러분의 자발적인 노력을 최대한 뒷받침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항상 열린 마음으로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농업인 여러분께서도, 국민 여러분께서도 다함께 농업 · 농촌의 미래에 대

한 꿈을 가지고 힘을 모아 나갑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농림부 장관 이임사

(2005. 1. 4)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지난 1년 5개월 동안 저와 같은 길을 걸어왔던 농림공직자 여러분!

힘이 돼 주었던 농업기관단체 대표자 여러분! 그 동안 여러분께 많은 신세를 지고, 무거운 짐을 안겨 놓은 채 물러갑니다.

오늘의 한국농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직자 역할일 것입니다. 저는 공직자 여러분을 믿고 있습니다.

농림공직자 여러분께서 평소 농업에 대한 깊은 애정과 소신과 철학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 농업을 차질 없이 이끌어 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먹는다면, 농업인과 손을 잡고 우리 농업의 장래를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지난 1년 5개월 동안의 농정수행과정에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에게 신세를 졌습니다.

개별적으로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미안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공직자의 길이 뭐겠습니까?

국가의 부름 속에서 맡은 일에 양심과 원칙으로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공직에 계시는 동안 큰 족적을 남기시는 공직자가 돼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시무식에서 농림공직자 여러분에게 드렸던 2005년의 농정의 화두,

책임농정·통합의 농정이 허허로운 소리가 됐습니다만, 너무 흘려듣지 않았으면 합니다.

10년 후 여러분이 심은 나무가 큰 숲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Ⅱ. 연설문

여 백

**Further strengthen cooperation to bring about prosperity and
development in agriculture**

(제3차 아세안+3농림장관회의 기조연설문, 2003. 8. 22)

Mr. Chairman,
Delegates of ASEAN+3 members,
Ladies and Gentlemen,

On behalf of the Republic of Korea, I would like to first extend my appreciation to Malay Minister Effendi Norwawi of Agriculture and the ASEAN Secretariat for hosting this meeting. I would also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the people of Malaysia for their warm welcome they extended to Korean delegation.

Today, almost 800 million people are suffering from chronic starvation and poverty. But the East Asian region, despite unfavorable circumstances in agricultural sector, such as small-scale farming and climates, has faired quite well compared to other regions in terms of alleviating starvation. All of this is a result of the tireless devotion of the farming industry, including farmers, government, and academia.

In this regard, I believe that although launched only three years ago in 2001, the AMAF+3 Meeting is very significant for the agricultural development of the East Asian region.

Changes in the agricultural environment due to globalization, industrialization, urbanization, and climate change entail new possibilities as well as important challenges, such as the question of agricultural sustainability in our present world.

We must take note here that the international agricultural development is valid only when it respects the diverse agricultural systems of each country.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among all the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East Asia is important for the preservation and coexistence of worlds agricultural diversity. In this respect, I am very satisfied with the activities we have pursued related to the East Asian Food Security and Sustainable Agricultural Development at the 1st and 2nd round of AMAF+3.

I hope the ASEAN+3 members' cooperation in the agriculture sector will not only help solve the inter-regional problems but also lead to further cooperation at vari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negotiations.

Chairman,

Delegates,

Rice is a staple food for more than half of the population around the world, and the ASEAN+3 is a major rice-producing region growing more than 60 percent of the world's rice.

East Asian rice cultivation has contributed to sustainable rural development by facilitating 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such as the

conservation of water resources and prevention of floods, protection of ecosystems and maintenance of rural scenery, as well as preservation of culture and cultural relics.

I believe it is very timely that the UN General Assembly has declared 2004 as the "International Year of Rice". With the advent of the International Year of Rice, Korea is preparing various international and national events including "International Seminars related to Rice". We ask for all the member ministers' cooperation to encourage active participation by the ASEAN+3 members.

So far, Korea has maintained cooperative relations in many areas with the East Asian countries. In agriculture, Korea is planning to invite trainees and dispatch experts to exchange experiences and information with ASEAN members. We hope to strengthen the agricultural cooperation between the East Asian region and Korea.

This year, Korea is on schedule with the two trainee invitation projects, one already completed and the other beginning, both of which were proposed at the 2nd round of AMAF+3 meeting. Korea has also proposed to hold a "Work Shop on Agricultural Finance" during the current round of meetings. I hope such proposals will contribute to agricultural development in this region.

Lastly, I would like to once again thank Dr. Effendi Norwawi, ASEAN Secretariat, and all other relevant officials for the efforts they have put

in to successfully hold this meeting, and I hope this will be an opportunity to further strengthen cooperation among members to bring about prosperity and development in agriculture and rural villages in the ASEAN+3 countries.

여성농업인이 우리 농촌과 농업의 명실상부한 주역임

(제2회 한국여성 농업인 전국대회 격려사, 2003. 8. 27)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김인호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 주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장원석 농특위 위원장님,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님, 김혁규 경남지사님, 김종규 창녕 군수님, 송남수 전국농민연대 대표님, 서정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농림부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여성농업인 여러분들을 모시고 격려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한 길을 걸어온 사람으로서 여성농업인 여러분들이 우리 농촌과 농업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곁에서 잘 지켜보아 왔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우리 농촌과 농업을 지키고 가꾸는 원천임을 줄곧 확인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성농업인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여성농업인 여러분!

여러분의 축제인 이 대회의 주제는 ‘깨어 있는 여성농업인, 실천하는 여성농업인’입니다.

대회의 주제가 말해 주듯, 오늘의 대회는 여성농업인이 우리 농촌과 농업

의 명실상부한 주역임을 당당히 선언하고, 그에 걸맞은 전문 농업인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혜를 결집하는 여성농업인들의 한마당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될 ‘여성농업인은 바란다’, ‘복지농촌건설 탐쌍기 대회’, ‘한여농 선발대회’ 등 화합과 단결 그리고 아이디어를 모으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속에 이러한 여러분의 의지가 생생하게 녹아 있음을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그 동안 농업현장에서 만난 여성농업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교육 잘 시킬 수 있는 농촌에서, 육아 걱정 없이 마음 놓고 농사에 전념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성농업인 여러분들의 이러한 고민이 우리 농촌과 농업의 중심으로서, 다시 말해 전문 농업경영인의 길을 힘차게 걸어 나가기 위해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 동안 여성농업인 여러분의 고충을 해소하고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여성농업인의 사기진작과 전문 인력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이 그것입니다.

이에 따라 농정사상 최초로 출산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가도우미제도를 도입하였고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과 영유아 보육 및 도·농교류사업 등을 담당하는 여성농업인센터 설치사업 등을 줄곧 펼쳐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의 권익신장과 영농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집행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친애하는 여성농업인 여러분!

지금 우리 농업과 농촌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힘겨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는 9월 멕시코 칸쿤에서는 10여 년 전 우리에게 큰 시련을 안겨 주었던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결과를 훨씬 넘어서는 DDA 농업협상이 막바지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쌀 관세화 유예에 대한 재협상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국내적으로는 농가인구가 급속히 줄고 농가 노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과중한 부채부담으로 많은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열악한 농촌의 교육·복지여건으로 젊은이들이 농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농촌이 활력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농업여건이 어려운 이때, 저는 농업문제를 담당하는 주무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농업과 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가경제 발전의 당당한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농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농촌복지정책과 직접지불제를 양축으로 농업구조조정의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농업·농촌의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농업·농촌 대책방향을 한여농을 비롯한 농업인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확정해 나가겠습니다.

농가부채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장기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부채경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한·칠레 FTA체결에 따른 농가피해 최소화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농업인들도 현장의 위기를 적극적으로 헤쳐 나가려는 의지와 각오를 다지는 노력이 긴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소비자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고품질의 안전농산물을 공급하는데 힘을 쏟으면서, 생산비를 낮추는 노력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정부와 농업인들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질 때, 농업에 대한 국민들

의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고, 우리 농업이 한 차원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성농업인 여러분!

저는 여성농업인 여러분들이 도시와 격차를 느끼지 않으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시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

그리고 전문 농업경영인으로서 농업에 전념할 수 있을 때, 우리 농촌사회가 안정되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담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대회 기간동안 다채로운 학술 문화행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생한 제안을 풍부하게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김인호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리면서, 여성농업인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쌀은 민족의 문화와 역사가 담겨 있다

(쌀 홍보대사 위촉식 인사말씀, 2003. 9. 5)

오늘 『LOVE米』 캠페인 홍보대사로 문화예술계를 대표하시는 세분을 위촉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쌀 홍보대사로 활동해 주십사 하는 정부의 요청을 흔쾌하게 받아들여 주신 세계적인 타악기 연주자이신 김대환 선생님, 우리나라 한복을 국제화하여 한복이란 말을 불어사전에 포함될 수 있게 하신 이영희 선생님, 우리 전통무용을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세계화시키는데 노력하고 계신 무형문화재 정재만 선생님 세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세분은 한국 문화예술계를 대표하는 장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인이란 한 분야에서 인고의 세월을 넘어서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경지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단순히 전통문화를 이어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를 현대에 맞게 창조적으로 재해석하고 계승 발전했다는 점에서 다른 분들과는 다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쌀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농업인이 쏟는 정성과 노력은 장인들이 예술을 구현하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쌀은 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는 먹거리로서 농업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쌀 소비량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햄버거, 피자 등 서양의 간 편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가고 밥은 너무 친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멀리하는 경향이 가장 큰 요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만 등 서양 간 편식의 폐해가 늘어 가고 있고 우리 밥, 된장, 김치 중심의 식단이 영양학적으로는 물론 문화적으로도 의미가 재조

명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해 오신 세분이 「Love 米 캠페인」의 홍보대사로 활동해 주시는 것은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예술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분께서 「Love 米 캠페인」의 홍보대사로서 활동해 주심으로써 국민들, 특히 서구문화에 익숙한 젊은 이들이 농촌과 쌀의 소중함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쪼개어 『LOVE米』 캠페인에 동참해서 우리 농업과 쌀 산업을 위해 봉사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공연 스케줄까지 취소하고 여기에 참석하신 김대환 선생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뢰받는 도매시장이 되도록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 방문 인사말씀, 2003. 9. 5.)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임직원과 가락시장 종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락시장은 전국에서 가장 큰 도매시장으로, 청과물 유통의 선진화를 위
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개방으로 인한 농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유통체계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가락시장이 이러한 유통개혁을 선도하여 명
실상부한 유통의 중심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추석을 앞두고 일기불순과 작황 부진으로 농업인이나 유통인 모두
에게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도매시장이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기
여하여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신뢰를 받는 시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의 고객인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와 사랑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다는 인식을 가지고 서비스를 강화하고 시대에 맞는 앞서가는 유통을 실현
하기 바랍니다.

이제 거래의 공정성을 둘러싼 해묵은 시비에서 탈피하여 어떻게 하면 시
장운영 수준을 한 차원 높일 것인가 하는 실질적인 문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물류비의 절감방안이나, 소비자가 찾는 친환경·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
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
입니다.

품질개선과 효율성 증진만이 도매시장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만들 수 있

을 것입니다.

정부는 도매시장이 질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모든 시장 종사자 여러분들께서 서로 협력하여 도매시장의 번영과 농산물 유통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다시 한 번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A balance of interests among the Members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칸쿤 농림장관회의 기초발언, 2003. 9. 11)

(Introduction)

1. We would like to express our sincere appreciation to the Chairman of the General Council, the Director-General and the Chairman of the Special Session of the Committee on Agriculture for their efforts in putting forward the draft framework modalities through intensive consultations in Geneva.

2. It is without question that agriculture is the key to the DDA negotiations. We hope this we will be able to agree on the framework at this meeting so that detailed modalities can be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newly agreed time frame.

(General Assessment of the Draft Text)

3. We believe that the framework for the modalities should meet two conditions.

First, it should strike a balance of interests among the Members not only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but also between exporting and importing countries.

Second, it should provide a level of ambition that the realities of

diverse Members can accommodate. As mentioned in the cover letter to the draft text, the level of ambition in all three pillars and the final balance will depend on the figures to be negotiated after this Cancun Ministerial. Nevertheless, the framework must set the parameters in such a way as to ensure a realistic level of ambition.

4. We believe that the draft text contains some positive aspects. In particular, we would like to note the attempt to provide adequate S&D treatment for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the SP concept. In that regard, it is certainly an improvement over the EC-US joint paper.

5. But in general, we do not believe that the draft text meets the test.

(Specific comments-MA)

1. First of all, let me explain our serious concerns, particularly, on the issues of tariff capping and TRQ expansion.

2. We understand that the concept of tariff of capping is introduced to address the concerns about high tariffs and tariff peaks.

However, the issue needs to be looked at within the context of their history and origin. As we are all well aware, these high tariffs are the result of the tariffication process agreed to in the UR negotiations, and, by definition, the absolute level of tariffs could be varied according to the different types of historical background and market realities of societies.

The concept of tariff capping, however, does not consider these historical background and market realities. In so doing, it may make it extremely difficult for importing countries to continue agricultural reform

and go on to create a crisis which these countries cannot endure.

3. The draft text imposes an additional burden of TRQ expansion on those products to which the UR formula is applied. As a result, it disrupts the balance between the interests of importing countries and exporting countries, and fails to meet the purpose of providing flexibility to sensitive products.

4. Finally, although the level of ambition in the area of tariff reduction is not yet specified, we believe that the proposed framework is meaningful only when it is interpreted as a basis for final outcomes which are workable in real societies and thus practically acceptable to all members.

(Specific comments-DS)

1. We are of the view that the significant reduction of the sum of supports as proposed in paragraph 1.4 is too burdensome. Reductions in each area of AMS, de-minimis and blue box are already quite a challenge. The requirement for reducing the sum of each form of support represents an additional burden that may be too heavy for many Members.

2. With regard to Green Box, there has been significant progress so far in the discussions to improve the current provisions, especially in areas of S&D on the basis of Chairman Harbinsons draft. In order to pursue the purpose after this ministerial efficiently, we need to make it clear that we continue our discussions on the basis of Harbinsons draft.

(We believe it is essential that we reflect S&D in Green Box from the viewpoint that it can provide developing countries with policy

instruments to solve their own NTCs such as food security and rural development with no or minimal trade distorting effects.

In this line, we would like to reiterate the importance of reflecting support for maintaining domestic production capacity of staple crops and support for small-scale family farms.)

3. Finally we also expect that the proposed framework is regarded to be a basis of final outcomes which are practically acceptable to all members.

(Specific comments-EC)

1. Korea supports the current draft in that Article 9.4 of the AOA should be maintained. It is our understanding that there is a consensus on this issue.

2. Apart from that issue, we are basically flexible in the area of export competition.

축산신문은 축산농가와 축산정책의 반려자이자 비판자

(축산신문 창간 18주년 기념축사, 2003. 9. 25)

축산신문의 창간 18주년을 맞아 지면을 통해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85년에 창간된 이래 18돌을 맞이하기까지 축산신문은 축산농가와 축산정책의 반려자이자 비판자로서 우리 나라 축산업의 정도를 제시하고 축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축산업 여건이 나날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축산신문이 축산 전문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신 윤봉중 사장님과 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의 축산농가 여러분, 그리고 축산관계자 여러분!

지난 '95년 WTO체제 출범 이후 '97년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개방하고 '01년에는 쇠고기도 개방하여 축산업은 완전개방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개방폭이 확대되는 와중에서도 우리 축산업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시설·장비 현대화, 유통구조 개선, 사양관리 기술개발 등을 통해 '95년 5조 9천 억원이던 축산물 생산액이 '02년 말에는 9조 1천 억원으로 52% 증가하였고, 전체 농림업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7%에 이르고 있습니다. 축산업은 이제 쌀 못지 않은 비중을 가진 주요산업이며 농가의 주요 소득원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축산물 등급판정제를 도입·확대하고, 고품질 브랜드를 육

성하여 브랜드 중심의 유통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와 같은 선진 위생제도를 도입하여 보다 안전하고 고품질의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축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은, 현장에 계신 축산인과 관련단체 임직원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축산신문이 축산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부에 전하고 정부정책을 축산현장에 신속하게 전파하는 가교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면으로나마 여러분의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합니다.

그러나 우리 축산업은 현재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이 진행 중에 있어 축산물시장 추가 개방이 예고되고 있으며, 안으로는 친환경 축산업,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국민과 소비자의 관심과 요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축산업이 추가개방의 파고를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내외적인 도전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i)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자연순환형 친환경 축산업 육성, (ii)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탁에 올릴 수 있도록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 (iii)고품질 우량브랜드 육성을 통한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 (iv)농가와 국민의 피해와 우려를 최소화하도록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의 효율화, (v)생산자가 주도하는 소비촉진 및 수급조절 등에 중점을 두고 축산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축산직불제 및 우수농장인증제(GAP) 도입, 위해요소중점관리제(HACCP) 내실화 및 확산, 의무자조금사업 활성화, 지방과 민간의 방역기능 강화 등 새로운 제도를 전향적으로 도입·정착시켜 축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뜻깊은 축산신문 창립 18돌을 다시 한번 축하 드리며, 축산신문이 축산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고 국민과 축산인들로부터 사랑 받는 축산 전문지로 거듭 발전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농업은 생명을 지켜주는 산업, 농촌은 우리 삶의 뿌리

(제12회 대산 농촌문화상 시상식 축사, 2003. 10. 15)

존경하는 류태영 재단이사장님과 재단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를 빛내 주기 위해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제12회 「대산농촌문화상」 시상식을 맞이하여 故 대산 신용호 선생님의 높은 업적을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축사에 앞서, 지난 여름동안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태풍과 냉해, 잦은 강우 등 열악한 기상 조건에도 불구하고 금년 농사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농업인들의 노고에 고개 숙여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산 농촌문화상은 “농업은 생명을 지켜 주는 산업이요, 농촌은 우리 삶의 뿌리”라는 대산 신용호 선생님의 숭고한 철학에 따라, 매년 첨단농업기술진흥, 농촌교육문화 창달 등 각 분야에서 공헌한 분들을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우리 농업·농촌발전에 크게 이바지 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뜻 깊은 영예의 대산농촌문화상을 수상하시는 「충북대학교」 백기엽·성진근 교수님, 「청화산영농조합법인」 조삼수 대표님,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심 원님과 그리고 「논산시 농업기술센터」의 훌륭한 업적에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

어느 한해 우리 농업과 농촌의 문제가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만,

을 한해는 유난히 험난한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DDA 농업협상, 쌀 재협상과 FTA체결 등 지난 UR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도전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작황부진 등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채부담이 심화되고, 농촌과 도시의 교육·복지격차가 날로 확대되어 많은 젊은이들이 농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활력을 잃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절박한 상황을 인식하고, 예측 가능한 농정을 통해 농업인의 신뢰를 확보하고 농업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우리 농업과 농촌을 국가 경제·사회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바로 세워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으로서 농업정책과 농업인의 소득·복지정책을 분리하되, 그 상호 연계성을 높여 선순환 구조로 개편한다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주요 농정시책도 이러한 관점에서 대폭 보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산업으로서의 농업은 친환경적이면서도 시장을 지향하는 경쟁력 있는 농업이 되도록 하고, 1차 산업에 지식과 정보와 기술이 접목된 2차, 3차 산업으로 연결되는 21세기형 고부가가치 농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촌형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교육·의료·주거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농촌과 도시를 연계하여 균형 잡힌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여러분!

이제 농업·농촌문제는 주무부서인 농림부와 농업인만의 과제가 아니라 사회전체가 심각하게 아파하고 해결방안을 찾아가야 할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정부가 비전을 제시하고 다각적인 노력도 기울이겠습니다만, 일찍이 대신 신용호 선생님께서 농촌과 농업발전이야말로 국가존립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여기시고 몸소 실천하신 바와 같이 “우리 농촌을 지키는 지킴이”를 키

우고 지켜 나가는 일이야말로 희망찬 미래를 여는 핵심 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은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각계 지도자들과 거센 도전에 맞서 창조하고 앞서 나가는 농업인, 모든 국민들의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 그리고 정부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질 때 21세기 국가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대산 농촌문화상」 시상식을 위해 애써 주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상(賞)이 대산 선생님의 유지를 받들어 우리 농업과 농촌의 발전은 물론 나라의 융성에도 밝은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통과 과학의 접목인 발효를 통해 농업 부가가치 창출

(2003 제1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축하, 2003. 10. 25)

존경하는 강현욱 전라북도지사님, 그리고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공동조직위원장이신 두재균 전북대학교 총장님과 김원주 전주시장님,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여러분!

오늘 제1회 국제발효식품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준비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조직위원회와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여러분!

어느 한때 우리 농업과 농촌의 문제가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만, 금년 한해는 유난히 험난한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DDA 농업협상과 쌀 재협상, 그리고 FTA 체결 등 거센 개방 압력이 밀려오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태풍 「매미」 등으로 인한 작황 부진과, 도·농간의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등 우리 농업·농촌은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절박한 상황을 인식하고, 앞으로 농업인의 신뢰를 확보하면서, 농업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우리 농업과 농촌을 국가발전의 기초로 자리매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농업·농촌의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대책과 투자계획도 국민적인 공감대 속에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여러분!

전라북도는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의 「農道」이며, 맛과 멋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이 아름다운 고장에서 올해 처음으로 국제발효식품엑스포가 개최되는 것은, 여러 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농업인이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가공과정에 적극 참여하면서 농산물에서 얻는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전통과 과학의 접목」인 발효를 통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며, 생산자와 유통업체가 직접 만나는 장을 제공했다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고유의 음식문화인 「발효」의 기법을 널리 전파시키고, 외국의 유사한 식품과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식문화의 우수성 전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세계에 널리 알려진 김치와 더불어, 장류·젓갈류 등 우리의 풍요로운 먹거리를 세계에 알림으로써 농산물과 식품의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간의 균형발전이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행사는 전주뿐 아니라 전라북도의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촉발하는 큰 계기가 될 것으로 보며, 앞으로 이러한 기회가 더욱 정례화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여러분!

농림부는 앞으로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면서, 우리 식품의 수출과 전통 식문화의 해외전파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고

우리의 전통식품산업이 세계 속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행사기간 동안 학술행사 등을 통해 여러 가지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행사준비를 위해 애써 오신 강현욱 지사님과 두재균·김완주 조직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국제발효식품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와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농업인 스스로도 경영자가 되어야

(최고농업경영자과정 10주년기념 국제심포지엄 축사, 2003. 11. 7)

전국의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을 맡고 계시는 교수님, 재학생 그리고 총동문회 회원 여러분!

농업인들의 기술과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농과계대학에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을 개설한지도 10주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농업최고경영자과정 교육프로그램의 현황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신지식 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주신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수님들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 농업은 대외적으로 DDA농업협상·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방확대로 인해 지난 우루과이라운드에 못지않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기상이변에 따른 농작물 작황 부진과 심화되는 농가부채, 그리고 낙후된 농촌의 복지·교육여건으로 농촌은 점점 활력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 지혜와 힘을 모아 어려움을 이겨낼 방도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당면한 농업·농촌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FTA 이행지원특별법」, 「농가부채경감특별법」, 「농어민삶의질향상특별법」, 「농특세연장특별법」 등 4대 농업지원 특별법의 제·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DDA 이후 농정여건을 반영하여 향후 10년 앞을 내다보는 근본적인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산업으로서의 농업은 시장경제원리에 근거하여 종합 생명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전업농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되 영세·고령농에 대한 보완대책을 확실히 갖추어 농업의 체질개선에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직접지불제를 비롯한 농업인의 소득 안전망 확충과, 농업인도 도시근로자 수준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농산물이 수입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차별화 될 수 있도록 친환경·고품질 농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농촌을 교육·복지 환경이 갖춰진 정주공간으로 개발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정책만으로는 우리 농업이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인 스스로도 경영자가 되어야 합니다.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농산물 생산에서는 생산비와 경영비를 줄이는 기술을 익혀 경영혁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농업경영인은 소비자의 요구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요즘 소비자는 비싸도 좋으니 고품질, 건강에 좋은 환경적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원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을 생산만 해 놓고 소비자가 국산품을 애용해 주기를 기다리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농업인이 경영인이라면 농산물의 유통과 마케팅에서도 전문가가 되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공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대책과 함께 여러분

과 같은 경영마인드와 의지를 가진 농업경영인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21세기에는 농업인도 창조적인 지식농업의 선도자, 새로운 농업 지식과 기술의 창조자,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경영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이 신지식·기술농업의 중심 축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서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이 보다 더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심포지엄 준비를 위해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은 강군중 전국농학계대학 최고농업경영자과정협의회회장님, 김경량 강원대학교농촌사회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과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튼튼하고 어깨 곁어서 더 큰 희망으로

(Love米 농촌사랑 마라톤대회 축사, 2003. 11. 9)

제8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Love米 농촌사랑 마라톤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대회에 참가하신 마라톤 애호가 여러분과 대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농민신문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Love米 농촌사랑 마라톤대회」가 소비자들에게 쌀을 비롯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소비활성화로 농촌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농업인들에게는 우리 농업과 농촌이 잘 살기 위해서 소비자의 신뢰와 성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해야겠다는 다짐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농업과 농촌은 DDA 농업협상, 쌀 재협상과 FTA체결 등 지난 UR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도전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여 앞으로 예측 가능한 농정을 통해 농업인의 신뢰를 확보하고, 농업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우리 농업과 농촌을 국가 경제·사회 발전의 든든한 기둥으로 바로 세워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대회에는 지난해보다 많은 1만여명이 참석하여 국민들의 농촌사랑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서로 묶이고 어깨 걸어서 더 큰 희망으로 나아가는 생명력을 지닌 벼처럼 어려울수록 서로 의지하는 우리 민족의 저력을 느끼게 합니다.

참가자 여러분 모두 농촌을 사랑하자는 대회의 의미를 되새기며 여유 있는 마음으로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업·농촌사랑! 우리의 미래를 열어 가는 힘

(제8회 「농업인의 날」 기념 행사 경과보고, 2003. 11. 11)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참여정부 출범이후 처음 맞이하는 「제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농업·농촌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계시는 대통령님 내외분을 모시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서는 개방화에 직면한 우리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걱정하시면서 인수위시절부터 「선대책·후개방」의 확고한 원칙을 가지시고,

농업·농촌종합대책과 중장기 투융자계획 수립을 관계부처에 직접 독려하시며 챙겨 오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모든 농업인들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인의 날」은 농업인들의 오랜 소망과 의지를 모아 1996년에 법정 기념일로 제정 되었습니다. 이 날은 농업인들이 1년 동안 땀 흘려 거둔 결실의 기쁨을 온 국민과 함께 나누고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다시 새겨 보는 날입니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관심과 애정이 우리 농업과 농촌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금년의 행사 주제는 “농업·농촌 사랑! 우리의 미래를 열어 가는 힘입니다”로 선정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농업과 농촌은 상당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경지정리가 거의 완성되고 용수개발 등 농업기반시설이 확충되었으며, 농업시설의 현대화는 물론 재배기술의 발전으로 농업의 생산성도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농촌은 상대적으로 도시와의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복지와 생활

여건이 낙후된 가운데 DDA/FTA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농업·농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우리 농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농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10년간의 중장기 종합대책과 투융자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단체와 함께 실천 가능한 대책을 확정하여 우리 농업과 농촌의 비전을 연말까지 제시하겠습니다.

정부와 농업인이 힘을 합쳐 나간다면 오늘 우리가 당면한 위기는 오히려 우리 농업과 농촌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 우리농업을 소비자의 식탁위에 고품질의 안전한 먹거리를 올려놓는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농촌을 전통과 환경이 보존되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농업인의 날」 행사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이 살아야 농업이 산다

(제44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 격려사, 2003.11.12)

친애하는 전국의 농업기술자 여러분!

전국농업기술자협회 강춘성 회장님, 그리고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이양희 위원장님, 그리고 전국농민연대 송남수 대표님을 비롯한 농민단체장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농촌이 살아야 농업이 산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제44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에 참석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농업·농촌을 위해 애쓰신 공로로 수상하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국농업기술자대회는 “농업인의 정신혁명, 농업의 기술혁명, 농촌의 생활혁명”이라는 슬로건 아래 이 땅의 농업을 선도하고, 농촌의 활로를 개척하는 장이 되어 왔습니다.

친애하는 선도농업인과 기술자 여러분!

오늘날 농업·농촌은 먹거리의 생산뿐만 아니라 생명과 환경을 지키고 전통문화를 보전하며, 국토를 가꾸는 공익적 가치가 새롭게 주목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농업·농촌의 21세기적 가치를 보전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을 통해, 우리 농

촌을 농업인에게는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그리고 도시민에게는 여유 있는 전원·휴식공간으로 가꾸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때 전국농업기술자협회가 주도하여 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 고자 하는 '도·농 상생을 위한 녹색교류운동'은 참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하 겠으며, 앞으로 농촌의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

어느 한해 우리 농업과 농촌이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만 올해는 유난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외적으로 도하개발아젠다(DDA)농업협상, 쌀 재협상과 자유무역협정(FTA) 등 지난 우루과이라운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도전이 밀려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내적으로도 잦은 강우와 태풍 '매미'의 여파로 농작물 작황이 좋지 못한 가운데 농가소득의 불안정과 가중되는 농가 부채문제 등으로 농촌과 도 시간에 소득·복지 격차는 날로 커져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당면한 농업·농촌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FTA이행지원 특별법」 「농어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 「농어가부채경감특별법」 등 4대 특별법의 제·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DDA 이후 농정여건을 반영하여 향후 10년 앞을 내다보고 농업회생을 위한 근본적인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어제 농업인의 날을 맞아 참여정부 농정의 기본틀을 제시하고, 향후 10년간 우리 농업·농촌에 119조원을 투융 자하고 이중 전반 5년간의 투융자규모 51조원은 정부의 중기재정운용계획에 우선 반영할 계획임을 천명하셨습니다.

이는 FTA, DDA협상과 2004년도로 예정된 쌀 재협상 등 시장개방확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선대책 후개방 원칙에 따라 국내 보완대책을 사전에 마련함으로써 우리 농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농업인들이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는 그동안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의 국제경쟁력이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고, 농가경제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회복이 어렵다는 농촌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특히, 한·칠레 FTA 체결, WTO/DDA농업협상 및 2004년 쌀재협상 등에 따른 농업인들의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표명이라 하겠습니다.

농림부는 이번에 발표된 중장기 투융자계획을 뒷받침하여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 및 사업별 투융자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며, 그 과정에서 농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농민단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선도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농업에 대한 대·내외적인 도전과 새로운 발전가능성이 맞물려 있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농업·농촌이 재도약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때일수록 선도농업인 여러분들이 70년대 우리 농촌의 원동력이 된 푸근한 농심, 근면하는 정신과 자조노력을 되살려 국민정신자원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할 것 입니다.

전국 농업인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농도불이의 국민적 화합을 통해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장을 열어 나간다면 현재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회가 보다 유익한 농업기술과 정보교류를 확산시키고

도·농 녹색교류의 활성화로, 더불어 잘사는 우리사회를 이룩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제경쟁력 문제는 우수한 농업기술개발에 달려

(제6회 대한민국농업과학기술상 시상식 치사, 2003. 11. 13)

존경하는 농업과학기술인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농업과학기술 발전에 힘써 오신 여러분들을 모시고 제6회 「대한민국농업과학기술상」 시상식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수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로 「대한민국농업과학기술상」을 받는 수상자 여러분과 그 가족 분들께 영예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수한 농업과학기술은 21세기 개방화·세계화 추세 속에서 우리 농업을 경쟁력 있는 고품질·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정부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이 영농현장에서 활용되는 것을 촉진코자 1998년부터 「대한민국농업과학기술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6회 제인 이 상은 영농현장에서 필요한 우수 농업기술을 개발·보급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 농업을 고부가가치 종합생명산업으로 탈바꿈시키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농업과학기술인 여러분 !

지금 우리 농업·농촌은 대내·외적으로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화·개방화 추세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 자유무역협정(FTA), 쌀 재협상 등 우루과이라운

드에 못지않은 도전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급은 늘어나고 소비가 정체되어 생산만 하면 팔리던 그런 공급부족시대”는 지났습니다. 소비자는 보다 맛있고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품목을 생산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방법으로 생산하여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우리 농업 경쟁력의 핵심은 사람에게 있다고 보고, 창의와 기술, 경영능력을 지닌 우수농가를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IT·BT 접목을 통한 농업의 성장잠재력을 키우고 지원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도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을 읽고 이에 발맞추어 품질과 안전성, 마케팅 등에서 수입농산물과 차별화 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농업과학기술인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우리나라 농업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개방확대로 인해 외국의 값싼 수입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우리의 대응은 아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국제화·개방화시대에 있어서 우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국제경쟁력 문제는 우수한 농업기술개발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수한 농업기술개발에 농업과학기술인 여러분의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정부도 농림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고품질·신기능성 품종의 육성 및 신물질 생산 등 농업생명공학기술의 집중지원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정부의 노력과 연구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함께 할 때, 우리 농업은 21세기 지식기반시대의 선도산업으로 도약하게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수상의 영광을 안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상식이 우리나라 농업과학기술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끝으로 이 행사를 준비하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서종혁 소장님을 비롯한 농림기술관리센터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축복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업·농촌지역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제23회 농어촌청소년대상 시상식 치사, 2003. 11. 14)

친애하는 농어촌 청소년 여러분!

이 행사를 주관하신 대한매일신보사 채수삼 사장님! 그리고 해양수산부장관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

올해로 스물세 돌을 맞이하는 「농어촌청소년대상」 시상식에 참석하여 앞으로 우리농업을 선도해 나갈 농어촌청소년 여러분에게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농어촌 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농어촌의 훌륭한 동량으로 인정받아 오늘의 영광을 차지하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농어촌을 젊어지고 나갈 인재를 발굴·육성하는데 깊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오신 대한매일신보사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영예의 농업부문 대상을 수상한 박재만군은 친환경 농법으로 고품질의 사과를 생산하고 '꿈동이'라는 고유브랜드 개발과 철저한 마케팅으로 연간 1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자랑스러운 청년농업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의 친환경과수원을 시범농장으로 활용하여 인근농가에 기술을 보급하고, 소년소녀가장 및 무의탁노인 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도 노력하고 있는 그야말로 농촌의 '꿈동이'로서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부문 특별상과 본상을 수상한 10명의 청년들도 끊임없는 노력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농업·농촌지역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로상을 수상하신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의 곽영호 농촌지도사는 17년간을 4-H운동에 헌신 노력하는 등 우리농업·농촌의 후계전문인력을 육성하는데 공헌한 모범 지도사입니다.

농촌청소년 여러분!

어느 한해 우리 농업과 농촌이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만 올해는 유난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외적으로 도하개발아젠다(DDA)농업협상, 쌀 재협상과 자유무역협정(FTA) 등 지난 우루과이라운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도전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잦은 강우와 태풍 '매미'의 여파로 농작물 작황이 좋지 못한 가운데 농가소득 불안정과 가중되는 농가 부채문제 등으로 농촌과 도시 간에 소득·복지 격차는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당면한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FTA이행지원특별법」 「농어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 「농어가부채경감특별법」 「농어촌특별세법」 등 4대 특별법의 제·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DDA 이후 농정여건을 반영하여 향후 10년 앞을 내다보고 농업회생을 위한 근본적인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농민단체와 함께 농업·농촌의 청사진을 연말까지 제시할 계획입니다.

지난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대통령께서는 향후 10년간 우리 농업·농촌에 119조원을 투융자하고 이중 전반기 5년 동안 소요분 51조원은 정부의 중기재정운용계획에 우선 반영할 계획임을 천명하셨습니다.

이는 FTA, DDA협상과 내년 쌀 재협상 등에 대비하여 「선대책 후개방」 원칙에 따라 국내 보완대책을 사전에 마련함으로써 우리 농업의 근본체질을 강화하고 농업인들이 여건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참여정부의 강력한 실천의지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농촌 청소년 여러분!

우리농업에 대한 대·내외적인 도전과 새로운 발전 가능성이 맞물려 있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농업·농촌이 제도약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농촌청소년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노력과 불굴의 의지를 갖고 농업을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농촌을 복지가 충만한 정주공간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고향인 농촌의 미래는 투철한 농업관, 신지식과 정보화마인드로 무장된 바로 여러분의 두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농업이 인류의 생명산업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21세기에는 반드시 우리농업이 선도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역량과 노력을 한데 모아 나갑시다.

정부는 여러분의 노력에 대해 최선을 다하여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의 이 「농어촌청소년대상」 시상식이 우리 농업과 농촌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이 시상식을 마련하기 위해 애써 주신 대한매일신보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영광을 안으신 수상자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e Right to Food, International Trade and Role of FAO

(제32차 FAO 총회 기조연설, 2003. 12. 2)

Mr. Chairman, distinguished delegates,

It is an honor for me to participate in this important Conference. And I am very pleased to have this opportunity to make an address on behalf of the Republic of Korea.. I would like to begin by expressing my sincere appreciation to the Director General and the FAO staff who have made such excellent arrangements for this conference.

Since holding its first conference in 1945,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has made an earnest efforts to improve nutrition and living standards for people around the world. Thanks to such efforts, the number of people suffering from starvation is decreasing. However, there are over 800 million people still suffering from malnutrition and 60 million of them are faced with a serious food crisis. Under the circumstances, all of us are obliged to join the efforts of eradicating hunger and poverty as we confirmed our determination at the World Food Summit in 1996.

As you may be aware, Korea once suffered from food shortages and learned a painful lesson about the devastating consequences resulting from the lack of food. But Korea has been successful in overcoming this hardship within one generation and is now willing to share the experiences.

Mr. Chairman.

Recent efforts of FAO in setting the guidelines to realize the right to adequate food deserve to be praised. The right to food is a critical element for eradicating hunger and poverty. I believe that the right can be achieved by the appropriate combination of international trade and local food production.

Today, however, we see talks focused only on international trade. I would like to point out that this type of approach disregards the characteristics and reality of the international food market and therefore it might be dangerous approach to ensure the right to adequate food.

Particularly, in the case of developing and food importing countries, maintaining a certain level of local production is crucial in terms of food security as well as other functions provided by agriculture.

To win the battle against poverty and hunger, global cooperation is as important as the effort of each member. As one of key institutions, it is necessary that FAO play a role for sustainability of agriculture.

In this context, FAO, as highlighted at the World Food Summit in 1996 and in the Organization's long term development plan, should continue to work for people's right to adequate food through the necessary role in the process of global trade system building.

Let me turn to the International Year of Rice. Food security is highly dependent on staple food. It is also true that efforts in ending starvation should focus on maintaining and increasing production of staple food.

Since rice is the staple food for the world's large population, the United Nations declared year 2004 as the International Year of Rice at its General Assembly in December 2002.

FAO, under the slogan "Rice is Life", set out to achieve food security

and to eradicate hunger by increasing awareness about the importance of rice and facilitating the effort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to resolve the issues related with rice production and consumption.

I, on behalf of the Republic of Korea, welcome the determination and efforts of FAO and believe that the intended goal should be achieved. I am also confident that rice will play a vital role in overcoming world poverty.

The Republic of Korea will do its best to help achieve the goal. As part of these efforts, the government is preparing various international as well as local events related with rice in 2004. I would like to ask for your interest and participation in these events.

I believe this kind of effort will move us closer towards the target of halving the number of people in poverty by 2015.

< Round Table >

Introduction

Thank you, Mr. Chairman.

Let me first congratulate you both on being elected co-chairs of this round table.

We are now at a critical point in dealing with the DDA negotiations. Countries have just resumed discussions after the failure of the Cancun Ministerial Conference. I hope this kind of discussion on food security and trade will contribute to making a timely and well-balanced conclusion of the DDA negotiations.

Elements of food security

To begin with, I would like to quote the Rome Declaration of the World Food Summit in 1996. It says:

(quote) “Food security exists when all people, at all times, have physical and economic access to sufficient, safe and nutritious food to meet their dietary needs and food preferences for an active and healthy life”.
(unquote)

It clearly shows that the main elements of food security are availability, accessibility and stability. It also means food security can be ensured when these three elements are considered in a balanced manner. I believe food security in each country can be achieved through the appropriate combination of local production and international trade. Therefore, as far as food security is concerned, international trade is not an independent goal, but just one of the tools for food security.

Food security concerns are also explicitly referred to in the WTO Agreement on Agriculture as one of the non-trade concerns (NTCs) to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continuation of the reform process. The Doha Development Declaration also takes note of such concerns.

However, I am of the view that NTCs, including food security, have not been sufficiently considered at the DDA negotiations so far. In particular, the Draft Text at the Cancun Ministerial gives priority to trade liberalization by including a new concept of tariff capping and TRQ expansion. We need to note here that we failed to reach an agreement.

Role of FAO

At this point, we cannot help but think of the role and responsibilities of FAO. FAO i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pursuing the very important and urgent goal of ending hunger and malnutrition. I believe that it is necessary that FAO have a strong voice in order to promote its own goals and to prevent these goals from being overlooked during the trade negotiations. I understand FAO, with an enhanced role in the DDA negotiations, will contribute not only to achieving the goals of FAO itself, but also to increasing welfare of humankind.

Thank you.

시대가 요구하는 이 변화와 혁신에 주역

(2004년 시무식 인사말씀, 2004. 1. 2)

오늘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갑신년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게 된 것을 저는 큰 행복으로 생각합니다.

작년 일년이 우리에게서 문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대로 슬기롭게 잘 마무리를 해 주셔서 여러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8월부터서 5개월을 저는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장관과 여러분 모두가 일심동체가 돼서 금년을 위해서, 앞으로 10년을 위해서 새로운 정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같이 개발하고 또한 추구했던 한해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4년은 새로운 농정의 원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2000년부터 21세기가 시작됐지만, 사실상 우리 농업의 역사로 봐서는 새로운 시작이 아닌가 그렇게 혼자서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은 여러분과 같이 앞으로 10년간 우리 농정을 어떻게 펼칠 것이냐 하는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10년에 대한 대처, 또 119조의 투융자의 시작이 금년이 첫해가 될 것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경제자문회의에서 실물경제나 실지 이론경제학에서 저술하신 분들이 말씀하신 얘기가, 또한 그 분들 외에도 제 귀에 항상 들려오는 얘기가 농업 외쪽에서는 과거 10년 동안 42조 15조 농특세를 투자를 했는데, 그 결과가 농가부채로, 오늘날 농정은 더 어려워지지 않았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나름대로 저는 거기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만, 사실상 이것이 우리 농업인들뿐만 아니라 농업 외쪽에서 보는 시각이라면, 이번 119조야말로 차질 없이 집행되지 않으면, 그 첫해가 2004년인데, 2004년에 우리가 펼치는 사업들이 농민들과 함께 하고 농업 외쪽에 국민 전체의 공감을 얻는 그런 정책이나 사업이 되지 않는다면 상당한 어려움이 2005년부터 시작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2005년에 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2004년이 중요한데, 농정의 불신을 해소하는 첫해로서 2004년이 국장들께서 책임 하에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또한 확인을 하고 2004년 말쯤 평가를 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자족하는 만족하는 그런 일련의 결실을 맺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만, 이제 과거처럼 농정이 농림부의 책상 앞에 앉아서 지침이나 시달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현장에 내려가시고, 현장에 가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또한 그것이 맞을 것인가? 안 맞을 것인가? 그 사업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농업인의 목소리, 특히 대학의 목소리까지 담아서 도 단위의 또한 시·군 단위의 농정을 펴는데 여러분들이 조정자의 역할, 최종 책임자의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의 화두가 뭘니까? 결국에는 ‘변화와 혁신’인 것 같습니다. 신년사에 대통령부터서 어느 분의 신년사를 봐도 2004년은 개혁이 계속 되어야 하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우리 시대의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시대의 문화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대의 문화가 충돌하고 있는 것 아니냐. 결국에 가치관의 충돌이라 할 수 있는데, 시대는 결국에 진보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진보를 주도해 내려면, 결과를 얻어내려면 우리는 혁신하고 계속 변화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이 변화를 선도하는 그런 세력들은, 그런 민족들

은 세계 역사 속에서 승자로 남아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민족이나 조직이나 사회는 결국에는 망하고 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는 과거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 금년 일년이 참여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농림부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요한 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펼치는 정책이나 사업이 농민들한테 인정을 받고 더 크게는 소비자들한테까지도 인정을 받는 그렇게 해서 정착이 됐을 때, 우리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우리 정책이 잘못 집행이 되고 실행이 돼서 일년간의 평가가 부정적일 때 2000년부터 새로운 시작은 이미 늦은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는 말할 것도 없고, 산하 기관·단체까지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를 따라야 할 것이고, 또 앞서가야 할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낙오가 된다면, 결국에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우리 농업기반, 농림부 위치에서는 생각조차 하기 싫은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이 한국의 농업이 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또 국제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용납해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금년에 또 쌀 재협상을 해야죠. DDA협상도 해야죠. 지금 FTA가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만, 일본과 그것도 아세안 여러 나라들과 FTA를 해야죠. 결국에는 다자·양자 무역체제 속에서 세계의 시장질서가 재편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잘못한다고 하면, 정부도 농림부도 어려워질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혁신의 주역이 돼 주시고 결국에 개혁을 하려면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부처 좀 하는 것 봐서 적당히 따라가자 그러면 될 일인데, 앞서가려면 여러 가지로 괴롭죠. 그러나 이건 결국에 우리 스스로를, 우리 스스로의 위치를,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을 하려면 남보다 앞서야 되고, 또 이 개혁이라는 것은 남이

시켜서 하면 이것처럼 보기 싫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일년 우리 농림부는 시대가 요구하는 이 변화와 혁신에 주역이 돼 줘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걸 조금은 나태한 모습을 보인다면 외부의 힘이 작용해서 결국에 억지로 하는 개혁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04년의 개혁이 성공이 돼서 2008년의 평가가 우리들에게 정말 자신을 갖다 주고 한국 농업이 나름대로의 세계 농업 속에서 국민들 가슴속에서 인정받는 그런 산업으로서 자리 잡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림부에 510명뿐만 아니라 산하 기관·단체, 우리 농림부 가족들이 공유해야 할 가치가 무엇이나……. 이런 문제를 오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농업의 비전, 또한 농업의 방향, 정책, 이것을 산하 기관·단체 전 가족이 잘 이해를 하시고, 또한 공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9조 사업뿐만 아니라 DDA나 쌀 재협상, FTA에 대해서 폭넓은 지식을 갖고 농업인뿐만 아니라 국민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데 여러분들이 첨병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공직자로서 당당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결국에 자기 분야에 전문가가 되어야 할 것이고, 새로운 창조나 도전정신을 가져야 할 것이고, 또한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해서 지금까지 잘 해주신 것처럼 원칙과 정도로, 원칙을 지키고 정도로 가는 여러분의 모습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그 모습에 만족하는 그런 당당한 자세를 가져 주길 바랍니다.

금년 건강한 모습으로 일년을 저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개혁과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2004년 농업인 신년인사회 인사말씀, 2004. 1. 5)

농업인 여러분! 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성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빛내 주신 이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농민단체, 소비자단체 여러분께 그동안의 지도편달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는 ‘매미’, 가축인플루엔자, 광우병 등으로 유난히 힘들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8월부터 준비하여 10년간 종합대책과 119조 투융자계획을 만들어 다행입니다. 119조원중 전반 5년간의 계획은 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2004년은 가장 중요한 한 해입니다. 119조원이 어떻게 잘 집행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조순 교수님의 ‘돈으로 농촌문제 해결 안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고민을 바탕으로 생산자나 교수, 농업인과 함께 이런 인식을 다시 세워야 하며 2004년은 그 첫 단추를 끼우는 중요한 해입니다.

국제 개방시대에 FTA, 쌀협상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변화와 개혁”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농림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건은 우리에게 이롭게 돌아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개혁과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양심을 지킬 수 있는 당당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종합대책과 119조원에 대하여 불만과 염려가 많을 줄 안다. 융자 비율을 25%로 줄이는 등 노력했습니다. 못쓰는 한이 있더라도 함부로 쓰지는 않겠습니다.

먼저 전업농을 양성하여 쌀·과수·원예·축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체질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촌농민을 위해 교육·의료문제를 해결하여 농촌사회를 유지함으로써 전 인구의 20%가 농촌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안전식품 공급 체계 구축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예 농업인력 육성 및 유통인력의 전문화가 필요합니다. 농과대학교수 등을 시도 겸임연구관으로 하여 농촌지도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부도 뼈를 깎는 각오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 민속, 정서 도시민이 찾아가고 싶어 하는 고장으로 농촌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 향수 오래도록 꽃피고 열매 맺는 ‘여성농촌문학’誌이길

(농어촌여성문학 제9집 발간 축하, 2004. 1. 30)

우리는 향토적 농촌과 농민의 삶을 그린 문학을 일컬어 농민문학이라 불렀습니다. 한 때는 이 문학 장르가 문단과 독자로부터 매우 각광받았습니다. 농민은 곧 우리네 고향을 떠올리는 상징어였고 농촌을 노래하는 것은 곧 한국인의 정서를 노래하는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죠.

돌이켜보면 1930년대 대표적 농민문학으로 부상했던 이광수의 ‘흙’, 이기영 ‘고향’, 김유정 ‘동백꽃’, 심훈 ‘상록수’, 김동리의 ‘산화(山火)’, 박영준의 ‘모범경작쟁’이나 ‘목화씨 뿌릴 때’ 등은 지금 읽어도 아름다운 작품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970년대 산업화 속에서도 농촌을 모르고서는 한국의 사회를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문학계와 언론계의 논쟁이 뜨거웠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런 부산물이 지금도 영원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신동엽 시인의 ‘금강’, 신경림 시인의 ‘농무’ 등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들 작품들을 통해 우리 농촌 그리고 우리 농민들의 삶이 문학에 얼마나 귀중한 씨앗이고 모든 국민들의 마음에 아름다운 영혼의 노래가 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세계화와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이런 농촌문학이 점차 퇴색되어 가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직접 농사를 짓고 창작 활동에도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며 우리 농촌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크나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러한 중심에 섬세한 감정과 풍부한 정서 그리고 미묘한 심리적 표출이 돋보인 여성문학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 또한 큰 의미가 있을 것입

니다. 최근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늘어나면서 이로 말미암아 다수의 여류작가들이 우리사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박화성 한무숙 선생에서부터 ‘토지’의 박경리 선생, 그리고 김남조, 유안진, 문정희, 강은교, 양귀자, 나희덕, 신경숙 선생에 이르기까지 장르별 연령별 골고루 분포된 여성 작가들이 독자들의 영혼을 나날이 살찌워 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한국의 여성은 예로부터 한결같이 가정과 농촌의 버팀목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네 어머니라는 이미지는 우리 사회 마지막 보루의 가치가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모성애가 여러 문학 작품을 통해 녹녹하게 익어서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은 위대하고 여성 여러분의 문학을 통한 세상에 대한 사랑과 사색의 작업은 빼놓을 수 없는 우리 사회 새로운 원동력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도 이러한 흐름에 걸맞게 체계적인 틀 속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10년이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 아래 올해를 새로운 농정의 원년으로 정하고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충실히 실천해 나가 농업인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촌복지를 증진하는 데 더욱 역점을 두어 나가려 합니다.

이제 농촌에는 물소리 새소리뿐만 아니라 우리네 터전인 농토와 농민의 삶을 되짚어 보게 하는 흙바람 소리 사람소리 산업화의 거센 기계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밀려드는 세계화의 물질 소리들은 농촌문학의 또 하나의 소재가 되어 농촌문학을 더욱 탄탄하게 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농촌의 삶과 전통문화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학 작품을 통해 재현되고 지켜지면서 새로운 경쟁력을 키우는 데 열정을 쏟게 되는 한편 우리 농촌의 정서적 가치를 되살려 낼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렇게 농어촌 정서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문학적 영혼을 담아 창작한 작품들은 국민 독자들에게도 농어촌에 대한 향수를 잔잔하게 불러일으킬 것

이며, 개방화에 흔들리는 농업·농촌의 가치를 더욱 드높일 수 있을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굵고 밝은 마음을 다지게 하는 문학 활동이야말로 농촌 희망의 바로미터이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에 대한 상징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비록 현재 우리 농업·농촌이 DDA 농업협상과 한-칠레FTA에 따른 개방파고, 농가부채의 증가 등으로 다소 어두운 여건에 직면해 있습니다만 문학이란 것이 역경을 견뎌 내며 희망의 불씨를 살려내는 행위이듯이 여러분의 문학 활동을 통해 표출되는 삶에 대한 슬기로운 생각과 농촌 삶에서 경험하고 터득한 언어들이 곧 우리 농촌과 우리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는 농민과 여러 독자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전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갑신년 새해 벽두부터 이홉 번째 <농어촌여성문학>이라는 옥동자를 잉태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오래도록 여성에 의한 농어촌문학의 전통을 축적해 나가 우리 문단에서 탄탄한 작품성과 새로운 여성문학, 여성 농어촌문학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이 손수 창작한 책의 갈피마다 스며 있을 농촌의 향기며 맛깔스러운 세상사는 이야기들처럼 여러분 가정에도 훈훈한 사랑과 행복이 내내 꽃피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정성이 가득 배인 작품들을 시간을 두고 읽어 가면서 잠시 사색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시금 <농어촌여성문학> 제9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농업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

(농업발전전략 세미나 및 거북선농업 출판 기념회축사, 2004. 2. 19)

먼저 참다래유통사업단 정운천 회장의 「거북선농업」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거북선농업」의 발간과 오늘의 출판기념회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사단법인 한국신지식농업인회 임직원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장원석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장님, 민화식 해남 군수님과 기초자치 단체장님, 그리고 주제발표와 토론을 이끌어 주실 각계 전문가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운천 회장은 우리 농업을 대표하며 평생 그 외길을 걸어오신 참 농업인입니다.

인생은 곧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책을 써 가듯이 사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회장이야말로 23년 농업이라는 한길을 그렇게 걸으면서 책을 쓰듯이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삶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농업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을 고스란히 담은 「거북선농업」이란 이 한권의 책이 갖는 의미는 남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경사스런 일일 것입니다.

훌륭한 예술가는 자연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마치 책을 펼쳐 있듯이 자연을 읽는다고 합니다. 책을 집필하신 정회장도 그렇게 자연을 읽어 오면서 누구보다도 농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사랑이 일구어 왔습니다.

저는 이토록 뜨겁게 우리 농업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농업인이 있다는 점에서 정말이지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DDA, FTA, 쌀시장개방 재협상 등 어려운 농정 현안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나온 책이어서 더욱 값진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정회장 같은 농업인이 있기에 어려운 농업 환경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생깁니다.

정부는 「선대책 후개방」 원칙에 따라, 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대비하고 우리 농업과 농촌이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 경영 차원에서 10년 앞을 내다보는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농촌에는 쾌적함과 농촌다움을 살리면서 다양한 지역특화 산업을 유치하여 다양한 소득원을 개발하여 도·농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선진농업으로의 발돋움을 위해 미래 농업을 선도할 전문인재를 양성, 유통혁신, 생명공학을 이용한 지식·기술주도형 산업의 육성으로 농업의 성장 동력을 확충해 나가는 등 농업·농촌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우리 농업과 농촌사회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농업·농촌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배려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정회장이 「거북선농업」에서 보여주고 있는 농업에 대한 열정어린 관심과 제안은 참으로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일이며 많은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것으로 믿습니다.

23년간 농업 현장에서 터득한 경험을 토대로 제시한 농업 대책이기에 농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쌀시장 개방 대책은 물론, 「거북선농업」을 통해 정회장께서 제안해 주신 각종 농정대책은 농림부를 비롯한 각계의 협의와 검토를 거쳐 농정발전은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농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이런 훌륭한 대응책을 제안해 준 정회장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거북선농업」이 보다 많은 농업인들, 농업 관계자들, 나아가 많은 국민들에게 널리 익혀 우리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는 기폭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래 농업·농촌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한국농업전문학교 제5회 학위수여식 격려사, 2004. 2. 20)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한국농업전문학교 학위수여식을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윤여창 학교운영위원장님, 그리고 학부형님과 내외귀빈 여러분!

올해로 다섯 번째 맞이하는 한국농업전문학교 학위수여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21세기 우리 농업·농촌의 주역으로 활동하게 될 졸업생 여러분을 만나 뵙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능한 청년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박해상 학장님과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졸업생 여러분!

21세기는 지식과 정보와 기술이 가치창출의 핵심요소가 되는 지식정보화 시대이며, 세계로 뻗어 나아가는 열린 농업의 시대입니다.

토지·노동·자본이 생산요소로 중요시되었던 산업사회에서는 농토가 좁고 자본축적이 미흡한 우리의 농업여건은 자연조건이 좋은 나라에 비해 불리했습니다만, 지식·정보와 기술이 가치창출의 핵심요소가 된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인적자원이 우수한 우리 농업에 희망과 새로운 기회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여러분이 닦고 새로운 영농문화를 창조하는 그런 기념비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젊음은 미래가 있다는 것만으로

도 행복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젊음은 끊임없는 도취이며 이성의 열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희망과 열정으로 마음을 다잡아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다가오는 과학 영농 시대, 세계적 경쟁력만이 살아남는 시대에 당당하게 도전하고 창조하려는 욕구만 있다면 여러분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도전할 영역은 무한대로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21세기 우리 농업발전을 주도할 용기와 자신감을 뭉쳐 있을 때 여러분의 앞날은 물론 청년의 미래가 조국의 미래라는 말이 있듯이 국가의 미래도 밝아 올 것입니다.

끊임없는 탐구와 실천으로 새롭고 경쟁력 있는 기업가정신을 갖추어 지식정보화 시대의 무한한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 전통농업을 첨단 지식·기술농업으로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장을 움직이는 힘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로 이행하는 소비자 중심경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를 농산물 생산·유통에 적극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업경영전략만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산물을 그저 생산해 놓고 소비자가 사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 생산·유통에 고객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국내외 소비자가 만족 수준을 넘어 감동을 제공할 수 있는 경영전략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미 생명공학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유통방식을 개선한 지식농업인, 홈페이지를 만들어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있는 정보농업인, 양위주의 농사에서 질 위주의 농사로 전환한 고품질 친환경농업인 등이 등장하여 역대 소득을 올리는가 하면,

진취적 정신으로 무장한 첨단 벤처농업인, 맨손으로 해외농장을 일군 개

척 농업인들이 우리 농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지식과 경영전략으로 우리 농업의 미래를 열어 가면서 국가경제에도 이바지하는 선진농업인들의 성공사례는 21세기 첨단지식·기술 농업의 주역을 담당할 영농학생 여러분들께 큰 힘과 용기가 되어 주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농업과 농촌 현실을 타개해 나갈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졸업생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현재 우리 농업은 FTA, DDA, 쌀재협상 등 개방화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은 위협요소도 내포하고 있지만, 대응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오히려 품질고급화와 수출을 확대하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는 것을 인식해 주십시오.

특히 최근의 농산물 가공, 유통, 관련서비스산업 등 농업관련산업의 증대되는 수요를 고려할 때, 앞으로 성장가능성도 매우 큰 게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불굴의 도전정신을 굳게 다져 나간다면, 분명 여러분의 농업 경영체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이러한 토대를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도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 농업이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대응코자 합니다.

FTA 비준에 따라서 「FTA 특별법」을 제정하여 향후 7년간 1조 2천억원 규모의 특별기금을 설치하여 관련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 경영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올해부터는 향후 10년간 119조 수준의 자금을 투융자 하여 지속 가능한 생명산업으로서 경쟁력 있는 농업, 농촌다움을 갖춘 복지농촌으로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제 협상에도 대비할 나날 것입니다.

아울러, 미래를 선도할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공한 신지식농업인 농장에서 지식·기술과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현장견학·체험교육과 창업·경영컨설팅 및 벤처농업 창업지원 등을 통해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돕고자 하며, 여러분이 새로운 농업지식과 기술의 창조자, 미래 농업·농촌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중심인력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한국농업전문학교의 무궁한 발전과 졸업생, 학부모 여러분들의 가정
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수의사들의 역할과 책임 또한 막중해

(대한수의사회 2004년 정기총회 축사, 2004. 2. 24)

이 자리에 오신 전국의 수의가족 여러분! 그리고 축산관련 내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갑신년에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오늘 대한수의사회 2004년 정기총회 행사를 준비하신 이우재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 와 주신 내·외빈 참석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칠레 FTA가 비준되고, 관련법이 통과됨에 따라, 우리나라 농업도 본격적으로 범세계적인 개방화의 물결에 동참하게 되었으며, 농업인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농업부문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농업·농촌을 지켜 나가기 위해 농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피해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119조 원 규모의 농업·농촌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이외에도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 위하여 농민단체, 국회 등에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수의·축산분야에서도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개방화의 험난한 파고를 어렵게 넘고 있는 상황에서 가축질병이 발생하여 적지 않은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2000년 2002년의 구제역 발생, 2003년 연초의 돼지콜레라 발

생 및 연말의 가금인플루엔자 발생 등으로 축산업계의 어려움이 커질 때 보여주시는 수의가족 여러분의 방역활동에 대한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보내는 바입니다.

현재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금인플루엔자는 위험성을 감안하여 방역상황을 당분간 유지하는 한편,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닭·오리의 수매·도태와 다양한 소비촉진 활동 덕분에 최근에는 닭·오리 산업이 예전 모습으로 빨리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일본·캐나다에 이어 미국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하고, 가금인플루엔자는 아시아,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어 축산물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금인플루엔자, 광우병과 같은 인수공통질병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최전방에서 지키고 감시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우리 수의사들의 역할과 책임 또한 막중해 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애완견 등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동물에서 사람에게 옮겨 주는 질병을 차단하고, 예방하는 수의사들이야말로 국민건강과 복지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더욱 커져 나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수의학과 6년제 졸업생이 처음 배출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수의학의 발전과 수의학문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들이 우리나라 수의·축산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들이 사회 속에서 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수의 및 축산업계가 계속 성장·발전하기 위하여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강조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무엇보다 소비자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축산은 범 세계속의 무한 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어려우며, 안전과 위생부

분은 수의사 여러분들의 고유영역으로 절대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사육단계에서의 동물약품 사용과 사료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도축장 위해요소 중점관리도 내실화 하며, 음식점 원산지단속의 제도화 추진 등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반려동물의 증가에 따른 동물복지 향상과 국가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동물보호법을 전면 개정하여 실질적인 반려동물의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금년 10월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수의사대회 행사를 철저히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최근 아시아 지역의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악성가축전염병이 상시 발생함에 따라 회원국간의 정보·임상기술의 교류·협력 강화가 긴요한 시기이며 정부에서는 가축질병 방역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동 대회의 행사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국가방역의 중요성과 더불어 지역의 방역사업에서도 수의사가 선도적으로 이끌어야 하며 시·군 등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참여가 중요합니다. 축산인 중심에서 더 나아가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수의사가 되어 주길 당부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수의가족 및 축산인 여러분!

앞으로의 농정은 소비자의 만족과 친환경농업에 역점을 둘 것이며, DDA, FTA 등으로 인한 농촌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대비를 위해 모든 농업인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현장에 적용되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진형 직거래를 강력히 추진

(강서농산물도매시장 개장식 격려사, 2004. 2. 25)

존경하는 신기남 의원님, 김성호 의원님, 조재환 의원님, 그리고 이명박 서울특별시장님과 유명 강서구청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

서울 서남권의 중심도시인 강서구에 농산물도매시장을 개장하게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을 완공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신 서울시와 건설 관계자 등 모든 분들에게 치하를 드리며, 이 뜻 깊은 자리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경제는 절대자원이 빈약한 아시아의 변방국가에서 동북아 중심 국가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우리 농업인, 근로자 모두가 하나로 뭉쳐 국가 발전에 매진한 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농업분야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92년 UR 당시와 비교하면, 생산기반 정비, 기계화, 시설현대화 등 농업인프라가 크게 확충되어 이제는 예기치 않은 기상이변에도 대처할 수 있는 안정적인 영농기반이 구축되었습니다.

규모화·전문화된 전업농 비중도 늘어, 쌀의 경우 3ha이상 농가가 4만 농가(4.1%)로 늘어나 전체 생산의 22%를 담당하고 있고, 양돈은 1천두 이상

을 사육하는 전업농 3천호(17.4%)가 국내 돼지고기 생산의 72%를 점유하는 등 구조조정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규모화된 전문 경영체를 중심으로 농업의 체질 개선이 진행되고 있으며, 생산·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생산과 유통의 계열화를 통해 농가소득과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는 등 농업내부의 질적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개방하에서 농업생산력의 증대가 농가소득 향상으로 연결되지 못해 부채문제가 심화되었으며, 그동안 농업정책이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어 따라 농촌지역의 교육·복지·생활여건의 개선에는 상대적으로 배려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농업정책의 방향은 개방화시대, 우리 농업이 지속 가능한 「친환경·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농업체질을 더욱 개선하고, 농촌현실에 맞는 소득·복지 안전망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농업·농촌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으로서의 농업정책은 시장원리를 기초로 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도 직접지불제 등을 통해 정당한 보전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농촌지역에 농업외에 다양한 농외소득원을 개발하고 농업인 연금·보험지원을 강화하는 등 소득·복지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을 하지 않더라도 농촌에서 생활이 가능한 여건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맞이하여 정보화, 생명공학, 농업벤처의 육성 등 우리 농업과 농촌이 첨단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농산물 유통개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산물 유통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매시장을 확충하고 종합유통센터·전자상거래와 같은 선진형 직거래를

강력히 추진하여 신 물류체계에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도매시장은 지난해 말까지 30개소가 개장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그 결과 유통단계를 줄이고, 물류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생산자는 제 값을 받고, 소비자는 싸고 품질좋은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에 개장된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을 비롯하여 2004년까지 총 32개소의 공영도매시장이 차질 없이 개장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농업인과 농촌사회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FTA, DDA, 쌀 제협상 등 산적한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농업·농촌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배려가 절실할 때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농업부문에 선진 노하우를 조언해 주시고 개방에 대비해 농업이 활성화되어야 경제성장도 건설해 진다는 相生의 원칙 하에 농업문화의 발전방안도 함께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개장한 강서도매시장이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개혁의 중추적 역할과 지역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농협이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2004년도 농협정기대의원회 치사, 2004. 2. 26)

존경하는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전국의 대의원 조합장님, 정대근 회장을 비롯한 농협임직원 여러분!

오늘 2004년도 농협중앙회 정기대의원회를 맞아 여러분들을 모시고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해 잦은 비와 태풍 매미피해, 돼지콜라라 방역, 연말에 발생한 가금인플루엔자 등 어려운 농정여건 속에서도 우리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농협관계자 여러분께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16일에는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인 한·칠레 FTA 비준안이 오랜 진통 끝에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농특세 10년 연장조치와 함께 「부채경감특별법」, 「삶의질향상특별법」도 통과되어 「10년간의 농업·농촌종합대책」과 「119조원 규모의 투융자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칠레와의 FTA체결로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농협도 정부와 보조를 맞추어 농업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농협임직원 여러분!

정부가 올해를 “새로운 농정의 원년”으로 삼아 10년 동안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선택한주요 혁신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농업의 중추세력으로 전업농을 키우겠습니다.

영농규모화사업을 두 배로 늘리고 고령농의 경영이양을 본격 추진하여 6ha 수준의 쌀 전업농 7만호를 육성하고, 농지규제 완화와 농지은행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둘째, 미래농업을 선도할 젊은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35세 미만의 젊고 유능한 창업농을 매년 1천 명씩 선발하여 집중육성하고, 농업인이 전문 경영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술지도와 경영컨설팅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직접지불 관련예산을 현재 9.4%에서 2013년까지 23%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넷째, 친환경농업 확산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비자의 식탁위에 안전한 먹거리를 올려놓겠습니다.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을 2013년까지 현재보다 40%를 감축하고, 축산물은 항생제 등 위해요소를 중점 관리하는 HACCP제도를 사육에서 판매까지 전 과정에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다섯째, 신기술 과학영농 개발·보급을 강화하고, 품질을 고급화하여 수출도 늘려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 농촌복지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정주공간이 될 수 있도록 농촌을 개발하여 살고 싶고 가고 싶은 농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의원 조합장 여러분!

지난 한 해 조합장님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농정활동을 펼쳐 주셨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가 4대 농업인 지원법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119조원 투융자 계획과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수립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정부의 시책을 잘 이해하여 주시고, 각 지역에서 농정활동을 적극

펼쳐 주신 조합장님들의 노력이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올해도 우리 농업을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우리농업이 안고 있는 어려운 과제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합니다. 특히, 우리에게선 쌀 재협상이란 큰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농협이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팔 수 있도록 협동조합이 농산물유통에 더욱 충실해야 하겠습니다.

WTO/DDA협상, 한·칠레 FTA체결 등 개방화에 따른 위협, 품질과 안전성을 중시하는 구매패턴의 확대, 급성장하는 대형유통업체 등 농산물 유통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농협은 공동마케팅을 주도하고 산지조합을 중심으로 생산 단계에서부터 선별·가공·포장·마케팅에 이르기까지 함께 힘을 모아 부가가치를 높이며 시장 교섭력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둘째, 부실조합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조합을 규모화하고 전문화하여 경쟁력 있는 조합으로 육성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현재의 읍·면단위의 소규모 영세구조로는 조합원인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돌려줄 수 없습니다.

정부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자율합병을 추진하는 조합에 대하여는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부실조합에 대해서는 그 원인과 책임을 반드시 규명하고 부실 관련자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 풍토를 조성하는 등 경영을 투명 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실시되는 조합장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공명하게 치러 깨끗한 선거의 모범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조합장선거에서 금품을 준 당선자뿐 만 아니라 금품을 받은 조합원이 구속

또는 불구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전체 농협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농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조합장 선거제도 개편 등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습니까만, 무엇보다 조합장 여러분께서 깨끗하게 선거를 치르겠다는 자정노력이 중요합니다 하겠습니다.

대의원 조합장, 그리고 농협임직원 여러분!

지역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서는 일선 농협이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며 진정으로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협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농업인과 소비자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농정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변화에 끌려가기 보다는 먼저 준비하고 혁신하는 자세와 농업과 농촌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기 좋은 농촌을 다같이 건설해 나갑시다.

끝으로 오늘, 이 뜻 깊은 정기대의원회를 맞이하여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축하를 드리며 농협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어업인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방송이길

(KBS-1TV 「6시 내고향」 3천회 기념 축하, 2004. 3. 26)

먼저 91년 5월 첫 방송을 시작한 이래, 14년 동안 한결같이 농어업인의
듬직한 벗으로 함께 해온 「6시 내고향」이 3천 회를 맞이하게 됨을 진심으
로 축하드립니다.

농어촌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입니다. 3천 회 방송이 나가는 동안 많은 시
청자들은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잊고 지낸 고향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농림부장관으로서,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동안 고향 냄새 물씬 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오신 여러분의 노고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6시 내고향」 프로그램은 늘 감칠 맛 나는 고향소식으로 우리들 마음을
포근하게 해 주었습니다.

들판에서 구슬땀 흘리는 농부와 아낙네를 바라보며 우리네 뒷바라지에
여념 없던 부모님을 생각하기도 하고, 저마다 뿔어내는 토속적 사투리를 통
해 진솔하고 소박한 고향 사람들 모습에 마음 편히 웃기도 하고 조용히 향
수에 젖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풍경들과 함께 맛깔스러운 농수산물 생산현장을 마주하기도 하고
선명한 화면을 통해 싱싱하고 다양한 먹거리 우수성을 접하며 자부심도 느
끼고 우리 농산물에 대한 애정도 도타워졌던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스타 농어업인을 발굴해서 그들의 신선한 아이디어들이 농
어업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 농산물도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세계경제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농어업도 예외일 수 없어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자유무역협정(FTA) 등 각종 험난한 개방 물결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원하는 소비자의 기대는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농어업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농어업에 대한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도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6시 내고향」이 3천회를 맞이하여 더욱 다채롭게 알찬 프로그램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변화를 모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농어인의 길잡이 역할과 도시와 농어촌을 잇는 가교자의 역할을 다 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정부도 지난 2월 발표한 향후 10년간 농정로드맵인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 잘 사는 농업인, 쾌적한 정주공간으로서의 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3천회를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프로그램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비자를 감동시키는 시장이 되어야

(광주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식 치사, 2004. 4. 20)

오늘 존경하는 정동채, 김태홍 국회의원님과 지병문, 김동철 국회의원당 선자님과 심재민 광주광역시부시장, 이형석 시의회의장님 내외 귀빈 여러분을 모시고 광주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개장하게 된 것을 감사드리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개장하기까지 열과 성을 다하신 광주광역시 관계관, 시공업체 임직원 및 도매시장 종사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농산물유통에서 도매시장의 기능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영도매시장을 통하여 생산된 농산물의 절반 정도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30여 년 전에는 5일장을 통하여 농산물이 유통되는 자급자족의 시대였습니다만 현재는 시장 - 품질경쟁, 서비스경쟁 해야 하는 문자그대로의 시장시대에 돌입하였습니다.

광주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정부가 설립한 32번째 시장이며 유통개혁대책에서 제시한 도매시장 건설을 마무리하는 시장입니다.

광주시각화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포화상태를 해결하고자 34천여 평의 넓은 부지에 현대식 전자경매 시설을 갖추고 오늘 개장하였습니다.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인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소비자인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에게 안전성이 담보되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제공하고 농업인 입장에서는 농산물 판매에 따라 제값 받는 시장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과거 공영도매시장은 농산물을 상장시키기만 하여도 판매가 되던 때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최근 농산물 유통은 도시의 신물류업체와 경쟁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대형유통업체, 종합유통센터, 직거래를 통한 유통량은 크게 증가한 반면 도매 시장거래는 정체상태이며, 재래시장은 위축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통분야에서 정부의 영향력은 감소하는 반면, 시장의 힘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광주 서부 도매시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감동시키는 시장이 되어야 하는데 있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이 언제든지 모여드는 시장, 믿고 구입할 수 있는 농산물이 많이 있는 시장, 고객 만족을 철저하게 추구하는 시장이 되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종사자들은 유통 관련 전문지식을 함양하여야 합니다. 고객의 수요변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문화적 예술적 소양이 있는 종사자들, 불의에 저항하는 원칙에 충실한 광주시민이기에 신뢰와 명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의 장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에 대해 모두 걱정하고 있습니다.

농정불신과 일관성이 없었다는 질책에 대해서 장관을 포함하여 농림부 전 직원은 모두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농정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투자와 융자시스템을 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평가하여 성공가능성 있는 곳에만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92년부터 11년간 62조원을 투자하였으나 농가부채와 농촌공동화 현상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시류에 따른 정책은 지양하겠습니다.

2004년부터 10년간 농업을 살리고 농촌에 활기를 가져올 수 있도록 119조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88조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남기는 한이 있어도 쉽게 지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자하

는 의지가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과거와 달리 농업인, 지방자치단체, 지방대학이 협조하여 계획수립을 평가하고 책임의식 있는 곳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농업을 지켜낼 전업농을 육성하겠습니다. 쌀전업농 7만호가 50%의 식량을 생산하고, 축산전업농 2만호가 85%의 축산물을 생산하고, 과수·채소 전업농 11만호를 육성하여 128만 농가 중 20만 농가가 농업을 지켜내고, 개방시대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사회 유지를 위하여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013년까지 10년간 우리나라 농촌마을 46,000여개 중 3~5개 마을을 1권역으로 1,000개 권역 3~5,000개 마을을 개발하는데 7조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25명이 참여하여 설계평가 및 미래를 예측하는 등 자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 권역별로 3년 동안 70억원을 지원합니다만 매년 평가를 통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 중간에도 지원을 중단하는 등 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유통인력, 농촌지도자육성 등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05년까지는 농업인 자녀의 중·고 학비는 전액 지원하고 농어촌 출신 농업계 대학생에 대하여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농촌학교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능한 선생님이 계실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원 등에 대하여 정부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금년은 가장 어려운 한해입니다. FTA, DDA, 쌀재협상 등 여러 현안들에 대하여 정부의 해결 의지와 함께 국민들과 농업인의 슬기를 모아서 해결하여야 하므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광주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장을 축하드리며, 광주 전남지

역 유통개혁의 중추적 역할과 함께 지역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것을 당부
드리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2의 녹색혁명을 한다는 각오로

(환경농업선포식 인사말씀, 2004. 4. 30)

먼저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농업·농촌특별위원회 장원석 위원장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김천주 회장님, 환경운동연합회 최 열 대표님,

그리고 전국에서 모이신 내외귀빈 여러분과 농업인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21세기 우리 농업이 가야 할 방향을 확인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약속의 자리입니다. 이제 시작이지만,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해 의미있는 자리가 되고, 훗날 농업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업은 시대의 변화에서 오는 시련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쌀 재협상을 끝내야 하고, DDA 협상, FTA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농업·농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농업소득보전, 농촌사회유지 등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정부의 대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과제들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또한 농업의 장래를 설계해야 하는 2004년의 중요한 시점에서 있습니다. 금년의 의미는 우리 농업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때가 될 것입니다.

정부재정 119조로 만들어진 농업·농촌대책 10년 계획이 처음 시작하는 해이고, 과거 생산위주로 추진돼 왔던 농업정책들이 이제는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고품질·안전성 농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작의 해입니

다.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상품생산, 소비자 US화에 적응해야 하는 생산·가공·유통·판매의 전략이 새롭게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되는 첫 해가 금년이 될 것입니다.

생산자인 농업인이 할 일, 수십 년 우리 농업을 연구해 오신 농학자들이 할 일, 정부가 할 일들이 우리의 머리와 노력과 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중 금년부터 앞으로 우리 농업에서 중요한 화두는 생산에서 소비자의 식탁에까지 「환경적으로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식품을 생산해 놓고 소비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당당한 권리를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금년부터 쓰여 질 119조는 21세기 개방화시대에 한국농업을 이끌어갈 근간인 전업농을 육성하고 고품질의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는 일, 농촌과 도시가 공존할 수 있도록 농촌마을을 삶의 공간으로 개발하는 일, 또한 농가소득안전망을 확충하는데 쓰여 지게 될 것입니다.

첫 시작으로 오늘 이 자리는 환경농업·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그동안 농업인들과 함께 만든 정부의 계획을 발표하고, 실천을 위한 다짐의 자리입니다.

10년 동안의 우리의 계획들이 차질 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생산자·소비자·정부 3자가 힘을 모아 우리농업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금년부터 화학비료와 합성농약의 사용을 2013년까지 40%를 줄이고, 친환경농산물을 2010년까지 10% 이상 생산해내겠습니다.

주요작목에 대한 친환경적 시비방법, 농약사용지침을 가지고 영농현장에서 농업인들과 함께 생산해내고, 소비자들이 현장을 찾아 직접 확인하고, 유통과정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자연순환농법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정책의 전환을 서두르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 방법과 정책만이 21세기 우리농업의 국제경쟁

력과 농업인의 안전한 소득을 보장해주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정부 농업인·소비자가 손을 잡고 우리생명의 모태인 농업·농촌을 살리는 일에 애정과 힘을 모을 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힘이 되주시고 이 에너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70년대 녹색혁명으로 우리 국민들의 식량문제를 농업인들이 해결했습니다. 이제부터 국민의 건강과 국토의 환경을 지켜내는 농업으로, 제2의 녹색혁명을 한다는 각오로 우리농업의 새로운 전환, 새로운 시작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각별한 애정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동안 도움에 감사드리면서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해 나가야

(지역농업클러스터 협의회 인사말씀, 2004. 5. 4)

먼저 지역농업 클러스터의 가능성을 보여준 보성군의 녹차사업과 약초 특화사업단의 사례 발표를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이 협의회를 통해 지역농업 클러스터의 필요성과 발전방향, 그리고 성공가능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우리는 국민소득 2만불시대 달성을 위해 사회 모든 분야에서 변화와 혁신을 요구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발전전략을 모색 중에 있으며 우리 농업분야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농업분야도 지방농정의 큰 틀 속에서 지역의 혁신주체들이 자발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해 나가야 지속 가능한 농업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방농정의 중요성은 두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농업 문제는 일차적으로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농업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 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특화사업단의 사업추진도 지역농업 클러스터 발전, 지역농업 혁신이라는 큰 틀 속에서 움직여야 하며, 산·학·관 협력도 시·군의 노력이 있어야만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회의를 계기로 우리부는 별도의 작업반을 구성하여 하반기까지 지역농업 클러스터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우선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

확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분들과 같은 지역농업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멀리서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협의회를 마무리 짓고 저녁을 함께 하시면서 못 다한 이야기들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사 1촌 결연운동은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상생

(도·농교류센터 개소 및 1사 1촌 결연식 격려사, 2004. 5. 6)

1사 1촌 결연운동 참가기업 및 마을대표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장원석 농특위 위원장님, 농업기반공사 안중운 사장님, 시장·군수님과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도·농교류센터 개소식 및 1사 1촌 결연행사」에 참석하여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농교류센터」가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안중운 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1사 1촌 결연행사」에 선도적으로 참가해주신 기업대표님, 마을대표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농업·농촌은 대내외적으로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밖으로는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쌀협상, FTA 등 국제무역질서 변화에 따라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고, 안으로는 농가소득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농촌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고령화됨에 따라 농촌공동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주 5일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여가수요 증가 등 최근의 생활환경 변화는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에 새로운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향후 10년간의 농업·농촌 종합대책과 119조 투융자 계획을

마련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서의 농촌을 만들어 나가
고자 합니다.

우선 개방화시대 우리 농업을 지켜낼 수 있도록 전업농을 육성하고 농촌
인력을 양성하여 농업의 체질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영이양직불제와 농
지제도 개편 등을 통해 2010년까지 6ha수준의 쌀전업농 7만호를 양성하겠
습니다.

또한 고품질·친환경 농업을 적극 육성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고히 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수농산물관리제도
(GAP), 생산이력제 등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촌을 쾌적하게 개발하고 농촌에 사람과 자본이 들어올 수 있도
록 각종 유인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농촌경관, 전통문화를 농촌관광수요로
연결시키기 위해 약 1천개의 농촌관광마을을 조성하고 농공단지 활성화 및
향토산업 육성 등을 통해 농외소득원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내외귀빈 여러분!

농촌을 우리 모두의 삶의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과 자
본이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전국적으로 잘 발달된 도로망이
있고 농촌에도 초고속 인터넷이며 케이블 TV 등이 잘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규제를 대
폭 완화하고 농촌다움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
니다.

도시의 사람과 자본이 농촌으로 들어가 활력을 불어넣고, 그 대신 농촌은
우리 국민들에게 여유로운 삶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상생의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1사1촌 운동도 기업이 일방적으로 농촌에 혜택을 주는
시혜적 방식이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
니다.

오늘 「1사 1촌 결연행사」에 참여해 주신 기업과 마을대표님, 그리고 시장·군수님들께서도 상호이해와 협력증진을 통해 도·농교류사업이 전국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정부의 도농교류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행해나갈 도·농교류센터의 출범과 1사 1촌 결연행사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FAO have to take a more active role

(제27차 아시아·태평양 FAO 총회 기조 연설, 2004. 5. 20)

Chairperson,
Director General,
Distinguished Delegates,
Ladies and Gentlemen.

It is my honour to be here representing the Republic of Korea. I would like to express many thanks to the people and the government of China for hosting the conference. My appreciation also goes to the FAO secretariat for preparing the conference.

Korea, once devastated by poverty and hunger, has achieved remarkable economic development in a short period of time. The Korean government fully recognizes the important role of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in economic development. Based on our experiences, we are increasing our support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n Asia and the Pacific.

As part of our efforts,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KOICA) has been conducting education programmes, dispatching experts, and initiating various field projects. To combat desertification, the KOICA is providing 5 million US\$ to the reforestation project in western China. The KOICA has also committed 180,000US\$ to the afforestation project in Myanmar, with an additional 300,000US\$ still to

come.

The Korean government is increasing its support for agriculture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FAO and IFAD. This year, a 576,000-dollar sericulture development project has been launched through the Korea-FAO Trust Fund. This project is expected to play a critical role for creating income and jobs in rural areas of developing countries.

Korea will be committed to supporting relevant programmes in the area of capacity building and technology transfer to help overcome poverty and hunger in the region.

In Asia and the Pacific, 70% of the population suffering from poverty lives in the rural area, and most of them depend on agriculture for their livelihood.

Therefore, growth in agriculture plays a pivotal role in both reducing poverty and ensuring food security. Nevertheless, investment for agriculture in most countries is still not sufficient.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poverty reduction which was set at the World Food Summit in 1996, each government should recognize the importance of agriculture, renew its political will, and strengthen its support.

Since the 1990s, Korea has increased its investment for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which have been lagging behind other sectors. The government has recently made a 10-year, 100-billion-dollar investment plan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In Asia and the Pacific, various type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re

necessary as agricultural environments and development levels among member countries are different.

The regional food network system being pursued in connection with the International Food Data System of the FAO is a good example of such cooperation. Korea is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North East Asian Regional Food Data System(NEASIAFOODS).

In the same context, the ACD Workshop for Agricultural Ministers being held this weekend is very timely and appropriate. We should use this opportunity to strengthen cooperative relationship in the region and to achieve visible results in the near future.

As I mentioned earlier, investment at national level is most important to overcome hunger and poverty. International support is also important as a complementary tool to make up the deficit.

International support is desperately needed in Asia and the Pacific. Around 60% of all the undernourished in the world, 500 million people, live in the region. About 1.2 billion people worldwide are living under one dollar a day, and two thirds of them live in the region.

However, only 9% of the FAO resources for major programmes were allocated to Asia and the Pacific in 2002-2003, which is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33% allocated to the Near East and the 20% for Africa.

I would like to urge FAO to increase its support for Asia and the Pacific and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Pacific Island Countries, given that the support for them is particularly insufficient.

The region must work towards greater food security. Food security can be achieved through an efficient combination of domestic production and international trade. Maintaining a certain level of domestic production

is vital when it comes to food security risks, such as the instability of the international food supply and price fluctuations.

However, at the current WTO/DDA agricultural negotiations, the importance of Non-Trade Concerns such as hunger alleviation and food security seems to be neglected.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ese functions once again.

At the negotiations, flexibility must be given to member countries to maintain certain level of domestic production. The interests of importing countries as well as exporting ones should be reflected in a much more balanced manner.

Finally, I would like to turn to rice in the region.

More than half of the world population depends on rice as their staple food. Small-scale farmers in Asia and the Pacific account for four fifths of world rice production.

Therefore, rice-based income creation and poverty reduction are very critical to eradicate hunger in the region. In this respect, it was appropriate for the UN/FAO to declare 2004 as the "International Year of Rice".

Unfortunately, the support of the FAO for the "International Year of Rice" does not seem to be sufficient, and I urge FAO to take a more active role in this regard.

The Korean government has organized a special task force to implement the "International Year of Rice".

To increase public awareness on the contributions of rice to food security and poverty alleviation, various events have taken place and will be held throughout the year. I encourage all members to participate and

help promote this vital crop.

In closing, I would like to reassure you that the Korean government will fully cooperate in the effor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alleviate poverty and hunger.

I thank you.

Achievements of agricultural reform in Korea and future plan

(ACD 회의 기조연설, 2004. 5. 23)

Chairperson, Ministers and distinguished guests,

On behalf of the Republic of Korean Government,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appreciation to the Minister, Mr. Du Qing Lin for organizing the first Workshop for Agricultural Ministers of ACD.

I am pleased to introduce Korean agriculture and seek together what we should take to enhance agricultural cooperation among Asian countries.

During the rapid economic development, Korea has experienced sharp decrease in agricultural population, emergence of commercial farmers and so on. From the mid-1990s, Korea has taken various market-oriented measures complying to the Uruguay Round Agreement which has been accelerating agricultural reform in the country.

To make the agricultural sector more competitive, the government gave priority to building up agricultural infrastructure during the last decade. Thanks to this, we are able to maintain a stable production system enough to overcome frequent natural disasters. For example, in 1999 when we had the worst drought in our recent history, the production remained considerably high.

Income stabilization and improved welfare for farmers, however, have not

yet been fully realized.

Despite the increase in productivity, farm household income remained stagnant compared with other sectors. Moreover, the rural area lost its vitality as the gap between urban and rural communities widened in terms of the quality of education, medical services and housing.

Following the progress of the WTO/DDA and FTA negotiations, the market liberalization shall be expanded, increasing burdens on farmers. On the contrary, consumers' concern about and interest in food safety, food quality and environment have increased sharply.

To cope with these changes, the government has launched a comprehensive plan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this year.

This plan focuses on fostering sustainable agriculture, lifting farm income up to the level of urban workers, and making the rural area a place with amenity to live in.

To stabilize farm income, the government is introducing direct payment schemes that do not influence production nor distort market mechanism. These include direct payments for environment-friendly farming and crop insurance program.

The government is implementing various measures to increase off-farm income such as creating rural tour villages and constructing industrial complex in rural areas.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is working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in rural communities by improving medical services and education. To this end, the government expands the health insurance coverage and family allowance for rural residents.

We endeavor to supply safe agricultural products to consumers. We are going to introduce the traceability system to manage the entire food

chain from farm to table. We will firmly establish HACCP throughout food industry.

Chairperson,

Agriculture, in addition to food production, provides many public benefits such as preserving environment, providing beautiful natural scenery and maintaining traditional culture of rural community.

Each country, whether developed or developing, importing or exporting, recognizes the significance of agriculture. The Korean government also fully recognizes that agriculture has played a key role in the development process.

Based on our experiences, we are increasing foreign aids in agricultural sector for Asian countries.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KOICA) has been conducting education programmes, dispatching experts, and initiating various field projects.

Korea will continue to be committed in supporting programs for capacity building and technology transfer to help Asian countries overcome poverty and hunger

In the Asian region, 70% of the population suffering from poverty, lives in the rural area, and most of them depend on agriculture for their livelihood. Therefore, it is evident that the growth in agriculture plays a pivotal role in reducing poverty and developing rural communities.

Nevertheless, investment in agriculture in most countries is still not sufficient. Each Asian country should recognize the importance of agriculture again and renew its political will to increase the investment to the agriculture sector. This can not be overemphasized.

Multi-dimensional cooperations are necessary because the development

levels are different in the area. Through these cooperations, we all will be able to find out ways to allow diverse types of agriculture to coexist.

I believe that information sharing and networking should be the starting point among ACD member countries. The regional food network system being pursued in connection with the International Food Data System of the FAO is a good example of such cooperation. Korea is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North East Asian Regional Food Data System.

Korea is willing to share its various experiences in agricultural policy implementation with Asian countries.

The Korean government is also willing to expand agricultural training programmes for ASEAN members to ACD countries.

The ACD Workshop for Agricultural Ministers is very timely and appropriate. We should use this opportunity to strengthen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in the region and to achieve visible results in the near future. I thank you

쌀은 우리민족과 함께 해온 생명의 원천

(세계 쌀의 해 기념사, 2004. 5. 27)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같이 해 주신 주한외교관과 국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UN이 정한 『세계 쌀의 해』 기념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전국에서 쌀농사에 종사하는 농업인 여러분과 농업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쌀산업의 발전과 농촌현장에서 헌신해 오신 공로로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신 여러분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는바와 같이 쌀은 세계 인구의 절반이, 특히 아시아에서는 20억 인구가 주식으로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식량입니다.

뿐만 아니라 벼농사는 홍수조절, 수자원 함양, 생태계보전 등 다원적 기능 또한 지대하다고 하겠습니까. 한국의 경우 논농사가 갖는 다원적 가치는 쌀생산액(9조)의 2배인 15~19조원에 달한다는 연구보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아시아 몬순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벼농사가 적합한 지역이며 전통적으로도 벼농사가 발달되어 왔습니다.

쌀은 반만년 역사 속에서 우리민족과 함께 해온 생명의 원천이었습니다. 따라서 쌀은 경제적 가치 뿐 아니라 사회적·문화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쌀 한 알 한 알에는 우리 농업인들의 정성과 혼 그리고 고 땀이 담겨 있습니다. 벼농사 자체가 우리의 문화와 민속의 근원이었습니

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벼농사는 잦은 기상재해와 영세한 규모, 높은 노령농가의 비율 등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최근 DDA, FTA협상, 쌀 협상 등이 진행 되고 있어서 쌀 산업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내의 여건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3년까지 10년 계획으로 『농업·농촌종합 대책』과 119조원의 투융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농업·농촌종합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농업인이 손을 잡고 고민하며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의 농정은 정부와 농업인이 함께 지혜를 모아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는 농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 쌀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젊고 유능한 농업경영인을 중심으로 『쌀전업농 7만호』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쌀 전업농을 중심으로 영농규모를 늘리고 농업기계화를통해서 생산비를 절감하여 우리 쌀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농약·화학비료를 40% 감축하는 친환경농업을 적극 육성하여 국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정부는 농촌을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농촌지역개발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농업의 다양한 주체들이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의 쌀산업은 4천 700만 국민의 영양과 건강을 책임지는 주식으로서, 또 128만 농가의 농업소득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정부는 쌀산업의 안정을 위해 생산과 유통, 소비까지 시장원리에 따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 입니다.

앞으로 쌀협상에 따른 농가의 소득문제는 다양한 직불제 확충과 농촌복지정책으로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이제부터 한국은 국제사회와의 농업협력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 농업발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량부족·기아문제와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북한의 농업발전과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농업 교류협력사업도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 쌀의 해』를 맞이하여 쌀과 농업의 다양한 가치와 중요성을 모든 국민이 다시 한 번 되새기고, 한국의 쌀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전국 350만 농업인과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산물수출물류센터는 개방화시대 우리 수출농업의 첨병

(광양 농산물수출물류센터 개장식 치사, 2004. 5. 29)

존경하는 전남도민과 광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정철기 의원님, 오현섭 전남도 정무부지사님, 이성웅 광양시장님, 이정문 광양시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철과 향만의 도시이며, 남도 제일의 명산인 백운산과 섬진강이 어우러진 전원도시 광양에서 우리 농산물 수출의 전진기지이자 새로운 수출농업시대를 열어갈 광양 농산물 수출물류센터 개장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잘아 시다시피 지금 우리 농업·농촌은 대내외적으로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밖으로는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쌀 관세화 협상, FTA 등 국제무역질서 변화에 따라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고, 안으로는 농가소득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농촌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로 농촌공동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여가수요 증가 등 최근의 생활환경 변화는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에 새로운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향후 10년간의 농업·농촌 종합대책과 119조 투융자 계획을 마련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서의 농촌을 만들어 나가 고자 합니다.

우선 개방화시대 우리 농업을 지켜낼 수 있도록 전업농을 육성하고 농촌 인력을 양성하여 농업의 체질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영이양직불제와 농지제도 개편 등을 통해 2010년까지 6ha수준의 쌀전업농 7만호를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친환경 농업을 적극 육성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고히 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생산이력제 등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촌경관, 전통문화를 농촌관광수요로 연결시키기 위해 약 1천개의 농촌관광마을을 조성하고 농공단지 활성화와 향토산업 육성 등을 통해 농외소득원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숙된 지방화시대에 걸맞은 사업추진을 위해 산·관·학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농업 혁신의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지역농업 클러스터」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2005년에는 중장기 농업농촌종합정책에 포함된 25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0개정도의 시범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뒷받침할 119조 투융자 사업은 투융자에 대한 사전심사와 사후평가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심사평가 시스템을 혁신하여 사업 성공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업인들의 부실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의 성공 가능성이 의심스러우면 예산을 다 못쓰고 남기는 한이 있더라도 집행하지 않는다는 각오로 엄격하게 집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귀빈여러분!

우리 농산물 수출은 수출업체가 산지에서 물량을 수집하거나, 생산자가 선별·포장한 후 개별적으로 수출업체에 운송한 물품을 수출업체가 취합하여 공항 또는 부두로 운송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광양 수출물류센터 건설 당시, 산지유통시설('98기준 8,190개소)중 저온저

장고가 40%, 선별장 8%, 예냉시설 1.5% 수준으로 신선도 유지나 상품의 규격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한 소규모 물량운송으로 물류비의 증가와 냉장탑차 대신 일반트럭으로 운송되는 비율이 오이 61.5%, 파프리카 50.4% 등으로 저온수송체계가 미비하는 등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동선별·포장부터 예냉·저장, 훈증·검역까지 일관된 수출체계(one-step)를 구축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고자 시범적으로 광양과 마산에 농산물수출물류센터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오늘 처음으로 개장하게 된 광양 농산물수출물류센터는 개방화시대 우리 수출농업의 첨병으로서 그 책임과 사명은 실로 막중하다고 봅니다.

광양 수출물류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은 수출물류비를 줄이고, 체계적인 선별과 포장, 품질관리를 통하여 상품성을 향상시킴으로서 우리 농산물의 수출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국제적으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를 한층 향상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양이 동북아 물류기지의 중심축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저는 물류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위탁업체는 물론, 광양시와 전남도, 그리고 수출농업인 여러분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광양 물류센터가 수출품의 선별·포장, 예냉·저장, 훈증·검역 등에 한층 향상시킬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므로 이를 계기로 전남도와 광양시가 획기적인 농산물 수출 확대의 전기를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농산물 수출도 '00년 15억3천만 불, '02년 16억4천불, '03년도 18억6천만 불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금년도도 4월말까지 전년 동기에 비해 17.4%가 증가한 6억5천만 불('03.1~4. 553백만 불)로 수출에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양 물류센터는 이러한 분위기의 일익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광양 물류센터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므로 반드시 성공하는 모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치밀한 경영전략으로 기업처럼 운영하여 이윤을 창출하고 현재의 시설 규모를 계속 확대하여 더 큰 발전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광양 물류센터를 신상품 개발이나 유통정보, 농가교육 등의 시범 장소로 활용하여 농산물 수출시장 개척에 적극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넷째는 2004년도 농산물 수출목표액 20억불과 2013년 50억불이 달성될 때까지 모든 관계자가 열심히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광양 수출물류센터가 성공적으로 개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전라남도과 광양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우리 농업의 활로 개척을 위한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이 관심과 협조를 다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와 농촌이 균형 있게 성장

(농촌사랑 협력조인식 및 1사1촌 자매결연 발대식 격려사, 2004. 6. 8)

먼저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농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장원석 위원장님과 내외귀빈 여러분!

그리고 경제계의 적극적인 농촌사랑운동 참여와 1사 1촌 자매결연의 계기를 마련해 주신 전국경제인연합회 강신호 회장님을 비롯한 경제5단체 대표님, 농협중앙회 정대근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1사 1촌 결연행사」에 선도적으로 참가해 주신 기업대표님, 마을대표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21세기 우리 농업과 농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인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약속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농촌이 활력을 되찾고 도시와 농촌이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씨를 뿌리는 매우 의미 있고 소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업과 농촌은 현재 커다란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으며 시련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쌀 재협상을 마무리해야 하고, DDA 협상, FTA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내적으로는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여기수요가 늘어나는 등 국민 생활 패턴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농업·농촌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

어 나가고자 향후 10년간의 농업·농촌 종합 대책과 119조 투융자 계획을 마련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서의 농촌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개방화시대 우리 농업을 지켜낼 수 있도록 미래 농업을 선도할 정예인력을 중점 육성하여 농업의 체질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영이양직 불제와 영농규모화 지원, 농지제도 개편 등을 통해 2010년까지 6ha수준의 쌀전업농 7만호를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친환경 농업을 적극 육성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고히 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수농산물 관리제도(GAP), 생산이력제 등 제도적인 뒷받침도 해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농업인의 복지지원을 확대하고 농촌에 사람과 자본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각종 유인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농촌경관, 전통문화를 농촌관광수요로 연결시키기 위해 약 1천개의 농촌관광마을을 조성하고 농공단지 활성화 및 향토산업 육성 등을 통해 농외소득원 마련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숙된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정부, 지방자치단체, 농촌에 계시는 농업인, 특히 지방대학이 같이 손을 잡고 지방의 특성을 살린 지역농업클러스터 정책을 통해 함께 대책을 세워나가고 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선 2005년에는 10개 정도의 시범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단계적으로 성공사례를 만들어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도시와 농촌이 균형 있게 성장하고, 농촌을 우리 모두의 삶의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과 자본이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농촌다움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도시의 사람과 자본이 농촌으로 들어가 활력을 불어넣고, 그 대신 농촌은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여유로운 삶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 도·

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상생의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농촌사랑 1사1촌 운동도 기업이 일방적으로 농촌에 혜택을 주는 시혜적 방식이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상호이해와 협력증진을 통해 도·농교류사업이 전국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농촌사랑 협력조인식 및 1사1촌 자매결연 행사」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농업인도 의사결정 과정에 전문성 확보와 리더십을 증진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인사말씀, 2004. 6. 9)

바쁘신 가운데도 여성농업인육성 정책자문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농업·농촌 현장에서 여성농업인들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자문회의가 이러한 역할 증대를 뒷받침하는 정책 평가와 대안 제시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금년은 우리 농업사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해입니다.

향후 10년간의 농업·농촌종합대책을 마련하여 119조 투융자계획이 시작 되는 해이며, 과거 생산위주로 추진되어 왔던 농업정책이 소비자 중심의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으로 본격 전환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농정은 새로운 투융자 시스템에 의해 추진되어야만 목표를 달성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을 평가하여 성공 가능성 있는 곳에만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유통업체, 지역대학, 연구기관 등 전문가가 지역클러스터를 형성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스스로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전문인력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1년부터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5개년 계획 추진 4년차로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여성농업인 스스로가 경영 주체로서의 자각이 확산되는 등 성과

가 점차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이 변화된 농업환경에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농업 경영 능력을 강화하고, 역할에 부응하는 지위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와 안정적인 농촌정주에 필요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성농업인도 이제는 사회 각 분야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가 늘어날 것이므로 의사결정 과정에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역량을 개발하고 리더쉽을 증진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어진 역할에 상응한 교육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센터를 중심으로 농촌생활 현장의 실질적인 복지기능을 확산해 나가고, 농가도우미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하며, 고교생 학자금과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을 전체 농가로 확대하면서 농과계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보조사업도 새로 도입하여 경제적 부담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농업의 미래, 여성농업인의 미래를 위해 자리해 주신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시면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자리가 여성농업인 발전에 소중하고 귀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인들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농협통합 제4주년 기념식 치사, 2004. 7. 1)

존경하는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

정대근 회장을 비롯한 농협 임직원 여러분 !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국내외 귀빈 여러분 !

오늘로 농협·축협·인삼협 중앙회가 하나가 된지 어느덧 네 돌을 맞았습니다. 이 뜻 깊은 날 여러분들을 모시고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자립·과학·협동의 새농민 정신을 숭선수범하고 협동조합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로운 훈·포장과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와 가족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 농협이 출범한 이래 상호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과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 온갖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정대근 회장과 임직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정대근 회장께서는 통합농협 제2기를 이끌어 갈 중앙회장으로 재선된 것과 함께 지난달 국제농업생산자연맹(IFAP)회의에서 농업협동조합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데 대해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 그리고 농협 임직원 여러분 !

흔히들 21세기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들 합니다. 세계적인 기업인인 빌

케이츠는 “변화하라. 그렇지 않으면 변화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은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쌀협상, DDA협상 등으로 개방의 폭과 속도가 커질 수밖에 없고, 안으로는 농가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농촌은 활력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변화 속에서 우리 농업·농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냉철한 반성을 토대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정부가 먼저 변화하겠습니다. 올해를 “새로운 농정의 원년”으로 삼아 새로운 10년을 열어 갈 농업·농촌종합대책과 119조원 투융자계획을 농업인과 함께 손을 잡고 차질 없이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농정의 추진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 확보인 만큼 농정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하고, 지역의 산·학·연·관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지역농업클러스터를 통하여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협 임직원 여러분 !

통합 농협이 출범한 이후 여러분들은 참 많은 일을 해 내셨습니다. 지난해에는 무디스로부터 국내 은행 가운데 최고인 A3 신용등급을 획득하였는가 하면, 4년 연속 흑자 달성을 이룩하여 농업인 조합원의 실익 증진을 위한 기틀도 닦아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통합당시 200여개에 해당하던 적자 조합도 지난해 26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지역조합의 상호금리도 8.5%로 인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통합농협의 시너지 효과가 가시화되는 것으로 모두가 축하해야 할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고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게 협동조합을 둘러싼 엄연한 현실입니다.

특히, 금년 초에는 구미 장천농협과 파주 교하농협에서 조합원 스스로 조

합 해산을 결정하는 뼈아픈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간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많은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농업인들은 보다 근본적인 변화와 자기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협동조합은 농업인이 있기에 존재가 가능하고, 농업인을 위한 조직입니다. 조합원인 농업인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해 설립된 현재의 협동조합이 당초 목적인 바를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지를 우리 모두 냉철히 돌이켜 볼 때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농업과 농촌발전에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 온 협동조합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협동조합이 농업인들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임직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냉철한 현실 인식과 개혁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농업인들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 농업인을 위해 봉사하는 조직이란 협동조합의 출발 목적부터 새로이 다져 나갈 수 있도록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정신개혁, 문화개혁 노력을 다해 “새로운 협동조합 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둘째, 농업인에게 실익을 주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규모화·전문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더 이상 영세하고 비전문적인 경영형태로는 신용사업이든, 경제사업이든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없으며, 임직원을 위한 조합이란 가슴 아픈 비판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영세한 경영형태에서 벗어나 조합원과 조합의 발전을 위해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되새겨 보아야 하겠습니다.

정부도 부실조합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부실의 원인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묻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자율적으로 합병을 추진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자금지원 등 정책적 배려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사업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개방화의 진전으로 외국의 농산물이 국내 시장에 보다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소비자의 소비패턴도 품질과 안전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통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사업 중심, 산지 마케팅 주체로서의 협동조합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농산물을 수집해서 도매시장이나 시장 상인에게 출하하는 단순한 대행 역할에서 벗어나 여러 조합이 힘을 합쳐 생산단계에서부터 선별·가공·포장하여 상품성을 높이고 시장 교섭력도 키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경제사업 중심의 조합경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품목조합의 활성화와 함께 품목조합 연합회로의 발전을 위한 중앙회 차원의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부터 집중 실시되는 조합장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공명하게 치뤄 지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5일에 있었던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였습니다. 이러한 선거 문화가 지역조합장 선거에도 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동조합의 명예를 걸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조합장 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하고, 불법 선거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다할 것입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깨끗하게 선거를 치르겠다는 자정노력이라 하겠습니다.

농협 임직원 여러분 !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

지금 협동조합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협동조합의 변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농업인들의 당연한 요구입니다. 이 요구에 여러분들께서도 정확한 답을 주셔야 합니다.

인류역사상 수없이 펼쳐졌던 발전과 반전, 생성과 멸멸의 전환점은 대부분 지도자의 고뇌에 찬 결단의 산물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어야 농업인들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협동조합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도 협동조합이 농정의 동반자로서 건전하게 발전하고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농협 창립 43주년, 통합농협 출범 4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거듭 축하하면서 농업인은 물론, 국민의 사랑과 신뢰 속에서 더욱 발전하는 협동조합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농업을 지키고 농촌을 가꾸는 견인차이자 주역

(제9회 한국농업경영인대회 축사, 2004. 8. 4)

친애하는 전국의 12만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회원 여러분 !
그리고 멀리 이곳 경상북도 안동까지 오신 농업경영인 가족 여러분 !

오늘 이곳 유교역사 문화의 중심 고장이자 수천 년 민족의 젖줄이 흐르는 안동시의 낙동강 둔치에서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회원과 가족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 「농업을 우리 손으로, 농촌을 우리 가슴으로!」 라는 기치아래 우리 농업·농촌의 새 희망을 다지는 제9회 전국농업경영인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키고 가꾸는데 헌신해 오신 '서정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전국의 12만 농업경영인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영예를 안으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참석해 주신 국회 농림해양위원회 김광원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의근 경북도지사님과 김희동 안동시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농업경영인 여러분 !

어느 한해 우리 농업과 농촌이 어렵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만 특히 올해는 앞으로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를 가름하는 대내외의 여러 가지 난제가 도사리고 있어 함께 뜻을 모아 현명한 결정을 해야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밖으로는 도하개발아젠다협상과 쌀관세 관련 협상, FTA 등 국제무역환경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할 것을 더욱 거세게 요구하고 있고, 안으로는 농가소득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농촌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고령화되어 개방에 스스로 대응하기가 힘겨운 상황입니다.

반면에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거리와 친환경에 대한 관심증대, 주5일 근무제의 확산에 따른 여가수요의 증가 등 최근 생활패턴의 변화 추세는 우리가 잘만 활용한다면 농업·농촌의 미래에 새로운 기회와 활력이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우선 당면한 쌀관세화 관련 협상에서의 관세화 유예관철과 DDA 협상에서의 개도국 지위 확보를 기본목표로 다각적이고도 총력적인 협상을 전개함으로써 우리 농업이 개방화의 충격을 적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임을 재차 밝혀 드립니다.

위기라고 느낄 때가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상황이 어렵지만 우리 농업·농촌을 새롭게 설계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로 삼고자 향후 10년간의 농업·농촌종합대책과 119조 투융자계획을 이미 마련한 바 있으며, 이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서의 농촌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개방화시대에 농촌에서 우리 농업을 지키는 여러분과 같은 정예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농촌에 거주하면서 자신감과 도전정신을 갖고 우리 농업·농촌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후계농업인을 양성하고, 후계농업인이 선도전업농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경영이양직불제와 농지제도 개편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고품질·친환경 농업을 적극 육성하여 우리 소비자가 우리 농산물을 신뢰하고 외국산보다 우선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를 친환경농업의 원년으로 선포한 바 있으며,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GAP), 생산이력제 등 제도적 뒷받침도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과 우리조상들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농촌관광수요로 연결시키기 위해 약 1천개의 농촌마을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정책들이 지역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산·학·관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함께 추진하는 「지역농업클러스터」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려운 농업·농촌을 위해 마련한 119조 투융자사업은 과거 투융자사업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추진과정에서 점검하고 평가하여 농업·농촌을 살리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사업계획의 성공 가능성이 의심스러우면 예산을 다 못쓰고 남기는 한이 있더라도 집행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각오라는 점을 거듭 밝혀 드립니다.

존경하는 400만 농업인과 12만 한농연 회원 여러분 !

우리 농업에 대한 대·내외적인 도전과 새로운 발전 가능성이 맞물려 있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농업·농촌이 제도약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 전국의 농업경영인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우리농업을 지키고 농촌을 가꾸는 견인차이자 주역임을 다짐하고 결의하는 모습은 참으로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있고 변화에 앞서 행동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맙니다. 농업부문도 예외가 아닙니다.

농업·농촌의 주역인 농업경영인 여러분들의 의지와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해내고야 말겠다는 농업경영인 여러분의 열성만이 위기에 처한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살려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내일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힘을 합쳐 전진합시다.

아무쪼록 이번 대회가 우리 농업경영인 가족의 꿈과 우정을 키우고,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를 활짝 여는 힘과 지혜, 그리고 용기를 모으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행사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서정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장과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전국의 12만 농업경영인을 비롯한 모든 농업인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업분야 정론지로 더욱 발전해가기를

(농민신문 창간 40주년 축하, 2004. 8. 11)

「농민신문」 창간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964년 창간된 이래 「농민신문」은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농정소식과 영농정보를 제공하고, 농촌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여 왔습니다.

도하개발아젠다 협상과 쌀 관세화 관련 협상 등으로 우리 농업이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 이 때, 「농민신문」이 우리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전국의 농업인과 농업관계자들로부터 사랑받는 농업분야 정론지로 더욱 발전해가기를 기원합니다.

공감대 형성의 출발과 최종 결정은 국회를 중심으로

(농어촌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 총회 축사, 2004. 8. 16)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농어촌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고 오늘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이 모임이 새로운 농업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쌀 협상과 국내대책, 농지법 개정, 협동조합 개혁 등 농정의 근간이 되고, 농업인 뿐 아니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공감대 형성의 출발과 최종 결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임의 첫 토론회 주제로 최근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인 쌀 협상과 쌀 정책을 선정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깊다고 하겠습니다.

UR협상 결과에 따라 금년 말까지 진행 중인 쌀 관세화 관련 협상은 미국, 중국, 태국, 호주 등 주요 4개국을 중심으로 3차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해득실의 판단기준이 없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협상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분명한 것은 협상이 어떤 형태로 종결되더라도 쌀 수입량이 늘고 이에 따라 국내 쌀값 하락, 쌀 농가 소득감소 등 불안요인이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현재 쌀 산업보완대책을 마련하여 농업인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 있습니다. 보완과정에서 이를 최대한 반영하고 쌀 협상 추진 등을 보면서 확정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초에 수립된 농업·농촌 종합대책과 119조 투융자 계획도 품목별 생산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세부계획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이 주인이 되어 계획을 세우고 지자체, 지역대학, 농협 등 지역 농업주체들이 스스로 실천하는 농정으로 변화를 만들어 가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투융자시스템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개혁과 농지제도 개선도 개방에 대처 해야 하는 농업인의 입장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올해 안에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농업·농촌의 문제야 말로 우리 모두가 풀어 가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농촌사회가 흔들리는 것은 농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화와 전통, 국가 균형발전과 성장잠재력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농업·농촌의 가치와 미래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 건전한 정책대안이 제시되고 이러한 공감대가 국민들 속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본 모임이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토론회에서 여러분들께서 제시하시는 소중한 의견은 관련대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분야 남북경협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 발족 인사말씀, 2004. 8. 20)

먼저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강문규 대북지원민간단체협의회 회장님, 김성훈 前 농림부 장관님,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님, 황민영 통일농수산포럼 상임이사님, 서경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 참여를 기꺼이 수락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일이 찾아뵙고 위촉장을 드렸어야 함에도 우편으로 송부해 드린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우리 농업과 농촌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금년 초 「새로운 10년을 여는 농업·농촌 종합대책과 119조 투융자계획」을 마련하고 올해를 농정의 원년으로 삼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종합대책에서도 보시다시피 이제 우리의 농업은 생산의 개념을 넘어서 고품질과 안전성을 중요시하는 시점에 와 있고, 개방화시대를 맞아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생산체제의 비효율성, 사회 간접자본 미비, 농자재 공급 부족, 자연재해 등으로 매년 식량이 부족하여 외부의 원조 없이는 버티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주변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남북관계는 꾸준히 발전되어 왔고 북한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는 민간단체와 기업의 헌신적인 대북지원 및 협력사업 추진과 전문가 여러분의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실이라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대북지원 민간단체와 협력기업 그리고 관계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은 '80년대 중반이후 중국의 개혁·개방, 구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로 인한 원조중단과 '95년부터 3~4년에 걸친 가뭄과 수해 등으로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았습니다.

'90년대 중반부터는 경제난과 식량난 해소를 위해 농업부문의 갖가지 개혁조치를 통해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02년도에는 '02.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단행하고 신의주특별행정구,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관광지구를 지정하여 개혁개방을 시도, 실리 중심의 사회구조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근본적인 농업생산체제의 비효율성과 농자재 부족, 자연재해 등으로 경제난과 식량난은 현재까지도 심각하게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한 식량난 완화를 위해 '03년 말 현재 약 1조원 정도의 식량과 비료 등을 무상 또는 차관방식으로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비료는 20만 톤을 이미 지원 완료하였으며, 식량 차관은 총 40만 톤 가운데 국내 쌀 10만 톤을 7월부터 경의선과 동해선 육로를 통해 각각 북한으로 수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식량기구(WFP)를 통해 옥수수 10만 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간은 정부지원과 상호보완 구도 하에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가지고 농업지원 및 기술협력 사업을 추진 중이며, '03년 말 현재 약 34백억 원 가량을 민간차원에서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남북협력기금의 민간단체 지원액(총 100억원) 중 농업분야가 20%(20억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61억원 규모로 민간분야 대북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량과 비료 등을 현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생산기반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난 5월 「제27차 FAO 아태지역총회」에 참석했을 때 북한측 참석자에게 북한의 식량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북한농업 발전을 위해 농업생산기반정비, 종자개량, 산림복구 등의 지원과 협력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정부의 지원과는 달리 종자개량, 농기계수리공장 건립 등 다양한 형태로 북한의 농업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재정과 전문성의 한계, 북한에 대한 정보교환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의 연속성과 지속성이 미흡하며, 단체상호간 중복 또는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민간 또는 민간 상호간 정보교류 및 상호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대북지원과 교류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협의회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 협의회 발족을 계기로 정부와 민간의 적정한 역할분담 및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농업분야 남북경협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전통술은 품위 및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의 하나

(제1회 우리 술 페스티벌 기념행사 인사말씀, 2004. 8. 27)

우리 전통주를 되살리기 위해 「우리 술과 예술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2004 제1회 우리 술 페스티벌」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사의 취지에 동참하시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를 같이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행사의 공동위원장을 맡아 주신 최불암, 조정래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전통주 산업을 여기까지 되살리고 발전시켜 온 업계 대표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우리 민족은 5천년 역사를 이어오며 지역마다 수많은 민속주들이 명성을 자랑하며 일곱 집에 한집 꼴로 전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일제 강점기에 일제의 주세령에 의해 우리 조상들의 가양주(家釀酒) 문화가 명맥이 끊어지고, 소수의 주류들만이 전래의 제조방식과는 달리 질 낮게 생산됨으로써 양질의 전통주가 거의 말살되는 비운을 겪었습니다.

해방이후에도 식량난과 급격한 산업화 등으로 우리 술의 복원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현재에도 수입산 포도주, 위스키 등 수입주류들이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전통술은 품위가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의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도 소비자에게 파고 들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 우리 전통주를 되살려 보자는 굳은 각오로

이러한 행사를 마련하게 된 것임. 연간 약 7조원이 넘는 주류시장에서 우리 농산물로 만든 양질의 우리 술을 한자리에 모아서, 소비자의 건강도 생각하고 술 마시는 예절도 가르치고,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우리 술을 살려내 보고자 함. 많은 분들이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고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전국 각지에서 출품된 다양한 우리 술을 시음을 통해 평가해 보시고, 우리 술이 보다 빨리 우리나라에 정착될 수 있도록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알의 종자가 세계를 바꾼다

(2004 아시아·태평양종자협회(APSA) 서울총회 축사, 2004. 9. 14)

존경하는 APSA(아시아·태평양지역 종자협회) 비니치 추안차이 회장님!
집행위원 여러분!

특별주제 발표를 해주실 아트로 마르티네즈 박사를 포함한 발표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같이 해 주신 국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아시아·태평양지역 Seed Festival이라 할 수 있는 2004 APSA 서울총회에 참석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한국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이번 총회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고희선 조직 위원장님과 서기호 한국종자협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4년 창설된 APSA 총회는 그동안 이 지역 종자협력체로서 종자산업관련교류와 기술협력 및 무역촉진에 커다란 업적을 이룩해 왔으며, 이는 회원 여러분과 APSA 집행부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2004 서울총회에서도 “종자별 분과회의”와 “기술동향발표회”, “무역상담실운영” 등 여러 가지 행사가 차질 없이 수행되어 성공적인 결실을 맺기를 기대합니다.

2004 APSA 서울총회 참가자 여러분 !

종자는 예로부터 인류의 고귀한 문화적 자산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우리 조상들은 “굶어 죽어도 다음 농사를 위한 씨앗은 남긴다”고 할 정도로 종자

를 중요시 하였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한 알의 종자가 세계를 바꾼다”고 할 정도로 종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21세기 농업은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변화하는 21세기 농업기술의 중심에 있는 것이 정보화와 생명공학의 발전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농업생명공학의 발전이 급속히 실용화되고, 무한한 가능성이 나타나는 분야가 바로 종자산업입니다.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량부족·기아문제도 결국 우수한 종자를 개발하여 공급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2004 APSA 서울 총회가 열리는 것을 매우 중요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4 APSA 서울총회 참가자 여러분 !

종자 생산과 공급에 시장원리가 강화되고, 종자 교역의 국제화 및 자유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지역은 세계 채소종자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시아-태평양 권역의 모든 국가가 UPOV 규정에 따라 식물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보장하여 우수품종 개발이 촉진되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권역의 종자 무역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국이 공정한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종자산업을 바이오테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6위의 유전자원 보유국으로서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였으며, 바이오그린 21사업에 연구역량을 결집시켜 2010년까지 세계 5위의 농업생명공학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신품종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UPOV 50번째 회원국으로써 1997년부터 UPOV규정에 부합하도록 종자산업법을 개정하여 품종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품종육성자의 권

리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외국의 우수 품종이 안전하게 국내에서 출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자본이 국내에서 자유롭게 종자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여러 외국종자업체가 한국에 진출하였으며, 한국에 진출한 기업은 국내의 우수한 육종진과 빼어난 기술인력을 바탕으로 활발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4 APSA 서울총회를 계기로,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우수한 육종능력 보유국인 한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 종자산업 발전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2004 APSA 서울총회 참가자 여러분 !

이번 행사기간동안 여러분이 한국농업의 이모저모를 살펴보고, 한국 종자산업 관계자와 상호 정보를 교환하여 무역을 증진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APSA 서울총회가 여러분 모두에게 유익한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종자를 통하여 국제간의 이해와 교류의 폭을 넓히고 인류가 더불어 사는 협력의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사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국에서의 총회기간동안 종자관련 기술정보교류 및 무역상담 등을 통해 뜻 깊은 결실을 맺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마산업의 저변 확대와 국민의 건전한 레저스포츠로 정착

(한국마사회 창립 제55주년 기념 축사, 2004. 10. 1)

전국의 경마가족 여러분!

박창정 회장님을 비롯한 한국마사회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한국마사회 창립 제55주년을 맞이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마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출발한 한국마사회는 지난 55년간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룩하여 왔습니다.

금년 6월에는 우리나라가 국제경마연맹(IFHA)으로부터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과 같은 「Part III 경마시행국」으로 공식승인을 받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로써 우리 경마산업은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제적 지위와 국제화의 기반을 확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경마가 있기까지 헌신적인 노력으로 우리의 경마산업을 발전 시켜 온 한국마사회 임직원과 유관단체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아테네 올림픽에서 정정당당한 경기로 국위를 선양하고 국민에게 기쁨과 자긍심을 안겨 준 유도의 금메달리스트 이원희 선수와 은메달을 획득한 장승우 선수를 비롯한 모든 마사회 선수단 여러분께도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의 경마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 경마산업은 대내외적으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경쟁산업의 성장과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환경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아직도 광범위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경마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경마를 국민의 건전한 레저스포츠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바탕으로 끊임없는 경영혁신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경마가 사행성 도박이라는 고착화된 이미지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경마운영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혁신해 나가야 합니다.

건전한 중산층이 가족과 함께 즐겁게 경마를 즐길 수 있도록 관람시설과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휴식과 놀이공간도 확충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마사회 경영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경영실태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경마 시스템을 경쟁중심의 선진화된 체계로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부정경마나 경마중독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혁신노력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적극 홍보해 나가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사회가 올해를 「마사회 이미지혁신 추진 원년」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을 강화하고, 내부 경영혁신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국산 경주마 육성과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경마의 질적 수준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마필 개량과 효율적인 관리로 경주마의 능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 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주마 육성을 위해 금년에 착공한 장수 육성목장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건설되어야 하겠습니다.

한국 마사회는 그 이익금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공익기업으로 우리 축산업의 발전과 농어촌 사회복지 증진에도 커다란 기여를 해 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마사회가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경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한국 마사회 창립 제55주년을 축하드리며 한국 마사회의 무궁한 발전과 경마가족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도자와 숨은 일꾼을 발굴, 격려하는데도 전력을 다해 주길 기대

(제13회 대산농촌문화상 시상식 축사, 2004. 10. 12)

존경하는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

류태영 재단이사장님과 재단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

오늘, 제13회 대산농촌문화상 시상식을 맞이하여 대산 故 신용호 선생님의 높은 업적을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산농촌문화재단은 농촌문화의 창달, 학자금 지원, 농업인 교육, 연구지원사업 등 우리 농촌·농업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산농촌문화상을 제정하여 매년 농업구조개선, 농촌교육문화, 농업공직부문 등 각 분야에서 공헌한 농업인과 단체 등을 발굴하여 표창하는 등 농업인의 복지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뜻 깊은 영예의 대산농촌문화상을 수상하시는 여주 자영농업고등학교 두창묵 교장선생님, 화천군 농업기술센터 최수명님과 경남 사이버농업인연합회 이동수 회장님의 훌륭한 업적과 아트팜 영농조합법인의 성공경영 그리고 임실군 농업기술센터의 헌신적 공복자세에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농업인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정부는 무엇보다도, 올해 가장 큰 농정현안인 쌀 관세화 관련협상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는 한편,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쌀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고자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만 TRQ 증량수준, 관세화 유예기간, 소비자 시판 등 여러 쟁점에서 협상 상대국과는 상당한 입장차가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우리 쌀 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에 있어 먼저, 농업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쌀 농가가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소득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추곡 수매제도도 개편하는 등 쌀 산업 보완대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쌀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당년도 가격과의 차이의 일정수준을 직접지불로 보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실시해 왔던 논농업직불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를 고정형직불제와 변동형직불제로 개편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이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농정의 근간을 이루는 협동조합·농지제도를 새로운 여건에 맞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협동조합이 농업인에게 실익을 주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미 농민단체, 농협중앙회와의 협의를 거쳐 농협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법 개정 이외의 개혁과제도 함께 추진하여 협동조합 전문화와 농산물 유통혁신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영농의 규모화와 농촌 활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되, 우량농지는 최대한 보전해 나가면서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투기 등 부작용의 방지대책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직접지불제를 대폭 확충하고 농작물 재해보험을 내실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친환경축산 직불제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를 시범사업으로 시행하였으며, 우리실정에 맞고 WTO규정에 합치하는 직접지불제를 내실화하고 확대하여 2013년까지 농가소득의 10% 수준까지 늘려 나가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내년부터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재보험기금을 설치하여 최근 빈발하는 거대재해에서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보험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소비자의 식탁에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우리 농산물의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금년부터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2013년까지 현재의 60% 수준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생산이력제 등 선진 제도의 조기 정착을 통해 우리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한 단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성숙된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정부, 지방자치단체, 현장에 계시는 농업인, 특히 지방대학이 같이 손을 잡고 지방의 특성을 살린 지역농업클러스터를 만들어 함께 대책을 세워 나가고 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우선 2005년에는 10개 정도의 시범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단계적으로 성공 사례를 만들고 이를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도농간 균형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삶의질향상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범정부 차원의 농촌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와 고교생학자금 지원을 늘려 나가고 농촌출신 대학생과농업계열 대학생의 학자금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의 건강

보험료와 연금보험료도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통하여 도시와 농촌이 공존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가고, 1社 1村운동 등 다양한 도·농 교류 확산과 농촌관광을 활성화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온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위기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래를 헤쳐 나갈 용기와 자신감입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입니다.

농정에 대한 신뢰 없이는 농업·농촌 투융자 사업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먼저 나서겠습니다. 정책 수립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농촌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반영하겠습니다.

여기에 대산농촌문화재단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해 오신 것처럼 농촌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 주시고 앞으로 우리 농업을 이끌어 나갈 선도자와 묵묵히 일하는 숨은 일꾼을 발굴, 격려하는데도 전력을 다해 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13주년을 맞은 대산농촌문화상 시상식을 축하드리며 농업인과 모든 국민의 사랑과 신뢰 속에서 우리 농업과 농촌을 위해서 큰 기여를 해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과 농촌에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실 것

(나의 농촌문화답사기 시상식 축사, 2004. 10. 14)

농촌을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존경하는 유홍준 문화재청장님, 김진배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님 그리고 김천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회장님!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정재돈 전국농민연대 상임대표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농업과 농촌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실시한 '제1회 나의 농촌문화답사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심사위원님들이 심사후기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수기공모전에서는 우리 사회의 밝은 희망을 느끼게 하는 글이 많았으며, 특히 중·고등부의 작품에서 조금씩 농촌을 이해하고 느끼고 스며들어 가는 과정은 나의 농촌문화답사기 공모전의 성과라고 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에 치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공모전에서 농촌과 농업의 의미를 진솔하고 순수하게 표현함으로써 대상을 수상한 이연실 양을 비롯한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

정부는 무엇보다도, 올해 가장 큰 농정현안인 쌀 관세화 관련협상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는 한편,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

니다.

현재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쌀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고자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만, TRQ 증량수준, 관세화 유예기간, 소비자 시판 등 여러 쟁점에서 협상 상대국과는 상당한 입장차가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우리 쌀 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에 있어 먼저, 농업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쌀 농가가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소득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추곡 수매제도도 개편하는 등 쌀 산업 보완대책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쌀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당년도 가격과의 차이의 일정수준을 직접지불로 보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실시 해 왔던 논농업직불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를 고정형직불제와 변동형직불제로 개편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이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농정의 근간을 이루는 협동조합·농지제도를 새로운 여건에 맞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협동조합이 농업인에게 실익을 주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미 농민단체, 농협중앙회와의 협의를 거쳐 농협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법 개정 이외의 개혁과제도 함께 추진하여 협동조합 전문화와 농산물 유통혁신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영농의 규모화와 농촌 활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되, 우량농지는 최대한 보전해 나가면서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투기 등 부작용의 방지대책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직접지불제를 대폭 확충하고 농작물 재해보험을 내실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친환경축산 직불제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를 시범사업으로 시행하였으며, 우리 실정에 맞고 WTO규정에 합치하는 직접지불제를 내실화 하고 확대하여 2013년까지 농가소득의 10% 수준까지 늘려 나가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내년부터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재보험기금을 설치하여 최근 빈발하는 거대재해에서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보험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소비자의 식탁에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우리 농산물의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금년부터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2013년까지 현재의 60% 수준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생산이력제 등 선진 제도의 조기 정착을 통해 우리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한 단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성숙된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정부, 지방자치단체, 현장에 계시는 농업인, 특히 지방대학이 같이 손을 잡고 지방의 특성을 살린 지역농업클러스터를 만들어 함께 대책을 세워 나가고 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우선 2005년에는 10개 정도의 시범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단계적으로 성공사례를 만들고 이를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도농간 균형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삶의질향상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범정부 차원의 농촌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와 고교생학자금 지원을 늘려 나가고 농촌출신 대학생과 농업계열 대학생의 학자금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의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도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통하여 도시와 농촌이 공존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가고, 1社 1村운동 등 다양한 도·농 교류 확산과 농촌관광을 활성화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온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나

가겠습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향후 10년간의 농업농촌종합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우리 농촌이 살기 좋은 농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범국민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민들께서 농업과 농촌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 주신다면 정부, 농촌주민, 지자체가 향후 부딪히게 될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격려가 되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국민여러분들이 농업과 농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정부, 농촌주민, 지자체가 합심하여 농촌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포함한 국민들께서도 앞으로 더욱더 농업과 농촌에 대한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수상자여러분께 축하를 드리며 참석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곁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야 할

(제32회 양봉인의 날 기념 축사, 2004. 10. 17)

전국의 4만 양봉농가와 한국양봉협회 정해운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박준영 전라남도지사님, 최형석 담양군수님, 그리고 평소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내빈 여러분!

오늘 제32회 양봉인의 날을 맞이하여 가시문학의 산실이자 대나무의 고향인 이 곳 담양에서 여러분을 모시고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국의 양봉농가와 농업인 여러분!

우리 농업과 농촌은 참으로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고, 중요한 시점에서 있습니다.

쌀 관세화 관련 협상, DDA협상, 앞으로 계속 확대될 FTA 등을 국민적 공감대와 역량을 모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농업·농촌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담은 「농업·농촌 종합대책」 과 119조 투입자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종합대책의 중심은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촌사회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우선, 2013년까지 농업인의 소득을 도시근로자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WTO에서 허용하는 직접지불제를 농가소득의 10%까지 확대하고, 농촌관광 등 다양한 농외소득원을 확충할 것입니다.

또한 농촌의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금년에 제정된 「삶의 질 향상특별법」을 계기로 범정부적인 대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농촌의 교육·의료·복지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고 이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 하에서, 정부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중추적인 농업인력을 양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쌀·축산 등 분야별로 약 20만호의 전업농을 우리 농산물 생산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핵심인력으로 육성하는 한편, 중소농·고령농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소득보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앞으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농산물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소비자 식탁에 친환경 안전 농산물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우수농산물 관리제도(GAP)등 선진화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기질비료 등 친환경 농자재 지원을 확대하고 대규모 친환경농업 단지 조성 등을 통해 친환경유기 농산물의 비중을 현행 2%에서 2013년까지 10%로 늘리겠습니다.

셋째,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쌀 협상에서 최대한 유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쌀 협상결과와 관계없이 우리 쌀 농가가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소득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현행 논농업직불제를 고정형직불로,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변동형직불로 개편하여 쌀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보전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넷째, 지방이 스스로 농업·농촌의 활로를 찾아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의 농업 특색을 고려한 클러스터가 형성·발전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은 농림부장관이 혼자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남의 농업은 여기계신 도지사님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방 정부와 지역대학·생산자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지역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이를 심사하여 집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2013년까지 7조원을 지원하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전국 1천개 권역의 농촌마을을 농촌다움과 쾌적함이 공존하는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충분한 준비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조언을 받아 내실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전국의 양봉농가와 농업인 여러분!

우리 양봉산업은 지난 1995년 585억원에 불과했던 생산액이 2003년에는 2,010억원에 달하여 무려 3배가 넘는 규모로 성장하였습니다.

그간 벌꿀 수입증가와 밀원 부족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이처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러분의 노력 덕택이라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은 봄철 잦은 비와 저온 등 기상여건이 어려웠고 아카시아 나무에 병충해가 발생하여 양봉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191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양봉산업이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꿀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가에서 생산한 품질 좋은 벌꿀은 양봉협회나 농협 등을 통한 공정하고 정확한 품질인증과 표시로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둘째, 정부에서는 양봉인의 최대 숙원인 밀원식물 식재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림청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림사업도 백합나무, 헛개나무와 같은 수종을 우선 식재토록 함으로써 한 지역에서 장기간 채밀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셋째,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활용하여 로열 젤리, 프로폴리스, 화분 등 2차 생산물 분야를 육성·발전시켜 양봉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양봉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정부도 항상 여러분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제32회 양봉인의 날을 축하드리며 오늘 행사 준비에 애쓰신 한국양봉협회 정해운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신문은 우리 축산업에 나침반이 되고

(축산신문 19주년축사, 2004. 10. 18)

축산신문 창간 1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85년 창간된 축산신문은 그동안 축산농가에게는 변함없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정부에게는 지지자로서 때론 비판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 우리나라 축산발전에 크게 이바지해왔습니다.

'85년 창간 당시 약 3조원 수준이었던 축산업 생산액은 2003년에는 그 3배인 약 9조원에 이르는 등 그간 우리 축산업은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난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95년 WTO체제 출범 이후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시장이 차례로 개방되었고, 최근에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이 빈발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축산업이 성장산업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1차적으로 축산농가와 축산관련단체의 땀과 노력의 결과라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 축산신문을 비롯한 전문언론의 역할도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축산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인 여러분!

우리 축산업이 국민과 소비자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선진축산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DDA 협상, FTA 확대 등 시장개방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은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등 축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일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소비자의 요구에 맞게 우리 축산업을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 공급함으로써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농장에서부터 건강한 가축사육환경을 조성하고, 항생제 등 동물약품의 사용량을 줄여 나갈 때만이 가능해집니다. 도축, 가공, 유통과정에서 위생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환경문제의 해결 없이는 우리 축산업은 설자리가 없다는 비장한 각오로 친환경 축산을 정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를 줄이고 분뇨를 퇴비나 액비로 자원화하여 농지로 환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구제역과 같은 악성가축질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기 농장은 스스로 책임진다는 자세로 주기적인 농장소독과 출입자 통제 등 자율적인 방역활동을 철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수입축산물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고품질 우수축산물브랜드를 생산·공급해 나가야 합니다.

종축과 사료, 그리고 사양방법을 통일하여 균일한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도축·가공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우수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데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정책과제 해결을 위하여 지난 2월 농업·농촌종합대책과 119조원 투융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각 품목단체와 협의하여 품목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2월 [축산물브랜드 육성계획]을 시작으로 [쇠고기 이력추적시

스텝 추진계획(5월)],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 종합대책(7월)], [가축방역 종합대책(8월)]을 각각 수립하였으며, 환경부와 공동으로 수립 중인 [축산분뇨의 관리·이용대책]이 마무리 단계에 와있는 등 분야별 세부계획도 착실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축산농가, 축산관련단체, 정부가 힘과 지혜를 모으고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우리 축산업은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이겨내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끝으로 축산신문이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우리 축산업에 나침반이 되고 축산농가, 관련업계 그리고 정부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가교(架橋)역할을 담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뜻 깊은 축산신문 창간 19돌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독자들의 보다 많은 사랑과 함께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농산물가공 및 식품산업이 발전되어야 농업도 성장 가능

(한국전통식품 BEST 5 선발대회 수상제품 시상식 축사, 2004. 10. 21)

우리 전통식품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2004 한국전통식품 Best 5 선발대회」에서 영예의 大賞인 대통령상을 차지한 (주)동원F&B 대표 박인구사장님을 비롯한 수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과 농촌은 참으로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고, 중요한 시점에 서있습니다.

쌀 관세화 관련 협상, DDA 협상, 앞으로 계속 확대될 FTA 등을 국민적 공감대와 역량을 모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농업·농촌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담은 「농업·농촌 종합대책」과 119조 투융자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종합대책의 중심은 농가의 소득을 향상 시키고, 농촌사회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우선, 2013년까지 농업인의 소득을 도시근로자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WTO에서 허용하는 직접지불제를 농가소득의 10%까지 확대하고, 농촌관광 등 다양한 농외소득원을 확충할 것입니다.

또한 농촌의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금년에 제정된

「삶의 질 향상특별법」을 계기로 범정부적인 대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본방향 하에서, 정부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쌀·축산 등 분야별로 약 20만호의 전업농이 우리 농산물 생산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중추적인 핵심 농업 인력으로 양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앞으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농산물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소비자 식탁에 친환경 안전 농산물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우수농산물 관리제도(GAP) 등 선진화 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쌀 협상에서 최대한 유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쌀 협상결과와 관계없이 우리 쌀 농가가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소득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넷째, 지방이 스스로 농업·농촌의 활로를 찾아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의 농업 특색을 고려한 클러스터가 형성·발전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은 농림부 장관이 혼자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정부와 지역대학·생산자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지역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이를 심사하여 집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2013년까지 7조원을 지원하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전국 1천개 권역의 농촌마을을 농촌다움과 쾌적함이 공존하는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업체 및 종사자 여러분! 개방과 경쟁은 우리농업 뿐 아니라 모든 산업분야에 경쟁력 제고를 위한 끊임없는 혁신을 요구하고 있으며, 농산물 가공업체들 또한 예외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우리 전통식품의 개발·육성과 소비홍보 등을 적극 지

원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농업·농촌대책 및 투융자 계획에 따라 우리 식품산업의 발전과 세계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생산자 스스로의 노력입니다. 수상자 여러분들도 오늘 수상에 만족하지 마시고 엄격한 품질관리와 우수한 제품개발에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비록 입상하지는 못했지만 BEST 5 선발대회에 출품한 모든 제품들은 이미 그 우수성이 인정된 제품들입니다. 농산물가공 및 식품산업이 발전되어야 농업도 성장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산물 가공 및 식품산업이 더욱 성장 발전하도록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본 행사를 위해 수고가 많았던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 드리며, 아울러 수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비자의 믿음을 확고히 하는 지름길은 바로 브랜드 육성

(2004축산물브랜드경진대회 및 전시회 치사, 2004. 10. 21)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행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김천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소비자단체장님과 축산관련 단체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여러 지도자 분들과 함께 「2004년도 제2회 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 및 전시회」에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애쓰신 농협중앙회 정대근 회장님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남호경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제2회 축산물브랜드경진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한우 부문과 돼지부문을 비롯한 여러 수상업체에게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의 농업인과 소비자 여러분!

우리 농업과 농촌은 참으로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고, 중요한 시점에서 있습니다.

쌀 관세화 협상, DDA협상, 앞으로 계속 확대될 FTA 등을 국민적 공감대와 역량을 모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농업·농촌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담은 「농업·농촌종합대책」과 119조 투융자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종합대책의 중심은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촌사회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우선, 2013년까지 농업인의 소득을 도시근로자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WTO에서 허용하는 직접지불제를 농가소득의 10%까지 확대하고, 농촌관광 등 다양한 농외소득원을 확충할 것입니다.

또한 농촌의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금년에 제정된 「삶의 질 향상특별법」을 계기로 범정부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의 교육·의료·복지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고 이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 하에서, 정부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중추적인 농업인력을 양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쌀·축산 등 분야별로 약 20만호의 전업농을 우리 농산물 생산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핵심인력으로 육성하는 한편, 중소농·고령농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소득보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쌀 협상에서 최대한 유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쌀 협상결과와 관계없이 우리 쌀 농가가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소득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현행 논농업직불제를 고정형직불로,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변동형직불로 개편하여 쌀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보전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지방이 스스로 농업·농촌의 활로를 찾아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의 농업 특색을 고려한 클러스터가 형성·발전되어야 합니다.

지방 정부와 지역대학·생산자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지역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이를 심사하여 집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2013년까지 7조원을 지원하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전국 1천개 권역의 농촌마을을 농촌다움과 쾌적함이 공존하는 삶의 터전으

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충분한 준비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조언을 받아 내실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다섯째, 앞으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농산물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소비자 식탁에 친환경 안전 농산물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등 선진화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기질비료 등 친환경 농자재 지원을 확대하고 대규모 친환경농업 단지 조성 등을 통해 친환경유기 농산물의 비중을 현행 2%에서 2013년까지 10%로 늘리겠습니다.

축산인 여러분!

우리 축산업의 미래 역시 소비자의 신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축산물이 품질과 안전성 면에서 소비자의 믿음을 확고히 하는 지름길은 바로 브랜드 육성입니다.

우수 축산물브랜드를 통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선택기준을 제시하고 수입 축산물과 시장차별화를 확실히 해 나간다면 우리 축산업은 개방화의 도전을 극복하고성장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명실상부한 우수브랜드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균일한 축산물을 생산하고 위생적인 가공과 유통으로 소비자가 믿고 다시 찾도록 해야 합니다.

축산분뇨를 제대로 처리하고 가축 방역도 철저히 하여 국민에게 불편과 걱정을 끼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축산인들의 노력으로 최근 축산물브랜드는 양적 성장은 물론 질적으로도 많은 발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브랜드가 세계 최고수준의 브랜드로 커 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축산인 여러분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우수 브랜드경영체를 선별하여 자금을 집중지원하고 브랜드 인증제 도입 등 우수브랜드가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하여 우수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대형 유통업체와 연계한 판로개척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이 행사는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수상의 영광을 안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들께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악성가축전염병의 청정화와 세계 수의학산업계의 발전을

(제13차 아시아·태평양수의사회 서울총회 개막식 축사, 2004. 10. 25)

존경하는 아시아태평양수의사회(FAVA) 마타 압둘 라만 회장님!
허버트 슈나يدر 세계수의사회 회장님을 비롯한 초청연사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같이 해 주신 FAVA 회원국 대표단 및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아시아태평양수의사회 제13차 서울총회에 한국 정부의 대표로 참석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수고하신 이우재 대한수의사회장님, 정영채 조직위원장님을 비롯한 대한수의사회와 조직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FAVA는 1978년에 아시아지역 6개국 수의사회가 참여하여 창설된 이래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는 아시아·태평양지역 18개국의 수의사회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FAVA는 그 동안 활발한 정보교류와 연구협력을 통해 수의학과 축산업 발전에 커다란 업적을 남겼으며, 앞으로도 세계 수의계를 선도하는 기구로서 더욱 크게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한국에는 1만여 명의 수의사들이 산업현장과 학계 등 각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조기 종식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하였고 생명공학분야에서도 크게 기여하여 국내 학계

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13차 FAVA서울총회 참가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수의사의 임무는 가축질병의 예방과 치료,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의 퇴치, 축산식품 안전관리 및 동물복지의 증진 등 매우 다양하며, 앞으로 그 중요성은 한층 더 커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부터 개최될 서울총회는 '생명공동체내에서의 사람과 자연, 그리고 동물과의 자연스러운 조화'를 주제로 다양한 학술행사를 통해 수의축산업계의 발전과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의 적절한 보호를 위하여 1991년에 동물보호법을 제정하였으며, 지난 10. 6일에는 동물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하여 「동물보호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이 개정·시행될 경우 한국에서의 동물보호 수준도 한 단계 더 높아지게 되어 사람과 동물, 그리고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오늘 개최되는 FAVA서울총회의 정신을 구현하는데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본인은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종료되어 최근 이 지역에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인류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청정화와 세계 수의축산업계의 발전을 위한 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가을은 한국의 4계절중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계절입니다.

참가자 여러분께서는 행사기간 동안 한국의 가을정취를 마음껏 즐기면서 600년 전통에 빛나는 수도 서울의 문화와 전통도 체험하고, 이 행사를 계기

로 더 많은 정보교류를 통해 상호발전을 도모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내 참가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참여로 수의·축산분야의 역량을 집결하고,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널리 홍보함과 아울러, 국제간의 유대와 결속을 도모하는 훌륭한 대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사의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농업·농촌 재도약에 전국의 농촌지도자가 앞장서 줄 것

(제36회 전국농촌지도자대회 차사, 2004. 10. 28)

존경하는 8만 농촌지도자회원 여러분 !

강대기 회장을 비롯한 농촌지도자 가족 여러분 !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과 내외 귀빈 여러분 !

오늘 제36회 농촌지도자대회를 맞이하여 여러분을 모시고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농촌지도자회는 1947년 농촌자원지도자로 출발한 이후 농촌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다해 왔을 뿐만 아니라 과학영농의 선도적인 실천과 농촌 후계인력의 육성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농촌지도자 한분 한분의 노고에 대해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우리 농업과 농촌은 참으로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고, 중요한 시점에서 있습니다.

쌀 관세화 관련 협상, DDA협상, 앞으로 계속 확대될 FTA 등을 국민적 공감대와 역량을 모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우리 농업을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농업·농촌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담은 「농업·농촌종합대책」 과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119조 투융자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종합대책의 핵심은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촌사회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우선, 2013년까지 농가소득을 도시근로자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WTO에서 허용하는 직접지불제를 농가소득의 10%까지 확대하고, 농촌관광 등 다양한 농외소득원을 확충할 것입니다.

또한, 농촌의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금년에 제정된 「삶의질 향상특별법」을 계기로 범정부적인 대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농촌의 교육·의료·복지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고 이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하에서, 정부는 개방화 시대에 우리 농업을 지켜 낼 수 있도록 미래농업을 선도할 정예인력을 중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경영이양 직불제와 영농규모화 지원, 농지제도 개편 등을 통해 2010년까지 6ha수준의 쌀전업농 7만호를 양성하겠습니다.

축산분야에서도 전업농 2만호를 양성하여 우리 축산의 85%이상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사과·배·감귤 등 6대 과수산업도 1조 2천억 원의 FTA 기금을 활용하여 품질경쟁력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생산뿐만 아니라 농산물 유통부문에서도 전문인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전국의 5개 대학에 유통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세워 1년에 450명씩, 10년 동안 총 4,500명의 인력을 유통핵심 인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둘째,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쌀 협상에서 최대한 유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쌀 협상결과와 관계없이 우리 쌀 농가가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소득보완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현행 논농업직불제를 고정형 직불로,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변동형 직불로 개편하여 쌀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보전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고품질·친환경 농업을 적극 육성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고히 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수농산물 관리제도(GAP), 이력추적제,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금년부터 시작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권역별로 특색 있는 농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금년 36개 권역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000개의 권역을 조성하여 도시민들이 농촌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문학, 건축학, 미학 등 각계 전문가들과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충분한 준비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조언을 받아 내실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다섯째, 지방이 스스로 농업·농촌의 활로를 찾아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농업의 특색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클러스터가 출현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은 농림부장관이 혼자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의 농업은 지역농업인과 개별 지자체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합니다.

지방정부와 지역대학·생산자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지역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이를 심사하여 집중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5년에는 10개 정도의 시범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단계적으로 성공사례를 만들어 이를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에는 농정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농지제도는 우량농지를 최대한 보전하면서 농촌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소유와 이용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급격한 농지가격 하락 등 시장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 제도도 새로이 도입하겠습니다.

양정제도도 쌀협상, DDA협상이라는 여건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되, 농업인들의 불안이 최소화되도록 보완장치도 마련할 것입니다.

협동조합이 농업인에게 실익을 주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협동조합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농촌지도자회원 여러분!

위기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래를 헤쳐나 갈 용기와 자신감입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입니다.

농정에 대한 신뢰 없이는 농업·농촌 투융자 사업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먼저 나서겠습니다. 정책 수립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농촌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반영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농촌지도자회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까지 헌신해 오신 것처럼 우리 농업·농촌이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전국의 농촌지도자 여러분이 앞장서 줄 것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제36회 농촌지도자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래 우리 농업의 주역이며, 농업·농촌 발전을 책임질 지도자

(한국영농학생전진대회 축사, 2004. 10. 29)

친애하는 영농학생 여러분 ! 내외귀빈 여러분 !

이곳 전통 농촌문화가 숨쉬는 강진에서 서른 세 번째 한국영농학생전진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21세기 우리 농업과 농촌의 주역으로 활동하게 될 영농학생 여러분들 만나 뵙고 이렇게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능한 청년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전국의 농업고등학교 선생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뛰어난 성적을 거두어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수상자 한분 한분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랑스런 영농학생 여러분 !

21세기는 지식정보사회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토지, 노동, 자본이 중요시되었던 지난 20세기 산업사회에서는 대규모 영농을 하는 농업수출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우리농업이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지식과 정보가 중시되는 현대사회에서는 우리농업도 생명공학과 정보, 기술을 잘 활용한다면 고부가가치를 창조하는 첨단 생명·환경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정보사회에서는 한사람의 뛰어난 인재와 지도자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한사람의 리더가 전체를 먹여 살린다는 말도 있듯이

한사람의 뛰어난 농업인이 우리 농업과 농촌의 모습을 바꾸어 갈 것입니다.

실제로 농업분야에서도 많은 신지식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경영기법으로 역대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주위의 다른 농업인과 더불어 농촌에서 우리농업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기계신 영농학생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이고, 또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우리농업의 희망을 보고 싶어 이곳에 왔습니다.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유능하고 패기 있는 영농학생이 있는 한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의 앞날은 여러분들의 두 어깨에 달려 있음을 잊지 마시고, 더 나은 지식과 기술 그리고 경영능력을 배양하도록 정진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친애하는 농업고등학교 선생님과 영농학생, 내외귀빈 여러분!

현재 우리농업은 FTA, DDA, 쌀재협상 등 개방화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은 위협요소도 내포하고 있지만 대응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신지식농업인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오히려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 위기와 도전을 우리 농업·농촌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금년부터 10년간 119조를 투입자하는 농업·농촌종합대책을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보다 경쟁력있는 농업,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서 농촌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개방화시대에 미래 우리농업을 선도할 정예인력을 중점 육성하여 농업의 체질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신지식을 바탕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끊임없이 연구하여 소비자를 감동시키는 경영능력이 있는 전문인재를 양성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다양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후계농업인 및 전업농

육성정책 등 다양한 인력 육성정책을 마련하여 여러분들이 영농에 정착하여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뒷받침 하겠습니다.

경영이양직불제와 영농규모화지원, 농지제도 개편 등을 통해 2010년까지 6ha 수준의 쌀전업농 7만호를 양성하겠습니다.

축산분야에서도 전업농 2만호를 양성하여 우리 축산의 85% 이상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원예·특작 분야도 1조 2천억원의 FTA기금 등을 활용하여 품질경쟁력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에서의 삶도 도시와 차별이 없도록 교육과 의료 등 농촌의 복지 문제를 국가에서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비와 고교생학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농촌출신 대학생의 학자금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영농학생 여러분 !

여러분들은 미래 우리 농업의 주역이며, 21세기 지식농업을 선도하고, 농업·농촌 발전을 책임질 지도자입니다 !

정부는 여러분들이 창업하여 신명나게 꿈을 펼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농업의 미래며 희망이라는 자긍심과 강한 의지를 갖고 농업·농촌의 주역이 되도록 노력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한국영농학생전진대회의 개최를 준비하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개방화시대를 이겨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제3회 LOVE米 농촌사랑 마라톤 대회 축사, 2004. 10. 30)

대회 창설 삼년 째를 맞이하는 「LOVE米 농촌사랑 마라톤」이 올해도 많은 마라톤 애호가, 국민들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개최하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참가자가 늘어나는 등 국내 유수의 마라톤대회와 견주어 손색없는 훌륭한 행사로 성장하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은 농민신문사 관계자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대회가 바쁜 일상에 지친 도시민들이 심신을 단련하여 삶의 활력을 되찾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개방화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농촌, 그리고 농업인들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04년은 우리 농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해입니다. 지난 '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이후 10년 동안 관세화 유예를 받아왔던 우리 쌀 시장의 개방 확대를 놓고 미국·중국·태국 등 9개 나라와 힘든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협상에 만전을 기하면서 직접지불제도 보완, 양정제도 개편 등 국내 쌀 산업 종합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개방 충격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과연 우리 농업을 지켜 내기 위한 최선의 대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생명이 살아 숨쉬는 우리 땅에서 농업인들이 땀 흘려 생산한 고품질의 우리 농산물을 많이 애용함으로써 농업인들이 개방화시대를 이겨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옛말에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맘껏 발휘하시되, 자칫 지나친 운동으로 건강에 무리가 가는 일이 없도록 깊어 가는 가을을 정취를 맘껏 즐기면서 달리시길 바랍니다.

참가자 모두에게 완주의 기쁨이 함께 하길 바라며,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1세기 선진농업·복지농촌을 실현을 위한 다짐의 자리

(한국4-H본부 창립 50주년 치사, 2004. 11. 9)

존경하는 이영래회장님을 비롯한 전국의 4-H 회원 여러분 !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광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 이재오 의원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 !

오늘 한국 4-H본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여러분을 모시고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4-H운동은 우리 근대사에 큰 획을 그은 농촌사회발전운동이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해방 후 사회적 혼란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시절, 우리나라 4-H운동은 농촌의 문맹을 퇴치하고 생활개선을 촉진하였으며, 나아가 이 땅의 농촌근대화를 이룩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4-H운동을 지도해온 농촌지도기관의 관계공무원, 4-H지도자, 학교 4-H지도교사, 그리고 4-H 후원회원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4-H 가족 여러분 !

우리 농업은 참으로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농업인과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쌀 관세화 관련협상과 DDA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농업농촌종합대책과 119조 투융자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 가장 큰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쌀 협상이후 시장개방 폭이 얼마나 확대되고, 시장개방에 의해 쌀농가의 소득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정부는 쌀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가의 최근 수취가격을 기준으로 목표가격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가격은 산지쌀값과 논농업직불금 소득효과, 그리고 쌀 수매제도의 직접소득효과를 합한 금액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정부에서 직접지불로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일정금액을 고정형직불금으로 지급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변동형직불금을 추가로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쌀농업에 관한 한 농업인들이 걱정을 안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완전해에 가까운 대책을 수립하겠으며, 이를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도 가시화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이 이제는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경쟁력의 원천은 사람입니다. 앞으로는 지식경영과 기술농업이 가능해야 경쟁에서 앞설 수 있습니다.

매년 4천5백명씩 10년 동안 4만 5천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구체적인 계획을 올 연말 안에 발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통해 권역별로 특색있는 농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013년까지 7조를 투자할 계획인데, 이 사업은 정말 어렵습니다.

10년이나 100년 후의 우리 농촌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서두르지 않고 접근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도 만들고 마지막으로 점검을 하고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어령 선생님, 지금 문화재청장이 되신 유

홍준 교수님 등 열다섯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농업은 지방의 시대입니다. 그 지역농업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 지역농업인, 지역의 대학들이 설계하고 계획해서 신청을 하면, 정부에서 정확한 평가를 한 뒤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은 지방에서 시작하고 책임을 지며 정부에서 뒤받침 하는 농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의료 분야에서 만큼은 농촌에 산다는 자체만으로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미 농업인자녀출신 농과대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1.5ha미만 농가에게 평균 10만 2천원씩 지원하고 있는 영유아양육비를 내년부터는 2ha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이 부담해야 할 연금보험료를 정부에서 50%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제 농협도 구조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농업협동조합 개혁안을 이에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농업인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농지제도도 변화된 환경에 맞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우량농지를 최대한 보전하면서 농촌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소유와 이용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농지은행제도를 도입하여 농지가격 하락 등 농지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전국의 4-H 가족 여러분!

지·덕·노·체의 깃발아래 우리농업·농촌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묵묵히 농촌현장을 지켜 오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21세기 선진농업·복지농촌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다짐의 자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이제까지 해 오신 것처럼 우리 농업·농촌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4-H 회원 여러분이 앞장서 줄 것을 기대합니다.

다시한번 한국 4-H본부 창립 50주년을 축하드리며, 오늘 행사준비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영래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4-H회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수농업기술 개발과 농업인의 사기진작에 큰 힘

(제10회 세계농업기술상 시상식 축사, 2004. 11. 9)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

史光基 사장님을 비롯한 세계일보 관계자 여러분 !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국회의원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 !

오늘 선진 농업기술 개발과 수출증진에 앞장서 온 농업인들을 발굴해 격려하고 이를 널리 알리는 자리인 「세계농업기술상」 시상식에 참석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로 열번째를 맞는 「세계농업기술상」은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과 우수 농업기술 개발 등을 통해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같이 뜻 깊은 상을 제정하고 운영해온 세계일보사 사광기 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새로운 농업기술의 개발 보급과 수출증진, 협동영농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영광을 안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우리 농업은 지금 어려운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농업인과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쌀 관세화 관련 협상을 금년 12월까지 끝내어야 합니다. DDA협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FTA도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내적으로는 향후 10년 동안 우리 농업과 농촌의 비전을 담은 종합대책과 119조원 투융자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 10년을 우리 농업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가장 큰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쌀 협상이후 어떻게든 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비하여 쌀 농가의 소득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정부는 쌀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가의 최근 수취가격을 기준으로 목표가격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가격은 산지쌀값과 논농업직불금 소득효과, 그리고 쌀 수매제도의 직접소득효과를 합한 금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쌀값이 이 목표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정부에서 직접지불로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일정금액을 고정형직불로 지급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추가로 일정수준을 변동형 직불로 보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적어도 쌀농사에 관련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완전에 가까운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이 이제는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경쟁력의 원천은 사람입니다. 앞으로의 농업은 지식농업이 될 것입니다. 기술과 지식, 정보화 능력을 갖춘 농업인이 우리 농업을 지켜 내어야 됩니다. 이를 겸비한 전문인력의 양성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리 농업 생산의 50%를 맡아 줄 전업농이 20만명 정도 필요한데, 그 중에서 매년 4천5백명씩 10년동안 4만 5천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구체적인 계획을 올 연말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이 4만 5천명은 일본, 중국 등 외국의 전문농업인보다 지식수준이 높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농업이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통해 권역별로 특색 있는 농촌을 만

들어 가겠습니다. 2013년까지 7조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이 사업은 정말 어렵습니다.

10년이나 100년후의 우리 농촌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서두르지 않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실무위원회도 만들고 점점 및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어령 선생님, 문화재청장인 유홍준 교수님, 농촌정보화에 도움을 주실 서정욱 前 과기부 장관님 등 농업·인류학·예술·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열다섯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농업은 지방의 시대입니다. 정부는 과거처럼 중앙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에 따라 시도에 예산을 배분하지 않고 그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 지역농업인, 지역의 대학들이 설계하고 계획해서 사업을 신청하면, 정부는 정확한 평가를 한 뒤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방의 농업은 그 지방에서 대책을 세우고 책임을 지는 체제로 바뀌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의료 분야에서 만큼은 농촌에 산다는 자체만으로도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미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을 전액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으며, 영유아 양육비와 고교생 학자금을 전액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농업인들의 연금보험료 지원을 연차적으로 높여 나가고 건강보험료도 50%까지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농협도 구조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농업협동조합 개혁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정부는 이 개혁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지제도도 변화된 환경에 맞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우량농지를 최대한 보전하면서 농촌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기위해 소유와 이용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농지가격 하락 등 농지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 그리고 내빈 여러분 !

위기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래를 헤쳐 나갈 용기와 자신감입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입니다.

농정에 대한 신뢰 없이는 농업·농촌 투융자 사업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먼저 나서겠습니다. 정책 수립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농촌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반영하겠습니다.

농업인 여러분과 정부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지금의 위기를 우리 농업·농촌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수상의 영광을 안으신 분들께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세계농업기술상이 앞으로도 우수농업기술 개발과 농업인의 사기진작에 큰 힘이 되어 줄 것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농토를 건전하게 보전하는 것은 농업의 기초

(제5회 흙의 날 기념식 치사, 2004. 11. 9)

존경하는 김 광원 농림해양수산위원장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농업인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제5회 『흙의 날』 기념식과 제8회 『흙을 살리자』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준비와 그 동안 흙 살리기 운동 전개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정대근 농협중앙회장, 현의송 농민신문사장 및 김용웅 한국토양비료학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농업과 농촌은 참으로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고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쌀 관세화 및 DDA 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 FTA 체결도 확산되는 추세에 있어 농산물시장의 개방 확대는 앞으로도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고품질의 안전한 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수준도 높아 가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이 대내외의 환경변화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지속 가능한 생명산업으로, 도·농 공존의 정주공간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합심하여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 농업을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체제로 개편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으로 자리 매김하고, 또한 농촌을 교육·의료·복지환경이 갖추어진 정주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농업·농촌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담은 「농업·농촌 종합대책」과 119조 투융자 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지는 농업생산의 기본이며, 농업은 근본적으로 흙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흙 살리기 운동”을 통해 우리 농토를 건전하게 보전하는 것은 농업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농업은 증산위주의 고투입 농법에 의존하여 왔으나 그 결과 농업환경이 악화되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영위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의 농업환경을 지속 가능한 형태로 발전시키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을 적극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친환경 인증 농산물 비중을 현행 2%에서 2010년까지 10%로 늘리는 한편, 화학비료와 농약사용량을 2013년까지 현재의 60%수준으로 줄여 나갈 것이며, 유기질 비료 등 친환경 농자재의 지원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흙살리기 운동”은 그 의미가 매우 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흙살리기를 통한 토양자원 관리와 활용』이란 주제로 개최되는 심포지엄에서도 좋은 의견들이 많이 개선되기를 기대하여 봅니다.

끝으로, 오늘 이 행사를 마련하고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격려와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향후 10년은 우리 농업의 귀중한 시기가 될 것

(제9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 축사, 2004. 11. 11)

존경하는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정대근 농협중앙회장님, 최준구 전국농민단체협의회회장님을 비롯한 농업인 단체 대표 여러분!

그리고 김광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님과 장원석 농어업·농어촌특별 대책위원장님을 비롯한 귀빈 여러분!

오늘 아홉 번째 맞이하는 「농업인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농업과 농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영예로운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올해는 농업인 여러분의 지극한 정성과 노력으로 쌀 뿐 아니라 과수와 축산도 모두 안정적인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업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농업인 여러분!

지금 우리 농업과 농촌은 가을의 풍성함을 기뻐할 여유도 없이 위기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과거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고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 적극 대응하면서 개방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는 작년 8월부터 금년 2월까지 2013년을 목표년도로 한 농업·농촌종합대책과 이를 뒷받침할 119조원 투융자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1년 전 오늘, 「농업인의 날」 행사에 대통령께서 참석하시어 119조원 계획을 확정 발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통하여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농업인이 피부로 느끼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정부의 의지를 확인해 주셨습니다.

지금 농림부는 10년 계획 중 1년차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촌현장의 농업인, 전문가 의견을 들어 119조원 투융자계획을 다시 다듬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확정하고 3년 단위로 계획을 조정하여 정부와 농업인이 함께 하는 사업계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농업·농촌이 어려워지고 있고, 여러분의 걱정이 많을 것입니다. 정부도 우리 앞에 첩첩이 쌓여 있는 농업문제를 차질 없이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고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쌀 협상을 금년 말까지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쌀 문제는 농업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민 전체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의 협상과정을 이달 내에 공개하고, 농특위의 논의, 토론회, 공청회를 통해 농업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정부의 입장을 결정하겠습니다.

협상결과가 어떻든 추가적인 시장개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쌀소득 보전대책을 확실히 세우는 일입니다.

추가적인 수입개방에 따라 줄어드는 쌀농가의 소득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보전한다는 입장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쌀농가가 정부를 믿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쌀농가의 소득보전방안은 농업인 여러분들이 쌀농사를 통해서 얻고 있는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목표가격을 80kg 한 가마당 17만원으로 정하고, 3년 단위로 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목표가격은 지난 3년간 산지 평균 쌀값에다 논농업 직불제 소득과 추곡수매제로 얻어지는 소득효과를 합한 값입니다. 목표가격 17만원과 산지

쌀값과의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ha당 60만원을 고정형 직불로 지급하고, 이것으로 부족할 경우 변동형 직불을 추가로 지급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내년 쌀값이 2003년 수확기 쌀값에 비해 5% 떨어질 경우를 가정할 때 직접지불을 포함한 가마당 농가수입은 목표가격의 98.2%가 됩니다.

이것은 정부의 시안입니다. 이 시안을 놓고 설명회, 공청회를 통해 농업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정부안을 결정하고, 국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것입니다.

이러한 직접지불제를 통한 소득보전방안은 전 농가의 쌀 생산량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5% 정도만 수매하는 현행 수매제보다 그 혜택의 범위가 넓어질 것입니다.

내년부터 시행할 쌀농가 소득보전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가칭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시행에관한법률」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쌀농가 소득보전방안을 확정된 후 추곡수매제, 공공비축제 등 양정제도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출하기 쌀값 안정을 위해 미곡종합처리장 등 민간유통능력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600만석 수준의 미곡종합처리장 수확기 처리능력을 1,100만석 규모로 확대하고, 농업인과 미곡종합처리장의 계약재배를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난 10년간 매년 평균 3%씩 감소하고 있는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을 어떻게 80kg선에서 유지하느냐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국민건강을 위해서 쌀 소비문제도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농업이 경쟁력 있는 성장산업으로, 21세기 농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정의 틀을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비전을 제시하고 과감한 구조조정과 혁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농업의 성패는 이제 정부의 소득보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농업인의 지식수준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농업인의 지식경영능력, 기술 수준, 정보이용능력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주도의 농정을 지방정부 중심의 농정으로 틀을 바꾸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지역 농업인, 지방대학이 주체가 되어서 그 지역의 농업을 계획하고 설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면, 정부는 정확하게 평가한 후 예산지원을 하고 뒷받침 하겠습니다. 결과는 지방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35개 지역농업특화사업단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지역농업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지역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농업의 혁신은 지역이라는 기반위에서 출발하여 그 결과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귀빈 여러분!

앞으로 10년은 우리 농업에서 귀중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농업·농촌 종합대책에 근거한 119조원 사업계획을 농업인과 농림공직자들이 함께 실천해 가야 합니다.

정부는 교육과 의료문제 등 농업인의 삶의 질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교육은 영유아 보육비를 매달 10만 2천 원씩, 고교생 학자금은 전액을 지원하고, 대학교 등록금은 금년부터 무이자로 전액 융자 지원합니다.

특히, 농과대학에 재학 중인 농업인 자녀 4천명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이미 금년 2학기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도 정부가 50%를 지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소중한 10년 후 우리 농업의 장래를 계획한다면, 제일 중요한 부문이 인력양성입니다. 10년 후 우리 농업인의 지식수준이 우리의 경쟁국보다 앞서야 합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규모화된 전업농을 육성하고, 전업농 20만 명이 농업생산의 절반을 맡아 줘야 합니다.

그 중 5만 명 정도는 매년 4,500명씩 10년간 농업 인턴제, 대학생 창업연수, 직업훈련과정, 창업농 후견인제를 통해서 육성하겠습니다. 2조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될 것입니다.

전통농업과 식품의 결합으로 건강산업도 육성할 것입니다. 농업생명공학 분야도 중요합니다. 바이오 장기 생산, 유전자원 확보, 신식품 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도 정부의 신성장동력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농업의 생산이 소비자의 요구수준에 눈높이를 맞추는 것입니다. 지금 소비자는 고품질과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쌀에서부터 과수, 채소, 축산물까지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농업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 30일 친환경농업 선포를 통해서 2013년까지 농약·화학비료 사용량을 40% 줄이고, 친환경 인증농산물 비중도 현재 2%에서 1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이 지켜져야 우리 식탁에서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생산이력추적제 등 농장에서 식탁까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축산은 농가에서 쌀 다음의 소득원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구제역과 같은 악성 가축질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역체계를 개선하고, 조직과 인력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인력으로 232명을 채용할 준비를 하고 있고, 2006년부터 수의과 대학 졸업생을 공익수의관으로 지자체에 배치하기로 국방부와 이미 협의를 마쳤습니다. 축산인 여러분께서 작년에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를 성공적으로 방역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농촌마을 가꾸기 사업 또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농촌이라는 공간은 도시와 공존하는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농촌개발에 10년 동안 17조 6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그 중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7조원이 투자됩니다. 우리 농촌마을의 1/10인 1,000개 권역을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미래의 우리 농촌마을의 모습을 그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착수해야 할 16개 사업을 내년으로 이월시켜 충분히 준비한 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에서도 혁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산지유통을 주도할 조직으로 계열화·규모화된 공동마케팅 조직 200개소를 2013년까지 육성하고, 산지유통센터에 대한 시설지원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이미 유통전문가 교육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금년부터 전국 8개 대학에 산지유통 전문인력센터를 설치하여 10년간 4,500명 정도의 전문인력을 육성합니다.

농산물 수출도 금년 20억불, 2013년 50억불을 목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FTA 추진과 더불어 우리 농업의 활로를 찾기 위해 농산물 수출지원도 더욱 확대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우리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과 개혁이 뒤따라야 합니다.

농지제도는 농업인 입장에서 고쳐 나가겠습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면서 우량농지는 최대한 보전하고, 농촌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소유와 이용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농지은행을 통해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 유통화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농지가격의 변화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 경영위기에 빠진 농업인에 대해서도 농지은행을 통해 지원할 것입니다.

협동조합은 농업인의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농업인과 국민이 바라는 협동조합이 되기 위해서 농협이 스스로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정부도 농협개혁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중앙회는 대표이사 중심의 전문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일선조합은 전문화·규모화해서 경제사업이 산지중심으로 활성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우리 농업·농촌이 UR이후 가장 어려운 때를 맞고 있습니다. 농업인과

정부가 손을 잡고 이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지난 10년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10년을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시고 따뜻한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사 주제가 「함께 가꾼 우리농업, 함께 누릴 푸른 미래」입니다. 오늘의 다짐이 우리 농업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농업인 여러분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이 인류의 생명산업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제24회 농어촌청소년대상 시상식 치사, 2004. 11. 12)

친애하는 농어촌 청소년 여러분!

이 행사를 주관하신 서울신문사 채수삼 사장님! 그리고 해양수산부 장승우 장관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

제24회 「농어촌청소년대상」 시상식에 참석하여 앞으로 우리농업을 선도해 나갈 농어청소년 여러분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농어촌의 훌륭한 동량으로 인정받아 영예를 차지하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농어촌을 짊어지고 나갈 인재를 발굴·육성하는데 깊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오신 서울신문사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농업부문 대상을 수상한 노형수군은 농고 졸업과 동시에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노력으로 지금은 상시 100여두의 한우를 사육하는 축산전업농으로 성장, 연간 2억여 원의 소득을 올리는 자랑스러운 청년 농업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우의 각종 질병 예방과 육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봉침요법 등을 개발 보급하고, 소년소녀가장돕기 및 사랑의 헌혈운동 전개 등 사회봉사활동에도 노력하고 있는 그야말로 앞으로 우리 농촌을 지켜 나갈 '동량'으로서 모두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으로서 유일하게 본상을 받게 된 임은영 양을 포함하여 10명의 수상

자들도 끊임없는 노력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농업·농촌지역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로상을 수상하신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조정주 농촌지도사는 공직 16년간을 4-H운동 활성화에 헌신 노력하는 등 우리농업·농촌의 후계 전문인력을 육성하는데 공헌한 모범 지도사입니다.

농촌청소년 여러분!

우리 농업과 농촌은 참으로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고, 중요한 시점에서 있습니다.

쌀 관세화 관련 협상, DDA협상, 앞으로 계속 확대될 FTA 등을 국민적 공감대와 역량을 모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우리 농업을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농업·농촌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담은 「농업·농촌종합대책」과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119조 투융자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종합대책의 핵심은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촌사회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우선, WTO에서 허용하는 직접지불제를 농가소득의 10%까지 확대하고 농촌관광 등 다양한 농외소득원을 확충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도시근로자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제정된 「삶의질향상특별법」을 계기로 범정부적인 대책을 추진하여 농촌의 생활여건을 정부가 책임지고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정부는 개방화 시대에 우리 농업을 지켜 낼 수 있도록 미래농업을 선도할 6ha수준의 쌀 전업농 7만호와 축산분야 전업농 2만호를 육성하고, 전국 5개 대학에 유통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세워 향후 10년간 4천5백 명의 유통분야 전문 인력도 배출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쌀 협상에서 최대한 유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되, 협상결과와 관계없이 우리 쌀 농가가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소득 보완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적절한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현행 논농업직불제를 고정형 직불로,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변동형 직불로 개편하여 쌀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보전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고품질·친환경 농업을 적극 육성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고히 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이력추적제,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금년부터 시작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충분한 준비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조언을 받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금년 36개 권역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000개의 권역을 조성하여 특색 있는 농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섯째, 지방이 스스로 농업·농촌의 활로를 찾아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 농업의 특색을 고려한 클러스터가 형성·발전되어야 합니다. 지방정부와 지역대학·생산자 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지역농업발전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이를 심사하여 집중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에는 농지제도 및 양정제도 개편, 협동조합개혁 등 농정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는데 역점을 두어 변화하는 농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의 농촌청소년 여러분!

위기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래를 헤쳐 나갈 용기와 자신감입니다. 우리 모두의 고향인 농촌의 미래는 투철한 농업관, 신지식과 정보화마인드로 무장된 바로 농촌청소년 여러분의 두 어깨에 달려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농업이 인류의 생명산업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21세기에는 반드시 우리농업이 선도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역량과 노력을

한데 모아 나갑시다.

정부는 여러분의 노력에 대해 최선을 다하여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의 이 「농어촌청소년대상」 시상식이 우리 농업과 농촌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이 시상식을 마련하기 위해 애써 주신 서울신문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영광을 안으신 수상자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분야 수출, 우리 농업의 가능성과 가야 할 방향

(농림축산물 수출 20억불 달성 기념식 축사, 2004. 12. 29)

존경하는 농업인, 농식품 관련 기업인 여러분!

그리고 김광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님, 신중식 의원님, 박홍수 의원님, 장원석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장님, 그리고 김재철 한국무역협회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올해 드디어 농림축산물 수출 20억불을 달성했습니다. 이 모두가 농식품의 생산과 수출에 애써 주신 농업인과 기업인 여러분의 노고 덕분입니다. 감사패를 수상하신 농업인과 수출업체를 비롯하여 농식품 수출에 기여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우리 농산물을 애용해 주신 수입바이어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억불은 수치상으로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에 불과한 금액이지만, 우리 농업의 가능성과 가야 할 방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이상의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도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우리 농업의 현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위기로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제 농산물 시장 개방은 거스르기 힘든 대세가 되었습니다. DDA 협상

이 진행 중이며 FTA도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어 온 쌀협상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정부는 올 한 해 동안 40여 차례의 협상을 진행하였고, 이제 국민적 공감대를 통한 선택과 WTO의 법적 절차가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추가적 시장개방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지만, 협상 과정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만큼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도 값진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협상만큼 중요한 것이 추가적인 쌀 시장 개방 확대에도 불구하고 안심하고 쌀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는 쌀농사를 통해 얻고 있는 실제 수입을 목표가격으로 정하고 목표가격보다 쌀 가격이 떨어질 때 그 차액의 80%를 직접지불로 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쌀농가소득보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안대로라면, 내년에는 쌀값이 작년 수확기 쌀값에 비해 5%까지 떨어지더라도 직접지불을 포함한 가마당 농가수입은 목표가격의 98%이상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법제화하여 쌀 농가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수출 농업인, 농식품 관련 기업인 여러분!

우리는 공업분야에서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를 일으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농업분야에서도 수출이 농업 전체의 성장 동력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이 바로 우리 농업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2008년에는 30억불, 2013년에는 50억불 수출을 중장기 목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20억불 수출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농업인과 농식품 가공·수출 기업들이 힘을 모으고, 119조 투융자 사

업을 통해 농업 경쟁력이 향상된다면 50억불 달성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혜와 힘을 모읍시다.

수출 20억불 달성이 있기까지 노력해 주신 농업인, 농식품 기업인, 그리고 수출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농식품 수출을 위해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국의 농업인, 농식품 관련 기업인 여러분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 백

Ⅲ. 기고·담화문

여 백

농업인과 정부가 손을 잡고 슬기롭게 극복

(쌀 관세화 관련 협상 농민단체협조 서한문, 2004. 9. 23)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들녘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가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만, 우리 농업은 「쌀협상」, 「DDA 협상」 등으로 대단히 어렵고도 중요한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은 농업인과 정부가 손을 잡고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지금 농촌 현장에서는 우리 국민의 식량인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이 스스로 벼를 갈아엎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농사는 사람과 하늘과 땅이 함께 짓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온갖 정성을 기울여 가꾼 벼는 여러분의 자식과도 같습니다. 그런 벼를 갈아엎는 행위는 어떤 명분이나 주장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농업인 여러분들이 농업의 장래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쌀산업의 기반을 굳건히 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역 공청회에 직접 참여한 농업인도 있겠습니다만 농업인·농민단체·학계 등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여 『쌀산업발전 종합대책』과 『쌀농가 소득안정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쌀협상 결과가 가시화 되면 그 영향까지도 감안하여 대책을 발표

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충분치 않을 경우, 여러분의 의견을 표현하고 주장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도 발표 이전·이후 여러분들이 주시는 주장에 귀 기울여 함께 토론한 후 대책을 확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논을 갈아엎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의사표현은 농업인 여러분은 물론 농업의 장래를 위해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러한 일은 이 나라의 뿌리를 지켜 온 농업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차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농업인 여러분께서 정부를 믿고 앞으로 대책을 구체화하고 내실화 하는데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농업인과 농민단체들이 농업의 미래를 개척하는데 힘써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심하고 쌀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쌀소득보전방안을 마련

(쌀 관세화 관련 협상 대국민 담화문, 2004. 11. 15)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으로 농촌 현장에서 노력하고 계신 농업인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농업과 농촌은 가을의 풍성함을 기뻐할 여유도 없이 위기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과거 어느 때 보다도 어려운 고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쌀협상도 금년 말까지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3월 범정부 차원의 협상단을 구성하여 미국, 중국 등 협상을 요청한 9개국과 수차례의 협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쌀산업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절한 시점을 선택하여 지금까지의 협상과정을 농업인 여러분을 포함한 전국민에게 공개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의 최종입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여러분 !

정부는 쌀협상으로 인한 농업인 여러분의 불안과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들께서 안심하고 쌀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쌀소득보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추가적인 개방에 따라 쌀농가의 소득이 줄어들 경우 정부가 보전한다는 입장에서 기존의 논농업직불, 쌀소득보전직불 등 쌀관련 직접지불제를 전면

개편하여 쌀농가소득보전방안에 대한 정부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소득보전방안에서는 농업인 여러분들께서 최근 쌀농사를 통해 얻고 있는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목표가격을 80kg 한 가마당 17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이 목표가격은 ① 지난 3년간('01~'03년)의 전국 산지 평균 쌀가격 ② 추곡수매제로 얻어지는 소득효과 ③ '03년 논농업직불 소득효과를 감안한 것입니다.

어느해 쌀 가격이 2003년 가격보다 5% 떨어진다면 농가의 실제 수입은 직접지불을 포함하여 16만 7천원을 보전받게 되어 목표가격의 98% 수준이 됩니다.

이번에 정부시안으로 발표한 쌀농가소득보전방안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i) 거의 전체 생산량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생산량의 15%내외를 수매하는 추곡수매제 보다는 혜택의 범위가 훨씬 넓다는 점,
ii) 목표가격을 3년 단위로 고정하여 계속 운영함으로써 쌀농가의 소득을 최대한 보장해 나간다는 점,
iii) 소득보전방안을 법제화 하여 제도적으로나 재원면에서 앞으로도 계속 안정적인 뒷받침이 되도록 한다는 점 등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소득보전방안은 정부의 시안입니다. 앞으로 이 시안을 놓고 농업인, 전문가, 학계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부안을 만들고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여러분 !

이러한 쌀농가소득보전방안 마련을 전제로 현재의 양정제도를 개편하여 쌀협상/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 이후를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곡수매제는 우리나라 쌀산업의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서 농가소득지지와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WTO출범 후 수매보조금 감축 등으로 그 역할과 기능

이 크게 축소되었고 앞으로 몇 년 안가서는 더 이상 계속 실시 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추곡수매제도가 수행해오던 역할중 농가소득지지는 앞에 말씀드린 소득보전방안으로 확고히 하고,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는 공공비축제 도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수확기 물량흡수 기능은 산지유통의 핵심체인 미곡종합처리장의 비 매입능력 확대를 통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민간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면서 건조·저장시설을 확충하여 수확기 처리능력을 현재 600만석 수준에서 1,100만석(유통량의 70%) 수준까지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형태의 농업인 육성과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해 우리 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양곡유통을 위해 농업인 여러분과 함께 정부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 여러분과 정부가 자신감을 가지고 개방의 파고를 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리며 농업 현장에서 흔들림 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농업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1社1村운동 농촌사랑-나의 농촌사랑記

(2004. 12. 29, 문화일보 기고)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농촌은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일까. 대부분 어린시절을 농촌에서 보낸 기성세대들에게 농촌은 그리운 고향이자 추억의 장소로 자리 잡고 있다. 반면 젊은 사람들에게 농촌은 생소한 곳이다.

어쩌면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 농촌의 이미지는 TV에서나 접하는 영상이 그들이 알고 있는 농촌의 전부일지도 모른다. 이처럼 농촌에 대한 세대간 인식의 단절 속에 우리 농촌이 서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 농업과 농촌은 쌀 협상 등 시장개방의 확대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희망도 자라나고 있다. '1사1촌운동' 이 대표적인 사례다. 시작한지 1년도 채 안돼 이처럼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이 운동을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확산시켜 농촌과 도시가 상생하는 길에 앞장서온 전국경제인연합회·농협중앙회·농업기반공사

그리고 문화일보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사장님으로부터 새내기 신입 사원에 이르기까지 농촌에서 다같이 여가를 즐기고, 농업인들과 함께 흘리는 땀속에서 농촌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때 농촌은 세대간의 벽을 넘어 새로운 삶의 장으로 자리할 것이다. 다시 말해 1사1촌운동은 도시와 농촌이라는 공간간의 교류만이 아니라,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간의 교류와 화합도 의미한다. 바라건대 이 운동이 일시적인 봄에 그치지 않고 2005년에도 계속되고 보다 알차게 발전되어 나갔으면 한다.

자매결연 마을에 회사 교육원이나 사원 휴게시설을 지어 농촌마을 주민들과 함께 한 가족처럼 지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도시의 밀폐된 공간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직장인들이 적어도 일주일중 이틀 동안은 농촌에서 삶의 여유와 기쁨을 맛보길 바란다.

어느 일방이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서로 원·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 1사1촌운동의 밑그림이 하나하나 채워졌으면 좋겠다. 머지않아 농촌을 바꾸는 운동이 시작돼야 할 것이다. 과거 농업사회에서의 농촌이 아니라 21세기 첨단사회에서의 농촌의 모습을 새롭게 그려야 할 것이다.

관세화 유예를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연장

(쌀 관세화 유예 관련 협상 농림부장관 발표문 2004. 12. 30)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 UR 협상결과에 따라 쌀 시장을 개방하게 되었고, WTO 일반원칙인 관세화를 금년 말까지 10년간 유예 받아 최소시장접근만이 이루어지도록 했었습니다.

WTO 농업협정문은 이러한 예외조치를 2005년 이후에도 연장하기 위해서는 회원국들과 금년 말까지 협상을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관세화의무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년 초 쌀협상 개시의사를 WTO에 통보한 이래 협상 참여를 신청한 9개국과 50여 차례 관세화 유예조건을 최대한 유리하게 도출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지난 1년간 진행한 협상결과, 주요국들과 실질적인 협상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정부는 이를 반영한 이행계획서(Country Schedule) 수정안을 금일(12.30) WTO사무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금번에 통보하는 이행계획서 수정안은 WTO 회원국들의 검증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검증 과정에서 일부 회원국들의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번 통보내용의 이행과 관련한 기술적이고 절차적인 사항과 양자 차원의 부가적 사항에 대해서는 검증기간 동안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이행계획서 수정안 외에 국가별·쟁점별로 문서형태의 별도 합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한편 국내적으로는 금번 쌀협상이 UR의 후속협상임에도 불구하고 쌀의

관세화 유예 연장이라는 주요내용 변화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행계획서 수정안에 대한 비준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WTO에 통보하는 이행계획서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관세화 유예를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행 5년차인 2009년도에 이행상황에 관한 다자간 중간 점검을 실시하며,
 - 우리나라는 유예기간 중 언제든지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였습니다.

둘째, 의무수입물량은 2005년 225,575톤('88~'90 소비량의 4.40%)에서 2014년 408,700톤(7.96%)까지 매년 균등하게 늘려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의무수입물량의 수입방식은 현행과 같이 전량 국영무역 방식을 유지하되 2005년도에 의무수입물량 중 10%를 밥쌀용으로 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되 이 비중을 6년차인 2010년 30%까지 늘리게 되며 2014년까지 30% 비율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의무수입물량 중 기존물량 205천 톤은 '01~'03년 수입실적을 반영하여 미국, 중국, 태국, 호주 등 4개국에 국가별 쿼터를 배정하고 신규물량(증량분)은 최혜국 대우 방식으로 운영키로 하였습니다.

정부의 관세화 유예연장 결정은 협상결과와 그동안 국민대토론회, 시장·군수·의회의장 토론회, 읍·면장 설명회, 농민단체장 간담회, 농업통상정책협의회, 학계의 쌀대책협의회, 방송토론회 등 100회가 넘는 토론회 등을 통해 제시된 각계의 의견과 농어업·농어촌대책특별위원회의 건의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쌀산업 실리 확보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만약 관세화를 할 경우 향후 DDA 협상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일정량의 수입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점과 DDA 협상결과가 지금으로서는 불투명하여 쌀산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함께 고려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쌀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는 향후 10년간 쌀 관세화 유예를 추가 연장하게 되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우리 쌀산업의 체질을 강화시킬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체질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쌀농가가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소득을 안정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농업인, 전문가 등과의 다양한 논의를 거쳐 이미 쌀농가 소득안정방안을 마련하였고, 그 내용을 구체화한 '쌀소득보전직불제시행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시행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목표가격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3년 단위로 변경합니다. '05년~'07년의 목표가격은 최근 산지쌀값('01~'03년 평균), 추곡수매제 소득효과, 논농업직불 등을 기초로 80kg 가마당 17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낮을 경우 목표가격과 차이를 정부가 직접지불로 보전하게 됩니다.

둘째, 쌀소득보전직불금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고정직불금은 WTO규정상 허용보조 요건에 맞도록 타작물 재배 및 휴경하는 경우에도 고정금액을 지급하며,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과 당년쌀값 차이의 100분의 80에서 고정직불금을 차감한 금액을 쌀생산 농업인들에게 지급합니다.

셋째,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농지는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정하고 논농업직불제의 면적상한 및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농업인 납입금 제도는 폐지하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우리의 쌀산업이 이러한 관세화 유예연장 조치와 쌀농가 소득안정장치에 안주함으로써 구조조정이 지체되지 않도록 과감한 양정제도 개편과 경쟁력 제고 대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추곡수매제 폐지, 공공비축제 도입 등 양정제도 개편, '10년까지 규모화된 쌀 전업농 7만호 육성을 통한 생산의 효율성 제고, 안전하고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는 단계별 대책 추진, 산지 쌀유통의 핵심체인 미곡종합처리장의 구조조정과 경영개선 등 쌀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표시기준, 원산지규정 등에 대한 엄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부정유통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양곡유통의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쌀 시장의 수입 확대에 의한 농업인 여러분의 불안감을 덜어 드리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각종 경영안정 및 복지 지원시책을 대폭 확충하여 나가겠습니다.

첫째,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친환경축산직불제를 조기 정착시키고 '05년부터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현재 농가소득의 2%수준인 직접지불금을 '13년에는 10%까지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농작물재해보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재해 발생시 국가가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국가재보험제도를 '05년부터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13년까지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품목을 현재 6개 품목에서 쌀을 포함한 30개 품목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농가 영농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류의 공급기한을 당초 '05년 말에서 '0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추가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친환경농자재 중 천적, 키토산, 목초액 등 3종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고품질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돕겠습니다.

넷째, 농촌의 교육, 복지여건을 확충하기 위해 범정부적 협력을 통해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우선 농특세 재원을 활용하여 농업인 건강보험료를 내년 40% 경감하고 점차 50%까지 경감율을 확대하며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도 상향조정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고교생 학자금 지원은 전농가로 확대하고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농가도 2ha미만까지 상향조정하며 대학생의 학자금 무이자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 여러분!

이제 농업인·생산자단체 모두가 우리 쌀 산업의 혁신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정부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농업인 여러분들을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민족의 생명과 정신의 뿌리인 우리 쌀산업의 미래를 힘있게 열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IV. 신문 · 인터뷰

여 백

농업 중시하지 않고 잘된 나라 없다

(월간정경뉴스, 2003. 10. 30)

- 관세화 유예 원칙 견지하면서 구조개편 추진
- 농업의 다원적 가치, 시장논리로 평가할 수 없어
- 재임기간 동안 농업기술지원 인력, 유통전문가 양성하고 싶다

지난 9월 WTO 각료회의에서 발표된 선언문 초안은 우리나라 350만 농민의 가슴에 짙은 먹구름을 드리우게 했다.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에도 상당 부분 개방의 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정해지지 않아 정확한 피해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루과이라운드 때보다 강도 높은 개방의 파고가 예상된다. 우리나라 농정의 최고 책임자인 허상만 농림부 장관을 만나 농업 현안과 대책을 들어봤다.

지난 7월 김영진 전 농림부 장관이 새만금 사업 중단 결정에 반발, 사표를 낸 이후 후임으로 허상만 장관이 임명됐을 때, 그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순천에서 태어난 허 장관이, 대학 시절과 외국 대학의 초청 교수로 있던 기간 외에는 60평생 순천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일컫어 ‘촌사람’ 이라고 말하는 순수 지방출신인 그가 정부 각료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참여정부의 정책적인 고려와 허 장관 특유의 추진력, 개혁 성향이 두루 평가를 받아서였다.

전남대 농대를 거쳐 순천대 농학과 교수를 지낸 허상만 장관은 사회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순천경실련 공동대표, 그린순천 21협의회 상임의장 등을 지내는 동안 사회와 환경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참

여해 왔던 것. 순천대 직선 총장(1998~2002) 재직 당시에도 4년의 임기 동안 캠퍼스 부지확보, 학술정보원과 전산정보원설립 등 학교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전국대학평가에서 순천대학교를 10위 권 안에 드는 대학으로 끌어올렸으며, 교수 공채 과정을 지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학교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다. 지난 2002년 10월 15일 총장 이임식을 앞두고서는 1억원의 대학발전기금을 선뜻 내 놓기로 해 유종의 미를 거뒀다.

참여정부는 갑자기 공석이 된 농림부 장관의 후임을 두고 민병채 전 양평군수, 박상우 전 농림차관, 황민영 농어민 신문 대표이사와 허상만 현 장관을 두고 고민을 거듭했다. 무엇보다 도하개발아젠더(DDA) 및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 국제통상 현안을 앞두고 이에 가장 걸맞은 역량을 가진 인물을 찾으려 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일본 구주대 객원교수, 미국 미주리대와 코넬대 객원교수를 지낸 허장관의 경력이 대외협상력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순천대 총장 시절의 추진력과 개혁성도 허 장관을 후임으로 낙점하게 한 요인이 됐다.

허장관은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에서 그곳에 와 있던 농민단체를 두고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쳐다볼 사람이 누구겠나”라며, 관례를 깨고 거의 매일 농민 단체를 방문해 협상 상황과 대책을 논의했다. 이경해씨가 자결했을 때는 그가 농민단체를 방문했을 때, 자신을 안내해 줬던 사람임을 알고 “눈앞이 캄캄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경해씨의 자결을 두고 “농업을 모르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농업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 심정을 충분히 헤아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으로 산적한 농업 현안은 그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맞닥뜨린 어떤 장애물보다 큰 것이다. 오는 2004년까지 DDA(도하개발아젠다)의 모든 세부 협상이 종료되고, 오는 2006년에는 DDA 전면 시행으로 인한 개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부적인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장관직을 수행할 허 장관에게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그는 지금 농업 개방을 앞두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점검해 봤다.
 <월간정경뉴스 편집자 >

농가소득하락은 개방에 따른 공급과잉

최재영 편집주간 : 10여 년 동안 60조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농가부채, 도·농간의 소득격차가 악화된 원인은 무엇인가.

허상만 장관 :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이후,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농업 분야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진행 중이던 지난 91년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을 수립하여, 2002년까지 생산기반정비, 농산물유통개선, 농업기계화, 영농규모화 등에 62조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농업 인프라가 상당 부분 정비돼 어지간한 기상재해에도 안정적인 농업 생산이 가능하게 됐고, 전업농 중심으로 구조 조정이 진전돼 농업의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토대는 마련됐다고 봅니다. 92년 이후 10년 동안 농업진흥지역 경지정리율은 82%에서 95%, 농산물 도매시장은 8개에서 30개, 양돈 전업 비중은 24%에서 71%로 증가했습니다.

농가당 농업자본액은 84%, 노동생산성은 87%나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농산물 공급 확대에 따라 농산물의 가격은 하락한 반면, 자재비 등은 올라 농가의 실질 소득이 정체되어 농가 경제가 악화되었고, 농촌의 주거 환경, 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 도시와 농촌의 생활 격차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97년 IMF 외환 위기는 한창 진행 중이던 농업 분야의 구조조정을 후퇴시켰고, 농가 부채 규모도 더욱 커지게 했습니다.”

개방 대비해 쌀 산업 구조 개편 추진

최재영 편집주간 : 오는 12월에 있을 WTO 일반이사회와 내년에 있을 쌀 협상에 대한 대책은.

허상만 장관 : 12월 15일 이전에 개최될 WTO 일반 이사회의 회의 진행 계획이나 의제가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분야별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보다는 향후 협상 일정과 같은 절차적인 문제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로서는 제네바에서 계속될 수석 대표회의가 논의되는 것을 봐 가며 대응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쌀 재협상은 그 동안의 ‘한시적 예외 조치’가 만료된 데에 따른 후속협상입니다. 그런데 협상 이전까지 세부원칙(Modality)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객관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협상에 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쌀은 꼭 지킬 것입니다. 농업기반이 무너진 나라치고 잘된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는 쌀 관세화 유예라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세부 원칙과 협상 동향을 감안해 우리 농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공론화시켜 구체적인 전략을 만들 것입니다. 또한 개방 확대에 대비해 국내외 가격차를 줄이고, 쌀 산업의 구조 개편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농업의 전업화·규모화 이뤄져야

최재영 편집주간 : 농업의 영세성과 고령화가 만연된 상황에서 농업 분야의 구조 조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보는가.

허상만 장관 : 정부는 쌀 산업의 경우 2010년까지 6ha규모의 전업농 7만 호를 육성하여 경쟁력 있는 쌀 산업 기반을 구축할 생각입니다. 축산업은

가축 질병을 사전 예방하고 품질 고급화에 역점을 두면서, 2013년까지 전업 농 2만호가 전체 사육의 85%를 담당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동안 소홀했던 영세농, 고령농에 대한 지원대책이 뒷받침돼야 구조 조정이나 경쟁력 향상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경영이양직불제를 개선하고, 농촌지역 사회 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농어촌지역 복지 교육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도시지역에 비해 열악한 농촌의 복지·교육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10년 내다보는 근본 대책 세울 것

최재영 편집주간 : 영농의 전업화와 규모화를 추진하다 보면 영세농들의 퇴출과 그로 인한 대규모 실업자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은가.

허상만 장관 : 현재 향후 10년간을 내다보는 근본적인 농업·농촌 종합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이 대책은 DDA협상 결과에 따라 그 여건이 많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DDA가 어느 정도 가시화돼야 구체적인 모습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대책은 과거 우루과이라운드 때 추진 됐던 대책과는 다릅니다. 과거의 대책이 단순 규모화, SOC 확충 등에 집중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고품질 경쟁력(생명산업), 농촌의 복지, 문화, 의료,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 등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농가를 규모화해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에서는 이를 선별하여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농가(예 쌀 농가 6ha, 축산 2만호 등)는 규모화를 계속 추진하여 우리 농업 생산의 중추를 담당하게 하고, 중소농은 고부가가치,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토록 유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농장에서 소비자 식탁까지 안전한 농산물

을 공급하는 체제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또 농촌관광, 농촌투자 등으로 농외소득의 비중을 높여 갈 계획입니다. 농촌에서도 농업 생산에 의한 소득만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도 소득이 증가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개의 범주에 포함되지 못한 영세 고령농은 안정된 은퇴를 할 수 있도록 농촌의 복지, 의료, 사회보장 인프라 등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개방 확대로 농가의 소득과 경영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직불제를 확대한다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이번 종합 대책에서는 농업 정책뿐만 아니라 농촌 정책을 강조할 것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을 전제로 농촌에 꼭 농업인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생활공간이 되도록 여러 정책을 구상 중입니다.

농업의 다원적 가치, 제대로 평가돼야

최재영 편집주간 : 공산품을 수출해 그 돈으로 농산물을 수입해 먹는 것이 비교우위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허상만 장관 : 농업을 시장가치로만 따지려는 시각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농업은 시장 논리의 잣대로만 평가할 수 없는 공익적 기능, 다원적 가치(식량안보·농촌지역사회의 유지·환경 및 국토의 보전·문화 및 전통의 계승·도시인의 안식처 제공)를 지니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자국의 농업을 지키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UR 이후 가격 지지 정책이 제한을 받게 되자 미국, EU, 스위스 등은 자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직접 직불제도를 통해 농업보호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의 경우는 아직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지난 97년 규모화촉진 직불제를 시작으로 친환경농업 직불제, 논농업직불제 등을 도입하였습지만, 농업예산 중 직불제 예산비중이 미국의 36%, 일본의 13%에 훨씬 못 미친 7% 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농업의 다원적 가치는 대부분 외부경제효과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시장에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농업의 가치를 도외시한 비교우위론은 우리가 경계해야 하며, 앞으로도 농업의 다원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식량재고 유지 위해 공공비축제 검토

최재영 편집주간 : 식량 자급률이 30% 정도인 나라에서 전체 곡물 수입의 60%를 미국계 ‘카길’이 차지하고 있다. 식량의 무기화가 우려되는 상

황이 아닌가.

허상만 장관 : 지난해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율은 58%, 사료용 곡물 수요를 포함한 곡물 자급률은 30% 수준에 불과한데, 이는 밀 옥수수 콩 등 사료용 곡물 수요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곡물 메이저인 카길사의 경우, 우리나라 식용 대두 수입량의 10%, 사료용 곡물 수입량의 30~50% 수준을 차지할 정도여서 지적하신 대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제 곡물 시장은 몇 개의 업체에 의한 과점 상태가 아니고 수출국 수출업체들이 다원화돼 있어 문제 발생의 여지는 비교적 적습니다.

쌀의 경우는 국제 시장을 통한 거래 물량이 많지 않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으로 예정된 쌀 재협상으로 시장 개방 폭이 확대되는 경우에도 적정 생산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남북 분단 상황을 고려하면 식량 안보의 문제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매년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을 보면서, 향후 통일을 대비해서라도 식량 기반은 항상 적정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정 수준의 재고를 유지해 식량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공공비축제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농업비상사태’ 선포, 지원책 마련 중

최재영 편집주간 : 그 동안 묶였던 농업 지원 정책 중 이번에 추진되는 정책은 어떤 것이 있나.

허상만 장관 : 현재 정부는 당면한 농업·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대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칠레 FTA로 인한 농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FTA이행특별법은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통과될 경우 앞으로 7년 동안 1조 원가량을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에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그 동안 농업인들을 힘들게 했던 농가 부채의 상환 기간을 5년 거쳐 15년 상환으로 하고, 금리를 1.5%로 낮추는 내용의 농가부채특별법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이외에도 농어촌 복지 교육과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 내년 6월말로 끝나는 농어촌특별세법도 관련부처와 협의해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에 통과시켜 농특세 징수 기한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또한 개방화 시대에 우리 농업 농촌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중장기 농업 농촌발전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대책 수립에 있어 의원들과 농업인 단체 대표들과 수시로 만나 대화할 것입니다.

최재영 편집주간 : 재임기간 동안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허상만 장관 : 우리 농업은 앞으로 기술 집약, 고품질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기술 자원을 어떻게 확보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농대 교수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 도 단위 농업기술원에 가서 같이 연구도 하고 농업 기술도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그 다음은 유통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싶습니다. 지금 농산물은 유통 과정에서 붙는 마진으로 도·소매 간의 가격 차이가 심합니다. 유통 전문가를 양성해 이러한 문제를 바로 잡고 농민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나 위스키 시장을 전부 외국에 맡길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일본처럼 우리도 국내산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일본은 포도주만 해도 국내 시장의 25%를 자국의 생산품이 점유하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도 결국 수출이 살 길이다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 2003. 11. 15)

허상만 농림부 장관의 각오와 자신감

지난 7월 25일 농림행정의 수장으로 부임한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취임 후 굵직한 현안들로 어느 각료보다도 정신없이 바쁜 5개월을 보냈다.

법원의 새만금사업 공사중지가처분 결정, 멕시코 칸쿤 농협협상과 이경해 씨 자결, 한·칠레 FTA 국회상정, 노 대통령의 119조원 농업지원금 발표에 이어 19일 전국농민대회를 앞두고 있다.

허 장관과의 인터뷰는 최근 발표된 정부의 119조원 투융자계획과 참여정부의 농업정책의 방향, 농협의 신·경분리(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 개혁 등 참여정부의 농정 전반에 관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허 장관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19조원은 향후 10년 정부의 농업농촌종합발전계획에 근거해 나온 액수"라며 "발표 전 2차례에 걸쳐 농민단체들과의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밝혀 '쏟아붓기식'이란 비판을 일축했다.

이어 그는 "119조원은 순수하게 농업부분 투융자에만 쓰일 돈"이라며 "1차분에 해당하는 51조원 투자금은 내년부터 5년 동안 집행될 국가재정운영 계획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허 장관은 농림부가 제시한 금액이 삭감 없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의 결단이었음을 강조하며 "경제관련 장관들이 고개를 돌려버렸을 때 역장이 무너지더라"는 노 대통령의 말을 인용했다.

참여정부의 농정방향에 대해 허 장관은 "전문화가 핵심"이라며 "쌀농사는

향후 10년 동안 7만호의 대농가(6헥타르 이상)를 육성, 쌀 개방이 되더라도 버텨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 시장을 겨냥해 화훼와 채소의 경쟁력을 강조하며 "10년 뒤 수출목표를 50억불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소농의 도시 빈민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허 장관은 "연금, 직불금 등을 지속적으로 늘려 가 농사를 짓지 않고도 농촌에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업개혁의 핵심인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에 대해 그는 "금융사업에 치중해 경제, 지도사업을 소홀히 하는 농협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을 이해한다"면서도 3년 내 신경분리를 요구하는 농민단체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내후년에 하자고 못 박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혀 사실상 '조건이 될 때 하자'는 농협측 주장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허 장관은 식량자급률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법에도 적정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WTO 개방국면에서 당장에 목표치를 명시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말해 법제화에 성공한 일본과 대조를 이뤘다.

허 장관은 1시간20분 동안 진행된 인터뷰에서 시종일관 한국농업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중국과 미국의 대규모 농업에 대해 식품의 안전성으로 승부해야 한다며 '생산이력제'에 대한 구상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 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여에 걸쳐 과천 청사 허 장관 집무실에서 이뤄졌다. 허 장관은 취임 이후 중앙언론과는 한번도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언론에 만나오는 게 잘 하는 거 아니냐(웃음)"는 말로 대신했다.<오마이뉴스 편집자>

박형숙 기자 : 농업·농촌에 대한 참여정부의 핵심적인 입장은 무엇인가. 지난 11일 발표한 지원계획에 따르면 대농 위주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절반 이상의 농가들이 설자리가 없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허상만 장관 : 우선 우리 농업을 어떻게 해서 전문화시킬 것인가이다. 과

수, 채소 축산, 쌀 등 우리농업을 경영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 다음은 전문화 과정에 참여 못하는 농민들에 대한 대책이다. 정부 정책의 기본 전제는 이 두 가지다.

예를 들어 이번 발표에서 쌀의 경우를 보면 향후 10년 뒤엔 6헥타르(1만 8000평) 이상의 농사를 짓는 7만호를 육성해 우리 쌀의 50%를 생산케 한다는 것이다. 그 외 소농은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밖에 없다.

고령화로 인해 지금은 65~75세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분들은 기계화가 곤란한 지역에서 환경농업으로 고품질화를 유도하지는 것이다.

현재 쌀이 한 가마니에 16만5000원 정도 하는데 개방 후 11만 원대로 떨어지더라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가 7만호를 우선 육성하고,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해주어야 한다. 연금보험도 단계적으로 22%에서 30%로, 30%에서 50%로 올려서 지원하겠다.

농사를 짓지 않고도 농촌에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농촌을 단지 식량생산지가 아닌 아름다운 국토로 보전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박형숙 기자 : 정부가 추진해온 농업의 '규모화'는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가령 미국의 '헬리콥터 농사'나 중국의 200만 헥타르 무농약 단지와 어떻게 경쟁이 되겠나.

허상만 장관 : 복 받은 나라와 비교할 수는 없다. 우리 국토의 한계는 있다. 하지만 미국이나 중국의 대규모 농업은 고품질화가 불가능하다. 중국이 한국과 일본 시장을 겨냥해 시도는 하고 있다지만 공업부문의 경제성장이 되면 지속하기 힘들 것이다.

이번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나는 소비자의 식탁에 안전한 먹거리를 올려 놓겠다. - 이 말은 곧 기술집약적인 농업으로 부가가치를 높여 수출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뜻이다.<편집자 주>

허상만 장관 : 현재 농업부분 수출액은 18억불 정도지만 10년 뒤엔 수출 목표를 50억불을 보고 있다. 가까운 일본시장의 50%만 차지하면 목표달성이 가능하다. 현재 원예의 경우 일본시장에서 네덜란드와 경쟁하고 있다. 파프리카(고추의 일종)는 60%를 장악했다. 농민 스스로 개척해 한국농업기술의 위상을 높여 왔다.

이제 농업은 환경이 중요하다. 소비자에게 신뢰가 가야 된다. 과거 야채를 바로 뜯어먹었던 것처럼 말이다. 그의 일환으로 '생산이력제'를 계획하고 있다. 어떤 지역에서 누가, 어떤 농약과 비료로 생산한 농수산물인지를 밝혀야 한다. 일종의 상품 이력서를 붙이자는 것이다.

환경과 품질문제로 보면 미국이나 중국을 상대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일단 수입농산물은 가져오는 데만도 석 달 이상이 걸리지 않나. 아무래도 소독·방부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허상만 장관 : 소농 퇴출…….하지만 농사짓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농촌 만들겠다.

박형숙 기자 :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대통령이 발표한 119조원 투자계획에 대해 직불제(정부가 농가에 각종 명목으로 직접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 지원금을 늘리는 등 농가소득안정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다. 반면 과거 10년의 경험으로 보아 '쏟아붓기식'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허상만 장관 : 30년간 농업만을 해온 사람으로서 이번 계획을 한국농업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임했다. 장관 취임 후 나는 현장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농민이나 교수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8월부터 농정개혁자문단을 꾸려, 관료 중심으로 꾸려진 기존의 농정기획단과 함께 향후 10년 농업농촌종합발전계획을 검토해 왔다. 예산규모는 180개 사업계획에 기준해 산출된 금액이다.

정부입장에서 119조원은 획기적인 액수다. 농림부에서 최종안으로 119조원을 들고 갔을 때 한 푼도 깎이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대통령이 한 번은 '경제관련 장관들이 (119조원 예산안에 대해) 고개를 돌려버렸을 때 억장이 무너지더라'라며 토로한 적이 있는데, 농업농촌을 살리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단호하다. 그런 정부의 의지를 십분 살리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거다.

농민단체들의 의견도 수렴했다. 발표 전에 전농을 포함한 모든 단체들에게 8월, 10월 두 번에 걸쳐 초안을 주고 의견을 내라고 주문했다. 농업은 농민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현가능성 여부는 농민들이 가장 잘 안다. 당장에는 불만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년부터 예산이 집행되면 이번 발표를 신뢰하게 될 것이다.

박형숙 기자 : 119조원에 대해 향후 10년간 농림부 예산보다 적은 액수라며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도 있다. 가령 현재 농림부 예산이 8조8000억원인데 이를 10년 동안 더한 액수와 여기에 각종기금까지 포함하면 155조원에 이른다는 얘기가.

허상만 장관 :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 농림부 예산(8조8800억원)에는 직원들 월급까지 모두 포함된 액수다. 하지만 119조원은 순수하게 농업에 투자될 예산이다.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11년 동안 중앙정부의 지원금은 62조원이었다. 거기에는 또 타 부처와의 연계사업, 농특세 사업비 등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이번 119조원은 그야말로 투·융자 사업에만 쓰일 돈이다.

박형숙 기자 : 그렇다면 2배 이상 늘어난 정부지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최근 5년 동안 51조가 지원된다는 계획은 세웠지만 그 다음 5년에 대한 언급이 없다.

허상만 장관 : 전반기인 내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소요되는 51조원은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재정운영계획은 5년 단위로 설정하므로 우선 전반기에 대한 계획만 발표된 것이다.

2009년 이후 투융자 될 68조원은 현재 마련 중인 농업농촌종합대책의 내용에 포함돼 올해 말에 발표할 것이다. 정부부처의 연평균 예산은 올라 봤자 3~4% 늘어난다. 하지만 농림부는 2004년~2008년 동안 7.8%가 늘었다. 이 정도의 예산투자도 안하고 개방국면의 우리농업이 해결될 방법은 없다고 본다.

박형숙 기자 : 11월 19일 여의도에서 대규모 전국농민대회가 예정돼 있다. 국회 상정돼 있는 한칠레 FTA 통과반대가 가장 큰 이슈인데 전농, 한농연 등 7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농민연대는 여전히 반대 입장이다. 최소한 2004년 뒤로 미루자는 것이다.

이에 반해 정부는 '선대책 후개방'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의 논리는 결국 과거 개발독재시대의 공업수출 우선정책과 같은 맥락 아닌가.

허상만 장관 : 정부가 농업농촌종합발전계획을 세울 때, 최근 FTA 조건부 통과의를 밝힌 농단협 뿐 아니라 다른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8월에 전농을 포함한 단체들이 모두 배석했다. 하지만 두 번째 자리에서는 전농 등 두세 개 단체들이 빠졌더라.

우리농업이 살아남으려면 결국 수출을 해야 한다. 특히 과수나 채소는 국내 소비로는 안된다. FTA 안하고 할 방법이 없다. 농업 외 산업은 놔두고 농업만 보더라도 그렇다.

현재 우리산업의 대외의존도가 70%대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거 아닌가. 중국, 대만 등 아시아 10개국도 자유무역협정을 맺는데 한국이 빠지면 그들이 한국산을 사주겠다. 또 수입을 안 하면 4천만 인구가 어떻게 먹고사나.

경쟁력을 지닌 농민들은 국내 시장 가지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허상만 장관 : 농업도 결국 수출 외에는 방법이 없다

박형숙 기자 : 농민단체는 칠레산 과수가 들어오면 바로 가격과 질 모두에서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농업 붕괴로 이어진다고 우려한다.

허상만 장관 : 결국 아시아에서는 중국하고 경쟁을 할 텐데 중국은 저품질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 사이 고품질을 이루면 된다.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쌀을 지킨다고 축산은 모두 개방했다. 하지만 현재 축산이 망했다. 축산전업농가가 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 또 마늘 개방하면 죽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지금은 더 개방해야 하는 시점인데 정부는 대책을 세우고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선대책 후개방은 농민단체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WTO자체를 반대하는 전농조차도 정부의 119조 투융자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책을 세우라는 입장이었다.

박형숙 기자 : 쌀을 제외하면 식량자급률이 5%에 불과하다. 일본은 여론의 힘을 입어 식량자급률을 법제화했는데 성공했다.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허상만 장관 : 사료용 곡물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급률이 낮다.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식량자급목표 설정은 필요하다. 농업농촌기본법에도 '식량자급률 목표가 포함된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계획에 식량의 적정 자급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WTO 협상과 쌀 재협상 등으로 시장개방폭의 확대와 보조금 감축 등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식량자급률 목표를 당장에 제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유통전문가 육성해 '농협' 제역할 찾아 줄 것이며, 농협, 3년 내 신경분리 힘들어

- 허상만 장관은 최근 입법예고중인 농협법개정안에 신경분리(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안이 빠져 있다는 농민계의 거센 반발에 대해 "농협중앙회가 협동조합 본연의 업무(경제사업, 지도사업)보다 신용사업에 치중해 유통에 있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점을 인정 한다"며 되도록 빨리 신경분리를 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하지만 농민계의 주장대로 3년 내 실시한다는 점에는 난색을 표했다.<편집자 주>

박형숙 기자 : 농협에 대한 농민들의 불신이 높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농협이 경제지원사업보다는 '돈장사'를 하는 금융기관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농업의 생산성 향상이 유통문제로 인해 농가의 실질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한데 대해 농민들은 농협의 책임을 묻고 있다.

허상만 장관 : 유통에 있어 농협이 제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농협이 경제사업이나 지도사업은 안하고 신용사업에 치중하고 있고, 또 조직이 너무 비대화해서 직원들 월급 등 유지관리 경비가 너무 많이 나가고 있다는 농민들의 불만을 알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조합장의 경영능력이다. 자신들의 생산품을 제값 받고 팔아 주겠다 하고 대표를 뽑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조합장 선거가 지금처럼 불신을 받으면 안 된다. 농협선거가 일반 선거보다 문제가 더 많다고들 한다.

유통에 대한 대안으로 농림부 차원에서 매년 600명씩 유통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6개월 단위로 유통을 전담하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 전문화 교육을 시킨 뒤 농협에 들어가서 역할을 하게끔 할 것이다. 또한 2004년부터

터 농대 교수 300명 정도를 시도지사의 겸임연구관으로 배치해 지역의 농업특성화 사업을 맡길 생각이다.

박형숙 기자 : 현재 입법예고중인 농협법 개정안에는 농민들이 오래 전부터 주장해온 신·경 분리 내용이 빠져 있다. 국회상정하기 전 농림부의 입장이 어떻게 정리될 것 같나.

허상만 장관 : 좋은 안이 있으면 좀 내 놓세요(웃음). 이 문제는 대통령도 언급한 적이 있다. 농협개혁위원회가 합의를 못했다고 하길래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포함시키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을 보낸다고 합의가 이뤄질 걸로 보이지는 않는다.

핵심적인 쟁점이 신·경분리인데, 농민단체는 3년 내 하자는 것이고 농협은 여건이 성숙될 때 하자는 것인데, 계속 의견을 듣고 있다. 신·경 분리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자본금 확충이나 지도경제사업비 마련 등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박형숙 기자 : 농협의 경제사업 비중이 전체 20% 불과하다는 것은 심각한 수준 아닌가.

허상만 장관 : 알고 있다. 하지만 그나마도 성공 못하고 지지부진하다. 신경분리에 대한 농민들의 주장도 경제사업을 제대로 해서 농협 본연의 모습으로 가자는 것인데 나의 고민이 거기에 있다. 회피할 생각은 없다. 다만 신·경분리 하기 전에 할 일이 신용사업에서 지도·경제사업에 투자가 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다. 농협의 신용사업은 재정경제부의 지시를 받는다.

신용사업을 떼어내고도 정부의 지원 없이 자립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되도록 빨리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농민단체들의 주장대

로) 내후년에 한다고 명시적으로 박는 것은 불가능하다.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퍼 주기' 비판 옳지 않다…….통일 이후 식량정책 대비해야

박형숙 기자 : 우리 농촌이 어떤 기능을 하는 곳으로 돼야 한다고 생각 하나.

허상만 장관 : 가서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단순히 향수를 자극하는 곳이 아니라, 도시의 샐러리맨들은 주말이면 가서 쉬고 정년퇴직 뒤엔 아예 살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언젠가 지인으로부터 메일을 받았는데 서울에서 노년을 보낼 경우 지출 비용은 5~8억 정도가 든다고 하더라. 하지만 아이들 교육시키고 집 장만하고 해야 하는데 그 돈을 어떻게 구하겠나. 하지만 농촌에선 1억이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다.

장관 되고 서울로 올라와서 북한산 백운대엘 갔는데 그게 등산인가. 군부대가 이동하는 거지. 사람에 치어 등산이 안된다. 그나마 나는 과연 정부종합청사에 있는 것은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광화문은 사람 살 곳이 못된다. 사람이니까 살지 동물들 데려다 봤으면 다 죽지 못산다.(웃음)

박형숙 기자 : 올 농사가 23년 만에 최대 흉작이다. 남한이야 저장해 놓은 게 많으니까 수급에 문제가 없지만, 그 때문에 대북지원량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278만석이 유지되나.

허상만 장관 : 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다. 개인적으로 계속 보내야 한다고는 생각한다. 경의선 육로를 이용해 오고간다면 더 보기 좋을 것이다. '퍼 준다'는 비판은 옳지 않다. 옆에 이웃이 굶어 죽는데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나. 이북도 우리 땅이다. 통일 이후 식량문제에 대비해야 한다.

농업·농촌 종합대책 개혁안 관련 네티즌 토론

(중앙일보 조인스 닷컴, 2004. 3. 24)

중앙일보[중앙일보] : 장관님 오늘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네티즌들께 인사말부터 해주시고 다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농촌 종합대책" 토론에 들어가며

허상만 장관 : 전국의 농업인, 소비자, 네티즌 여러분!

오늘 농업·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대책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FTA, DDA, 쌀 재협상으로 인한 개방화시대에 향후 10년을 대비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농업·농촌의 새로운 비전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물론 이를 실행하기 위한 투융자계획 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참여정부에서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한 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하겠다]는 국정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농업인, 관계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등 각계각층과 정부 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쳤다는 점을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신 농업인, 소비자,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이번 기회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많은 네티즌들이 참여하여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에

대한 참신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jtkim[경상남도] : 세제상의 혜택이나 은행에서 자금융자나 지원 등이 전무한 상태임 따라서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거주하면서도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교통편, 학군조정, 세제 감면과 자금지원 등이 필요하며 또한 누구나 자유롭게 농촌의 주택과 1,000평정도 의 논밭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허상만 장관 : 지난해에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도시민이 농어촌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기존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도시민이 농어촌주택을 주말 전원주택으로 활용시 별장으로 간주되어 지방세로 중과세하던 것을 일반세율로 적용 하도록 하는 등 농어촌주택 구입에 있어서 세제상 불리한 점을 개선하였습니다.

김명남/m16 [경기도 부천시] : 향후 협동조합의 자율성 보장과 발전을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정책입안 및 결정시 장관께서 특별한 역할을 담당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허상만 장관 :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의 자율적 결사체로서 설립부터 사업추진, 해산까지 농업인 스스로가 결정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자율개혁 방식으로 개혁을 추진 중인데, 지난해 4월 농협 스스로 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개혁과제를 논의하여 정부에 건의하였고, 정부는 그 건의안을 바탕으로 개혁과제를 반영한 농협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임윤경[경기도 고양시] : 농민에 가장 근접한곳은 기술센터도 아니고 군농정과도 아닙니다. 바로 농협인데요, 농협을 농민을 위해 일 하는 곳으로

하루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교하농협 사태를 보더라도 시용사업으로 이익을 내고 이익 낸 만큼 직원은 연봉 과장급은 8,000만원을 받아 가고 농민은 연체 이자를 무는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허상만 장관 : 일선조합의 사업방향, 임직원의 봉급문제는 기본적으로 조합원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농협법의 정신입니다.

조합 임직원의 봉급문제도 농업인 여러분이 납득할 수 있도록 경영실적과 비례한 성과급시스템으로의 개편을 농협측과 협의 중입니다.

심훈/sh899[경기도 용인시] :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농업대책안중에 현 유지되는 추곡수매제를 공공비축제로 바꾼다고 하는데……. 많은 장단점들이 존재 할 텐데 그것들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허상만 장관 : WTO체제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연간 750억 원 정도 수매보조금이 감소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득지지 효과가 크게 약화되었고, 만약 쌀 보조가능액(AMS)이 크게 감소되는 경우 수매제도 유지가 사실상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수매제도를 WTO가 허용하는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제'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적정 쌀 재고 600만석 내외를 기준으로 매년 일정수준을 시가로 매입하여 방출하는 제도로서 공공비축 물량이나 매입·방출방법 등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김남식[남해] : 저 농업 살리기에서 농촌 살리기로 바뀌었던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허상만 장관 : 과거 농업정책인 생산기능에 치중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농정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 농업은 경쟁력 있고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가능한 산업으로, 농촌은 농촌다움을 갖춘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정책도 기존 농업정책위주에서 소득정책·농촌정책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정책의 외연을 넓혀 간다는 의미입니다.

프린트존[전라북도] : 절대농지는 지가가 상승 하지 않아 주변농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 대책은 없는지요.

허상만 장관 : 프린트존님께서 말씀하시는 절대농지는 아마도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진흥지역내 농지의 경우 농업생산을 위해 보전되어야 할 우량농지로서 농업의 활용이 제한되므로 진흥지역 밖 농지보다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진흥지역안 농지의 규제에 따르는 보상을 위해 농지법 등에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의 확대 및 우선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진흥지역에 대해 생산기반사업 우선지원, 논농업직불금 차등지원, 우선수매 및 영농규모화 자금 우선지원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lee2401[경기도] : 농산물의 시장개방에 따른 농산물 가격하락은 농지가의 하락으로 이어져 최악의 경우 농촌사회의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농지은행의 설치는 늦은 감이 있지만 적절한 정책으로 판단됩니다.

농지은행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정도의 재원은 확보되어야 농가의 파산이나 농촌사회의 붕괴를 예방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7조원 이상의 소요재원 확보방안은 무엇입니까?

허상만 장관 : 말씀하신 것처럼 DDA협상 등 농산물 시장개방의 진행에 따라 농작물수익률이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진흥지역안 농지를 중심으로 농지가격이 상당한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농림부는 이러한 농지시장의 변동에 대응하여 농지유동화 정보제공기능, 농지신탁기능 및 농지매입기능 확충 등 농지은행기능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도입방법이나 시기 및 재원확보방안 등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를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syblarry[경기도] : 농업진흥구역 농지중 비경지정리 된 곳은 이제는 현실에 맞게 비우량 농지에 한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허상만 장관 : 앞서 질문하신 분에게 진흥지역에 관한 말씀을 드렸으니 생략하겠습니다.

고독하내[충남 아산시] : 지금까지 농촌은 도시의 우렁찬 발전에 발맞추지 못하고 개발의 뒷전에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다시 농산물 수입 자유화라 하여 농민의 희생을 담보한 국가 경쟁력을 이야기하는군요.

이제 더 이상 농민이 설 곳이 없어진다면, 농업을 국가가 경영 하는 것은 어떨는지요?

허상만 장관 :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촌의 사정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개방 확대에 따라 값싼 외국 농산물과 경쟁이 치열해지고 상대적으로 영세규모인 우리 농촌은 그 어려움이 가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개방 확대는 거스를 수 없습니다. 부존자원이 적고 무역의존도가 64%나 되는 우리나라로서는 WTO, FTA와 같은 세계 무역질서에서 외톨

이로 살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향후 10년간 농업부문에 119조원을 투입하여 이 위기를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이 우리 농업을 살리는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하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와 농업인이 손을 잡고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정팔[마포] : 많은 농민들은 정부가 너무 농촌의 현실을 모른다고 합니다. 탁상행정이니 이러한 소리를 하는데 직접 가서 고충을 듣는 것은 어떠한지요? 너무 머리로만 짜는 것 아닙니까?

허상만 장관 : 제가 농림부에 와서 제일 강조한 것이 농업인이 신뢰하는 농정, 직접 농업현장을 찾아가는 현장농정, 농업인이 정책의 입안과 집행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농정이었습니다.

지난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할 때에도 이러한 원칙 하에 수없이 많은 회의, 농업인과 농민단체에 대한 토론회, 의견수렴 등을 거쳤습니다.

향후 10년간의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농촌현장과 종합대책이 함께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중앙의 종합대책과 연계하여 지역의 특수성을 잘 반영한 시책을 농업인, 지방자치단체, 지방대학들과 협의해서 만들고 정부는 이를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또 지역의 농업연구기관이나 지방농대 교수 등 전문가들이 우리 농업인을 적극 도울 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 현실과 잘 부합되는 정책을 추진하려 합니다.

이와 더불어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농정 모니터링 시스템을 조성하여 농정에 대한 신뢰회복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nike0917[청주] : 농촌의 농산물을 보다 질적으로 높이려면 수입농산물이 어떤 과정과 공정을 통해 경제적 수익성을 유지하는지 프로그램을 정부차원에서 지지해 주는 게 중요한 듯 합니다.

허상만 장관 : 맞습니다. 유럽이나 미국과 같이 농업 선진국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특히 건강, 고품질 등 단순한 생산을 넘어 농산물을 기술과 정보가 접목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들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인들도 단순한 생산만 할 것이 아니라 우선 어떤 농산물이 우리 소비자들에게 잘 팔릴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아울러 시장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산지 농업인들이 뭉쳐야 합니다.

산지 조직을 중심으로 계열화를 하고 시장정보를 서로 나누어 자기 상품을 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농업경영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정보와 농업경영기술을 습득하게 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각종 교육기회를 통한 정보제공과 교수, 전문가들의 컨설팅, TV 농어촌 프로그램을 통한 성공한 농업인의 비법 소개, 선진 농업기술의 끊임없는 개발과 현장 적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기[경기도] : 저 장관님 제 생각엔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정부를 농민들이 못 믿는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 FTA도 그렇게 심각하게 투쟁한 이유는 그동안의 정부정책이 그렇게 믿음을 받지 못해서 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상만 장관 : 농업 농촌 종합대책 수립시, 우리는 과거 11년 동안의 우리 농정에 대해서 냉철한 평가와 분석을 했습니다.

그 평가를 기초로 해서 119조 원 중에서 2008년까지 5년 동안 51조원을

정부의 재정운영계획에 반영했고, 이 재원을 2004년 올 한해 어떻게 쓰여 지나에 따라서 우리 농정의 신뢰회복 문제가 달려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을 '새로운 농정의 원년'으로 삼고, 정부에서 펼치는 사업이나 예산을 집행할 때 생산자, 지방자치단체, 지방에 있는 농과대학의 교수님들의 의견을 듣고, 그 결정을 존중하여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부가 이런 노력을 기울인다면 금년 한해가 우리 농정에 신뢰가 싹트는 한 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대진[대전] : 저 이번대책을 보니 너무 보상에 대해서만 나오는 데요 그럼 농사다 때려 치는 쪽이 되지 않을까요? 농민들을 묶어서 농사를 하게 해야지 그만두도록 장려 하는 것은 아닌지요?

허상만 장관 : 이번 종합대책을 두고 보상대책만 있다고 하시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산업으로서 농업의 체질을 강화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인의 소득과 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 그리고 농촌을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농촌 정책 등 그야말로 종합적인 대책입니다.

게다가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119조원 재원대책까지 마련한 실현가능한 대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모화가 필요한데, 규모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영농규모화 사업을 활성화하여 젊고 능력 있는 농업인에게 영농이 집중되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고령농이나 영세농으로 더 이상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에게도 농촌 복지인프라를 확충하여 농촌에 살면서도 농사를 짓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의료와 교육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하려고 합니다.

우창명[서울] : 농촌진흥청을 기르고 가꾸는 농업에서 시장에서 팔리는 농작물, 축산물을 생산하는 마케팅 전략 및 경영전략을 지도할 수 있는 기관으로 육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협에의 정책의뢰는 중단하고 농촌진흥청을 국제개방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변혁하여 일원화 하면 보다 국가경영 전략차원으로 일원화되어 좋을 것 같습니다.

허상만 장관 : 농협에 대한 개혁요구가 강하다는 점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종합대책에서도 밝혔듯이 농업협동조합의 개혁을 가속화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조합원들의 개혁의지를 바탕으로 자율적 구조개선을 뒷받침할 제도개선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농촌진흥청도 수출 및 내수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작목 개발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고 역량을 집중토록 개편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확 후 품질관리, 농산물 안전성 등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는 연구기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농정개혁 로드맵을 추진하기 위해 농정조직과 인력구조를 과감히 개편하여 농업인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남성우[경상남도] : 농민들의 출하농산물 소득보장을 위해서라도 모든 농산물의 상장경매를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참고로 저는 양상추 재배 농민입니다.

허상만 장관 : 도매시장 거래제도의 원칙은 상장경매입니다. 단지, 반입 물량이 소량인 경우와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경우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비상장거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장하여 거래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유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거래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한 것이지만, 비상장 품목으로 지

정된 경우에도 출하자가 상장거래를 원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을 통하여 상장경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니 양상추를 내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화식[군포시] : 기업농은 영농의 기계화를 기본으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의 영농 기계화란 경운기, 콤바인, 트랙터 등의 전통적 기계 장치에 국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계들은 특수작물 등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전통적인 기계가 아니라, 농산물의 파종에서 수확에 이르는 전과정에 로봇이나 컴퓨터에 의한 자동시스템과 같은 첨단 장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상만 장관 : 우리 쌀 산업의 기계화는 어느 정도 진척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노동력을 줄이기 위한 기계화, 생산기반 정비 등은 이미 상당부분 확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농업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첨단 장비 개발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첨단 기계라기보다 현장에서 농업인이 생산력 증대와 품질 고급화에 활용할 수 있는 농업기술을 혁신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는 산, 학, 연을 연계한 지역농업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농림기술 로드맵을 만들어 이러한 혁신기술이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염행철/yom[충남 천안시] : 제가 느끼는 농촌문제는 훨씬 더 심각하고 이런 정도의 정책으로는 농촌을 활성화 하는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농민들 보고 빨리 도시로 이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농민을 위한 정책은 아닐는지요?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허상만 장관 : 염행철님 말씀처럼 도시로 떠나기만 한다면 우리 농업 농촌이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물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가 제시한 농업농촌 종합대책이 궁극적 해결책이라고 자만하지는 않습니다. 궁극적인 해결책은 농업인 스스로 자신감을 회복하고 혁신을 통해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가 이렇게 농업인이 새로운 희망을 갖도록 최대한 돕겠다는 것입니다. 119조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을 정부와 농업인, 그리고 국민 모두의 지혜를 모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우리 농업과 농촌에 밝은 미래가 올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정부는 하고자하는 농업인을 적극 도울 것 입니다. 그러나 소농이나 고령 농은 하고자하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농업인에게는 교육, 의료 등 복지차원에서 정부가 지원하여 농촌에 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oungbai[경기도] : 농업, 농촌의 현실은 변화하는 시대에 부합되는 농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농정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조직은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농정기획 인프라의 획기적인 개혁 프로그램은 있으신지요?

허상만 장관 : 과거 농정에서는 없던 3년 단위 평가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나 하면,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119조원의 농업농촌 종합대책은 앞으로 10년 동안 변함없이 가는 것이 아니고 3년마다 성과를 평가 반성하고 다시 현실에 맞게 종합대책을 수정하여 살아 있는 대책이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책기획서부터 집행의 모든 과정에서 지방, 전문가,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듭니다. 그리고 농림부나 농협, 농업기반공사 등 농업관련기관도 새로운 시대적 농정수요에 맞춰 혁신해 나갈 것입니다.

문제는 인적자원인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천천히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leedmin[김포] : 경쟁력 없는 농업에 매달리지 않고 '농촌'을 살린다는 구호는 좋은데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면 농촌 관광마을을 조성해서 농외소득을 늘린다고 하는데,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허상만 장관 : 우리부는 어려운 현실에 처한 농촌을 살리기 위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촌관광 활성화, 농공단지 확충, 도시자본의 농촌유치 등의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관광마을 조성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농업인이 스스로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농촌관광은 농촌의 잘 보존된 자연경관과 생태환경, 전통문화, 향토음식, 친환경농업 등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도시민이 농촌에서 여가를 즐기고 농촌주민은 민박, 체험프로그램 운영, 농산물직거래 등으로 소득을 올리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관광마을에 방문객이 늘어 농촌소득이 실질적으로 증가될 수 있도록 홍보나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지원 해 나겠습니다.

도현수[무주] : 현재 농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보다도 농가부채 문제입니다. 막대한 부채 때문에 농사를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는 것이 오늘날 농촌의 현실입니다. 농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허상만 장관 : 말씀 하신 바와 같이 정부도 농업인들의 부채문제 심각성

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업인들이 과도한 부채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난 3월 5일부터 부채경감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원된 농업정책자금 9.6조원의 금리를 4%에서 1.5%로, 상환기간도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이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빌려 썼던 상호금융대체자금과 경영난에 처한 농가에게 대출해준 농업경영개선자금 약 9조원의 금리도 6.5%에서 3%로 낮추었습니다.

이밖에 2000~2003년 신규 대출된 상호금융자금 7조원의 금리도 평균 8%인데 정부가 3%를 보전해 줍니다.

2004년 신규정책자금 4조원의 금리도 4%에서 3%로 인하되었습니다. 또한 농가가 다른 농가에 연대보증을 썼다가 빚을 떠안은 경우 대출해준 '연대보증특별피해자금'의 상환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김현수[경기도] : 광우병과 조류독감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여전합니다. 특히 최근에 조류독감이 다시 발병하였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방역시스템이 매우 취약함을 입증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허상만 장관 : 우선 가금인플루엔자로 다시 한번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다만, 지난 번 가금인플루엔자가 아시아지역을 휩쓸 때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한국과 일본의 방역대책 추진을 모범사례로 선정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방역체계는 우수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방역인력이 부족하고, 농가와 지자체의 인식이 부족한 문제점 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질병발생 초기가 중요하므로 기동방역반을 상시 편성하여 초동방

역체계를 보강하고, 시 군 공익수의관제 추진 등 조직을 정비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성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 등 일관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우수 브랜드를 중심으로 쇠고기 생산이력제를 시범 도입하여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한종길[경상남도] : 쌀 재협상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어떤 결과이든지 개방이 지금보다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장관님은 우리 쌀을 지키기 위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허상만 장관 : 금년도는 우리 쌀 산업의 미래가 결정되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WTO/DDA 협상과 쌀 재협상 결과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쌀 시장개방 폭의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쌀 산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쌀값하락으로 단위면적당 소득이 감소하더라도 적정 수준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영규모를 확대하고 쌀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를 확충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개방 후 쌀값에 대한 몇 개 시나리오를 놓고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쌀이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수입쌀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품질고급화를 추진하는 한편, 기능이 축소되고 있는 정부수매제도의 개편과 아울러 취약한 민간유통기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정현[안동시] : 과거 정부의 농업투자가 실패한 것은 예산집행에 급급해서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돈을 나눠준데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다 지금의 농가부채로 연결 되었고요.

이번에는 예전보다 더 큰 규모로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걱정이 됩니다. 종래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한 묘안이 있는지요.

허상만 장관 : 이번 농업 농촌종합대책과 119조원 투융자계획은 정부의 투융자가 결과적으로 농가 부채만 양산했다는 과거 정책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투융자 지원방식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우선, 향후 투융자는 보조중심으로 지원하고, 특히 직불금 등 재정에서 직접 농가에 보조하는 방식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지원대상자의 경영능력이나,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기술·경영컨설팅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재해·가격 폭락 등 불의의 피해로 경영위기에 처할 경우에 대비하여 민간의 워크 아웃방식의 경영회생제도를 상설화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알래[정읍] : 지금 대부분 농민들은 쌀 개방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쌀 재협상이 있는데 쌀 재협상 계획과 정부가 생각하는 협상전략은 무엇인지요.

허상만 장관 : 지난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정 부속서(5의 8항)를 보면, 쌀 협상은 2004년, 금년에 시작해서 금년에 종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1월 20일 WTO사무국에 협상개시를 통보하여 오는 5월부터 9월 사이에 우리 쌀 시장에 관심 있는 국가들과 양자협상을 하게 될 전망이며, 협상결과를 WTO에 통보하고 검증절차를 거쳐 12월말까지는 모든 절차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관세화 유예를 기본입장으로 하여 협상을 추진하되, 관세화유예나, 관세화나의 이분법적인 명분논리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라는 실리 추구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기종[전남] : 신문에서 보면 과거 농업에 수십 조 원을 투자해서 지금 농가부채가 많이 늘어난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농가 부채 유발과 같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대책이 있습니까?

허상만 장관 : 정부의 투용자가 결과적으로 농가부채 문제를 유발했다는 비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반성하고 앞으로 투용자 방식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우선 앞으로는 직접직불제 등 보조금 중심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용자 비중이 과거 37%에서 25%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또한 지원대상자의 경영능력이나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하여 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영농에 성공하도록 기술과 경영컨설팅도 병행할 것입니다.

재해, 가격폭락 등 일시적인 이유로 부실화되는 것에 대응하여 워크아웃 방식의 경영회생제도를 만들어 올해부터 매년 2천 억 원의 회생자금을 장기 저리로 어려운 농가에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나비[충청남도] : 119조원 투용자계획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실제 농사짓는 농민에게는 전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전의 대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농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대책은 의미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허상만 장관 : 우리 농정에 애정을 가져 주시고 좋은 지적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투용자 내용면에서 과거의 경우 경지정리 등 생산기반 정비에 중점을 두었지만, 앞으로는 직접직불제 확충 등 소득 및 경영안정, 농업인 복지 및 지역개발 등에 중점에 둘 계획입니다.

지원방법도 과거와 달리 지원받는 농민들이 갚아야 하는 용자 비중을 낮추는(과거계획 37%, 119조 계획 25%) 한편, 직접지불제 등 보조비중을 높여 농업인들이 피부와 와 닿는 대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인들도 정부의 계획을 잘 이해하고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김창현[전라도] : 종합대책, 로드맵이라고 이름은 거창하고 뭔가 대단한 것인 것 같은데, 실제 우리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부족합니다. 농민들 입장에서 올해 당장 무엇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허상만 장관 : 경영이양 직불제가 연금방식으로 바뀌어 예전에는 1ha에 280만원을 한 번 주던 것을 금년부터는 매월 24만원씩 최장 8년간, 연금방식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농민여러분께서 관심이 많으신 논농업직불제도 4ha까지 받도록 하였습니다.

농어민 건강보험료도 금년부터 30%까지는 경감되고 장기적으로 50%까지 정부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5세 미만의 영유아 보육비도 매달 131천원 지원됩니다. 고교생등록금은 인문계, 실업계 구분 없이 전액 정부가 지원합니다. 대학생 학자금은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 용자 지원 합니다.

올해 대책 중 가장 큰 것이 농가부채대책인데, 정책자금이나 농업용으로 쓰인 상호금융 중 일정한 조건에 부합되는 자금은 상환기간을 늘리거나 이자율을 낮춰 주고 있습니다. 부채경감대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역에 있는 일선농협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kangs[전라도] : 전업농 육성을 강조했는데 그래도 농촌에서 전업농은 정부가 지원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한 계층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살기 어려운 영세농가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생계를 지원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허상만 장관 : 한정된 농지와 재원을 전업농 중심으로 집중하기 위해서는 영세·고령농 보완대책이 성공의 관건입니다. 은퇴 후 생활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영이양직불금 지원 단가를 대폭 인상하고 연금방식으로 분할·지급하는 내용으로 금년부터 경영이양직불제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농업을 하지 않더라도 교육·의료 문제 등으로 농촌을 떠나지 않고 농촌사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영유아 양육비,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농촌복지·교육 지역개발 업무의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아울러 전통문화·지역특산물 등 농촌 부존자원을 활용한 농촌관광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소득원을 창출함으로써 재촌탈농 여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jangk[강원도] : 6ha규모의 쌀 전업농을 7만호 육성한다는데 이 정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시됩니다. 전업농 육성을 위해 무엇을 지원할 계획인지 알고 싶습니다.

허상만 장관 : 우리 농업의 장래가 전업농 육성에 달려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정부도 이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영농규모화사업을 현재보다 2배 이상 늘리고 고령농의 경영이양을 촉진하는 경영이양직불제를 실시하여 쌀 전업농의 규모화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10년간 약 16만 4천ha의 논이 전업농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놓고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 경영교육도 지원하여 전업화에 꼭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유통을 뒷받침할 농지은행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출 계획입니다.

김대년[안양] : 그 동안 엄격하게 통제되어 오던 비농업인 들의 농지소유가 작년부터 한정적이거나 허용되기 시작하였으며, 300평까지 농지 소유를 허용하였다.

이렇게 농지소유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폐지되어 농지거래가 자유화 되게 되면 농지에 대한 투기 붐이 일어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며, 이제는 아파트 투기에 이어 농지까지 전국토가 투기 붐에 휩싸이게 될지도 모른다.

이번에 나온 정부의 정책은 농지 값을 올려 주려는 농업인들에게 주는 선물 이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정책은 영농규모의 영세성을 더욱더 부채질 하여 오히려 우리나라 농업의 경쟁력을 더욱더 떨어트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허상만 장관 : 정부의 농지제도 개선의 기본은 농업진흥지역과 진흥지역 밖의 우량농지는 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외 농지는 이용을 원활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70~80년대 시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에 맞는 농지제도 개편이 필요합니다.

농촌은 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업인과 도시민이 같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생산기반이 갖추어진 우량농지에 대해서는 도시민들이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1,000㎡미만에 한해서 이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소규모로 필지를 나눠서 영농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서, 종전과 같이 기계화된 영농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산기반이 정비된 농업진흥지역내의 우량농지는 비농업인의 소유가 현재보다 확대되더라도 정부에서 영농규모화사업을 통하여 전업농이 농지를 추가로 사거나 장기적으로 빌리는 것을 지원하여 지금보다도 규모화된 기계화 영농을 계속하도록 농지제도를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려하시는 투기·난개발 문제는 농지법상 비농민에 대하여는 일정규모 이하의 농지구입을 허용하되 최소한의 영농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농지법과

국토계획법에서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실제 수도권주위에서 발생 가능한 투기에 대해서는 재경부와 건교부 등 관계부처에서 토지거래허가제의 강화와 투기지역에 대한 중과세 도입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으로는 현행의 농지조성비 제도를 공시지가와 연계한 전용부담금제도로 변경하여 대도시 주변에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경우에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농촌지역에 대한 투자재원으로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정부는 농지제도 개선안을 만들기 위해서 각계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욱[대한민국] : 추곡수매제를 대신해서 공공비축제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수매제도가 농민들에게 미쳐 온 영향을 감안하면 농민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예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입장을 이런 방향으로 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허상만 장관 : WTO출범이후 보조금 감축에 따른 수매물량 감소로 추곡수매제 본래의 농가소득지지 및 수급조절 기능이 약화되었으며, 향후 시장 개방 폭 확대시에는 식량안보를 위한 물량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WTO에서 허용보조로 분류되고 있는 시가로 매입 방출하고, 일정수준의 재고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공공비축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공공비축제의 구체적인 도입 시기, 비축수준, 매입 방출 방법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수급균형 회복시기와 DDA협상과 쌀 협상 등을 감안하여 농업인, 농업인 단체, 관계전문가 등 각계의 충분한 토론을 통해 확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민[나주시] : 이번 쌀 재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대만처럼 관세화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관세화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가요?

허상만 장관 : 사실 관세와 유예와 관세화 모두 장단점이 있어 현재 상태로 어느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관세화 유예시에는 합의된 의무수입량만 수입되므로 연도별 쌀 수입량이 확정되는 반면,

관세화 유예 대가로 의무수입량 증량을 포함한 상대국의 과도한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관세화시에는 과도한 의무수입량 증량은 피할 수 있으나 앞으로의 국제가격과 환율변동, 관세감축 등에 따라 수입량이 급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해득실을 따져 볼 수 있는 기준이 될 DDA농업협상 세부원칙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미국 중국 등 관심이 다른 국가들과 쌀 관세화 유예 조건에 대한 개별적인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여 각각의 국가들과 합의를 이룬 후 이 결과를 종합하여 공동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관세화 유예로 간다고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주요국과 양자 협상을 통해 요구사항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협상력을 집중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수길(경상남도) : 이번 농업농촌대책은 지난 우루과이라운드 때와 내용에는 아무 차이가 없고 119조라는 금액만 강조하는데 농민을 현혹시키는 것이 아닌가요?

허상만 장관 : 이번에 마련된 농업 농촌 종합대책은 UR이후 추진된 농업정책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각계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과거의 대책은 품목별 경쟁력 제고, 생산기반 정비, 유통시설 등 농업인

프라 구축에 치중하였으나, 이번에는 규모화된 전업농 및 고부가가치 기술 농업 육성, 직접지불 등 소득안정과 농촌지역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농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대책은 수립 후 보완절차가 없었으나 이번 대책은 3년 단위로 평가해서 농정환경의 변화를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추진방식도 농업인과 중앙정부, 지자체, 지방농과대학 등이 새로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중앙정부는 사람과 자본이 모일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고, 지자체 중심으로 지방의 특성에 맞는 농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yoyg0531[서울시] : 광우병에 대해 조금씩 잊혀져 가고 있는 지금 미주산 수입육의 가격은 매점매석에 동조되어 폭등하고 있기에 이것은 음식점들을 두 번 죽이는 꼴이 되었습니다. 소고기뿐만 아니라 수입산 돼지고기도 50~100%가격이 상승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업체들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며,

앞으로 미국산 수입소고기의 수입 재개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부산 컨테이너 야적장에 있는 물량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오니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허상만 장관 :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수입재개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 광우병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나라는 광우병 발생국가로부터 쇠고기 수입 재개를 허용한 사례가 없습니다.

보세구역에 보관되어 있는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금지 물품이므로 반송되어야 합니다. 그 동안 보관되어 있던 2만 3천 톤 중 약 4천 톤이 이미 반송

되었고, 나머지 19천 톤도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반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화식[군포시] : 기업형 전업농의 경우, 대량의 농지가 필요한데, 농지의 공급방법(구입 혹은 임대)과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농지의 가격이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너무 높아, 농사를 지어 봐야 농지에 대한 이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영농회사가 어떻게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허상만 장관 : 쌀 전업농의 농지매입여건이 약화됨에 따라 안정적인 규모 확대를 위하여 농지매입보다는 임대차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매나 임대차 사업비율은 지역여건 및 개별 경영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경영이양직불제로 이양되는 농지는 모두 영농규모화에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영농규모화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인데, 농지매매사업 자금의 금리를 인하한다든지, 원리금 상환방식을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경영체별 경영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선우강[안양시] : 도시에서 자라서 30대 중반에 농촌으로 이주하였다가 40대 초반에 다시 도시로 귀경한 사람입니다.

귀경의 첫째이유는 농산물가격의 폭락입니다. 풍년이면 물량이 많아 폭락하고, 흉년이면 도시민 살리기 위해 수입하니 그나마 건진 수확물이 폭락합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묻고 싶습니다.

둘째, 교육환경의 열악입니다. 대다수의 초중학교 교원들이 (죄송하지만) 도시 교원의 학력수준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또한 정식으로 교직을 이수

한분들도 거의 모두 도시로 진출하기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치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셋째, 지금까지 나온 정책의 줄거리를 보면 결국 농촌은 도시민을 위한 주말농장이나 기업의 영리에 따르는 투자 일 뿐인데, 이것이 농촌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하십니까? '주말농장관리인' '미래가 보장 되지 않는 소작인' 장관님! 진정 농촌에 사는 농민은 이렇게 전략해야 합니까?

허상만 장관 : 선우장 선생께서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농업투자로 농업생산성이 향상되어 도시 사람들은 사시사철 풍성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이것이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이어지면서 농가 소득이 향상되지 못했습니다. 그 해결책을 정부도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제시 하였습니다.

우선 전업화가 필요합니다. 규모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야만 합니다. 아울러 직접지불제를 대폭 확대하여 취약한 농가 소득의 일정부분을 정부가 지원해야 합니다. 재해나 가격 폭락에 의한 농가 경영불안에 대비한 보험 등 각종 안전장치도 확충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육문제도 선생님말씀에 동감합니다. 저는 농촌에 산다는 이유 만으로도 국가가 교육이나 의료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책에서도 농촌출신 학생 지원이라든가 영유아 보육비지원, 농촌에 우수교원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 등을 교육부 등 관련부처와 협조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도시민에게 농지소유를 확대시키는 것은 농촌에도 자본과 사람이 유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투기나 난개발은 국가적 차원에서 엄격히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농촌이 농업인만 사는 곳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스스로 도시민에게 마음을 열고, 농촌에 돈을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

습니다. 그래야만 농촌지역도 개발이 원활해지고 농민도 농외소득을 얻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귀하께서도 정부의 농지제도를 잘 알고 정책을 비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leedmin[김포] : 전업농의 농업규모를 확대해서 도시근로자의 수입과 비슷한 수준으로 만든다는데 그 타당한 근거(계산근거)는 있습니까?

허상만 장관 : 앞으로 DDA나 쌀 재협상 결과에 따라서 쌀 시장의 개방이 확대되면, 농지 단위면적당 소득수준이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는 쌀 전업농의 소득수준이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수준이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영규모가 현재보다 크게 높아진 6ha 수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월말 발표한바 있는 농업농촌종합대책에서는 2010년도에 6ha수준의 쌀 전업농의 경우 소득수준이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수준(5,299만원/연)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도시가구원수(3.18명)보다 쌀 전업농가의 가구원수(2.43명)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감안할 경우 가구원 1인당 소득수준이 도시근로자 가구원 1인당 소득보다 높아(2,222만원/1,666만원) 쌀 전업농이 안정적으로 쌀 농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쌀을 지키기 위해서는 쌀 전업농의 육성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허용익[충청남도] : 논을 제 외한 농업진흥지역내 토지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 농업진흥지역내의 전의 전용허가.

허상만 장관 : 허용익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내 농지활용에 대한 엄격한 제한으로 농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량생산과 국토환경보전에 필요한 우량농지는 논밭의 구분 없이 진흥지역에 편입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밭의 경우에도 생산기반이 정비된 경우 농업생산에 활용되도록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농업인의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및 농산물 판매시설 등의 설치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leedmin[김포] : 농지전용 권한을 대폭 지자체에 이양한다고 하는데 전체 국토개발과 상치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거나 난개발 될 가능성 또는 토지투기의 우려는 없는지요?

허상만 장관 : 말씀하신 내용은 농지의 보전과 개발의 조화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적 개발을 위해서는 토지의 이용권한을 지방정부에 큰 폭으로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나, 그럴 경우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보전되어야 할 농업기반이 갖추어진 우량농지가 단기간에 급격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농림부는 현재 추진 중인 농지제도 개선에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한해서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농지전용허가권한의 위임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문수(경상남도 진해시) : 그린벨트 거주자는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으며 개인 재산권도 심각하게 침해 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사항에서 그린벨트 거주자가 그린벨트내의 농지(전/답)의 활용규제의 해제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허상만 장관 : 질문하신 내용은 농림부뿐만 아니라 건교부와도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린벨트내 농지에는 농지법상 규제외에 기본적으로 건교부 소관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법)에 의해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개발제한법시행령 개정시에 우리부에서는 건교부와 협조하여 실제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농업용 시설의 중복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한 바가 있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편익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leedmin[김포] : '농촌'을 살리고 살만한 농촌을 만들려면 농지소유, 농지 전용에 대한 규제축소와 더불어 주거, 복지, 병원, 학교시설 등 사회 인프라의 구축도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허상만 장관 : 농촌을 '농촌다움'을 갖춘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확대하여 사람과 자본이 농촌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소규모학교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공공도서관 건립을 확대하는 한편, 보건소 중심의 공공 의료서비스 기능도 보강해 나갈 것입니다.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비율도 확대하는 등 농촌형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교통·상하수도 등 농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하고, 농촌마을 종합개발과 같은 거점 개발형 지역개발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병무[전라남도] : 허상만 장관께서 반농업적 정서가 팽배하고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119조 농업 투융자사업을 이끌어 내고 로드맵까지 만들어 낸 것은 위기의 농업을 구할 수 있는 역사적으로 평가 받을 것입니다.

이번 투융자사업이 성공을 하려면 철저한 사전 타당성조사와 집행과정의

감독 그리고 사후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실 것 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허상만 장관 : 정부도 과거 우루과이라운드이후 추진된 농업 정책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미흡했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119조원 투융자계획은 3년 단위로 평가하여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보완하여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fofori[경기도] : 쌀 협상이 있는데 명분보다는 실익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만약 관세화 유예의 대가가 지나치게 클 경우에는 관세화를 할 수 도 있습니까?

허상만 장관 : 이 질문은 협상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로서는 우리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선택대안의 이해득실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체 DDA 농업협상의 동향, 상대국의 요구수준도 고려하면서, 농업인, 전문가, 국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국민적 공감대하에서 단계별로 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모든 과정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철기[경기도 안성시] : 17일 농특위에서 농지 은행 제도가 자칫 용어 자체에서 오는 부작용으로 인해 신탁 개념을 도입하지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농지 은행 제도가 농지 신탁제도로 바뀌게 되는 것인지요. 이 경우 위탁자가 농지 소유자, 수탁자가 농업기반공사, 수혜자가 전업농의 관계가 되는 것인지요?

만약 신탁 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이에 관한 준비가 얼마나 되었으며 그

시행 일정은 언제쯤이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허상만 장관 : 농지은행 제도와 관련하여 지난번 농특위 논의 내용은 아마도 농지은행을 도입한다는 것이 새롭게 은행을 설립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농지은행기능 도입 혹은 농지관리 기능 확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기념께서 말씀하신 농지신탁기능은 이러한 농지은행기능 혹은 농지관리기능 중의 하나이며 이밖에 농지유동화 정보제공기능 및 농지매입기능 확충 등이 농지은행기능에 포함됩니다. 이중 농지유동화 정보제공기능과 신탁기능은 현재 시행중인 영농규모화 사업과 연관하여 도입이 가능하므로 빠르면 2005년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신탁기능을 포함한 농지은행기능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은 연구용역 등을 거쳐 확정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박희만(서울시) : 현재 국가에서 브랜드화 촉진을 위해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결국 시장이 개방 된다면, 이스라엘의 "carmel"같은 국내용 브랜드가 아닌 국가통합 수출용 브랜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허상만 장관 : 좋은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산 이미지 제고에 수출농산물 공동대표브랜드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도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유관기관, 업계와 협의 하에 공동 대표브랜드제 운영을 검토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상반기 중 공동대표브랜드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브랜드 명칭 및 구체적 운영계획은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경현(경주시) : 과거 정부에도 농어촌발전을 위해 헤아릴 수 없는 돈을

쏟아 부었는데 효과는 미미합니다. 과연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며, 향후 10년간의 계획은 과거의 것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허상만 장관 : UR 타결 이후 우리 농업 농촌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진 농업 인프라 확충이었습니다. 1992~2002년까지 국고 총 62조원을 투융자한 결과, 농업 인프라가 상당부분 갖춰지고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어 빈번한 기상이변에도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 체계가 구축되고, 농산물가격 안정에 따른 가계비 지출 감소로 소비자 후생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생산성 증대가 농가소득으로 연결되지 못해 부채문제가 심화되고 농촌사회의 어려움이 지속되었는데 이는 엄격한 평가 없이 자금이 지원되고 개별 농가의 경쟁력 제고에 치중한 나머지, 농촌정책과의 균형이 부족한 데에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농업 농촌 종합대책은 UR이후 추진된 농업정책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각계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과거의 대책은 품목별 경쟁력 제고, 생산기반 정비, 유통시설 등 농업 인프라 구축에 치중하였으나, 이번에는 규모화된 전업농 및 고부가가치 기술 농업 육성, 직접지불 등 소득안정과 농촌지역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농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대책은 수립 후 보완절차가 없었으나 이번 대책은 3년 단위로 평가해서 농정환경의 변화를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추진방식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방농과대학 등이 새로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중앙정부는 사람과 자본이 모일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고 지자체 중심으로 지방의 특성에 맞는 농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심영보[평택시] : 올해부터 경지정리는 하지 않는다고 농림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비경지정리된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그리고 이런 비경지정리된 농업진흥지구 중 주변여건의 변화로 농사를 짓기 보다는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농민에게 유리한 곳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농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도 득이 되리라 생각 하는데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이런 농업진흥지역중 비경지정리된 곳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는 하고 계시는지 장관님의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허상만 장관 : 식량생산과 국토환경보전에 필요한 농지의 보전을 위해 진흥지역제도는 유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 2004년부터는 경지정리가 중단되고 주변 여건이 변화되면서 진흥지역으로 남아 있는 것이 불합리한 농지에 대한 재정비의 요구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농림부우량농지의 보전이라는 진흥지역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면서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진흥지역 재정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진흥지역 재정비가 농지소유자나 농업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재정비 기준이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진흥지역 실태조사 등 사전에 충분한 실사 등을 통해 신중히 결정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재정비를 통해 진흥지역에서 해제되는 농지는 생산관리지역에 편입하고, 진흥지역으로 남아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정현[사천시] : 제가 알기로는 이번 농업농촌대책이 처음이 아니라 예전부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엄청난 규모의 재원이 농업과 농촌에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촌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을 먼저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허상만 장관 : 그렇습니다. 선생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UR 타결 이후 우리 농업 농촌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진 농업 기반 확충 이었습니다. 1992~2002년까지 국고 총 62조원을 투융자한 결과, 농업 인프라가 상당부분 갖춰지고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어 빈번한 기상이변에도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 체계가 구축되고, 농산물가격 안정에 따른 가계비 지출 감소로 소비자 후생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생산성 증대가 농가소득으로 연결되지 못해 부채문제가 심화되고 농촌사회의 어려움이 지속되었는데 이는 엄격한 평가 없이 자금이 지원되고 개별 농가의 경쟁력 제고에 치중한 나머지, 농촌정책과의 균형이 부족한 데에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번 농업·농촌종합대책과 119조원 투융자 지원이 우리 농업·농촌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개방화시대에 맞는 농가소득안정망과 농촌사회안정망을 구축하고 도·농 균형발전을 앞당기겠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leedmin[김포] : 전업농 확대(현 농사규모 유지)와 농지의 타용도 활용 확대는 상치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복안이 있으십니까?

허상만 장관 : 이번 농지제도개선에서는 식량생산과 국토환경보전에 필요한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우량농지는 전업농 등이 영농규모화를 통해 기계화 영농을 하도록 하되, 그외 한계농지 등은 농업외 활용이 용이하도록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림부는 우량농지는 최대한 보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Minister vows to revamp farms

(코리아헤럴드, 2004. 4. 6)

Reviving the sagging farming sector may be a daunting challenge for the government. But the country is now at the critical juncture to tackle the task, Minister of Agriculture and Forestry Huh Sang-man says. With the new multitrillion won revamp project, the minister is optimistic.

"I have seen many competitive farmers in local towns. Working with these people, we will surely upgrade farming areas," Huh told the Korea Herald at his office in Gwacheon.

In February, the government unveiled a decade-long project to revamp the nation's farming sector. With more than 180 support programs, the administration will commit 119 trillion won over the next 10 years.

"We will not waste this huge budget. The government will continue thorough assessments to make sure that the money goes to where it can do best for the people," the minister said.

The farming sector faces huge challenges, experts say. Rising production costs hamper profitability and cheap imports pose a significant threat. The nation's farming population fell sharply to 3.53 million last year from 4.03 million in 2000, signaling that the agriculture industry is quickly losing its vitality.

"The government's previous policies mainly focused on building basic infrastructure in rural areas. But this time, our top priority is increasing

the income of local farmers," Huh said. The government plans to offer numerous insurance programs to farmers to guarantee a stable income. It will also provide debt-restructuring programs to farms in financial trouble, according to ministry officials.

Amid the stiff competition with cheap imports, strengthening local farming competitiveness will also be a focus of the revamp project, the minister said. The government vowed to nurture large rice farms that cultivate plots larger than six hectares in an effort to vie with foreign producers.

"Rice is obviously a main crop for the Korean farm industry. For survival, local rice farmers should upgrade their productivity and quality. We will continue to provide every possible support for the overhaul work," the minister said.

According to the ministry's policy plan, large farms will account for more than 50 percent of the nation's rice production by 2010.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will encourage small and mid-size farms to focus on organic rice production, which is emerging as a lucrative segment of the domestic market, officials note.

The minister sees public support as crucial to the success of the government project. The ministry will make all-out efforts to advertise the revamp plans to communities, he said. "Our message to the public is simple and clear. We will make rural areas far better places to live in."

Building more public service facilities in rural areas has always been a top priority, Huh stressed. "The most needed resources in the farming areas are educational and medical. Our revamp project will bring more medical centers and schools to farming areas."

Moreover, the revamp scheme will expand financial support to students

from rural communities. By 2005, the government will provide full tuition for high school students from farms, officials said.

Nurturing prospective farmers will also play a crucial role in the government's plan, Huh said. "Korea has already achieved a high level of farming technology and quality infrastructure. What we need more are young, talented brains who will spur the growth of the agriculture industry."

"We also aim to nurture more experts to improve the distribution system of agricultural products here, as a better circulation of products will work as a great stimulus to our farming sector," he said.

Ministry unveils 10-year road map

The nation's agriculture sector may be in limbo. The farming population has been on a constant decline and dipped to 3.53 million last year, far less than 10 percent of the total population. Cheap imports entering the local market are also a daunting threat. But the government is confident, saying a challenge can also be a chance.

In Februar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unveiled a 10-year road map to revamp the farming sector. For the long-term project, the government will spend a total 119 trillion won, the ministry officials said.

"Previous revamp plans focused on building basic infrastructure in rural areas. But this time, the top priority will be increasing the income of local farmers," Huh Sang-man, the agriculture minister, recently told reporters. "Our message to the public is simple and clear. We will make the rural areas far better places to live in," he said.

The ministry plans to expand benefit programs to farmers and launch a comprehensive insurance scheme against natural disasters to guarantee a stable income level to farming households. To financially troubled farms, the government will also provide a debt-restructuring program, officials said.

But new benefits should not be seen as "free" money, the ministry officials say. The revamp project will be highly selective in offering benefits to farms, they note. "Through rigorous assessments, we will make sure that all the money can be spent most efficiently. The evaluation procedure will be conducted every three years," the minister said.

Competitiveness rules

Experts here emphasize that improving farming profitability and productivity is a major issue that the government must tackle in next decade. According to a recent survey, the profit margin at local rice farms hit a 10-year low last year due to rising production costs. The nation's rice paddies shrunk to 1 million hectares from 1.04 million hectares in 2002.

"Without a major restructuring, the local farming industry will not be able to survive the competition with imports, which are up to five times cheaper," said Choi Hyeok-jae of the state-run Korean Research Institute of Human Settlement.

Experts stress that the nation's small-scale farming is eroding production efficiency. "Many farmers still grow crops on small plots. Such a farming style has been hampering th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of the local farming sector," said Kim Han-ho, agriculture economics professo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new revamp program will nurture large farms in an effort to ensure better productivity and profitability for the sector. According to the policy plan, farms that cultivate more than 6 hectares of land will be intensely promoted. These large farms will account for 50 percent of the nation's rice production, officials forecast.

Bigger will also be encouraged in the livestock industry. About 20,000 large farms will make up 85 percent of the local livestock production in six years, officials said.

For current small and mid-size farms, the government will promote a shift to organic crops, which is emerging as a highly lucrative segment of the local market. Through this policy, the Agriculture Ministry will raise the portion of organic food from the nation's total farm produce from the current 3 percent to 10 percent by 2010, officials said.

Educating highly talented workers in the local agriculture industry is also a priority of the revamp project. "Korea has already achieved a high level of farming technology and quality infrastructure," the agriculture minister said. "What we need more are young, talented brains who will spur the growth of the agriculture industry."

The government plans to offer 200 million won is loans to young people who will start farming businesses. Bringing young farmers to the aging rural communities, the support program will eventually rejuvenate the nation's agriculture sector, officials said.

"A better start-up environment can also entice young people in cities to go to rural areas to start their own farming businesses," the minister said. "In this sense, we can reverse the current imbalance between urban

and rural populations.”

A revamp of the distribution system is another big issue to tackle, the minister said. “We also aim to nurture more experts to improve the distribution system of agricultural products here, as a better circulation of products will work as a great stimulus to our farming sector,” he said.

Spurring development

The government also vowed to address the underdevelopment problem in the rural areas by improving public service facilities.

Keen to the lack of educational and medical services in farming areas, the government will open more local schools and clinics, officials note.

Expanding financial supports to students from farming families is another tactic the ministry will carry out to develop rural areas. By 2005, all high school students from rural backgrounds will receive waived tuition from a state-run continuing education program, according to the plan.

The government will also offer more incentives to the pension and health care programs for rural residents. The government’s annual subsidies to the farmers’ pension scheme will nearly double from the current 135,500 won per person to 256,500 won in 2005. The health care program for farmers will also provide greater discount benefits, officials said.

“We expect that the improved standard of living will attract more urban residents to settle down in rural areas. Given the growing awareness of health and environment, I believe that living in rural towns

will appeal to more and more urban residents," the minister said.

He also said the progress in transportation would also bolster this migration trend. The newly launched bullet-train service already enables rural residents to commute to adjacent cities, he noted.

The Agriculture Ministry will allow urban residents to own more arable land to build recreational facilities such as a weekend farms or resort towns. The regulation change is designed to bring more investment to rural areas and stimulate development there, according to officials.

Additionally, the government will announce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s for rural towns and promote specialized tourism zones. Such specialized areas include traditional Korean towns, organic farms and ecological parks.

농촌을 살리기 위해 성공 가능성 있는 농민 지원

(경향신문, 2004. 5. 13)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12일 경향신문과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신청만 하면 자금을 지원했던 우루과이라운드(UR) 때와는 달리 수익성 없는 농업 사업에 대해선 한 푼도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허장관은 농협 개혁과 관련, “농협도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농업인뿐 아니라 국민들이 외면 한다”고 강조했다.

허장관은 또 “농사를 열심히 짓고 사는 농민의 의료·복지·자녀교육만큼은 정부가 모두 책임 지겠다”며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살기 좋은, 살고 싶은 농촌을 꼭 이뤄 내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편집자>

노응근 산업부장 : 정부는 최근 농업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잘사는 농촌 건설을 위해 1백9조원을 투·융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비판도 있다.

허상만 장관 : UR 때는 농가의 사업능력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었다. 지원 후 사후관리도 미흡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 사전심사와 사후평가를 철저히 할 생각이다. 농민과 지자체, 지역 농과대학 등 3자가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사업타당성도 검토해 가능성이 보일 때만 지원하겠다. 만약 계획도 없고 성공 가능성도 의심스러우면 자금이 이월되는 한이 있어도 집행하지 않겠다.

노응근 산업부장 : 1백19조원에 대해서도 농림부 정기예산 및 융자지원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인데.

허상만 장관 : 투·융자 사업비는 지자체 및 자부담을 제외한 순수 국고 부담분만을 계상한 것이다. 채무상환, 인건비 등 비투·융자 예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지난해 농림분야 예산은 농림부 예산 8조8천억 원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이나, 투·융자 사업비는 5조5천억 원이다.

노응근 산업부장 : 농정개혁의 출발점은 정부다. 위로부터의 개혁이 있어야 현장도 바뀐다. 정부 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나.

허상만 장관 : 농림부 조직을 품목 중심에서 시장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농정을 구현해 나가겠다. 특히 농업기반공사, 유통공사 등 농림부 산하 정부출자기관 사장은 앞으로 전원 공모를 통한 책임경영을 이루겠다.

노응근 산업부장 : 농협을 어떻게 개혁해서 농민들에게 돌려줄 생각인가.

허상만 장관 : 우선은 농협 스스로 개혁하길 기대한다. 올해 안에 농협중앙회는 '지역 농협 중장기 합병지원계획'을 확정한다. 이를 토대로 경쟁력 없는 조합은 통폐합될 것이다. 그러나 자발적인 개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입법·행정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정·중재역할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다.

노응근 산업부장 : '입법·행정권한 범위 내의 조정·중재'는 무슨 뜻인가.

허상만 장관 : 농협법, 농협구조개선법 등을 개정, 합병의결 정족수 조정·

조합장 잔여임기보장 등을 통해 원활한 합병을 유도하고, 인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부적격 조합은 인가 자체를 취소함을 의미한다.

노응근 산업부장 : 1,300여개의 일선 단위농협을 2013년까지 500개 안팎으로 줄이겠다는 정부 발표로 일선 지역조합의 반발이 크다.

허상만 장관 : 현재와 같은 읍·면 단위 소규모 조합으로는 경제·신용사업에 한계가 있다. 예컨대 안성시를 예로 들자. 이곳은 한우와 포도가 유명한 곳이다. 이를 특성화해야 하는데 6~7개 중·소농협이 산재해 있다면 집중적인 투자가 가능하겠는가. 농협의 경쟁력을 키우려면 규모화 및 경영투명성과 함께,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노응근 산업부장 : 쌀 재협상에 대한 정부입장은 뭐가.

허상만 장관 : 기본입장은 관세화 유예다. 그러나 관세화 유예냐, 관세화냐의 이분법적 논리보다는 '우리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협상 추진과정에서는 우리 농업인들과 대화를 통해 이해와 의견을 구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

노응근 산업부장 : 쌀 시장이 개방되면 쌀 주권까지 내준다는 위기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쌀 자금대책은 뭐가.

허상만 장관 : 쌀 산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우량농지 보전, 경영 규모화, 쌀 농가 소득안정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

노응근 산업부장 : 통일을 대비한 쌀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견해도 있는데.

허상만 장관 : 북한의 식량 수급사정을 개선하기 위해선 종자개발, 생산 기반 조성, 재배기술 보급, 농업기계화 등이 우선돼야 한다. 여건이 조성되면 정부 차원의 남북간 농업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노응근 산업부장 :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연말까지 기본골격 수립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정부의 입장은.

허상만 장관 : 쌀과 같은 민감품목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세감축 방식 채택, 관세상한 철폐, 개도국 지위 유지 등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유사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과 공조, 대응하고 있다.

노응근 산업부장 : 벌써부터 한·중 FTA 체결 여부가 관심사다. 중국의 값싼 농산물이 몰려올 경우 국내 농업시장은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허상만 장관 : 한·중 FTA와 관련, 정부 차원의 제안은 없다. 다만 한·중·일 FTA 타당성에 대해 민간연구기관간 공동연구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노응근 산업부장 : 최근 발표한 친환경농업 대책의 핵심은 무엇인가.

허상만 장관 : 우리 농촌이 살려면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고품질 안전 농산물만을 생산해야 소비자는 안심한 먹을거리를 즐기고, 농가는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 이를 위해 내년 7월까지 화학비료 차손보조를 완전 폐지하겠다.

또 2013년까지 화학비료와 합성농약 사용을 40% 수준 감축한다는 목표로 매년 5%씩 줄여 나가겠다. 농축산물의 안전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생산이력제,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등

도 도입, 추진하겠다.

전체 농산물의 2% 수준에 불과한 인증농산물 비중도 2010년까지 10%로 확대하는 등 친환경농업의 저변을 확대하겠다. 일반농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현행 친환경직불제를 대폭 확대하고 친환경 농자재에 대한 부가세를 없애는 방안도 추진하겠다.

아울러 4대 강 유역, 새만금 상류지역, 친환경농업 특구로 지정되는 시·군에 1,000ha 이상의 대규모 친환경농업단지를 2013년까지 50개를 조성하겠다.

노응근 산업부장 : 정부는 농지제도를 확 뜯어 고치겠다고 했다. 자칫 도시자본만 살찌우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허상만 장관 : 소유 중심에서 이용 중심으로 혁신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보전이 필요한 우량농지는 추가적인 시설제한과 전용 허가기준의 정비 등 농지전용을 엄격히 규제하겠다. 비농민의 농지구입 때도 최소한의 영농의무를 부과하고, 농지전용으로 발생하는 전용이익을 환수하는 등 투기방지책을 마련하겠다.

노응근 산업부장 : 농촌 사람들이 떠나는 것은 복지, 문화환경과 함께 교육·의료 환경이 형편없기 때문이다. 대책이 있는가.

허상만 장관 : 연금보험료 지원을 연간 8만6천원에서 25만7천원까지 연차적으로 높이고, 건강보험료도 50%까지 경감하겠다. 5세 미만 영·유아의 보육비와 고교생 학비 지원을 전체농가로 확대하고, 농촌 출신 대학생의 등록금도 전액 무이자로 지원하겠다.

또 2013년까지 총 194개 읍을 농촌생활의 중심지로 가꾸겠다. 주변 3~5개 마을을 권역으로 묶어 특성화 마을로 개발하겠다. 농촌경관, 전통문화를 농촌관광수요로 연결시키기 위해 약 1,000개의 농촌관광마을을 조성하고 농

공단지 활성화 및 향토 산업 육성 등을 통한 농외소득원도 마련해 나가겠다.

노응근 산업부장 : 새만금 간척지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

허상만 장관 : 친환경을 기본원칙으로, 지역발전과 국가경영에 이익이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올해 말 이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구체화한 안을 내놓겠다.

노응근 산업부장 : 산림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5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우리의 숲을 어떻게 가꿀 계획인가.

허상만 장관 : 올해부터 1백만ha의 산림을 가꾸기 위한 '숲가꾸기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 특히 관리가 소홀한 도심 내 빌딩 주변, 도로변 가로수에 대해서도 '가로수 거름주기 운동'을 전개하겠다.

노응근 산업부장 : '농정개혁 10개년 로드맵' 성공을 위해 농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허상만 장관 : "올해는 농업·농촌 종합대책과 1백19조원 투·융자 계획 추진 첫해다. 첫 삼을 어떻게 뜨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이다. 농업인 여러분도 이와 같은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믿고 같이 뛰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식량 안보위해 쌀자급률 90%이상 유지

(조선일보, 2004. 5. 14)

농림부는 식량안보를 위해 앞으로 식량 자급률(自給率) 목표치를 설정, 현재 50% 선인 식량자급률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정부는 올해 2학기부터 농업인의 자녀로 농과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했다.<조선일보 편집자>

이준 경제부장 : 쌀 협상의 중요 상대인 미국 및 중국과 한차례 협상을 가졌다. 협상의 쟁점은 무엇인가?

허상만 장관 : 협상은 상대가 있으니 까 어렵다. 각자 자기나라의 국익을 위해 협상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한국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 기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낮은 관세로 수입하고 있는 최소시장접근물량을 늘리고, 민간 차원에서 미국 쌀을 수입해 달라는 얘기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 편이다. 중국과는 탐색 단계이다. 중국도 무리한 요구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우리의 입장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나라와는 의견을 조정하고, 어려운 나라에 대해서는 설득작업을 벌일 것이다. 9월말까지 협상을 끝내겠다.

이준 경제부장 : 쌀 협상은 대외적인 협상도 어렵지만, 대내적인 합의 도출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허상만 장관 : 농업인들과 대화를 통해 이해와 의견을 구하고,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다. 농업인과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협상을 추진해야 정부의 협상력이 최대화된다고 본다.

이번 17대 국회에 진출한 농민단체 출신 당선자들이 쌀 협상에 임하는 정부의 어려움을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민단체들도 어떤 식으로든 수입 쌀 물량이 많아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이해하고 있다. 결국 근본적으로 농업을 살리는 대책을 내놓고, 준비해야 한다.

이준 경제부장 : 지난해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가 통과되는 과정에서 정부는 119조원의 농업분야 투·융자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쌀 협상 과정에서 추가로 내놓을 보따리가 있는가?

허상만 장관 : 지난해 발표한 119조원 투·융자 계획은 농업전문가, 농업인, 농림부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10년간 우리 농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과거의 농업정책을 정확히 평가한 끝에 합의해서 만들어 낸 계획이다.

쌀 시장 개방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 보전, 농가부채 경감,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신규 지원, 올해와 내년에 예산을 집중 배치하는 것 등이 모두 119조원 속에 들어 있다. 이 범위 내에서만 집행한다.

이준 경제부장 : 스위스·일본 등 선진국은 식량자급률 목표를 세워 이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자급률이 낮지만, 아직 자급률 목표를 세우고 있지 않다. 이 문제에 대한 견해는?

허상만 장관 :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물량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열량(칼로리)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앞으로 농민단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식량 안보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자급률은 유지되어야 한다. 쌀은 개방 폭

이 확대되더라도 최소 90% 이상 자급률을 유지하겠다. 콩·축산·과수원예 등 주요 작목의 경우 정부가 의지를 갖고 생산을 지원하겠다.

이준 경제부장 : 농촌은 거대한 양로원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다. 농촌을 젊게 만드는 대책이 있는가?

허상만 장관 : 교육과 의료만 해결되면 농촌에 산다. 특히 교육문제는 해결돼야 한다. 오는 2005년부터 농촌에 사는 고등학교 이하 학생들은 전액 무료로 학교에 다닐 수 있다.

WRAPUP 1-INTERVIEW-Market forces priority for S.Korean farming

(로이터통신, 2004. 6. 10)

(Combines separate stories)

By Cho Mee-young and Martin Nesirky

SEOUL, June 10 (Reuters) - Market forces should play a bigger role in South Korea's agricultural sector than the old convention of protecting farmers, the country's agriculture minister told Reuters on Thursday.

Huh Sang-man, who has been involved with farming since the 1960s and minister since last year, also said South Korea would cooperate more in agriculture with neighbouring China, regardless of whether the Chinese economy maintained its current rate of growth or slowed down.

He forecast South Korea's rice harvest would reach its target this year and said a ban on U.S. beef imports would stay in place until there were scientific safety guarantees about mad cow disease in the United States. He said a task force had been set up to look at ways to improve farming in the impoverished North.

South Korea is ruled by a left-of-centre president, Roo Moo-hyun, and parliament is controlled by a party that backs him, so some foreign investors say they fear a lurch to protectionism.

But Huh said the market needed to play a bigger role.

"Our government will proceed with agricultural policies based on market principles in the next 10 years," Huh said at his ministry near

mountains on the southern outskirts of Seoul.

For instance, South Korea's agricultural policy was moving from the past income payment policy mainly involving price support to a direct income payments that do not affect trade and output under World Trade Organisation agreements, Huh said.

"We should break from the past convention of supporting prices unilaterally," he said in his meeting room, which has a huge picture of rice paddy behind the minister's armchair. "Instead, the government will support medical, educational welfares and regional development with responsibility."

Huh was confident farmers' groups -- some of whom have rioted in the past -- would understand these government plans which were formed in consultation with them. As part of the policy to raise competitiveness, the government last month proposed cutting this year's rice purchasing price by four percent. The cost of South Korean rice is roughly four times higher than imported rice.

If approved by parliament -- unlike last year -- it would be the first cut in the purchasing price since direct state buying from farmers started in 1948. Huh said South Korea's rice harvest was expected to reach 4.9 million tonnes this year against 4.45 million tonnes last year.

COOPERATION WITH CHINA

Huh said China's economy had positives and negatives for South Korean agriculture.

"On the positive side of China's booming economy, South Korea's agricultural product exports will increase along with Chinese demand for

highly-quality products," Huh said, adding it would also help exports of South Korean farming machinery.

However, strong Chinese demand would probably push global grain prices higher, increasing the burden on South Korea which imports grains for feed, he said.

If China's economy slows and it compensates through exports, China may increase pressure to expand into South Korea, he said.

"However,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are expected to increase in agricultural sectors regardless of China's economic situation," he said.

South Korea has made a long-term plan to provide new technology, machinery and high-grade seed stock or plants to hunger-stricken North Korea, whose battered agricultural system relies heavily on manual labour.

South Korea's agriculture ministry set up a task force last month to work on ways to help North Korea improve its farming system, although the North has not yet responded to the idea.

"It is hard to say when but North Korea will decide when," the minister said. "We are preparing and if the situation changes, we will actively work with North Korea."

On the chance of lifting a ban on imports of U.S. beef, Huh said it would not happen until the food safety of U.S. beef was guaranteed scientifically.

South Korea, a major beef importer, banned U.S. beef imports late last year after a cow tested positive for the brain-wasting mad cow disease, formally called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The infected cow was later found to have originated from Canada. <Editing by Martin Nesirky>

INTERVIEW-S.Korea sets up task force to aid North's farms

By Martin Nesirky and Cho Mee-young

SEOUL, June 10 (Reuters) - South Korea has set up a task force to work on ways to help food aid-dependent North Korea improve its farming system, the South's agriculture minister told Reuters on Thursday.

North Korea introduced some market reforms in July 2002 and has allowed people to tend their own plots, but there has been little change in a creaking state-run system that has failed for years to feed all of the communist country's 23 million people.

Agriculture Minister Huh Sang-man, who has been involved with farming since the 1960s and minister since last year, said he had met a senior North Korean official at a regional Food and Agriculture Organisation meeting in Beijing last month.

"North Korea's agriculture matters should be approached in terms of South Korea's environmental issues," Huh said he told the official, referring to pesticides and soil erosion.

"Starting with environmental issues, I told the North Korean official in Beijing 'let's consider how to revive North Korea's agriculture industry fundamentally and please deliver this message to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uh said.

Huh said South Korea wanted to help mechanise agriculture in the North to boost productivity, and that is what the new task force would focus on.

"We formed a committee within the ministry in late May to approach

this over the long term," the minister said, referring to ways to help the North.

South Korea has various economic projects with North Korea, including work to open rail and road links and to set up an industrial park in the North near the border so South Korean firms can use cheap North Korean labour.

But agriculture has not figured prominently so far, apart from aid, including rice for soft loans and free fertiliser.

Huh said the long-term plans would be to provide new technology, machinery and high-grade seed stock or plants for a system that relies heavily on manual labour.

Asked when North Korea would respond to the idea, the minister said: "It is hard to say when but North Korea will decide when. We are preparing and if the situation changes, we will actively work with North Korea."

NO RISK TO NUCLEAR TALKS

North Korea depends on foreign aid to feed about a quarter of its people. A famine in the late 1990s is estimated to have killed more than one million people and prompted up to 300,000 people to seek refuge in neighbouring China.

The North derives nearly 30 percent of its total output from the farm, forestry and fisheries sector, Ahn Yong-sung, a statistics department official at the Bank of Korea, told a news conference this week.

"The North Korean economy has a structure heavily exposed to weather conditions, so its future will be influenced very much by the

weather," he said after the central bank issued a report -- one of the most authoritative available -- on the secretive North's economy.

The mountainous North endures harsh winters and summer floods that wash away top soil from precarious hillside plots.

Asked whether the plan to look at broader help for North Korea's farms would pose problems for multilateral talks on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mbitions, the minister said he thought not because the aid plan was long term.

Economists say the North's economic outlook is intertwined with the progress of the six-country nuclear talks. The next round is due late this month in Beijing.

The Bank of Korea said this week North Korea's economy grew for a fifth consecutive year by an estimated 1.8 percent in 2003, helped by tentative market reforms, but energy shortages and an outmoded production base left the outlook uncertain.

The country's per-capita income was estimated to have grown seven percent to \$818, a 16th of that in capitalist South Korea, the bank said.

Just weeks after returning from an April visit to China,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 made a rare personal endorsement of economic change, telling factory workers profit was good.

South Korean officials and civilian visitors have said more free markets were selling goods and produce in Pyongyang.

Kim visited a military-run duck and fish farms in March. He called for farmers to increase the number of ducks, geese and other animals they raise privately.

S.Korea keeps U.S. beef ban for now—minister

By Cho Mee-young

SEOUL, June 10 (Reuters) - South Korea will keep its ban on imports of U.S. beef until scientific food safety guarantees over mad cow disease are available, Agriculture Minister Huh Sang-man told Reuters on Thursday.

South Korea's beef consumption this year is projected to fall 15 percent from a year ago to around 330,000 tonnes, Huh said, adding there would be no supply shortages even without U.S. beef supplies.

Koreans use beef for grilling and soup as well as an ingredient in other products.

"The government's stance is that we cannot help keeping the import bans if the food safety of U.S. beef is not guaranteed scientifically," Huh said.

Asked if it was possible for the government to lift a ban on U.S. beef meats partially, he said: "I know some experts argue that meat is safe from mad cow disease. But it is a matter of consumer understanding."

South Korea, a major beef importer, banned imports of U.S. beef on December 24 last year after a cow tested positive for the brain-wasting mad cow disease, formally called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The infected cow was later found to have originated from Canada.

Since the discovery of BSE in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s beef consumption has fallen sharply, hitting even home-grown beef and forcing its price to drop 10 percent.

"This year's beef consumption is expected to fall by 15 percent to around 330,000 tonnes," Huh said. "There will be no supply disruption even without U.S. supplies."

Of total demand, home-grown beef will account for 130,000 tonnes and the rest will be imported, he said.

On the supply side, South Korea has 100,000 tonnes of imported beef stockpiled and it expects to import another 150,000 tonnes this year, he added.

Some media reports have said local restaurants are suffering from the higher costs of using home-grown beef instead of cheaper U.S. beef amid falling beef demand. They have said that may force the government to resume U.S. beef imports earlier than expected.

But the minister made clear that was not the case.

"The government decides its policy considering the whole country not some businessmen," he added.

S.Korea rice harvest seen reaching 4.9 mln T

By Cho Mee-young

SEOUL, June 10 (Reuters) - South Korea's rice harvest is expected to rise 10 percent this year to 4.9 million tonnes, Agriculture Minister Huh Sang-man told Reuters on Thursday.

South Korea's rice harvest last year dropped 9.7 percent from the previous year to 4.45 million tonnes, its lowest in 23 years because of prolonged rain and a powerful typhoon.

"We are expecting this year's rice harvest to reach the targeted amount of 34 million rice pouches," Huh said, referring to a Korean

measurement that converts to 4.9 million tonnes.

The 2003 output was the lowest since 1980's 3.55 million tonnes, but the country's bumper rice stockpile still exceeds comfortable levels. South Korea's farming lobby is vocal and has influence beyond its numerical strength.

Good harvests in most years recently are a concern to South Korea because the World Trade Organisation (WTO) obliges the country to restrict output in the sector.

The ministry has completed the first round of bilateral talks with nine rice exporters on a new rice import regime from 2005, including the United States, China, Thailand, Australia, Argentina, Egypt, Canada, India and Pakistan.

"Our government's basic stance is extending the grace period instead of switching to a tariff system (from current quota system)," Huh said. "But we will decide later what is the best for our agriculture industry."

DIRECT MARKET ACCESS

Asked if South Koreans would be given access to imported rice as exporters demand, Huh said: "On market access, this can be discussed as the second round of the talks go on."

If consumers buy imported rice in a shop, it would have the positive impact of encouraging farmers to produce better quality rice and the negative impact of the market opening further, he added.

South Korea's rice import quota for this year was set at 228,031 tonnes of brown rice under the WTO agreement. No more rice imports above the quota are allowed in South Korea and its consumers cannot

buy imported rice directly from shops.

South Korea is due to finalise its rice import policy by the end of this year and the new rule will be applied from the start of 2005. If this year's negotiation fails to reach agreement, South Korea is supposed to switch to tariff systems from 2005, according to the WTO agreement.

To raise the competitiveness of South Korean ric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last month proposed cutting this year's rice purchasing price by four percent.

If approved by parliament -- unlike last year -- it would be the first cut in the purchasing price of rice since direct state buying from farmers started in 1948.

"Prices of domestic and imported rice will be equivalent and domestic rice will be competitive against imports, if the government's plan is carried out over the next 10 years," Huh said.

The cost of South Korean rice is roughly four times higher than imported rice, according to data from the ministry.

"I expect parliament to understand this," he said.

The government failed to get approval last year for a two percent purchasing price cut due to opposition from farmers and various political factions, which said the move would raise production costs and widen the gap between city and countryside.

개방피해 최소화 만전 · 농업개혁 제대로 할 것

(농업전문지 합동인터뷰, 2004. 8. 9)

기자단 : 농림부 장관 취임 1년이 되었습니다. 취임소감은

허상만 장관 : 우선 지난 1년 동안 장관을 믿고 따라 준 농림공직자들과 농업인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많은 농정현안에 매달려 급박하게 뛰어 왔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고생해준 사람들이 있어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해결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취임 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한·칠레 FTA비준 과정과 119조원 농업·농촌 투융자 계획을 확정하기까지의 과정이 가장 어려웠던 때가 아니었나 생각되며 한·칠레 FTA 비준을 위해 농민단체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국회의 이해를 구하면서 백방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우리나라 최초의 FTA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체결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십 차례의 지역 및 전문가토론회, 수차례의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농림부 계획안 그대로 119조원이라는 투융자 규모가 확정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새로운 농업·농촌의 미래를 열어 갈 토대를 마련한 것에 대해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 DDA협상, 쌀 협상 등 통상현안과 농협개혁, 농지제도 개선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농업인들의 의견을 구하면서 국익과 농업인들의 이익이 최대화 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자단 : 우리 농업 농촌은 안팎으로 엄청난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 농정이 나가야 할 방향과 새로운 패러다임은 어떤 것입니까.

허상만 장관 : 농업과 농촌의 발전 없이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2만 불 시대」도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이 저와 대통령님의 농정철학이라 하겠습니다.

농가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단순한 농업생산 중심에서 식품산업, 농촌지역개발 등으로 정책의 외연을 넓히고, 가격지지정책보다는 직접적인 소득보전 정책으로 대응하는 등 농정패러다임도 전환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인식을 바탕으로 농업·농촌 종합대책과 119조 농업·농촌 투융자계획을 세웠으며, 문제는 농촌 현장에서 농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부는 농정에 대한 신뢰 없이는 농업·농촌 투융자는 성공할 수 없다는 각오로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부터 철저히 농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농촌현장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으며,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인과 정부가 함께 뜻과 힘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된다는 concensus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자단 : 지난해에는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문제로 농업계 전체가 힘들었습니다. 올해에는 도하개발 아젠다 협상과 쌀관세화 관련 협상 등 우리 농업의 미래와 직결된 농업 통상문제가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선 도하개발 아젠다 협상에 대한 정부차원의 협상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허상만 장관 : 지난 7.3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일반이사회에서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기본골격 합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구체적 수치를 포함한 세부쟁점들이 후속 협상과제로 남아 있어 현 단계

에서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예측 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나, 그러나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 농산물 시장 개방 폭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후속 협상에서는 우리나라가 수용가능한 선에서 세부원칙이 결정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특히, 관세상한 설정문제, 민감품목의 TRQ 증량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기자단 : 또 하나는 쌀 협상입니다. 협상 참가국별로 2차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정부도 쌀협상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다시 한번이 자리에서 쌀협상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허상만 장관 : 정부는 쌀 관세화 관련 협상에서 관세화 유예 연장을 기본입장으로 하여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관세화 유예연장을 위한 조건과 관련하여 상대국이 제시하는 요구가 과도할 경우 관세화와 관세화 유예연장간의 득실을 분석하고 실리확보 차원에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우리 쌀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협상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정부는 상대국들의 요구조건에 대한 면밀한 득실분석과, 이번에 확정된 DDA 세부원칙 기본골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상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자단 : 이 같은 통상문제와 연계해 농업계에서는 협상도 중요하지만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국내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가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허상만 장관 : DDA, 쌀협상 등을 감안하여 이미 소득 및 경영안정 대책의 기본틀을 마련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전문가, 농민단체 등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개방화시대에 대비 전업농이 중심이 되어 우리 농업을 지켜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영이양직불제와 농지제도 개편 등을 통해 2010년까지 6ha수준의 쌀전업농 7만호를 육성하고 축산업은 가축방역과 품질고급화에 역점을 두면서 축산전업농 2만호가 축산의 85%이상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이 소비자의 신뢰를 확고히 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품질·친환경 농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고, 이를 위해 이력추적제,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등 제도적인 장치도 강구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방에 따른 농가소득 하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농가소득 안정장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있으며, 이를 위해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연계하여 직접지불제를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직불예산 비중을 '04년도 8.4%에서 '08년까지 23%수준으로 대폭 확대 하고 농업경영상 위험요인을 제도적으로 흡수·관리할 수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및 재해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기자단 : 정부는 농지제도와 양정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농업인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부에서 정부 개편방안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실 계획이십니까.

허상만 장관 : 농지제도 개선은 최근의 농정여건 변화를 감안, 우량농지는 최대한 보전하면서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촌지역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지이용의 효율성이 최대한 증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농지소유 및 이용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농촌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이 되도록 보전제도를 보완하며

농지가격 하락, 농지의 매도 및 임차수요 증가 등 농지시장의 변화에 대

응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번 입법예고 및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농지를 확보하고 투기·난개발을 방지하면서 농업인의 실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정제도의 개편은 쌀협상·DDA협상에 따라 불가피하게 예상되는 국내보조금 감축과 쌀시장 개방폭 확대라는 여건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매보조금이 계속 줄어들면 쌀 수급조절이나 소득지지, 식량안보 수단으로서의 수매제도는 기능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기에 새로운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WTO규범에서 허용되는 「공공비축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금이 그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공비축제가 추곡수매제를 당장 대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05년부터 전면 전환하는 방안, 추곡수매제 당분간 유지하고 DDA타결 이후 전환하는 방안, 양 제도를 병행하는 3가지 방안을 가지고 논의 중이며 전문가, 농업인들과 충분한 토의를 거쳐 확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를 검토하는 이유는 국내 보조금 감축과 시장개방폭 확대라는 변화되는 시장상황에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비축제로의 전환시 수확기 물량흡수는 RPC매입물량을 650만석에서 1,100만석 규모로 늘리는 방식으로 보완할 계획이며,

농업인이 우려하는 쌀값하락에 대해서는 직접지불을 통해 경영안정을 기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 마련된 시안을 가지고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농규모화 자금 등을 확대하여 「쌀전업농 육성」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자단 : 장관님께서서는 평소 낙후된 농촌지역개발을 강조하셨습니다. 또

한 농업인 삶의질 향상 및 지역개발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농촌지역 개발을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지역개발은 농림부는 물론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행정자치부 등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부처간의 문제점을 없애는가요.

허상만 장관 : 농촌에서 사람이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료와 교육문제를 국가에서 해결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연금보험료 지원을 연간 8만 6천원에서 25만 7천원까지 연차적으로 높이고, 건강보험료도 50%까지 경감하겠으며, 5세 미만 영유아의 보육비와 고교생 학비 지원을 전체농가로 확대하고, 농촌출신 대학생의 등록금도 전액 무이자로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농촌출신 농과대학생의 경우 현재까지 2,872명 지원했으며 금년 2학기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것이고, 다음으로 농촌을 쾌적하게 개발하고, 농촌에 사람과 자본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각종 유인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2013년까지 총 194개 읍을 농촌생활의 중심지로 하고, 주변의 3에서 5개 마을을 권역으로 묶어 지역 주민이 바라는 특성화된 마을로 개발되도록 지원하고,

농촌경관, 전통문화를 농촌관광수요로 연결시키기 위해 약 1천개의 농촌 관광마을을 조성하고 농공단지 활성화 및 향토산업 육성 등을 통한 농외소득원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람과 자본이 농촌에 모일 수 있도록 농촌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와 지방세 중과세 배제 등 제도개선과 더불어 1社1村운동 등 도·농 교류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한 부처간 조정문제는 현재 국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관계부처국장들로 '중앙공동추진단'을 구성하여 농산어촌 지역개발사업의 부처별 통폐합 및 전문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균형위 및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와 삶의질향상특별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통해 농촌지역개발 주무 부처로서의 농림부의 전문성과 위상을 강

화하고, 범정부적인 농촌지역개발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금년 말 수립예정인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을 통해 범정부적인 농촌지역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농산어촌의 복지·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자단 : 최근 불량만두 파동이후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농림부의 식품안전 관리대책을 설명해 주십시오.

허상만 장관 : 최근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농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여 소비자 신뢰를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위생·안전 시스템을 통해 원천적으로 안전한 농식품만이 생산·공급되는 사전 예방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계획이며, '13년까지 화학비료와 합성농약 사용을 40%수준 감축하는 등 우리 농업 전반의 친환경 수준을 끌어올리고 우수농산물 관리 제도(GAP)와 이력추적제 등 선진제도를 도입, 조기에 정착토록 하고

축산물의 경우 7.29일 발표한 '축산물 위생·안전성 종합대책'에 따라 사료 내 혼합가능한 동물약품수를 현행 53종에서 25종 수준으로 감축하고 위해 요소중점관리제도(HACCP)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악성가축질병의 국내유입방지를 위한 국경검역과 농가와 지자체의 소독·예찰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는 등 가축방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채소류 잔류농약검사, 축산물 작업장 위생점검, 원산지 위반행위 단속으로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특히, 하절기 식품안전성 취약시기를 맞이하여 8월까지 전국적인 집중단속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기자단 : 농협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농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농협개혁에 대한 장관님의 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허상만 장관 : 협동조합이 농업인에게 실익을 주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은 농업계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농협은 농업인이 있기에 존재 의의가 있는 만큼, 무엇보다 농협 스스로가 농업인에 봉사하는 조직으로 변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농협법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해 둔 상태로 중앙회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일선 조합의 규모화·전문화 등을 통해 협동조합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법안은 농협, 농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만든 것으로 당사자인 농협과도 합의한 만큼 법 개정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농협 개혁은 법 개정만으로 완료된다고 볼 수는 없는 만큼 법 이외의 개혁 과제도 금년 말까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즉, 경제사업 활성화, 일선조합 합병 촉진, 합리적 급여체계 개편방안 등의 과제를 농협, 농민단체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 심도 있는 대안들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기자단 : 정부가 국내 축산업 선진화를 위해 축산업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한지 6개월이 지났지만 농가의 참여율은 저조한 상태입니다. 축산업 등록제를 어떻게 끌고 갈 계획입니까?

허상만 장관 : 축산업등록제는 효율적인 가축방역, 환경부하 저감, 친환경 축산직불제 사업·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등 선진제도 도입의 기초로서 축산업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등록을 추진한 이래 8.4일 현재 등록대상농가 3만여호의 6%인 1,885호가 등록하였으며, 등록이 저조한 이유는 아직 등록 기간이 내년 말까지로 많이 남아 있는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일부 농가는 등록시 부담이 큰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등 등록제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낙농을 제외한 양돈·양계 및 한우농가는 등록제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으며,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을 계기로 오리농가도 등록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농가들에게 계속 이해와 설득을 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기자단 : 최근 낙농가들은 '98년 이후 원유가격이 동결되어 왔고 최근 사료값 인상 등으로 생산비가 올랐으므로 원유가격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유가 인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허상만 장관 : 과거에는 정부가 원유가격을 고시하였으나, '98년 이후 유업체와 낙농가간에 자율적인 협의를 통하여 원유가격을 결정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낙농진흥회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원유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원유가격 인상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낙농가 및 유업체 대표)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로서는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유가격 인상은 서울우유, 일반 유업체, 낙농진흥회 3개 단체간 형평성이 유지되고, 가격인상으로 인한 소비감소가 최소화 되는 적정선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자단 : 금년 초 일부 유업체에서 기준원유량을 증량하면서 낙농진흥회 농가들도 기준원유량 증량을 요구하고 있는 데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

확입니까?

허상만 장관 : 낙농진흥회는 수요기능이 없고 현재도 잉여량이 1일 350톤에서 400톤 수준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없는 단순한 기준원유량 증량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유 공급제도의 개선 없이 기준원유량만 상향조정할 경우 원유 공급불안이 가중되고 재정부담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예산당국을 설득시키는 것은 물론 소비자의 이해를 얻기도 어렵다고 생각하며 현재도 원유 공급조절자금으로 연간 400억원에서 500억원 소요되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우유의 공급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원유 집유를 직결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농업·농촌 종합대책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기준원유량 상향조정은 원유 집유의 직결체제 전환시 일반유업체 농가와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괄 검토하여 반영할 계획입니다.

오는 13일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기준원유량 조정을 논의할 계획이며, 앞으로 지역단위로 직결체제 전환을 희망할 경우 여건을 감안하여 기준 원유량을 증량할 계획입니다.

쌀소득직불제 도입으로 농가소득안정

(광주일보, 2004. 8. 26)

광주일보는 농정 수장인 허상만 농림부장관을 만나 WTO/DDA협상, 자유무역협정(F T A), 추곡수매 폐지추진 등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농정 현실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들었다.

또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J 프로젝트(서남권 해양·레저타운 계획)의 후보지역인 영산강 간척지의 용도변경문제, 농촌 피해를 인하여 전남 인구 200만 명 붕괴 등 농도 전남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문제에 대한 허 장관의 입장을 들었다.

허 장관은 이 자리에서 “농촌이 피해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식으로든 소득보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 장관과의 인터뷰는 25일 과천 정부 제2청사 장관실에서 있었다. <광주일보 편집자>

김석원 기자 : WTO/DDA협상으로 수입농산물 급증이 예상된다. 이에 따른 농가피해 해소 대책은.

허상만 장관 : 구체적인 대책을 놓고 전문가, 농민단체 등과 협의 중에 있다. 올 연말까지는 사업별 구체적인 계획도 확정될 것이다. 어떤 경우라도 농가소득이 보전되도록 하기 위해 직접지불제를 내실화하고 확대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논농업직불제는 WTO에서 허용하는 생산가격과 연계되지 않는 생

산중립적 성격의 직불제로 개편하고 쌀소득보전 직불제는 쌀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안정장치로 개편하고자 개방에 따른 소득 감소액의 일정수준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제고를 위해 친환경직불제 등을 내실화하고 조건불리 지역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등 선진국 방식의 다양한 직불제를 도입하겠다. 이와 함께 농작물 재해보험 및 재해지원도 확대하여 재해로 인한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김석원 기자 : 정부의 쌀 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 추진으로 농민들의 반발은 물론이고 쌀 재배농가가 농사를 포기하거나 파산, 농업기반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허상만 장관 : 정부는 DDA협상에 따라 불가피하게 예상되는 국내보조금 감축과 쌀시장 개방폭 확대라는 여건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매제도 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 앞으로 수매보조금이 계속 줄어들면 쌀 수급조절이나 소득지지, 식량안보 수단으로서의 수매제도의 기능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새로운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식량안보 차원에서 WTO규범에서 허용하는 공공비축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금이 그 시기라고 보고 있다.

현재는 수매제를 당분간 유지하는 방안, 수매제와 공공비축제 두 제도를 병행하는 방안, 공공비축제로 전면 전환하는 방안 등 3가지(안)을 놓고 전문가, 농업인들과 논의 중에 있으며 충분한 토의를 거쳐 확정할 것이다.

김석원 기자 : 전남도가 전남서남권의 영산강 간척지를 용도 변경하여 골프장 등 종합리조트타운으로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에 대한 농림부 입장은.

허상만 장관 : 영산강 3단계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은 식량안보와 쌀전업농 육성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으로 농림부로서는 당초 계획대로 활용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용·공공용이거나 국가계획상 필요한 경우는 타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본다. 정부 차원의 국가적 사업이라면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전남도의 종합레저타운 개발계획은 초기단계로서, 주무부처가 아닌 농림부장관으로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지만 사업목적이 분명하고, 구체성이 있으며, 실현가능하고, 지역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김석원 기자 : 농업소득의 악화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업구조 재편 등을 강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농업정책의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농림부 정부의 입장은.

허상만 장관 : UR(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농업투융자로 생산기반이 정비되고 사계절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지만 생산성 증대가 농가소득으로 연결되지 못해 농촌사회 어려움이 지속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과거 대책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수렴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농업농촌 종합대책과 119조 투융자 계획을 수립하였다.

단 앞으로의 지역 농업은 그 지역에서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나갈 것이다. 특히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을 포함한 지역농업 활성화방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내년에 10개 정도의 시범클러스터를 운영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석원 기자 : 전남도가 농촌피폐로 인구수가 급감하여 지난 7월말로 인구수 200만 명이 무너졌다. 이를 정부의 농업정책 실패의 결과로 보는 시각

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허상만 장관 : 정부는 농촌 사회의 활력을 유지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농촌복지 증진 및 농촌지역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농촌에서 사람이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료와 교육문제를 국가에서 해결해 줘야 한다고 본다.

연금보험료 지원을 연간 8만6천원에서 25만7천원까지 연차적으로 높이고, 건강보험료도 50%까지 경감하겠다.

오는 2013년까지 총 194개 읍을 농촌생활의 중심지로 하고, 주변의 3~5개 마을을 권역으로 묶어 지역 주민이 바라는 특성화된 마을로 개발되도록 지원하고, 농촌경관과 전통문화를 농촌관광수요로 연결시키기 위해 약 1천개의 농촌관광마을을 조성하고 농공단지 활성화 및 향토산업 육성 등을 통한 농외소득원도 마련해 나가겠다.

김석원 기자 : 정부의 농지 거래 완화조치로 인해 농지에 대한 투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허상만 장관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지제도개선방안은 농지거래를 무조건 자유화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영농규모화 등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실익을 증진하기 위해 농지 임대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농업경영목적 취득농지의 임대허용은 농지은행의 관리하에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로 제한되기 때문에 투기소지는 차단된다.

개발예정지 등은 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를 제한하기 때문에 투기방지가 가능하며 시세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취득하여 장기 임대한 후 매도한다 하더라도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보유·매도 단계별로 중과세되어 투기 유인이 되지 못한다.

김석원 기자 : 웰빙 바람을 타고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농림부 차원의 친환경농업 활성화대책은 무엇인가.

허상만 장관 : 최근 환경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확산을 개방화 시대 우리 농업의 새로운 경쟁력의 근간으로 삼기위해 친환경 농업 육성과 안전농산물 공급에 농정의 기본목표의 하나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생산·유통 부문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 7월까지 화학비료에 대한 보조지원을 폐지하는 등 13년까지 화학비료와 합성농약 사용을 40%수준 감축한다는 목표로 매년 5%씩 줄여 나가겠다. 또한 축산의 환경부담을 줄이기 위해 축산업 등록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축산분뇨의 경지환원율을 높여 나가겠다.

관세화유예 연장 목표...농협개혁 주목

(코리아플러스 · 국정브리핑, 2004. 9. 10)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결과 쌀에 대해서는 매년 일정물량만 수입하는 특별예외조치(관세화 유예)를 인정받아 2004년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소비량의 4%인 20만5,000t만 의무수입 하는 실정이다.

10년간 허용된 유예기간도 올해 만료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올해 말까지 각 국가들과 쌀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UR 농업협정문 부속서에 관세화 유예의 지속 여부에 대해 2004년에 협상을 시작하고 끝내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우리 농업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만큼이나 쌀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허상만 농림부 장관의 심정도 무거워 보인다. 안으로는 쌀시장 개방 확대에 대한 농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우려의 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밖으로는 미국·중국을 비롯한 쌀 수출국들의 시장 개방 압력이 날로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브리핑’과 ‘코리아플러스’는 2004년 하반기 국정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쌀협상 문제를 비롯해 우리 농업 전반에 걸쳐 제기된 현안에 대한 허 장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지난 9월9일 과천 정부종합청사를 찾았다.

이 자리에는 10년 전 UR 협상단 대표로 참가하는 등 농업문제에 이론과 실무를 두루 갖춘 성진근 충북대 교수가 동행해 약 1시간 30분에 걸쳐 허 장관과 열띤 대담을 벌였다.

허 장관은 “수확을 앞두고 태풍 피해가 크지 않아 다행” 이라고 운을 댄 뒤 “오늘은 교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다” 며 성 교수를 반갑게

맞아했다. <코리아플러스 편집자>

성진근 교수 : 중요한 시점에 이렇게 다시 뵙게 돼 반갑습니다. 우선 지난해 7월 취임한 이래 벌써 1년을 훌쩍 넘기고 농림부 수장으로로서 부처를 잘 이끌어 오신 점 축하드립니다.

허상만 장관 : 농림부 장관의 평균 재임기간이 11개월3일이라는데, 그러고 보니 저는 그 수명을 넘겼군요.(웃음)

성진근 교수 : 제가 UR 협상에 참여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올해로 쌀의 관세화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쌀협상이 농업계 최대 현안인 것 같습니다.

협상을 진두지휘하는 입장에서 협상국의 요구에 대해 국익도 지켜야 하고 그들의 요구도 일정부분 받아들여야 할 텐데, 이를 풀어 가기가 여간 힘들 것 같지 않습니다.

허상만 장관 : 그렇습니다. 관세화 유예 연장 조건으로 내놓은 협상 상대국의 입장은 우리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관세화 유예 위해 일정한 양보 불가피

성진근 교수 : 문제는 상대국이 우리 정부의 10년 관세화 유예 제안을 과연 또 받아들일지느냐는 겁니다. 받아 주면 좋지만 현실성이 다소 결여돼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허상만 장관 :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국이 수락 가능한 수준의 양보가 불가피합니다. 유예 연장 조건으로 상대국

이 요구하는 짧은 유예기간과 높은 수준의 의무수입물량, 소비자 시판과 민간 수입 허용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성진근 교수 : 일본·대만 등은 이미 관세화 전환을 마쳤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관세화 유예를 관철한다는 것이지만 한편에서는 관세화가 더 유리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허상만 장관 : 모두 각각 장단점이 있어 어느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관세화 유예시에는 합의된 의무수입량만 수입되므로 연도별 쌀 수입량이 예측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 관세화 유예 대가로 상대국의 과도한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유예기간 중에도 쌀의 잠재적 관세는 지속적으로 감축되어 유예 조치 종료시 우리 농업에 주는 충격이 더욱 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편 관세화시에는 과도한 의무수입량 증가는 피할 수 있지만 국제가격과 환율 변동, 관세 감축 등에 따라 수입량이 급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를 감안해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성진근 교수 : 쌀협상이 어떻게 결론 나든 쌀시장 개방 폭은 확대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농가소득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농민단체들은 ‘선 대책 후 협상’을 주장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허상만 장관 :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농가소득이 보전되도록 하기 위해 직접 지불제를 내실화하고 확대해 실질적인 농가소득 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성진근 교수 : 정부의 농가소득 보전 대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일 것 같은데요.

여기서 경쟁력이란 단순히 가격경쟁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품질·서비스·거래 등의 분야에서 총체적인 농업경쟁력이 돼야 할 것 같고요.

허상만 장관 : 동의합니다.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선 '규모화'가 필요합니다. 2010년까지 6ha 수준의 쌀 전업농 7만 가구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 축산업은 가축 방역과 품질 고급화에 역점을 두면서 축산 전업농 2만 가구가 축산의 85%이상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친환경 농업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력추적제,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 우수 농산물 관리제도와 같은 제도적 장치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진근 교수 : 전업농 육성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한 중소농에 대한 보완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쌀농가의 44%가 0.5ha 미만 아닙니까. 이런 현실에서 정부의 경쟁력 향상 정책대상에서 탈락하는 이들은 박탈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1.5ha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전업농을 육성하겠다는 것인데, 이들 중에서도 그 대상에 포함되기를 원치 않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이 예상되는 데요.

허상만 장관 : 옳은 지적입니다. 우리 농촌이 앞으로 전업농 7만 가구만 있고 나머지 농가는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소농을 위한 나름의 대책은 정부가 이미 세워 놓고 있습니다.

지난2월 발표한 '농업·농촌 종합대책'에서 정부는 향후 10년간 농업·농촌 부문에 119조 원의 투·융자를 약속했습니다. 이 대책에는 전업농 중심의 농업구조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탈락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119조원 투·융자로 농촌 체질 개선

성진근 교수 : 7만 가구 전업농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선 농지 유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농지유동화 과정에서 유동화의 필요성 때문에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엉뚱하게 농지로 보존될 가치가 높은 지역, 가령 도시근교의 환경적 가치가 높은 농지 등이 자꾸 난개발되는 일은 벌어지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허상만 장관 : 우선 농지 유동을 촉진할 농지은행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유동화 정보 제공 및 농지 매매와 수탁, 농지 비축 등의 기능을 강화해 농지시장의 안정적 관리와 수급 조절, 농업구조개선 촉진에 피한다고는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농지 투기 및 난개발 문제는 관계 부처와 협조해 대처할 방침이고요.

성진근 교수 : 지난 8월 초 WTO의 DDA 농업협상 기본 골격이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이를 살펴보면 우리에게 좀 심하다 싶은 위협 요인도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잘 선택 하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도 보입니다.

협상에 임하는 정부의 입장이 있을 테고 또 이를 불안하게 바라보는 농민의 입장도 있는데, 양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비책이 있습니까.

허상만 장관 : 현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하다 혹은 불리하다고 선불리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는 앞으로 세부 원칙을 어

땡게 협상해 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정부는 향후 협상 과정에서 우리와 입장이 비슷한 국가와 공동 대응을 통해 관세 감축 최소화, 관세 상한 설정 제한 및 저율관세 의무도입물량 (TRQ:Tariff Rate Quota)증량 최소화 등 우리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성진근 교수 : 그동안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도 손해만 봤다는 농민의 피해의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앞서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119조원 투·융자 계획이 차질 없이 잘 이행돼야 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용할 계획입니까.

허상만 장관 : 우선 전업농 중심의 농업 구조로 재편하고 탈락농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데 향후 10년간 52조5,000억 원을 투자합니다. 또 농업 개방으로 인한 농가소득 하락과 경영불안에 대비해 직접지불제, 재해보험을 확대하는 데 32조4,000억 원을 투입하고요.

마지막으로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어민연금·건강보험 등 농촌형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교육·의료 등 복지 서비스와 농촌종합개발 등에 17조 6,0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성진근 교수 : 과거 UR 투·융자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고 농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투·융자 집행 평가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또 정부의 농업 지원 계획이 너무 공급자 위주로만 돼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수요자 측면이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허상만 장관 : ‘투·융자 심사·평가 시스템 혁신 방안’ 을 마련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 신규 사업을 도입하거나 결정하는 단계에서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시·군 농업인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고요.

매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 성과가 없거나 비효율적 사업은 구조조정하고 효율적 사업으로 재원 분배를 확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현장에 가 보니 여전히 과거 1970~80년대 농어촌 개발 당시의 사고방식 속에서 사업이 진행될 우려가 있음을 느끼게 돼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가령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0년 간 7조원이 들어가는데 올해와 내년에 개발 권역으로 지정된 36개 지역 중 일부는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무조건 도시처럼 개발하려고만 합니다.

각 권역의 지리적, 인문적 특성을 살려 내실 있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더 보완해야겠지요. 수요자 측면을 지적해 주신 것은 잘 참조하겠습니다.

농협 스스로 못하면 정부가 개혁 요구

성진근 교수 : 추곡수매 문제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습니다. 농림부는 추곡수매가 결정의 국회 동의제 폐지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공공 비축제 도입의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공 비축제라는 것이 과거 정부미를 연상케 해 쌀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최근 제가 중국에 가서 쌀 비축 시설을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냉장 저장하는데, 2년간 쌀의 품질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허상만 장관 : 우선 DDA, 쌀협상에 따라 불가피하게 국내보조금 감축과 쌀시장 개방폭 확대라는 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매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이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또 추곡수매 국회 동의제폐지 검토는 변화하는 시장상황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농업인이 우려하는 쌀 값 하락에 대해서는 직접지불제 확대를 통해 경영안정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공공 비축제가 쌀 품질하락을 가져올지 모른다는 부분은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성진근 교수 : 농업인들의 농업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요구도 많습니다. 사실 농협 개혁은 오래된 이슈 아닙니까. 그만큼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만.

허상만 장관 : 농협은 자율단체이므로 스스로 개혁을 추구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농협도 이제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농협이 주인인 농업인의 의사에 반해 개혁을 소홀히 할 경우 정부로서도 강한 개혁 의지를 갖고 농업인들과 함께 개혁을 요구할 것입니다.

성진근 교수 : 마지막으로 쌀 개방 문제 등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시죠.

허상만 장관 : 개방 확대가 불가피한 실정이지만 정부는 농업인의 소득 보전만큼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 119조 원 투·융자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농업인 소득 보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입니다. 농업인들은 이런 정부의 의지를 믿고 함께 이 상황을 극복해 갔으면 합니다.

농지제도 바꿔 도시자본 농촌 유지

(중앙일보, 2004. 11. 1)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정부 주도의 농업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와 농민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또 농지제도를 바꿔 도시 자본을 적극적으로 농촌으로 유치해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촌 개발의 방향은 '농촌을 도시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농촌의 특색을 살리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지난달 28일 본지 홍병기 경제부 차장과 만난 자리에서다.

그는 쌀 재고 부담을 덜려면 북한에 쌀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쌀 협상에서도 쌀을 원조용으로 북한에 줄 수 있는 관련 근거를 인정받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편집자>

홍병기 경제부 차장 : 쌀 협상 시한이 연말이다.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허상만 장관 : 관세화 유예 여부를 놓고 그 시기와 의무수입 물량 규모를 정하는 것이 최대 쟁점이다. 우루과이라운드(UR)의 협정에 따라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일정 규모의 외국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도록 돼 있다.

지금은 1986~88년 평균 국내 소비량(513만t)의 4%에 해당하는 쌀을 수입하고 있는데 쌀 수출국들은 이를 9%까지 늘리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수용하기 어렵다.

1인당 연평균 쌀 소비량이 95년 109kg에서 지난해 83kg까지 줄어드는 등 쌀 소비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현재 수입량도 국내 전체 소비량의 6%나

된다. 그러나 상대국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수입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현재 금지하고 있는 수입 쌀 시판 문제도 부분적인 개선이 불가피하다. 수출국들은 자국 쌀을 안정적으로 수출하기 위해 국가별 수입량(쿼터)을 정해 달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국가별 쿼터를 주기는 어렵다. 대신 곡종별로 쿼터를 정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홍병기 경제부 차장 : 수입이 늘면 쌀 재고가 문제다. 해법은.

허상만 장관 :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을 계속할 것이다. 이번 협상에서 쌀 수출국으로부터 북한 원조와 관련된 근거를 인정받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은 인도적인 목적 외에 국내에서 남아도는 쌀 재고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된다.

홍병기 경제부 차장 : 쌀시장 개방에 대한 농민들의 걱정이 많은데 대책이 있나.

허상만 장관 : 외국 쌀과 경쟁할 수 있도록 농사짓는 규모를 늘려 생산비를 낮추고, 친환경 농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하루아침에 되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당분간 생산하는 쌀 80kg당 17만 원 선의 소득을 보전해 줄 방침이다.

농업인의 날(11월 11일)에 최종안을 발표할 것이다. 그러나 반발을 달래는 식의 지원은 하지 않을 것이다.

홍병기 경제부 차장 : 정부는 5년 이상 농민에게 농지를 임대하면 도시민이 농지를 무제한으로 소유할 수 있는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투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

허상만 장관 : 우리 농업은 생산비가 높고 규모가 영세해 가격 경쟁력이 낮다. 농촌이 지금처럼 활력이 없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향후 10년간 119조원을 투·융자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현재 농지제도로는 힘들다.

농지를 전문적으로 농사짓는 농민에게 몰아줘야 한다. 투기는 막겠지만 지금은 투기 걱정보다는 도시 자본이 농촌으로 유입돼 농촌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농지 제도를 안 바꾸면 농민들이 논을 팔고 싶어도 팔기 어렵다.

홍병기 경제부 차장 : 농정에 대한 농민의 불신이 깊다.

허상만 장관 : 지금까지 농정은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농민이 따라오는 식이었다. 앞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농민, 지역 전문가들이 지역에 맞는 사업 계획을 만들면 정부가 선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꿀 것이다.

쌀 협상 내용도 완전 공개하고 농민과 소비자, 국회가 최종 결정할 수 있게 할 것이다.

홍병기 경제부 차장 : 농업만으론 농촌 사회가 유지되기 어렵다. 농외소득을 높일 방안은.

허상만 장관 :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하던 농촌 관광·개발 사업을 농림부 중심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전국 5만6,000여개 농촌 마을을 1,000개 권역으로 묶어 권역별로 3년간 70억원을 지원할 것이다. 지자체들은 농촌을 도시처럼 만드는 개발 계획을 자꾸 가져오는데 농촌의 특성을 살려 농촌을 농촌답게 가꾸어야 도시인을 끌어들이 수 있다.

홍병기 경제부 차장 : 농협 개혁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허상만 장관 : 농민에게 이익을 주는 조직으로 농협이 바뀌어야 한다. 농협 조합장 보수를 은행 지점장과 비교하는데 조합원들에게 이익 배당이 없는데 일부 임원들이 무조건 높은 월급을 받는 것은 문제다.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은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신용 부분의 이익이 경제사업으로 이전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해야 한다.

농민 농지구입 금리 1.5% 검토, 소득보전 연계 개혁

(한겨레, 2004. 11. 13)

허상만 장관-정영일 교수 '농업현안' 대담

정 교수 "72%가 임차농·고정형 직불금 지주 손에"

허장관 "소득보전 10년 지속하며 품질향상 노력을"

관세화 찬반 이분법 앞서 수급조절·구조조정 시급

지난 11일은 '제9회 농업인의 날'이었다. 그러나 농민들에게 축제일만은 아니었다. 쌀 협상과 도하개발어젠다(디디에이) 협상, 추곡수매제 폐지, 농협 개혁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허상만 농림부 장관과 정영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정부과천청사 장관실에서 만나 농업·농촌 현안을 진단하는 대담을 나눴다.<한겨레신문 편집자>

허상만 장관 : 농업 현안 가운데 가장 뜨거운 쌀 협상은 관세화 유예 기간 10년 연장과 일정량의 의무수입물량 증대 등에서 가닥이 잡혀 가는 중이지만, 최근 중국과 의견차로 난항을 겪고 있다.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지막 협정문에 서명할 때까지 어려운 것이 협상이다. 중국 외에도 사실상 해결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있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의무수입물량을 들여와도 어떻게 시장 격리를 시킬 것이냐다.

정영일 교수 : 쌀 관세화냐 유예냐를 놓고 너무 많은 정력을 쏟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정부나 국민은 큰 그림에서 쌀 산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논의해야 한다.

지나치게 몇 %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관세화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분 법으로 대립하다 보니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핵심은 수급문제, 소득보전문제, 구조조정 문제다.

수급문제에서 우선 감산을 위한 휴경은 재검토해야 한다. 지난 3년 동안 논 2만7천ha가 휴경에 들어갔다. 일본의 경우 250만ha 가운데 100만ha를 늘리면서 돈을 주고 있는데, 일본의 생산조정정책은 실패했다.

논과 밭을 통합한 체계를 만들어 쌀농사를 짓거나 다른 농사를 하거나 차이가 없는 생산 구조로 바뀌 가야 한다.

소득보전문제는 농민의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3년 동안 해보고 디디에이협상 타결 뒤 다시 한다는 식으로는 안 되고, 7년이나 10년이나 지속되도록 정치적으로 타결할 필요가 있다.

구조조정과 소득보전을 연계해야 한다. 모든 농가에 획일적으로 고정과 변동 직불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고정은 기본으로 하되, 변동은 농가가 일부 부담하고 정부가 경영을 안정화시켜 주는 방식의 별도 패키지로, 옵션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다.



쌀 관세화 유예 협상 일지

1995년	세계무역기구 한국 쌀 시장 완전 개방 10년간 유예
2004년 1월	세계무역기구에 쌀 협상 개시 의사 통보
3월	농림부·외교부·재경부 등 쌀 협상대책단 구성
4월	미국·중국·티어 등 9개국 협상 참가 신청
5월6일	미국과의 쌀 관세화 1차 협상, 쌀 시장 개방문제 협의를 위한 본격적인 당사국과의 협상 돌입
5월~11월	9개국과 5~6차례 협상
11월	국민대토론회 및 관세화 여부에 대한 정부 방침 발표(예정)
12월 말	우루과이라운드에 따른 쌀 관세화 유예기간 종료

허상만 장관 : 생산조정, 휴경문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다시 조정해야

할 것 같다. 논을 늘린다는 것이 국민 정서에도 안 맞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

식량 자급률 문제에서는 쌀이 제일 먼저이고, 다음은 콩이어야 한다. 내년부터는 콩에 대한 사업을 어떤 형태로든지 시작할 생각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가능한 지역에 대단지를 조성하고 소비처를 확보한 상태에서 정부는 기계화 등을 지원하면 된다. 콩 재배시기를 앞당기면 생산량이 배로 늘어나 27% 자급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쌀 소득보전 목표가를 3년 단위로 정한다는 것은 디디에이 협상과 쌀값 변동 등을 고려해 그때그때 조정하겠다는 뜻으로, 정부의 쌀 소득보전 지원은 10년 동안은 지속돼야 한다고 본다.

그동안 정부도 농민도 품질 향상에 큰 노력을 못해 왔다. 그 정도 노력해서는 고품질이 나오기 힘들다. 고품질에는 최소 5년, 길게 10년 동안 땅가꾸기, 기술, 정성이 들어가야 한다. 더 나아가 양심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소비자가 신뢰한다.

정영일 교수 : 쌀 소득안정 방안으로 마련된 논농업직불제는 임차료를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 정부는 농민을 지원해 준다고 직불금을 주는데 결국 지주에게 간다. 농지의 43%가 임차지고, 농가의 72%가 임차농이다.

자작 위주의 농지제도는 자작 소득 보전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제도다.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제도 개혁도 농민의 소득보전과 연계시켜야 한다.

허상만 장관 : 제일 좋은 방법은 자기 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이다. 농지제도를 손대는 이유는 농사지을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10년 뒤면 38만 명이 고령으로 손을 놓는다. 14만~15만ha는 될 것이다.

농업인들이 그것을 사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디디에이 협상의 경제적·사회적 파장으로 쌀값은 떨어지고 지가도 하락할 것이다. 농지제도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각해야 한다. 그때 가서 정부가 대책을 세울

수는 없다.

전문가 의견을 통해 정부가 농지제도 개혁안을 만들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외국예, 농촌사회 변화 등 고려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쌀 소득보전 대책에서 땅에 대한 직접지불금으로 1ha당 60만원을 주려고 하는데, 토지대장 기준으로 지급될 수밖에 없어 경작자가 아닌 지주가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임차농의 권익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직불금을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가 받을 경우 확실한 제재를 하도록 하겠다.

정영일 교수 : 농지개혁 당시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정부는 자작농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농지정책을 운용해야 한다. 창업농 등 농가가 자작지를 늘릴 경우 무이자, 장기 할부로 지원하는 등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농지의 난개발과 투기를 막아야 하는데, 이번 종합부동산세 대책에서도 농지나 임야는 다 빠져 있다. 비농업인 들이 국채 산다는 기분으로 농지 투기에 나서지 않을까 염려된다.

허상만 장관 : 농지 가치가 적어 비농업인이 사려 하지 않는 지역에서 농민이 절박하게 땅을 팔아야 할 경우 농지은행이 도와줘야 한다. 축산·과수농가가 3년 고비를 못 넘기고 파산하더라도 농사를 계속 짓도록 해주고, 다시 성공할 경우 환매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농민과 농민 사이에 농지가 이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창업농 얘기를 들어보면 의욕이 있어도 농지 값이 올라 정부 지원 없이는 구입이 어렵다고 한다. 전국 논 값이 지난해 평당 평균 3만7천원에서 올해는 4만100원으로 올랐다.

농지구입 자금의 무이자는 곤란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금리를 현재 3%에서 1.5%로 낮추는 방안을 찾고 있다.

허상만 장관 : 쌀 소득안정 방안을 추곡수매제, 국회동의제 폐지를 위해 내놓은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개방 시대에 우리 농업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

농업농촌종합대책에 따라 119조원 투·융자사업만 착실히 진행된다면 과수·축산 농가는 경쟁력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쌀 부분에 대해서만은 농민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 쌀 산업도 1995년부터 시장에 맡기면서 구조조정을 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 정부는 농민들이 쌀 경쟁력을 가질 때까지 쌀 소득만큼은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해 준다는 차원에서 이번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안이 시행되면 수매제와 국회동의제는 저절로 의미가 없어진다. 또 수매제 폐지와 공공비축제는 별개의 문제다.

상당수 전문가들도 이 부분에 대해 오해를 하는 것 같다. 수매제를 유지해도 앞으로 3년이다. 대책도 없이 수매제 가지고 정책을 펼 수는 없다.

정영일 교수 : 현재 추진되는 양정개혁안의 취지는 수맷값 등 시장가격과 동떨어진 정책가격은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예외를 주장하다 보니 세계무역기구 체제 안에서 인정되는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적었다.

세계 농정의 추세는 국내외 가격차를 줄여 가고 그 대신 차액을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것이다. 과거에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을 납세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현재 유럽 농민 소득의 50~60%가 재정으로 보전되고 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서 출발하고 있다. 농민단체들이 수매제 유지를 주장하는 것은 이해가 돼도 정치권 등은 수매제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해야 한다.

■ 쌀 관세화 유예 협상 3대 쟁점

쟁점	현황	상대국 요구
유예기간	한국 10년 연장 요구	협상 초반 3~7년에서 대체로 10년으로 기닥이 잡혔으나 중국이 5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 난항
의무수입량	2004년 현재 4%	최고 16%(중국)까지 증량을 요구했으나 7~9% 선에서 협상 중
판매	가공용으로만 판매	10~15%를 발실판용으로 소비자 시판 요구

허상만 장관 : 우리 사회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자기 위치에서 자기 구실을 다해야 한다. 장관 재임 1년3개월 동안 농협을 보면 답답한 느낌을 받았다. 이런 구조 이런 형태의 농협 운영은 3년, 많이 가야 5년 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농협의 본래 모습으로 가야 한다.

농협중앙회와 합의해 8개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8개 항만이라도 국회에서 농협 개혁 입법으로 통과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연말까지 안을 만들어 농협인 스스로 개혁하도록 뒷받침할 것이다.

지금 이 마지막 기회다. 정부로서도 한계가 눈앞에 보이는데 건전한 지원 밖에 할 수 없다.

정영일 교수 : 올 들어 경기 파주 교하농협과 경북 구미 장천농협이 조합원 결의로 해산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조합원과 조합이 따로 도는, 조합원이 조합을 신뢰하지 않는 상황이 빚은 사건이다.

농협이 자생적·자율적 조직이어야 하는데, 관료주의가 더 심하다. 관료주의는 정책사업 의존도가 높은 데서 비롯됐다. 양곡사업 등 정부 국고 대리점 구실을 하면서 책임경영체제가 결여됐다.

경제조직이고 경영체인데도 조합장이 선거로 뽑혀 아무리 적자를 내도 독직만 안하면 별 문제가 없다. 그 주름살은 농민, 국민에게 다 간다. 결과적으로 중앙회가 비대해지고, 정치 조직화돼 있다. 기본적으로 경제조직이라는 틀을 벗어나 신용사업만 해도 극도로 허약해졌다.

농협은 농림부보다 몇 배로 중요하다. 농협 지원을 끊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대표권과 경영권을 분리해 경영이 제대로 살아나는 조직으로, 농민의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119조원 투·융자 성공 여부의 절반 이상은 농협에 달려 있다고 본다.

허상만 장관 : 지난 정부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82조원 투·융자는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도시 소비자들에게 사시사철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하고, 기계화 및 농지 정비, 전업농을 위한 기술수준 향상 등 긍정적 결과들이 많다.

다만, 경영에 문제가 있어 농민 소득과 연결이 안 된 것이 문제다. 미래 농업은 지식경영을 할 수 있느냐, 기술농업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관건이 달려 있다. 앞으로는 돈을 쓰는 방법을 바꿀 생각이다. 반드시 먼저 사업계획을 심사한 뒤 성공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투자할 것이다.

농업도 지방시대가 됐다. 지자체, 생산자, 지역대학 3자가 주체가 돼서 생산자 조직화, 유통 계열화, 상품 브랜드화 등을 설계해 추진할 때 중앙정부는 옳다고 하면 지원하는 형식이 될 것이다. 일례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프티에이)에 따른 올해 지역 지원액이 967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408억원만 집행하고, 559억원은 내년으로 이월시켰다. 지방자치단체가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다.

정영일 교수 : 119조원은 행정 차원의 대책이다. 법제로 뒷받침이 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기본법을 제정에 가깝게 근본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현재 농업농촌기본법은 선언적 내용 위주로, 구조적으로 일관성이 부족하다.

농업농촌종합계획에 따른 주요한 정책 틀 등이 들어가야 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 문제, 농촌 정책 등이 담겨야 한다.

허상만 장관 : 농업농촌기본법은 식량자급률 정도를 정하는 법이 아니라 우리 농업 장래를 결정하는 법이 될 것이다. 지난해 용역을 맡겼다. 의견 수렴해 내년 중에는 개정할 계획이다.

농업경쟁력 위해 10년정도 더 필요

(서울경제신문, 2004. 11. 29)

美·中等 무리한 요구엔 관세화 유예 재검토 가능
특성화사업단 통해 농촌을 복합산업 공간으로
전업농 20만 명 육성등 과감한 구조조정 나설 것

쌀협상 종료시한을 한달 앞두고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질문을 시작하기도 전에 먼저 "쌀협상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말문을 열어 관세화 여부를 놓고 고심하는 모습을 역력히 드러냈다.

연말까지 관세화나, 유예나 양자택일을 해야 하지만 미국·중국과의 막판 협상에서 조율에 차질이 빚어져 매듭이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허 장관은 "상대방이 양보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 더 많은 양보를 이끌어 내는 것이 쉽지 않다"며 "협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농업인들이 쌀 품질향상 등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10년 정도 기회를 더 줘야 한다"며 관세화 유예가 정부의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

허 장관은 협상국들의 수입쌀 시판물량과 자국쌀 수입물량 등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차라리 이번 기회에 관세화하지는 주장에 대해 "관세화 유예를 목표로 하지만 상대방의 요구가 무리할 경우 상황이 더 어려워지므로 원점에서 다시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세화에 대해 어떻게 결론이 나든 개방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제는 농촌이 과감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서울경제신문 편집자>

김인영 경제부장 :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쌀 관세화 유예 여부를 놓고 국민이 많으실 텐데, 협상진행 과정과 관세화 여부에 따른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허상만 장관 : 주요 협상국들과 마지막 쟁점을 놓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가 동의하지 않아 합의를 못하면 결국 관세화로 가야 합니다.

관세화 여부에 따른 장단점은 당장이 아닌 10년, 20년 뒤까지 생각해야 하므로 매우 어렵습니다. 관세화가 유예되면 합의된 물량만 수입되므로 안정적으로 정책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관세화로 가면 과도한 의무수입량 증량은 피할 수 있지만 국제가격과 환율변동 등에 따라 수입량이 급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정도로 가야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유예해 왔는데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바에야 이번 기회에 개방하는 것이 어떠한지 적도 있습니다.

쌀은 과수·축산 등과는 다릅니다. 쌀은 전 국민의 식량입니다. 쌀만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정책을 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관세화를 유예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상대방의 요구가 무리할 경우 10년 후 쌀농사를 더 어렵게 할 것이라면 (관세화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농업인에게 10년 정도 기회를 줘야 합니다. 지금 보통 쌀 한가마가 16만1,000원인데 20만원 받는 쌀도 있고 강원도에서는 100만원이나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부는 최소한의 뒷받침을 해주고 농업인들이 품질고급화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김인영 경제부장 : 일부 협상국이 관세화 유예조건으로 밥상용 쌀 시판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식탁에 수입쌀이 올라오면 우리 제품에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허상만 장관 : 외국쌀을 가리고 검사하면 분간할 수 없습니다. 식미 테스트를 해보면 기본적인 품종차이는 없습니다. 재배할 때 정성이 들어가야 합니다. 제대로 퇴비하고 농약·비료를 적게 쓰면 밥맛은 좋아집니다.

(소비자들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한 가마에 백만 원씩 주고 사 먹지 않습니다. 정부는 소비자 시판을 허용하더라도 수입차익금을 부과, 수입쌀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농업인이 고급 쌀을 만들 수 있도록 기반조성에서부터 뒷받침할 것입니다.

김인영 경제부장 : 미국·중국과의 협상이 결렬됐는데 관세화 유예방침을 세웠더라도 의무수입 물량이 8%를 넘으면 개방하는 게 낫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허상만 장관 : 그동안 협상을 통해 협상국의 요구수준이 상당히 낮아진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관세화 유예기간 10년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의무수입 물량 8%의 경우 우리의 기대치 7%대를 100% 관철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수입물량을 어떻게 소화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가공용으로만 썼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타이완도 지난 2001년 관세화로 갈 때 외국원조는 물론 사료용과 재수출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해외 수입쌀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본입장입니다.

김인영 경제부장 : 그동안 북한에 지원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은 협상에서 양해사항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허상만 장관 : 수입쌀의 소비방법을 찾는 것이 큰 숙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협상도 쉽지 않습니다. 협상과정에서 상대국은 의무수입 물량의 해외원조가 금지돼야 한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식량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인영 경제부장 : 오는 12월 말로 예정된 협상시한을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허상만 장관 : 지난번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우리는 예외적으로 10년 동안 유예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의무수입 물량 4%만 수입하고 장벽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올해 안에 협상해야 합니다. 시효 내에 협상을 매듭짓지 못하면 예외를 받았던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관세화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일부에서는 협상 자체를 무시하고 시간 끌기로 가자는 주장도 있는데 내년부터 바로 관세화가 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상대국들이 당장 이의신청을 해올 것입니다.

김인영 경제부장 : 관세화를 유예하면 그동안 정부가 지원해 주던 것과는 다른 형태가 될 텐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허상만 장관 : 쌀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11일 쌀농사를 짓는 사람이 과거 3년 동안 얻었던 소득을 바탕으로 한가마당 17만원 수준의 목표가격을 설정했습니다.

만약 쌀값이 5% 떨어지면 16만7,000원까지 보전해주고 나머지 가격 부분은 농업인이 자구노력을 해서 값을 채워야 합니다.

이것은 정부 시안이기 때문에 농업인·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정부안을

결정하고 국회와 논의해 최종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쌀이 남아돌고 농지가 과잉인데 농지용도를 풀어 줘야 하지 않습니까. 현재 쌀 재배면적이 매년 1만5,000ha씩 줄고 있으며 다른 용도로 전환되는 것도 1만2,000ha나 됩니다.

그래서 농업 이외에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논의 높아서는 안됩니다.

산업화 전용의 전제조건은 우량농지는 농업용으로만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산력이 낮은 곳은 지자체에서 산업단지·농공단지·산업부지로 만들어 그곳에만 유입되도록 해야 합니다.

김인영 경제부장 : 농업인들은 열심히 살았지만 가난합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마냥 지원만 할 수도 없는 여건인데요.

허상만 장관 : 우리 농업이 경쟁력 있는 성장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정부의 소득보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며 농업인의 지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10년 후 우리 농업인의 지적수준이 경쟁국보다 앞서도록 하기 위해 규모화된 전업농을 육성하고 전업농 20만 명이 농업생산의 절반을 담당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중 5만명 정도는 전문인력으로 양성해야 합니다. 매년 4,500명씩 10년간 농업 인턴제, 대학생 창업연수, 직업훈련 과정, 창업농 후견인제를 통해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 그동안 중앙정부가 주도해 왔던 농정추진 방식도 지방정부 중심으로 바꾸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조정과 함께 농촌형 사회안전망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이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등은 정부가 50%를 책임지고 있고 농림부 예산으로 농대 학생 4,500명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인영 경제부장 : 농업을 기업화하려면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와야 하고 도시인들에게도 투자기회를 줘야 하지 않습니까.

허상만 장관 : 과거에는 정부에서 사업을 일일이 정했지만 이제는 강원·전남·경남 등 농업지역에서 직접 경쟁력 있는 사업을 발굴,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 지자체-생산자-대학 등이 농업의 주체가 돼서 지역농업을 책임져야 합니다.

좋은 상품을 만들고 제값을 받도록 유통을 뒷받침해주면 정부가 평가해서 자금을 지원해줍니다. 같은 지역농업특성화사업단을 전국 35곳에 만들었는데 내년엔 본격적인 '농업 클러스터'가 가동되면 100개 정도 추가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농촌 고유의 자연경관과 향토자원을 활용해 농촌을 1·2·3차 산업이 공존하는 복합산업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 농촌관광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농촌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마케팅 활동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전업농 육성 못하면 농촌 붕괴한다

(시사저널, 2004. 12. 30)

대통령 표현에 따르면, 농림부장관은 교육부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쌀협상 주무 장관으로서 안팎의 공세에 시달리는 것이 그 한 증거이다. 하지만 미국·중국·태국 등 9개국과 쌀협상을 막 끝내고 지난해 12월30일 <시사저널>과 마주 앉은 허상만 장관은 피로감보다는 만족감이 커 보였다. 협상에서 선방했다고 믿는 듯했다.

그는 앞으로 10년이 한국 농업의 운명을 결정하는 마지막 기회라며, 쌀 산업 체질 강화에 온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개방보다 더 큰 문제는 급격한 소비 감소라며, 쌀 소비 촉진과 관련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가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야, 김치에 밥 먹어라’가 자신의 모토라고 외치고 다니는 것도 소비 급감을 걱정해서다.<시사저널 편집자>

장영희 기자 : 쌀협상이 완전히 끝났는가?

허상만 장관 : 그렇다.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늘려야 하는 의무 수입 물량을 처음 24%에서 8% 밑으로 끌어내리려 했고 결국 7.96%(40만8천7백톤)로 결정되었다.

농정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7.96%도 많다고 생각하지만, 협상국 요구 수준과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협상이 잘 되었다고 자부한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줄기차게 관세를 줄이는 상황이고, 시장을 더 개방

하라는 분위기에서 과거 10년 동안 관세화 유예 조건으로 부여받은 의무수입물량 4%보다 앞으로 10년간 적용될 물량이 더 적기 때문이다.

또 협상 중인 필리핀을 빼면 1백47개 회원국 가운데 관세화가 유예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12월30일 세계무역기구 사무국에 앞으로 10년간 쌀 관세화 유예를 연장한다는 내용의 이행계획서(cs) 수정안을 제출했다.

통상 검증 기간이 90일이지만, 쌀 협상의 효력은 2005년 1월1일부터 발생했다. 세계무역기구 검증이 끝나면 국회 비준 절차도 밟을 것이다.

장영희 기자 : 농민단체와 일부 국회의원은 협상 과정을 공개하고 재협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허상만 장관 : 협상은 끝났다. 농민단체 추천 대표(경북대 김충실 교수)가 처음부터 끝까지 협상에 참여했다. 또 협상 타결 전까지 토론회·간담회 등을 100번도 더 했다.

이제는 어떻게 한국 쌀 산업의 체질을 강화할 것인가에 대해 농민과 정부, 국회, 농업 전문가 등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장영희 기자 : 정부는 처음부터 관세화(완전 개방) 대신 관세화 유예를 선택했는데, 이런 전략이 도리어 농업 구조 조정을 더디게 하리라는 비판도 있다.

허상만 장관 : 쌀을 완전 개방하려면 외국 쌀과 경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토대가 되어 있지 않다. 개방 전에 국제 가격과 국내 가격차를 줄였어야 했는데 도리어 커진 상태다.

시중 가격의 바로미터인 정부 수매가가 지난 10년간 26%나 올랐다. 일본은 16% 떨어졌다. 더 크게는 품질이 우수하고 환경적으로 안전한 쌀을 내놓아야 하는데 그런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앞으로 10년 동안 정말 준비를

잘해야 한다.

장영희 기자 : 시판 물량이 적다고 하지만 이것이 정말 위협적인 결과를 빚지 않겠는가?

허상만 장관 : 10월쯤 시장에 나오면 쌀값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수입차입금(mark-up)을 부과해서 국제(수입) 쌀값과 국내 쌀값 차이를 줄이려고 한다.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것이다.

장영희 기자 : 수입쌀의 품질이 국산보다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 결과가 있다. 또 수확 후 관리 체계가 미비해 밥맛을 떨어뜨리고 있지 않나?

허상만 장관 :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 경쟁력이고 다음이 품질과 환경 안전성이다. 동진·일품 같은 우리 쌀이 아키바레·고시히카리·칼로스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쌀 저장·가공·보관 시설인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저장 능력을 현재 6백40만 석에서 1천1백만 석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런 농업 인프라 구축 관련 예산이 1백19조원 사업 속에 들어 있다.

2003년부터 포장 양곡 표시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다. 최근 2~3년간 쏟아지고 있는 브랜드 쌀은 굉장히 좋아졌다. 앞으로 한국 쌀은 더욱 많이 달라질 것이다.

장영희 기자 : 농업 구조 조정을 위해 엄청난 예산을 썼는데도 달라진 것이 무엇이나는 비판이 거세다.

허상만 장관 : 농업 기반 조성에 총예산의 31%를 투자하는 등 성과가 컸다고 생각한다. 벼농사의 99%가 기계화되었고 기술도 세계 수준에 올랐다.

물론 이런 생산성과 기술 향상 결과가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못했고 농가 부실이 초래되었다는 점은 인정한다. 특히 경영 능력을 평가해서 투융자 했어야 하는데 미흡한 점은 있다.

장영희 기자 : 그래서 1백19조원이나 드는 농업 구조 조정 사업에도 냉소적인 시각이 많은 것 아닌가?

허상만 장관 : 1백19조원은 품질 향상과 기술 개발 등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교육 의료 지원을 위한 농촌 복지, 전문 인력 양성에 집중 투입할 것이다. 지원 방식도 달라진다. 이미 개별 농가에 직접 돈을 주지 않고 있다. 농민과 지자체, 대학 등이 연합해 사업계획서를 내고 30명의 전문가가 심의해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해야 돈을 준다.

장영희 기자 : 농정의 핵심이 6ha 이상의 전업농 7만 명 육성인데, 이것이 도리어 농촌 피해를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이 적지 않다.

허상만 장관 : 경지 면적이 6ha쯤 되면 2013년 농가소득이 도시 근로자 수입(5천5백만 원)과 비슷해지리라고 본다. 농민들이 그런다.

10ha 이상이면 돈벌 수 있다고 농사 지어 소득이 보전되어야 농촌에 사람이 살려고 한다. 정부가 소득직불제를 도입해 80kg 한 가마당 목표 가격인 17만원을 보전해 주려고 애쓰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농업도 산업으로서 경쟁력을 가지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 농업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농업을 책임진 사람·집단이 있어야 한다. 일각에서 가족농·소농 중심으로 가자는 주장이 있지만, 전업농 없이는 이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다.

전업 농민이 소농에 기계로 모 심어 주고 농약 주고 수확해 주는 것이 현재 농촌의 현실이다. 1백19조원 투입 계획은 전인구의 20%를 농촌에 살

게 하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다.

장영희 기자 : 경쟁력지상주의는 경쟁에서 이탈한 집단을 양산해 농촌을 붕괴시키는 것으로 귀결되지 않겠는가?

허상만 장관 : 정부는 2~3ha 경작하는 농민에게 6ha 이상으로 늘리도록 유도하려는 것이지 소농이 농사를 못 짓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소농은 자급농이지 상업농이 될 수 없다. 전업농 육성을 반대하는 사람에게 묻고 싶다.

10년 후 38만 명의 노령자 농민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는데 이들이 경작하던 16만ha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전업농이지 소농이 아니다. 전업농이 육성되지 않으면 가격이 폭락해 농촌 사회 붕괴를 가져온다.

장영희 기자 : 쌀을 왜 지켜야 하나?

허상만 장관 : 쌀은 생명이다. 먹거리의 기본인데 외국에 맡길 수 없다. 현재 곡물 자급률(사료 포함)이 26.9%다. 쌀은 거의 100% 자급하지만, 쌀마저 무너지면 식량 주권을 잃는다. 맘대로 사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값이 천정 부지로 떨어질 뿐 아니라 3~4배 주고도 물량이 없을 수 있다.

이미 1980년대 초 전 두환 정부 때 경험했지 않나. 당시 냉해로 수확량이 톱 떨어졌는데, 곡물 메이저들이 2.7배 비싼 값을 부르기도 올해 것만 사가면 안 팔겠다고 해서 몇 년 치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재고가 엄청나게 쌓였다. 밀은 좀 어렵다고 보지만, 콩은 올해부터 자립도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장영희 기자 : 농정 책임자로서 고충이 무엇인가?

허상만 장관 : 쌀값과 1백19조원 사업이다. 소득을 보전하고 예산을 효율

적으로 쓰면 농정 불신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농림부 직원들도 현장 가서 농민과 호흡하면서 정책을 만들고 있다. 정부를 믿고 합심해 어려운 국면을 돌파해야 한다.

여 백

V. TV · 라디오 인터뷰

여 백

4대 농업지원특별법 만들어 FTA 대비 가격지지정책에서 시장지향 농업으로

(K-TV, 국정브리핑, 2003. 10. 30)

지금 농업·농촌은 농업개방 압력과 농가부채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게다가 이번 여름 태풍 ‘매미’의 피해는 농촌사회를 일순간에 나락의 늪에 빠뜨리기에 충분했다.

내년에 있을 쌀 개방 재협상에서 정부의 ‘쌀 관세화 유예’라는 원칙적 입장이 쉽게 먹혀들지도 의문이다.

그야말로 정부가 총체적으로 농업문제에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 농업·농촌이 붕괴할 위험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이와 관련, 허상만 농림부장관은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 이후 농정 여건 변화에 대비해 농업·농촌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기 위해 향후 10년 후를 내다보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침체된 농업환경에 희망을 던졌다.

우리 농업 피해 최소화 위해 협상 만전

허 장관은 29일 국정브리핑과 가진 인터뷰에서 “정부는 우선 DDA협상, FTA, 내년 쌀재협상에 우리 농업에 미치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협상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말하고, “한·칠레 FTA 등 당면 현안에 대해서는 ‘FTA이행특별법’, ‘부채경감특별조치법’ 등 4대 농업지원 특별법의 제·개정을 통해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허 장관은 한·일 FTA 추진과 관련, “잘 활용하면 김치·토마토 등 농산물은 수출 증대효과가 클 것”이라며 “농업부문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장관은 또 내년에 예정된 쌀 재협상에 대해 “DDA협상에 우리나라의 개발도상국 지위유지가 불리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쌀 관세화 유예라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세부원칙 협상동향을 감안해 구체적인 입장과 전략을 확정해 범정부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만금 사업 중단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우량농지 가능성이 있는 새만금의 경우는 개발과정에서 환경문제를 검토하며 개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 장관은 마지막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농촌을 지켜준 농민들에게 고맙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농민들이 믿고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K-TV 국정브리핑 편집자>

박상기 전문위원 : 현재 농업·농촌문제는 얽히고 설켜 있어 풀기가 쉽지 않다. 그야말로 총체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해결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데, 농업·농촌현실을 진단해 달라.

허상만 장관 :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세계 12대 무역국가로 자리 잡고, 선진국 모임인 OECD에도 가입하는 등 세계가 괄목할만한 고성장을 이룩했다. 반면 농업분야는 다른 산업부문과 성장격차가 확대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타산업과 격차 커 농업부문 어려워

우선 대내적으로는 농가부채 증가, 농산물가격 불안정, 빈번한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의 불확실성은 높아진 반면, 농가소득 안전망인 각종 직접지불

제도, 농작물재해보험은 도입 초기이다 보니 아직 부족한 면이 많다.

그 결과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95년 95% 수준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73%에 머물렀다. 게다가 많은 농업인들이 농촌을 떠나고, 농가인구 4명중 1명이 65세 이상일 정도로 고령화가 심화돼 점차 활기를 잃어 가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한 압력이 커져만 가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농업·농촌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중장기 농업·농촌정책을 마련하고, 계획적이고 일관된 투자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DDA협상 여파 우루과이라운드 능가할 듯

박상기 전문위원 : WTO, FTA 등 농업개방 압력이 거세다. 농업개방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 하더라도 국내 농업보호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허상만 장관 :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지만,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우루과이라운드(UR)에 못지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DDA협상, FTA, 내년 쌀재협상에서 우리 농업에 미치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협상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 한·칠레 FTA 등 당면 현안에 대해서는 'FTA이행특별법', '부채경감특별조치법', '농어업인삶의 질향상특별법', '농특세법' 등 4대 농업지원 특별법의 제·개정을 통해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DDA 이후의 농정여건 변화에 대비해 농업·농촌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향후 10년 후를 내다보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간의 정책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반성을 토대로 농업인단체나 전문가들과 충분히 협의해 올해 말까지 개방화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농정의 틀을 만들 생각이다.

박상기 전문위원 : 한·일 양국 정상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정부 차원에서 FTA 체결을 협의키로 했다. 일본과 FTA가 체결되면 우리 농업은 어떤 영향을 받나.

허상만 장관 : 지난 10월 20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2005년 타결을 목표로 연내에 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일FTA는 단기적으로 국가 전체 무역수지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나 농업부문 부가가치는 약 1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연간 농수산물 수입규모는 690억불로 세계 최대이며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가까워 유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일본과 FTA체결하면 우리가 유리해

이러한 점을 잘 활용할 경우 일본으로 수출되는 김치·토마토·가지·고추 등의 농산물은 수출 증대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부 농민단체가 FTA는 농업분야에 피해만 초래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나, 대상국가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일본은 그 좋은

예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한·일 양국간 FTA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농업부문의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다. 또한 협상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생산자단체·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가면서 협상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박상기 전문위원 : 한·칠레 FTA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나.

허상만 장관 : 한·칠레 FTA는 쌀·사과·배를 제외했고, 민감한 품목 377개도 DDA협상 이후로 연기했으나, 시설포도 등 과수분야를 중심으로 직·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한양대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칠레 FTA 비준 후 10년간 포도 2,286억원, 키위 347억원 등 총 5,860억원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칠레FTA는 과수분야 간접피해 우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칠레 FTA대책으로 7년간 8000억원의 특별기금을 조성하고, 지방비 2,0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원 규모의 지원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아울러 FTA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FTA 이행특별법’ 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특별기금에 충당될 정부출연금 1,000억원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84개의 FTA가 발효 중이고 전체 교역량의 43%를 차지할 정도이나, 우리나라는 아직 한 건의 FTA도 체결하지 못한 상황이다.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야의원과 농민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비준안과 특별법이 동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박상기 전문위원 : 농가부채문제도 심각하다. 부채경감을 위한 기본계획은 무엇인가.

허상만 장관 : 농가부채경감대책의 핵심은 농업인이 스스로 부채를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상시 경영회생 시스템과 능력에 맞는 상환제도를 마련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농민단체·학계·관계부처 등이 참여한 ‘부채대책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했고, 이를 토대로 정부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마쳤다.

부채경감특별조치법에서는 현 부채 중 정책자금의 금리를 4%에서 1.5%로 획기적으로 낮추고, 상환기간도 5년 거치 15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빠진 농가에 대해서는 워크아웃 방식의 ‘경영회생지원제도’를 상설화해 연리 3%에 상환기간은 3년 거치 7년상환 조건으로 연간 2,0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금리 1.5%로 낮추고 상환기간 20년까지

연대보증피해에 대해서도 상환기간을 종전 3년 거치 7년에서 3년 거치 17년으로 연장하고, 조기·정상 상환하는 농가에는 1년간 납부이자의 40%를 환급해 줄 계획이다.

그러나 농가부채 대책만으로는 현재의 농가소득 안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부채대책과 함께 다양한 직불제 확충,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등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동시에 추진해 나갈 것이다.

박상기 전문위원 : 향후 10년간 추진하게 될 중장기 농업·농촌 대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

허상만 장관 : 급변하는 대내외 농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는 농정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단순한 생산 중심의 농업에서 벗어나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면서, 정부 주도의 가격지지 정책은 축소하고 시장지향적인 농정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과거의 평균적 지원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업정책, 소득정책, 농촌정책을 3대 축으로, 작지만 자생력 있는 생명산업으로서의 농업, 도시근로자 수준의 소득을 갖춘 농업인, 농촌다움(amenity)을 지닌 삶의 공간으로서의 농촌을 만들어 나갈 생각이다.

농업정책은 전업농 중심의 시장지향적인 농업구조로 재편해 나갈 생각이다. 친환경 고품질 농업을 육성하고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확충해 나가겠다.

친환경적 고품질 농업으로 성장 동력 키워

농업인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직접지불제,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보완·확충하고, 농촌관광기반 조성, 향토 산업 육성 등을 통해 다양한 농외소득 기회를 확산시켜 나갈 생각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종합대책 수립과 함께 이의 실천을 담보하기 위한 투융자계획을 마련해 ‘농정협의회’를 통해 농민단체와 협의하겠다. 아울러 지역별로 설명회도 개최, 다양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박상기 전문위원 : 중장기 농업·농촌 대책이 갖는 의미와 추진방향은 무엇인가.

허상만 장관 : 현재 추진 중인 농업·농촌종합대책의 의미는 개방화시대에서 우리 농업·농촌을 지키기 위해 WTO에서 제한하는 시장왜곡적 정책

은 최소화하면서 농가소득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정책을 전환한다는 것이다.

WTO체제하에서는 국내 보조지출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효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농정의 추진방향은 그 동안 농업부문에 편중된 정책의 외연을 넓혀 식품, 농촌문제 등 개방화시대 농업·농촌문제에 통합하여 전방위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그리고 엄격한 평가와 시장원리에 따라 가능성 있는 농가를 선별해 지원토록 하고, 영세·고령농가가 안심하고 은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영세·고령농가가 안심하고 은퇴하게 할 것"

또한 정책의 무게중심이 지금까지의 사회간접자본(SOC) 중심 투융자에서 소득·복지·지역개발 중심으로 옮겨갈 것이며, 농산물 생산도 증산보다는 고품질·안전 농산물에 초점을 맞춰나가야 한다.

농촌은 지금까지 단순한 생산만을 위한 공간이었으나, 앞으로는 생산·정주·휴양공간으로서 농촌다움을 유지하는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고, 도시의 자본이나 사람을 유치해 농촌사회의 활력을 증진해 나갈 것이다.

박상기 전문위원 : UR대책 등 기존의 농업정책이 경쟁력을 키우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시켰다는 비판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허상만 장관 :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이후, 우리 농업·농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농업분야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일이었다.

정부는 UR협상이 진행 중이던 91년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을 수립해 2002

년까지 생산기반정비, 농산물유통개선, 농업기계화, 영농규모화 등에 연평균 5조 600억원, 총 62조원을 투자했다.

그 결과 농업 인프라가 상당부분 정비돼 어지간한 기상재해에도 안정적인 농업생산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고, 전업농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진전되는 등 농업의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토대는 마련됐다.

농업 관련 인프라 확충돼 생산성 크게 향상

이에 따라 농림부문 부가가치 성장률이 87년~90년의 마이너스 0.9%에서 91년~01년에는 2.1%로 높아졌고, 농가당 농업자본액은 84%, 노동생산성은 87%나 높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개방 확대, 산업구조 고도화 등으로 농가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돼 왔다. 즉 농산물 공급확대에 따라 농산물의 가격은 하락한 반면, 자재비 등은 올라 농가의 실질소득이 정체돼 경제가 악화되고 농촌의 주거환경·복지분야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결과, 도시와 농촌의 생활격차가 벌어지게 됐다.

또한 97년 IMF 외환위기는 한창 진행 중이던 농업분야의 구조조정을 후퇴시켰고, 농가부채 규모도 더욱 커지는 결과를 가져 왔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상기 전문위원 : 농업도 구조조정이 돼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구조조정 계획 또는 방향은 무엇인가.

허상만 장관 :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개방화가 진전될수록 전업화·규모화로 우리 농업의 체질을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쌀산업의 경우 2010년까지 6ha규모의 전업농 7만호를 육성해 경쟁력 있는 쌀 산업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축산업은 가축질병을 사전 예방하고 품질고급화에 역점을 두면서, 2013년까지 전업농 2만호가 전체

사육의 85%를 담당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과수·시설채소·화훼 등 원예 산업은 품질도 고급화하고,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시켜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구조조정이나 경쟁력 향상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영세농·고령농에 대한 지원대책이 우선적으로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경영이양직불제를 개선하고 농촌지역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 나갈 생각이다.

아울러 현재 도시지역에 비해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복지·교육·지역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 중인데, 이를 통해 농촌지역 복지·교육 인프라를 확충해 도시와 농촌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박상기 전문위원 : DDA 농업협상 동향과 향후 전망, 그리고 정부의 입장을 말씀해 달라.

허상만 장관 :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은 지난 9월 칸쿤 각료회의가 합의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다소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WTO일반이사회까지 별다른 진전 없이 소강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2월15일 이전에 개최될 WTO 일반이사회의 회의 진행계획이나 의제가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분야별 핵심쟁점에 대한 논의보다는 향후 협상일정과 같은 절차적인 문제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여부가 관건

정부로서는 제네바에서 계속될 수석대표회의 등의 논의동향을 보가며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등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우리나라가 농업분야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느냐, 못하느냐 말들이 많다.

하지만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는 문제는 세부원칙 협상이 끝나고 각

회원국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를 검증하는 과정에 논의될 사항이란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

현재의 국제사회 분위기를 볼 때, 우리나라의 개발도상국 지위유지가 불리한 것은 사실이나, 정부로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이다.

박상기 전문위원 : 쌀 재협상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혀 달라.

허상만 장관 : 내년에 있을 쌀 재협상은 WTO농업협정의 기본원칙인 포괄적 관세화에 대한 '한시적 예외조치'의 시한만료에 따른 후속협상이다. DDA협상의 관세감축 수준과 저율관세 수입물량(TRQ) 증량규정은 쌀 재협상시 이해 득실분석과 대안선택의 기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난번 DDA협상이 결렬됨으로써 앞으로 쌀 재협상이전까지 세부 원칙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객관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협상에 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정부는 쌀 관세화 유예라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세부원칙 협상동향을 감안해 정밀한 영향 분석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입장과 전략을 확정해 범정부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쌀 관세화 유예 원칙 입장에서 협상 진행

또한 개방폭 확대에 대비해 국내외 가격차 축소 등 쌀 산업의 구조개편 촉진하고, 농가소득 안정장치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

박상기 전문위원 : 현재 중단된 새만금 간척사업 문제 해결을 위해 총리실 산하에 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농림부 입장은 무엇인가.

허상만 장관 : 새만금 사업에 대해 86년부터 91년까지 충분히 연구 검토

했고, 그 결과에 의해 개발을 시작했다.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는 환경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환경단체 등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재검토하기 시작했는데, 재검토 결과는 국토계획 차원에서 새만금을 막아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지금 우리는 겨우 쌀을 자급자족하고 있는데, 농지를 도로나 산업용지 등으로 변경해 해마다 1만7,000ha가 줄어들고 있다. 새만금은 겨우 2만8,000ha으로, 큰 면적이 아니다.

실질적인 우량농지 가능성이 있는 새만금 같은 경우는 개발하는 과정에서 환경문제를 검토하면서 개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새만금 토지이용 쉽게 결정할 문제 아니다”

일단 막고 내부의 토지이용계획은 99년~2000년 사이에 결정했듯이 순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지금 성급하게 그곳에 바다도시를 건설하자거나 산업단지·연구 단지를 조성자하고 하는 것은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박상기 전문위원 : 농업개방화를 우리 농업·농민이 이겨내기 위해 무엇이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허상만 장관 : 농업·농민 문제에 대해 대부분의 정책입안자들, 그리고 도시민들이 중독중에 걸려 있는 것 같다. 농업을 중시하지 않으면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진정으로 2만 불시대로 진입하려면,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니까 수출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기저에는 농업이 안전적으로 뒷받침돼 줘야 가능한 것이다. 농산물을 외국에서 수입해 먹는다면 얼마나 불안하겠나. 지금은 우리가 어느 정도 쌀이라도 자급자족하고 있지만, 기타 작물을 거의 다 외국에서 사다먹는다는 것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

국가 재정이 어렵더라도 농업·농촌은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내년에 쌀 재협상이 끝나고, FTA는 한·칠레뿐만 아니라 한·중·일, 한-아세안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했던 멕시코에서도 다시 협상하자고 한다.

그 같이 농산물 개방 압력이 연속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영원히 질서를 못 잡을 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2003년 말까지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개방 압력 맞설 종합대책 연내 마련

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농민들만 참여해서는 안 된다. 정책자문을 하고 있는 15명의 전문가들이 계속 검토 중인데, 농민단체·시민단체들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왜냐하면 정부와 전문가들만 참여해 마련했는데, 앞으로 5년 후에 이 대책이 제대로 안 맞아 들어갈 때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다. 농민들이 직접 대책 수립과정에 참여해서 자신들에게 적절한 내용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이번 대책에 대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 자칫하면 UR 때보다 더 어렵고 더 큰 혼란이 올지도 모른다.

앞으로 정말 개방이 된 상태에서는 정부의 뒷받침 없이는 농업이 살아남기가 불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농업정책에 대해 잘 뒷받침하고 협조를 하고 있지만, 농산물 개방 압력이 거센 현시점에서는 앞으로 10년간 어느 정도 규모로 투융자를 하겠다는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박상기 전문위원 :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길은.

허상만 장관 : 크게 보면 우리 농업이 국제사회에서 경쟁을 하려면 농업이 기술 중심의 고품질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농

어업인에게는 소득안전망을 확충해 주고, 또 앞으로 농촌에는 농민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도시민들과 같이 공존하는 관광농업으로 가야 할 것이다.

박상기 전문위원 : 농촌의 소득구조도 많이 바뀔 것이다. 특수작물 등도 많이 해야 하는데 쌀농사만 해야 하는 절대농지로 묶여있는 곳이 많다. 시장은 개방하면서, 농민들보고 쌀농사만 지으라고 해 놓고 소득보장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 경쟁을 할 수 있겠나.

허상만 장관 : 농지문제는 신축성을 갖고 풀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실제로 보여줘야 한다. 쌀농사를 규모화해서 전업농으로 하고 있는 6ha이상 7만 호가 성공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과수, 원예 분야 11만 선도농가를 전진 배치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성공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전업 쌀·과수 재배농가 성공 모습 보여줘야

여기에 대해 정부가 인력을 육성해야 하고, 농민들에게 가는 농업정책자금은 어떤 형태로든 3% 이상은 유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3~5년이 고비인 것 같다. 판로개척도 충분히 돼 있고, 기술과 시설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자금만 뒷받침해 주면 얼마든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박상기 전문위원 : 농업인들에게 희망이 될만한 말씀을 한다면.

허상만 장관 :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농촌을 지켜준 농민들에게 고맙게 생각한다. 우선 사회가 혼란스러우니까 농업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경우라도 정책에서의 일관성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 농민들이 믿

고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다.

그리고 농촌사회에 농업에 대한 기술과 지식, 정보교류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이 자신감을 갖고 대응해 주고, 정부를 믿고 열심히 한다면 잘 될 것이다.

■ 에필로그

농업, 농촌 대책은 국가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

어쩌면 역대 농림부장관 가운데 지금의 허상만(許祥萬) 장관은 가장 어려운 시기의 농정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농업이 직면한 대내외적인 문제가 그만큼 복잡하고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대외적으로는 도하개발아젠다(DDA)의 농업협상, 내년의 쌀 시장 개방 재협상 등 농업통상`현안이 산적해 있다. 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한·일 FTA, 한·멕시코 FTA 등 우리 농업에 큰 영향을 끼칠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

한국농업은 ‘피도 눈물도 없는’ 신자유주의 무역의 비교우위론에 의해 좌절하고 말 것인가. 핸드폰, 반도체, 자동차를 더 수출하기 위해서는 농업과 농민의 희생은 불가피한 것인가.

반대로 그 파고를 넘어 살길을 찾을 것인가. 거센 시련을 극복하고 생명 산업으로서,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젓과 꿀이 흐르는 국토’를 가꿀 것인가.

허 장관은 지방 출신 농업학자로 농업과학연구소장, 순천대 총장을 역임했으며, 일본 구주대와 미국 미조리대에의 초청교수로 초빙돼 강의하기도 했다. 과제가 산적한 농업과 농촌행정의 수장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가이다. 또 그가 공저자로 참여한 <세계농촌을 가다>를 보면, 세계의

우수 농업현장을 답사하며, 우리 농업이 배울 점을 실감 있게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 농업과 농촌이 직면한 문제는 농림부의 농업행정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FTA나 DDA협상이 부처 사안이 아니라 국가 사안인듯이, 그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농민과 농촌에 대한 대책도 당연히 국가적 차원에서 고려되고 추진되어야 마땅하다. 역대정권에서 농업개혁, 농촌경제를 위해 그 많은 예산과 행정지원을 했는데도 왜 효과가 나지 않느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하는 많은 힐난이 일고 있다.

농민이 정부 말을 듣고 성공하는 사례를 보여주겠다.

그건 짧은 생각이다. 우리의 산업화가 농촌의 희생 위에서 가능했지 않았는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농촌의 젊은 인력을 값싼 산업노동력으로 유인하고, 주식인 쌀값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에 대한 강력한 통제로 도시 서민의 가계를 보호해 왔음을 제대로 인식해야 ‘우리가 농촌에 큰 빚을 지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도시인도 마찬가지이다. 서울 거리를 걷는 시민의 80% 이상이 한 대만 거슬러 올라가면 농촌이 고향인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도시에서 자기 집단의 조그만 권익을 이유로 머리띠를 두르고 거친 투쟁을 마다하지 않지만 ‘떠나온 고향’인 농촌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앞장서지는 않는다.

그만큼 농촌과 농민은 시대의 조류로부터도, 시민의 관심으로부터도 소외 당해 있다. 휘황한 네온에 싸인 오늘의 도시들이 한결같이 수십 년 동안 ‘만만한 젖어미’였던 농촌의 자양을 빨아먹고 성장했다. 제법 컸다고 젖어미를 몰라라 하는 건 도리가 아니다. 허 장관은 “앞으로 3-5년이 고비”라면서 “실제로 농민이 정부 말을 듣고 성공하는 사례를 보여주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의 말이 희망의 울림으로 농민들의 가슴속에 전해졌으면 싶다.

사람이 땅을 가꾸면, 땅은 사람에게 보답한다. 토지는 한국인의 오랜 믿음이고, 농업은 인간이 만든 산업중 가장 비공격적 산업이다. 사람의 생업 중 땅을 갈고 씨 뿌려 곡식을 거두는 모습만큼 평화스러운 노동형태가 있는가. 잡초 더미에 묻힌 논과 밭, 그리고 목축과 과수와 화훼가 황폐해진 땅은 죽은 땅이고, 죽은 땅에서는 인간의 품성도 사악해지기 마련이다. 농업은 단순히 수익성, 생산성으로만 평가할 수 없는 정서적이고 인격적인 생명산업이다.

한·칠레 FTA 체결관련 농업농촌중립대책 마련

(KBS-1R, 「강지원입니다」, 2003. 11. 12)

강지원 : 안녕하세요.

허상만 장관 : 네 안녕하세요.

강지원 : FTA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실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잘 통과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합니까?

허상만 장관 : 한·칠레 FTA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마련한 소위 농업인 지원 4대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FTA 이행 특별법은 앞으로 7년간 8천억 규모의 기금이 마련됩니다.

둘째로 부채경감 특별법은 정책자금 금리를 1.5%로 인하하고 상환기간을 5년 거치 15년으로 연장을 해줍니다.

셋째로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은 건강보험, 연금등 소위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여 복지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농촌지역 개발을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넷째로 농특세법은 원래 내년 6월로 종료됩니다만 정부는 앞으로 5년간 더 연장할 계획입니다. 농민들의 요구를 받아 들어서 국회에서는 10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충분한 지원 대책이 세워진 만

큼 정기국회에서 비준안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 농민들은 이러한 4가지 법안에 대하여 찬성하고 있나요?

허상만 장관 : 찬성하고 있습니다. 또 상호금융 자금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정부내에서는 협의가 끝났고요 국회논의과정에서 금리를 6.5%에서 3%로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의 요구를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강지원 : 농민들의 요구는 다 받아들여졌다고 지금 평가를 하시면 국회에서 통과가 되겠네요. 국회에서 반대하는 기류가 있는데 왜 그렇지요?

허상만 장관 : 농민들 입장을 의원님들이 생각해서 그런 것으로 봅니다. 4대 지원법이 통과가 되면은 의원님들도 국익차원에서 통과시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 어제 농업농촌 종합대책 발표 하셨지요? 주요 내용 지금 내용을 다 말씀하실 수 없고요 시간관계상 이 대책에 의하면 우리나라 농촌이 달라집니까?

허상만 장관 : 농촌이 달라지지요

강지원 :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허상만 장관 : 농업은 지속 가능한 첨단 생명산업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농촌을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은 영세소농인 위주의 농업구조가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규모화 된 전업농 중심으로 바뀌고 특히 환경 친화적인 고품질 농업을 육성합니다.

그리고 농외소득비중을 2013년에는 농가소득의 67%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선진국형 소득구조로 전환되는 것이지요. 결국에 농가 소득이 도시근로자의 소득 수준과 비슷해 질 것입니다.

또한 교육, 의료 등에 대한 농촌 복지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확충됩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 내 자본과 산업유치가 활성화 될 것이고 도농간 균형발전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지원 : 앞에 장관께서 말씀하시기를 농민들이 다들 좋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나온 농민단체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은데요 알고 계십니까?

허상만 장관 : 알고 있습니다.

강지원 : 그런데 농민들이 다 동의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듣기에는 전업농 중심의 지원일 뿐이고 영세소농을 탈농시키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가 많은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 이론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많은 농민단체들을 어떻게 설득하시려고 하지요.

허상만 장관 : 지금 65세에서 75세 되신 분들이 앞으로 10년 후면 자연적으로 탈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보험이나, 연금등 소위 농촌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농촌에 살고 계시지만 도시 근로자 못지않은 그런 보험형태의, 연금형태의 복지수준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지 정책이 같이 가기 때문에 염려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지원 : 지금 또 나온 이야기로는 우루과이 이후 10년 아닙니까? 그 동안에 62조원인가를 투자했다는 것인데요. 부채는 더욱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하도 그 동안의 정부정책에 대하여 불신들이 많아서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허상만 장관 : 그런 말씀을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투융자계획에는 과거 10년간의 투자에 대한 경험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농업농촌을 회생시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포함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내에서도 이미 재정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간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금년 12월까지의 국가 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게 되어있습니다. 예산확보도 문제가 없습니다. 정부는 과거 정책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투융자방식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강지원 : 어떻게요?

허상만 장관 : 앞으로 투융자는 보조중심으로 가고요 농가에 직접 소득보조가 되도록 하겠고 융자는 적습니다. 융자는 27%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원대상자의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를 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됩니다.

돈을 함부로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당면한 농가의 부채 상환문제를 저희가 생각 안한 것은 아니지만은 금년 중에 부채경감 특별법을 개정해서 금리를 인하하고 상환기간을 장기적으로 연장을 해주고요, 농가부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이런 지적도 합니다. 구조조정 투자가 필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허상만 장관 : 구조조정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10년 동안 우리목표가 우리농촌이 경쟁력이 있는 구조로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업체제를 일단 강화하고요.

그 다음으로 농가소득향상과 경영안정을 이루도록 해야 하고, 또 농촌 지역개발과 삶의 질 향상 이 세 가지 목표를 두고 구조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이 구조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말씀 올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미 전문가들, 대학교수, 실제농업을 하는 15인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금년 8월부터서는 구조조정에 대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는 결정해서 농민과 국민들에게 알리고 추진해 가겠습니다.

강지원 : 농촌에서 환영 할까요?

허상만 장관 : 지금 정부에서 세우는 계획은 현장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농민과 함께 하는 개혁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환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지원 : 예산은 충분히 확보할 자신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산이라는 것은 매년 따로따로 산정 하는 것인데 어떻게 10년씩 확실하게 하실 수 있으신지요

허상만 장관 : 앞으로 5년간은 어제 발표한대로 51조원이 확실하게 투자 될 것입니다.

강지원 : 2008년까지요?

허상만 장관 : 네. 이 돈은 정부에서 2008년까지 정부 재정운용계획을 금년 12월까지 수립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정부재정계획에 반영하라는 지시를

했기 때문에 5년간 예산은 확실히 된 것이고요.

그 다음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에는 정부 재정이 늘어나므로 자연적으로 우리 목표인 정부 재정의 10%수준씩 투자되어 후반기의 68조원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지원 : 하여튼 어제 나온 대책이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하겠는데요,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FTA법안 통과를 앞두고선 발표 하셨거든요.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법통과 시키기 위하여 한 것이 아닌가?

일찍 일찍 하지 않고 농촌이 이렇게 도탄에 빠지도록 나두었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느냐 하는 신랄한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허상만 장관 : 그렇게 정부정책이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이것은 10년 앞을 내다보는 계획이고요.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그룹과 농림부를 포함한 정부정책당국이 협의를 하여 발표된 것입니다.

FTA가 문제가 아니라 내년에 쌀 재협상, 또한 DDA협상 이후에 우리 농촌은 어떻게 될 것이냐에 초점을 두고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농업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전제하에서 만들어 진 것이고요. 다행히 금년 12월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부재정운용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포함되기 위해서는 지금 대통령께서 특히 농업인의 날이기 때문에 대통령님의 의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후속대책을 충분히 세우겠습니다.

강지원 : 네 알겠습니다. 후속대책을 잘 세우셔서 부디 성공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아침 말씀 감사합니다.

허상만 장관 : 예. 감사합니다.

강지원 : 지금까지 허상만 농림부 장관이었습니다.

개방화시대 농촌의 생존전략
(KBS-1R, 『시사플러스』, 2004. 2. 5)

송지현 : 국회의 한·칠레 FTA, 자유무역협정 비준이 무산되면서, 그 동안 농정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았죠. 게다가 쌀 시장을 개방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정책이 별반 달라진 것이 없어서 불만이 쌓여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다 보니 농정을 정권안정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고요. 개방화시대 농촌의 생존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사회 곳곳에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사플러스』에서도 네 차례에 걸쳐서 개방화시대 농촌의 생존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시간으로 정부의 농업정책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플러스』 '집중인터뷰', 우리나라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허상만 농림부장관을 초대했습니다.

허상만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장관 취임 이후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참 많이 겪으셨는데요. 지난 월요일부터 사흘에 걸쳐 저희 『시사플러스』가 우리 농업의 가능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 봤습니다. 결론적인 질문을 먼저 드려야 할 텐데요. 허 장관께서는 우리 농업이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허상만 장관 :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시대가 크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변화에 맞춰서 농업구조도 변해야 하고, 변화에 대한 철저한 준

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농촌·농업 현장에는 경쟁력을 갖추려는 농업인들의 노력이 있습니다. 또 국민들도 우리 농업을 지키고자 하는 변함없는 성원이 있습니다. 정부도 우리 농업 경쟁력을 위해서 농업·농촌 10년 대책을 세워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농업인들께서 국민이 원하는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해서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다면, 우리 농업은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지현 : 지난 19일에 정부가 발표한 '119조원의 투자계획'이 결국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허상만 장관 : 금년부터 2013년까지 농업·농촌 투융자액은 중앙정부 지원분만 119조원입니다. 이 돈은 먼저 우리 농업의 체질을 강화하는데 쓰이고요,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경영을 안정시키고, 더욱이 농촌 지역개발과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적으로 지원될 것입니다.

우선 우리 농업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업농 중심의 농업구조로 재편을 하고, 쌀·과수·채소·축산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대신에 전업농이 되기 어려운 농가는 친환경 고품질 농업을 해서 농가소득을 안정화시키고, 전체적으로 농촌사회가 유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농가소득 하락과 경영불안에 대비해서 직접지불제를 2003년의 7% 수준에서 2008년까지는 22% 정도로 높일 계획입니다. 2013년에는 28%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보험 범위도 확대를 하고, 크게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농민연금, 건강보험 농촌형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 이번 119조 계획이 중점적으로 투자될 것입니다.

송지현 : 그런데 현재 국회 내의 농촌출신 의원들이 119조원의 지원금이 향후 3년 안에 지원돼야 농촌이 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허상만 장관 : 정부도 농업인들의 우려와 농민단체의 요구를 고려해서 원래 FTA기금 규모가 8천억 원이었던 것을 국회 조정과정에서 1조 2천억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1차년도인 금년에 5천억 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국회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금년 중에 5천억을 쓸 방법이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의 농업투자 지원은 가능성이 있는 곳에, 특히 생산자나 지방자치단체, 지방대학이 공동으로 지역의 농업을 살리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지역부터 우선 지원할 것입니다.

돈을 못쓰고 남기는 한이 있더라도 쉽게 쓰지 않고 1조 2천억 원으로 앞으로 7년 동안 우리 과수산업을 선진국형 과수산업으로 육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책무가 정부에도, 또한 생산자 모두에게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송지현 : 허 장관께서는 참여정부의 농정방향을 전문화라고 하셨는데요. 조금 전에도 전업농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것은 대농을 육성하는 계획과 같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허상만 장관 : 전문화는 규모화와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농업의 전문화는 기술을 혁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예화된 농업 인력을 육성해야 되고, 고품질의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고 공급체계를 갖추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전문화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런 분야의 전문화가 결국 품질의 고급화, 환경적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갖추어야 할 기본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송지현 : 규모화한다고 해도 중국이나 미국 같은 쌀 대국과 가격에서 경쟁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허상만 장관 : 규모화와 전업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이의가 없는 것 같으나, 규모화만으로 경쟁력이 확보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고품질의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고, 기술·수출농업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충함으로써 경쟁력 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정부에서 직불·연금·보험 형태로 해서 농촌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 책임 하에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지현 : 상당수의 소농들이 자칫 정부계획대로 가다보면 퇴출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고품질농업으로 간다든지, 그밖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허상만 장관 : 이번 10년 동안 농업·농촌대책에는 중소농에 대한 대책도 이미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소농은 대규모 농가가 할 수 있는 농업에 대해서 약간 소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농이 할 수 없는 고품질 친환경농업을 하도록 유도하고, 농외소득원을 개발하는데 지원도 하고, 다양한 직불제를 통해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자연적으로 고령농으로 탈락할 농가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경영이양직불제를 8년 동안 매달 24만원씩 연금방식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실정에 맞는 기초생활보장제도도 확충을 하고, 특히 교육·의

료 인프라를 확충해서 도시와 농촌이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송지현 : 그리고 농협문제를 여쭙 보겠습니다. 농업개혁이 화두에 오를 때마다 함께 거론이 되는데, 본래 기능인 경제사업보다 신용사업에 치중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뭔가 가시적인 개혁방안이 있으신지요?

허상만 장관 : 가시적인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기본방향은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야겠죠. 그래서 일선 조합은 규모화를 통한 산지유통을 중심으로 해서 개편을 해야 되고, 조합원에게 실익을 주는 조직으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또한 농협중앙회는 경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합사업의 지원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기본방향에서 그 동안 농민단체 등이 참여한 「농업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개혁안을 마련하고, 이 개혁안이 조만간 정부안으로써 국회에 제출될 것입니다.

송지현 : 신용사업이 축소되거나, 분리할 계획도 있으신가요?

허상만 장관 : 3년 내 분리하라는 농민단체의 의견도 있습니다. 또 농협에서는 조건이 성숙될 때 하겠다는 의견도 있고요.

그러나 신·경 분리는 학자들 얘기를 들어봐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1년 동안 연구를 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1년 후면 신·경 분리에 대한 가부가 결정이 되고, 분리한다면 시기는 언제쯤 할 것인가 결

정을 해서 정부안을 확정을 하고 17대 국회 초기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송지현 : 농협이 나아갈 방향은 올 연말께 확정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장관께서는 '우리 농업이 살 길은 수출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수출할 만한 경쟁력을 가진 농산물로 뭘 생각하세요?

허상만 장관 : 우리 농업이 살 길은 수출만이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국내 소비만으로는 소득에 한계가 있으니 수출을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수출을 농업·농촌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보고 대책을 이미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 품목은 채소·김치·과실·화훼·인삼·밤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김치·파프리카·국화 등이 유망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05년에 한·일 FTA협정이 체결될 경우에 대비해서 일본 농산물 시장에서 우리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야 될 것입니다. 특히 신선 채소는 품질과 안전성으로 일본시장을 점유해야 할 것으로 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지현 : 경쟁력을 갖추자는 뜻에서 하시는 일로 알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생산이력제, 유기농업이 아닐까 싶어요.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허상만 장관 : 우리 농산물의 문제는 소비자의 신뢰·만족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출을 해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고품질과 환경적인 안전성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장에서 식탁까지’ 농식품의 안전성이 담보 돼야 소비자가 신뢰하고 우리 농산물을 아끼고 소비해 줄 것으로 보고 착실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생산이력제는 물론이고 원산지 표시,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등을 통해서 환경적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지현 : 그리고 정부입장에서 금년 말까지 쌀 협상을 완료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1월 정부가 WTO 사무국에 협상개시 통보를 하셨는데,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닌지, 쌀 협상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허상만 장관 : 쌀재협상은 10년 전 WTO협정서에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 20일 협상개시를 통보한 이유는 관세화의 예외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국들이 동의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막판에 시한에 몰리는 경우를 생각을 해서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협상개시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다만, 관세화 유예를 전제로 한 조치를 이미 했기 때문에 상대국의 반응도 보고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모든 과정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지현 : 그리고 FTA 관련해서 일부 농민단체에서 추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고,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허상만 장관 : 투융자계획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2004년·2005년의 투융자예산을 각각 3천억 원을 증액했고, FTA기금을 7년간 8천억 원에서 1조 2천억 원으로 4천억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농어민 부채경감을 위해서 상호금융대체자금, 농업금융개선자금의 금리를 6.5%에서 3%로 인하했습니다. 금년부터 지원되는 신규 정부의 정책자금도 금리를 4%에서 3%로 인하를 했습니다.

특히 농특세가 금년에 종료가 되는데 내년부터 앞으로 10년간 연장을 해서 매년 2조원, 10년간 20조원이 농업·농촌을 위해서 농특세가 쓰여질 것입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지현 : 지금 말씀 중에 쪽 보면, 결국 우리 농산물의 품질과 유통의 신뢰 확보, 그것이 결국 가격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농촌을 살리는 길이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정에 대한 농민들의 신뢰, 정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앞으로 농정을 어떻게 펼쳐 나가실 것인지 농민들에게 힘이 될만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만 장관 : 우리는 지난 11년 동안 우리 농정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충분히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반성을 하고 그 평가를 기초로 해서 2008년까지 5년 동안 정부의 재정운용계획에 119조 원 중에서 51조원을 반영해 놓고, 이 돈이 2004년 금년에 어떻게 쓰여 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농정의 신뢰문제는 결판이 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을 '새로운 농정의 원년'으로 삼고, 정부에서 펼치는 사업결과와 예산집행은 반드시 생산자, 지방자치단체, 지방에 있는 농과대학의 교수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결정 속에서 정부예산이 지원이 되고 정부는

여기에 대한 뒷받침을 하고, 이런 형태로 가면서 1년 동안 우리 농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지현 : 허 장관님 책임농정을 통해서 정말 떠나는 농촌이 아니고 이제는 돌아가는 농촌, 그리고 즐거운 농업이 되도록 애써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허상만 장관 : 감사합니다.

한·칠레 FTA 비준 관련 농업중합대책 마련

(SBS-R, 「정진홍의 전망대」, 2004. 2. 6)

정진홍 : 다음 주 월요일 그 동안 미뤄 왔던 한·칠레 FTA 비준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서 이번에도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정부의 FTA대책, 과연 무엇인지 허상만 농림부 장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상만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허상만 장관 : 예. 안녕하십니까?

정진홍 : 오는 9일 국회에서 한·칠레간 FTA 비준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농림부 입장은 현재 어떻습니까?

허상만 장관 :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따라서 해외시장 개척이 필요한 우리나라로서는 중요한 통상정책 수단인 FTA에 적극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칠레와 FTA를 막는다고 개방을 외면할 수도 없고요. 오히려 이번 FTA를 통해서 우리 농업체질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진홍 : 결국 한·칠레 FTA 비준을 일단 바라는 입장인데, 이미 FTA

특별지원안, 또 10년간 농업·농촌대책안 등 농가지원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단체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는데, 그 배경이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허상만 장관 : 기본적으로 농업인들은 FTA·DDA·쌀재협상등 개방 확대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칠레가 농업대국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우리 농업을 파탄시킬 것처럼 인식된 것도 불안의 한 원인인 것 같습니다.

실제 칠레의 농업경쟁력은 2002년에 신선농산물의 수출규모가 15억 6천만 불입니다. 세계 농산물 수출액의 약 0.6%에서 0.7%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신선농산물 수출액이 2002년에 5억불, 그러니까 우리보다 10억불이 많습습니다.

칠레가 경쟁력을 갖춘 품목은 사과·배·포도등 입니다. 그러나 사과와 배는 이미 협정대상에서 제외를 했고, 포도는 계절관세로 들어오게 해서 나름대로 보호 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정부의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농정에 대한 불신 때문에 농업인들이 불안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 1년 동안 원칙과 투명한 기준에 의해서 농업정책을 펼쳐 나감으로써 우리 농정이 농업인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진홍 : 이미 농가 지원책을 정부가 발표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상 농민단체에서 내심 원하는 것은 FTA 후속대책들에 대해서 ‘보완대책이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후속책·보완대책 어떤 것들이 더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허상만 장관 : 현재 농업인들과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어떻게 대책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융자계획을 조정해서 2004년과 2005년의 투융자를 각각 3천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FTA기금이 원래 7년간 8천억 원이었습니다만, 1조 2천억 원으로 4천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또 농업인 부채경감을 위해서 6조 8천억 원의 상호금융자금도 2조 5천억 원 정도 되는 농업경영개선자금도 6.5%의 금리를 3%로 인하했습니다. 또 2004년부터 지원되는 모든 신규 정책자금의 금리를 3%로 인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4년에 종료되는 농특세를 앞으로 10년간 연장을 해서 농업지원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이 돈은 매년 2조원 정도 걸리면 약 20조가 10년 동안 농업·농촌을 위해서 쓰일 것입니다.

이 외에도 국회의장께서 말씀이 있으셔서 FTA로 과수산업에 쓰일 원래 돈이 금년에 천 6백 원이었습니다만, 이 돈을 5천억 원으로 증액하는 문제,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의 이자감면 문제도 국회와 협조해서 수용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홍 : 방금 말씀하신 FTA 지원기금의 연내 상향조정 문제, 이게 그냥 단순 검토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허상만 장관 : 의장님께서 말씀도 계시고 의원님들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정진홍 : 그렇게 할 방침이라면 어느 정도 상향조정이 어느 정도 선까지 가능하다고 내부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허상만 장관 : 그러니까 그 동안의 농업인들의 요구, 또 의원님들의 요구를 거의 수용을 했습니다만, 지금 당장 거론되고 있는 것이 천 6백억 원을 5천억 원이니까, 3천 4백억 원이 더 증가되는 것입니다.

상호금융은 실제 금리가 6.5%인데 3%로 낮춘다면 예금금리보다 더 낮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있어서 상환하지 않을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를 상환한 농가에 한해서 3%씩 인하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 조건을 삭제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정진홍 : 농민관련 단체장들을 직접 최근에 만나셨습니까?

허상만 장관 : 예.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정진홍 : 방금 말씀하신 이러한 조건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좀 의중을 떠 보셨는지요?

허상만 장관 : 그렇습니다.

정진홍 : 그러면 이런 조건들로 이제 상향조정이 된다면 이번에 더 이상 FTA 비준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허상만 장관 : 기본적으로 찬성과 반대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농업인 대부분이 반대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시다만 많은 농업인은 FTA가 대세라서 먼저 대책을 수립하고 수용하자는 입장입니다.

농림부도 먼저 농정협의회 등을 통해서 농민단체와 함께 119조 농업·농촌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린 농정을 펼쳐나갈 것이고요. 지난 1월 8일 비준이 무산된 이후에도 농민단체, 국회, 언론계 등 각계각층을 직접 만나서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농업인의 입장에서 농정을 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홍 : 지금 농민단체가 요구하는 사항중 가장 곤혹스러운 것이 뭡니까?

허상만 장관 : 일부 농민단체에서 농정을 불신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FTA나 DDA 자체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국가 전체적인 국익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니깐, 이 점에 차이가 있는 것이 곤혹스러운 것입니다.

정진홍 : 쌀시장 개방문제도 여전히 논란 아닙니까? 농민단체는 ‘이번 협상에서 쌀 관세화 유예를 반드시 관철하자’, 또 ‘유예조치에 따른 저율관세 수입량도 국내소비량의 5%를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책이 나오고 있습니까?

허상만 장관 : 그렇습니다. 관세화 유예를 할 경우는 쌀 수입 예상량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수입쌀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농업인들이 관세화 유예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지난 1월 20일 WTO에 쌀 협상 개시의사를 통보를 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관세화 유예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이런 전제를 가지고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정부는 농업인들의 바램대로 관세화 유예와 함께 의무수입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정진홍 : 그 수입량을 농민단체는 ‘국내 소비량의 5%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 이게 마지노선이다’ 주장하는데, 이것은 지켜질 것 같습니까?

허상만 장관 : 이것은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선택대안의 이해득실을 면밀히 분석해서 전체 DDA 농업협상의 동향과 상대국의 요구수준을 고려하면서, 농업인, 전문가, 국회와 충

분히 협의를 해서 국민적 공감대하에서 단계별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모든 과정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진홍 : 광우병, 조류독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상 특히 조류독감 피해농가 아주 심각한데요. 먼저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문제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허상만 장관 : 지난 번 두 번에 걸쳐 미국에서 (대표단을 보내) 미국은 자국내 광우병 상황과 관련대책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이 문제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 충분하고 과학적인 안전 확보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미국 광우병 때문에 우리 국내 쇠고기 소비가, 특히 한우까지도 소비가 위축돼서 소비를 살리는 문제가 시급하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는 한, 수입금지는 계속될 것입니다.

정진홍 :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조류독감 피해농가 지원대책, 이거 아주 현실적으로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것은 어떤 구체적인 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허상만 장관 : 신문에서 조류독감 원인이 철새라는 보도가 있는데,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질병관리센터에서 결과가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가금 인플루엔자는 베트남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와는 유전자형 자체가 다른 것으로 밝혀져서 인체에는 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작년에는 15곳에서 발생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들어와서는 두 군데에서만 발생했습니다. 다소 안정이 돼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방역을 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이 기회를 빌어 지방자치단체장님들한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한 닭·오리는 시가 이상으로 정부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안정비용, 경영개선자금, 교육비, 보험·연금, 각종 세금연기까지도 정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지 값이 떨어져서 큰 문제인데요. 그래서 닭·오리 수매를 6백 70만수 했는데,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안정을 위해서 언론에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진홍 : 사실 이게 조류독감 살처분한 피해농가만이 아니라, 닭을 지금 여전히 내놓고 있지만 완전히 헐값이 되어 버린 것이 아닙니까? 이 피해가 사실 더 큰데 말씀이죠.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시고, 특히 닭·오리 많이 드셔야겠는데 말씀이죠. 캠페인도, 물론 언론도 노력하겠습니다만, 농림부에서도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장관님께서서는 교수 출신 아니십니까? 예전에 교수로 계셨을 때 보셨던 농정하고 또 장관이 되신 이후에 우리 농정을 보시면서 어떤 차이가 느껴지셨습니까?

허상만 장관 : 제가 교수로 있었을 때는 우리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알았습니다만, 농업·농촌의 실상과 농민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장관 취임 후 6개월 동안에 우리 농촌의 실상을 완전히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실상을 파악을 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특히 참여정부의 2008년까지 5년 동안은 농민단체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지방에 있는 농과대학의 교수님들과 같이 농업정책을 입안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도 공동으로 책임지는 그런 형태로 농정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니다.

정진홍 : 허상만 장관께서 장관 취임하신 이후에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 동안 참 일도 많았고 특히 한·칠레간 FTA비준 잘 처리 되어서 어깨를 펴실 날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상만 장관 : 고맙습니다.

개방시대, 우리 농업 미래는

(KBS-1TV, 『일요진단』, 2004. 2. 8)

박선규 기자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농촌에 짙은 위기의식이 감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힘겨운 현실에 FTA가 완전히 농업의 숨통을 끊어 놓을 것이라는 농민들의 안타까운 절규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개되고 있는 상황만 본다면 농산물 시장 개방을 결정했던 10년 전의 우루과이라운드 때보다 훨씬 심각해 보입니다. 답답한 것은 지난 10년 동안 정권이 바뀌고 100조원 가까운 농촌 살리기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왜 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책이 문제인지 농업현장이 문제인지 아니면 양자 사이에 오해가 문제인지 한번 심도 있게 원인을 짚어보면서 개방시대를 맞은 우리 농업의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출연해 주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허상만 농림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성진근 충북대 농대 교수도 함께 하셨습니다.

허상만 장관 : 안녕하세요.

박선규 기자 : 두 분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허 장관님, 이제 장관으로 일하신지 6개월쯤 되신 건가요?

허상만 장관 : 그렇습니다.

박선규 기자 : 어떠신가요?

허상만 장관 : 제가 밖에서 봤던 농정하고 안에 들어와서 봤던 농정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실감 하고 있습니다.

박선규 기자 : 실감하신다는 건 좀 어렵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

허상만 장관 : 그 동안 농정도 나름대로 성공을 했겠지만 새로운 도전, 시작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선규 기자 : 성 교수님 지금 우리 경우에 식량자급도가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성진근 교수 : 식량이라는 개념이 많이 변했어요. 종래에는 양곡을 중심으로 식량을 얘기했죠. 양곡으로 보면 한 30%, 쌀을 제외하면 거의 5%밖에 자급이 안 됩니다.

박선규 기자 : 95%를 수입했다?

성진근 교수 : 그런데 그 동안 식량의 개념이 바뀌어서 곡류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고기도 먹고, 열량으로 볼 때는 50% 정도, 우리 식탁의 절반 정도는 자급품이고 반은 수입해 먹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선규 기자 : 저희가 오늘 프로그램에 모시기 위해서 알아보니까 성 교수님께서서는 농민들에게 인기가 꽤 많이 있는데요? 그런 입장에서 요즘에 농민들의 집회를 보시면 남다른 느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성진근 교수 : 안타까운 일인데 10년 전에 있었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도 제가 참여했습니다. 많은 정책이 있고 그랬는데 갈수록 더 악화되는 것 같아요.

아마 현직 대학교수 중에서 농민들을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 중의 하나일 겁니다. 그 분들이 학교로 오기도 하고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하는 질문 절반은 뭐 심을까요?

그게 더 심해졌어요. 오죽하면 저렇게 나가겠느냐고 그런 생각도 하지만 저는 용기가 없어서 같이 나가지도 못하고 방에 앉아서 책이나 보고 그렇습니다.

박선규 기자 : 장관께서도 입각하시기 전에 물론 대학 교수로 연구 활동 많이 하셨고 또 경실련에서 시민운동도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역시 그런 입장에서 농민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허상만 장관 : 저는 장관이지만 농민들의 목소리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목소리에 근거해서 앞으로 우리 농업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박선규 기자 : 두 분 모두 농민들이 지금 주장하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는 일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장관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실 텐데 지금 현재 통계를 살펴봐주었다면 좋겠어요. 우리가 농산물 수출을 어느 정도나 하고 수입을 얼마나 하는지요?

허상만 장관 : 작년에 수출이 16억불 정도고요, 수입이 한 98억불 정도입

니다.

박선규 기자 : 그러면 80억 달러 적자상태, 농산물만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군요. 성 교수님, 지금 우리는 80억 달러 정도의 적자상태인데 아마 개방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인지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을 한 해 우리가 농산물과 관련해서 가져야 하는 외국과의 협상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주시겠습니까?

성진근 교수 : 국회비준안을 남겨두고 있는 자유무역, FTA라고 그러합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멕시코 칸쿤에서 세부 원칙 합의에 실패한 WTO/DDA협상(도하개발아젠다)이라는 게 있고요. 지난번 2004년까지 유예됐던 쌀을 2004년 말까지 하기로 협상 때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쌀에 대한 재협상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협상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박선규 기자 : 금년 안에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네요.

성진근 교수 : FTA는 앞으로도 계속돼야 될 일이고 쌀 재협상은 명시되어 있고 DDA협상도 원래는 2004년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2, 3년 더 늦어지거나 그렇게 될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규 기자 : 장관님, 지금 그런 개방시대를 맞는 정부 입장이 상당히 계획도 많으실 것 같은 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런 개방시대를 맞이 위해서?

허상만 장관 :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경제 질서는 WTO에 바탕을 두는

다자무역체제였습니다. 그런 것이 최근에 와서 2005년에는 세계 무역량의 51% 정도가 양자무역인 FTA 체제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WTO 체제가 상당히 침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DDA협상이 금년에 타결될 것인지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간다면 앞으로 FTA체제가 더 확산되지 않겠느냐, 당장 지금 세계 273개의 FTA가 체결이 되어 있는데 190개 정도가 발동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역의존도가 65% 이상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2002년 우리나라의 무역흑자를 보니까 103억불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51억불이 그러니까 우리 무역흑자의 50억불 정도가 중남미 국가를 통해서 돈을 벌어들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FTA는 어쩔 수 없는 세계적인 대세라고 보고 여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선규 기자 : FTA 대세론을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 아까 제가 여쭙았던 질문 가운데는 가령 우루과이라운드에서 10년 전에 10년 유예했던 쌀 시장 문제를 우리가 올해 풀어야 될 것 아닙니까? FTA문제도 있지만.....

그런 우루과이라운드의 쌀 협상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여쭙보겠습니다.

허상만 장관 : 우리는 오래 전부터 여기에 준비해 왔습니다마는 금년 1월 20일 WTO사무국에 쌀 재협상 관세화를 유예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이해당사국들이 우리에게 협상을 제안해 올 것이고 제안이 끝나는 4월 20일 이후 협상을 타결 짓고 연내에 WTO에 보고를 해

야 되는 이런 순서를 밟을 것입니다.

박선규 기자 : FTA 못지않게 쌀 시장 개방문제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거기에도 전력을 기울여야 되는 상태고 정부에서는 준비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지금 농민 아닌 분들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FTA하고 DDA가 있는데 교수님 간단하게 차이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진근 교수 : 다자간협상체제가 DDA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회원들이 모여서 똑같은 규칙을 가지고 국경 장벽을 낮추고 하는 것을 다자간이 합의한 체제거든요. 그것으로 해서 자유무역을 해 보자, 세계 무역기구하에서 이루어지는 DDA 협상입니다.

장관님 말씀 계셨지만 FTA는 자유무역 지대입니다. 그러니까 DDA협상은 관세가 이렇게 쪽 있으면 서서히 줄 여가는 방식인데 FTA는 그 지역 내에서 지역경제블럭을 말합니다.

지역 내에서 무관세로 가자. 바로 무관세로 가자,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FTA 가지고 자꾸 저러시는 것도 무관세로 되어 버리기 때문이거든요. 50% 관세가 제로 퍼센트로 간다. 그러니까 DDA 협상은 관세가 서서히 줄어 가니까 그 충격이 서서히 나타나는데 FTA는 바로 나타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박선규 기자 :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민들이…….

성진근 교수 : 잠깐만 장관님 말씀 계셨는데 조금 보완 하면 DDA 협상을 가지고 자유무역으로 가자는 그런 구도가 미국과 EU가 중심이 돼서 이게 개도국의 반대가 있고 저항이 있어서 지지부진하니까 갑자기 서운해 하는

것 같아요

서서히 가는 것보다 바로 지역별로 해보자, EU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EU가 지역공동체죠. 미국이 북미공동체, 남미공동체 합해서 미주공동체 만들려고 하거든요. EU는 아프리카를 붙이려고 하거든요.

동남아 국가연합은 미국과 붙여서 그런다는 말이죠. 그건 무관세라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계 경제의 절반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으니깐 우리가 너무 급하게 충격 오는 거 아닌가 해서 세계의 고아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거에는 장관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허상만 장관 : 기본적으로 FTA는 관세철폐 상태에서 시작한다는 원칙은 맞습니다. 칠레와 FTA를 체결할 때는 쌀, 사과, 배는 이미 제외시켰습니다만.

박선규 기자 : 제외 품목에 들어 있다는 말씀이죠?

허상만 장관 : 문제가 되는 것이 포도와 키위입니다. 포도의 경우 노지 포도는 별문제가 안 되고 시설 포도가 문제가 되는데 이 시설 포도가 나오는 시기 인 11월에서 4월까지 사이에는 관세를 두고 물론 관세를 점점 낮춰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파, 고추, 마늘등 민감한 품목들 373개는 앞으로 15년 동안 점차적으로 관세를 낮춰 가자. 이렇게 양자국간에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선규 기자 : 그러니까 장관님 말씀은 칠레와의 FTA협정이 비준이 돼도 우리 농촌에 큰 피해는 없는 상태이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허상만 장관 : 아닙니다. 과실 부분에서 특히 포도나 키위 쪽에서는 피해

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피해액이 연구 기관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최고로 본 한양대학 연구소가 5,864억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건 신선 과실뿐만 아니라 소위 그 과실이 들어옴으로 해서 다른 과실을 적게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1차 피해죠, 가공식품까지 해서 10년 동안 6,000억 정도 피해가 있을 것으로 봤는데 정부에서는 7년 동안에 1조 2,000억원의 기금을 마련해서 대비를 하고 우리 과수 산업을 선진국형 고부가가치 기술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박선규 기자 :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신대로 가장 큰 피해를 예상한 기관이 5,800억 원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크지 않은 5,800억 정도 최대로 잡았을 때, 그 피해에 농민들이 저렇게 저항하는 이유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농민들은 왜 그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것일까요?

성진근 교수 : 장관님께서 예외 규정 말씀을 하셨는데 세계 FTA에서 한 경험들을 보면 예외 품목도 있고 10년간 유예도 줘서 관세 감축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최대한 협정 내용을 보면 많이 고려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농민들이 왜 저렇게 절망하느냐, 두 가지 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소비 대체효과가 큼니다. 과일에서 특히 나타나는데 또 옛날에 오렌지를 미국에서 수입할 때 국민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값싼 미국 오렌지가 왔는데 수박이 안 팔려요, 수박이. 주부들이 가서 수입 오렌지를 샀어요. 그리고 수박 살 거 안 산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소비 대체효과가 일어나니까 전 산업 분야에 갈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하나 있고, 기본적으로 자존심이 좀 상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존심. 농민들을 건드리면 안 되는데 장관님 말씀대로 6, 7,000억원, 8,000억 이렇게 피해가 나니까 1조 2,000억을 만들어서 살리겠다고 해줘도 꼭 얻어먹는

것 같잖아요.

얻어먹는 거 당연히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가령 지금 외교통상부나 일간지, 신문에서 나오는 소리 종합하면 자동차 관세가 5% 받았다고 다른 데서는 0%가 되고 우리 자동차가 안 팔린다, 핸드폰이 안 팔린다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자동차 산업은 한-칠레 협상이 되면 바로 자동차 공장은 5% 관세가 안 주고 가니까…….

박선규 기자 : 이익이 되는 것이죠.

성진근 교수 : 이익이 확실히 되는 게 보이는 거죠. 농민은 피해가 지금 나타나는 직접 피해 말고도 간접 피해가 보이는데 그렇다면 정부가 앉아서 그냥 할 게 아니라 이익 보는 데서 딱 빼서 손해 보는 것만 지원해 주고, 농민은 당연히 받는 것으로 만들어야지 데모하니까 더 주고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박선규 기자 : 장관님 생각 어떠세요?

허상만 장관 :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FTA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고 손해 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익 보는 사람 쪽에서 손해 보는 사람 쪽에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익 보는 쪽에서 농민들 쪽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보상해 주어야 하는 돈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박선규 기자 : 그런데 우리 지금 성 교수님 말씀은 그것이 당연하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마치 농민들에게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처럼 가는 부분에서 자존심이 상하고 있다, 하는 그 말씀이시거든요.

성진근 교수 : FTA 특별법을 보면 기금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 출연금과 정부 이외의 출연금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애매하게 하지 말고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이번에 통과시킬 때 이익 보는 산업에서 손해 보는 사람에게 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좀 해라, 그럼 농민들 기분이 좋을 것이 아니냐는 거죠. 5% 세금 물던 사람이 0%면 자동차 산업은 버는데, 농민은 손해를 보는데 보태 줘서 한 푼을 준다고 할 거 없잖아요. 그렇게 좀 하세요.

박선규 기자 : 중요한 말씀 같아요. 여기에서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장관님께서도 성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해 주셨는데 FTA비준이 늦어지면서 지금 칠레시장에서 우리 자동차 산업, 휴대폰 산업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을 어떤 분들은 정부가 필요 이상으로 FTA가 비준이 늦어지는데 대한 악영향을 과장하고 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성진근 교수 :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언론을 보면 우리가 무역의존도가 70% 남짓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FTA로 인해서 무역이 높아지면, 늘어나면 우리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70%가 FTA에서 1%만 무역이 창출이 되면 우리 경제가 0.7% 높아집니다, 농업 성장은 4%거든요. FTA로 인해서 10%가 준다고 하면 0.4%입니다.

또 농민들 아들, 딸들 전부다 취직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합니다. 그쪽 분야에. 우리 경제가 커져야 됩니다. FTA되는 게 좋죠. 단 이익 받는 거, 손해 보는 것이 분명한데 왜 다른 소리를 하느냐 그게 문제죠. 그래서 농민들한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FTA사태를 보면서 너무 대내 협상에서 약하다. 돈을 내서 이익 보는 사람들 간의 협상을 국회의원들이나 정치권이 잘 조정해서 농민들 실망감도 달래 주고 희망도 주고 수출 잘되면 우리한테 들어올 게 있다. 이게 희망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선규 기자 : 지금 여러 차례 비준이 미루어졌던 칠레와의 FTA 비준안이 오는 9일 통과될 것처럼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여러 차례 예정을 했다가 밀리고 밀리고 했는데 장관님, 어떠세요? 국회동의를 바라보는, 절차를 바라는 입장…….

허상만 장관 : 지난 12월 30일과 금년 1월 8일에는 동의를 이루어지지 않았고 2월 9일에 다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농민단체들이나 의원님들도 FTA를 통과하는 것이 국가 전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고, 국가에 이익이 된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성진근 교수님 말씀처럼 정부에서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 대책이 정부만 세울 것이 아니라 이익 보는 쪽에서도 세워야 되는데 이거 미루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게 농민들 입장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정부 역할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는 FTA 뿐만 아니라 쌀 재협상, DDA 협상을 대비해서 10년간 농업농촌 종합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대책마련에는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니까 119조의 투자계획도 만들었고 또 지금 FTA를 앞두고 당장 피해가 예상되는 과수산업이랄지 농가에 피해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FTA 특별지원법도 만들었습니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중요한 것이 농가부채의 경감입니다. 그래서 농가부채경감법을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금 이미 농가에 정책자금으로 나간 돈이 한 7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돈에 대해서 4%로 그 동안에 이자를 받던 것을 1.5%로 금리

를 낮추고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상환기간도 연장 했습니다.

다음에 그럼 앞으로 신규로 나가는 정책 자금은 어쩔 것이냐. 이 자금도 4%로 되어 있는 것을 1%로 낮췄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호금융 자금이 9,000 억원 정도 되는데 이게 금리가 6.5%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3%로 낮췄습니다. 사실상 상호금리를 예금금리보다 낮춘다는 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과 정부가 합의해서 이걸 낮췄고요. 연대보증을 많이 서 있습니다. 농민들이 서로 보증을 서서 빚을 짊어지고 있는 연대보증도 보증기간이 3년 거치 7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3년 치 17년으로 기간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입법으로 만들어진 삶의 질 개선 및 농어촌 지역개발 특별법을 만들어서 농촌의 복지랄지 농촌 개발에 대한 재정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게끔 입법화시켰고요.

특히 농특세가 문제가 안 됩니까? 금년 6월에 농특세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10년간 더 농특세를 거두어들이기로 했죠. 그래서 대개 계산해 보면 매년 2조 정도 들어오는데 한 20조가 더 들어옵니다. 이런 4대입법으로써 농촌농업에 대한 뒷받침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선규 기자 : 그러니까 이번에 FTA 비준안 처리하면서 그런 4대 입법이 같이 처리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허상만 장관 : 2월 9일 같이 결정됩니다.

박선규 기자 :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성 교수님, 정부의 종합대책…….

성진근 교수 : 생각할 수 있는 건 다 지금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채대책 해서 이자 낮춘다, 기간을 늦춘다, 그게 이제까지의 중심이었는데 부채는 그냥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희생하고 퇴출프로그램 제대로 갖

추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삶의 질을 높인다고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농촌의 다른 산업에 취업이 어려운 사람이 한 50대 이상으로 보면 그게 75%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이 35%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경영규모 때문에 퇴출시켜야겠는데 생활보호대상자를 만들려고 해도 우리나라 법에 그게 잘 안 돼요.

몇 가지 예를 들까요? 생활보호대상자 기준이 재산을 3,000만 원 이하인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농촌에 땅이 조금 있어도 3,000만원은 됩니다. 주택 15평 이하인 자, 도시 기준으로 해 봤거든요. 농촌에 15평이 안 되는 집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할 게 없어요. 법체계를 좀 제대로 맞게……. 여태까지 많이 했잖아요.

별 정책을 다 만들었는데 농민들은 피부에 안 닿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현실에 맞게 사느냐 죽느냐 막다른 골목에 왔는데 이제는 죽고 살기로 법을 뜯어고쳐보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선규 기자 : 구조조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들리는 데 아무래도 저희가 지난 10년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된 다음에 그때도 우리 농촌이 이러다가 죽을지 모르겠다 해서 정부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100조원 가까운 돈도 쏟아 부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그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요?

허상만 장관 : 정확히 92년부터 2002년까지 11년이더라고요. 11년 동안 정부 국고가 62조 투자됐습니다. 지방비까지 하면 82조가 됩니다. 라는 사실 상 부정적인 시각에서 말씀하신 분도 있지만 이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도 62조 정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농업이 기계화할 수 있는 그런 구조와 기반이 마련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생산도 우리 소비자 식탁 위에 언제든지 쌓이고 신선과일이고 축산이고 올려놓을 수 있는, 물론 수입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기반도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득으로 연결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그게 유통이랄지 정책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과거 11년 동안에 투자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새로운 농업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11년이었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성진근 교수 : 보태겠는데요. 그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제가 열을 받습니다. 농업투자를 안 하겠다는 사회적인 인식들이 있어요. 농업투자하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다, 왜 이렇게 퍼붓냐, 정부가 과대평가해서 애기 한 적도 있기는 있지만 돈 자루를 쥌 기획예산처나 이런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서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실적을 보면 결국 농업투자가 돼서 농업에 자본이 모였습니다. 농업생산요소라는 것이 토지, 자본, 노동 아닙니까? 우리가 토지 값이 비싸고 노동비가 비싸니까 자본으로 토지를 대체해야 되겠죠? 자본시장에서는 농업의 수익률이 낮으니까 민간자본 안 들어가니까 정부가 대줘야죠.

그래서 그 동안 투자해서 자본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농업이 성장을 쫓았습니다, 2% 이상……. 그런데 결과 어떻게 됐느냐, 장관님 말씀 그대로인데 생산이 많이 되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농사소득에서 손해를 봤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면서 소비자 후생은 증가했습니다. 물가가 싸져서.

박선규 기자 : 혜택이 소비자한테는 가고 농민한테는 안 갔군요.

성진근 교수 : 소비자한테 간 거죠. 농민한테 안 갔죠. 대신 자본으로 바뀌었으니까 기반이 만들어졌습니다. IMF 때 생각해 봅시다. 인도네시아는 똑같이 IMF 위기를 당했는데 쌀 사재기 때문에 나라 경제가 엉망이 됐어요.

우리는 쌀도 충분하고 먹을 것이 충분하니까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투자를 안 했으면 그렇게 됐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자께서 이 겨울에 채소를 먹지 않습니까?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그때 투자한 거 때문입니다. 온 국민이 채소를 먹고 소비가 증가했는데 농업투자자들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소리 제발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맞붙을 용의가 있습니다.

박선규 기자 : 저는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지금 말씀이 중요한 얘기인데 그런 헛된 투자는 아니었다는 말씀 하셨는데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들한테 오는 실질적인 혜택은 없었다고 하는 부분이 농민들이 가장 주장하는 부분이고 이번에 119조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농민들이 그 부분을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된 얘기를 장관님께 하나 여쭙 볼게요. 제가 어제, 그제 농촌에 가서 농민들을 개인적으로 보고 왔는데 그 분들 얘기는 그래요. 당신도 알다시피 정부에서 하라는 거를 하면 망한다. 하라는 거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사는 길이다. 이런 얘기를 아직까지 합니다. 정부와 농민간의 신뢰문제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허상만 장관 : 글썄요, 정부는 사업을 정해 놓고 농민들한테 이 사업을 하라, 그런 정책을 안 펼 것입니다. 물론 정부의 큰 틀의 정책은 있습니다.

이건 관계전문가들과 농민단체 대표들, 생산자들이 다 모여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10년간 농업종합대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틀은 유지가 되지만 앞으로 우리 농촌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생산자, 지방에 있는 농과대학교수님들이 공동으로 자기 지역의 농부를 살리기 위해서 농업을 특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의욕이 있을 때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곳에 돈을 주지, 119조의 돈 아껴 놓더라도 그렇게 쉽게 돈을 쓰게끔은 안 하겠습니다.

박선규 기자 : 하나 더 짚죠. 농민들이 얘기하는 이농현상의 원인에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농민들에게 썩 이자로 돈을 융자해 주는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하셨는데 오히려 그것이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게 만드는 독소 요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농민들이 많더라고요.

이자가 싸다 보니까 너도 나도 그 썩 이자를 빌려서 큰 계획 없이 사용하고 나서는 나중에 원금도 이자도 못 갚는 상황에 처해 버리는, 이게 이농의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을 하는 농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성진근 교수 : 제가 옛날에 박사학위 논문이 이농에 관한 겁니다. 이농은 소득으로 설명합니다, 소득차이로. 그런데 소득뿐만 아니라 돈 쓰기 위한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농촌에서 대농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뭐를 하려고 해도 할 게 별로 없고 정부가 해서 된 게 별로 없습니다. 정부 만능주의 사고방식도 필요 없고 시장에서 이기는 사람이 이깁니다.

며칠 전에 농민들을 만났는데 정부 못 믿어요 정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말해요. 그래서 왜 정부를 믿나? 그걸 믿나? 믿는 네가 바보지 하고 말했습니다. 똑같은 정책 안에서 돈을 번 농가도 많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정책 때문에 돈을 못 벌고 나는 망했습니다. 얘기가 안됩니다

이 정책을 믿고 따른 사람이 돈 번 것을 누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시장입니다, 시장에서 자기 제품에 대한 고객을 만들어 내고 고객한테 감동주고 시장을 넓혀 가는 사람들만 살아남는 것입니다.

허상만 장관 : 이농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소득이 보장 안 되니까 이농이 생긴다고 보고요. 가장 큰 문제는 농촌의 교육과 의료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농촌에 가보면 시설도 교과과정도 도시와 떨어지지 않게끔 비슷한데 농촌에 선생님들이 안 계십니다. 교육이 제대

로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교육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농촌의 이농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정부내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농촌의 교육문제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이 농촌에 계시면서 농촌의 교육을 책임져 줄 것이냐, 또 인센티브랄지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선규 기자 : 농업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종합적인 문제라는 말씀이시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알아보았는데 이제 조금만 얘기를 진전시키겠습니다. 문제는 개방시대에 우리 농업이 어떻게 해야 살 수가 있고 어떻게 해야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느냐 하는 얘기일 겁니다.

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여쭙 볼게요. 많은 농민들이 문을 열면 우리 농촌은 하루아침에 망해 버릴 것이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성진근 교수 : 그게 잘못된 인식입니다. 아까 우리 작년 수출이 16억 달러, 수입은 96억 달러 그래서 80억 적자라고 했는데 16억 달러가 왜 수출됩니까? 그럼 망하는 겁니까? 칠레 포도 들어오더라도 씹니다, 그게……. 한서너 배 쌀 겁니다. 그런데 우리 포도도 아직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농산품을 대할 때의 태도입니다.

사회자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농민은 농산품을 생산한다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박선규 기자 : 글썄요, 맞는 얘기 아닙니까?

성진근 교수 : 그게 틀렸죠. 농산품을 생산하는 농민은 지금 도태되어야 합니다. 농가가 상품을 생산해야 됩니다. 옛날 농가들은 수확까지만 했습니다. 그리고 장구치고 놀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벼를 생산하는 농가는 매일 데모합니다. 벼는 소비자 상품이 아닙니다. 정부가 사주는 농산물이죠. 그런데 쌀을 생산하는 농가들은 정신 없이 바쁩니다,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농업이 경쟁력이 없다는 것은 평균적으로 그렇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앞서 가는 농가들은 그 속에서도 시장을 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선규 기자 : 그렇게 겁먹을 이유만은 아니라는 얘기시죠?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허상만 장관 : 교수님 말씀대로 생산에서 가공, 유통이 생산자가 경영을 한다는 측면에서 말아 쥐 야지…….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19조원의 이 돈이 제대로 잘 쓰여 진다면 우리 농촌은 지금 어렵다고 하지만 이 위기를 기회의 발판으로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19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 드리겠는데요.

일단 119조 중에서 우리 농업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국제환경이 변화된다고 해도 우리 농업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시키고 전업농을 육성하는데 64조 정도가 투자됩니다.

그래서 쌀을 우리 농가 인구가 128만호인데, 농업을 하는 사람이……. 결국 10년 후에는 자연탈농이랄지 경영이양을 해서 한 80만호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 쌀을 지켜 줄 수 있는 농가를 대개 7만호 정도 6ha 이상의 규모를 가진 사람이 우리 쌀 생산을 맡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신선한 채소랄지 과실을 이제는 어찌느냐 하면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 집약산업으로 육성을 해서 소비자의 식탁 위에도가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올려놓아야 되거든요. 이게 생산자들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 상품이 수출이 되어야 되거든요. 특히 일본시장이 2005년부터

FTA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일본에 36% 정도 수출하고 있는데 당장 2008년까지 50% 이상 올라가야 되고 신선채소는 일본 시장을 우리가 점유를 해야 됩니다. 축산은 현재 1만 3,000호 농가에서 우리 축산의 65%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만호를 육성해서 85%의 생산을 맡기려고 합니다. 이래야만 아무리 어렵더라도 개방이 되더라도 우리 농업을 지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업농으로 참여 못하는 소농들은 어쩔 것이냐, 이분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모가 작은 농토를 이용해서 친환경 고품질 농업을 해서 소위 틈새농업으로써 성공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득 안정과 농업 경영안정을 위해서 소위 직불제를 지금 현재 9.7%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2006년에 가면 22.7% 정도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일본이 14%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이 32%고 EU가 70%입니다마는. 다음에는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라면 농촌사회가 유지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교육과 의료, 복지, 이 분야에 17조, 농촌사회 유지를 위해서 39조를 이렇게 투자할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박선규 기자 :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가겠습니다. 장관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셔서 토론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전부 다 계획을 얘기하셨는데 성 교수님, 문제는 예정대로, 계획대로 갈 수 있는지의 여부 아니겠습니까?

성진근 교수 : 정책이 정책공급자, 장관님을 대표로 하는 정부가 정책공급자고 정책수요자는 우리 농가가 됩니다. 농가가 정책을 받아들여서 소화시켜서 잘 해내다면 이기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이 가져야 할 게 있습니다. 목표를 줘야 됩니다.

그 동안 많은 정책을 만드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고 나이도 됐으니까

많이 실패하는 경우도 봤는데 목표가 별로 뚜렷하지 않습니다. 경쟁력 문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경쟁력을 가격경쟁력만 얘기합니다. 그건 경제학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부존자원의 조건 때문에 생산비가 결정되고 그걸로 해서 가격이 결정된다고 그러합니다.

중국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하면 땅값이 중국이 우리보다 10%밖에 안 되고 인건비가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땅이 넓고 해서 만든 농산물은 당연히 생산비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한 3, 4배 정도 우리가 국제가격보다 높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비싼데 싸게 들어오면 우리나라 농산물을 팔 데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쟁력이 없다, 한국농업이 비관적이다, 장래가 없다고 농민들이 걱정을 하는데 참 잘못됐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장터, 장국밥은 3,000원짜리입니다. 그곳은 늘 한산한데 왜 호텔의 3만 원짜리 밥집은 예약을 안 하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까? 음식이라는 것은 가격보다는 질입니다. 품질이 더 중요합니다.

박선규 기자 : 알겠습니다. 가격이 절대적인 경쟁요건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성진근 교수 : 그런 조건에 우리가 너무 소홀했다. 가격만 낮추기 위해서 구조개선……. 지금도 70%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만드는 농산물을 어떻게 소비자가 먹도록 품질을 올리고 거래력을 높여 주고 서비스를 높여 줄 것이냐. 이런 쪽에 정책을 맞추면 희망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박선규 기자 : 알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은데 시간이 자꾸 가니까……. 장관님, 얘기 좀 해 주세요. 제가 지금 보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

들이 정부의 그런 좋은 계획이 있고 지금 추진되지만 제일 문제는 농민들이 믿어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 같거든요. 이 불신감을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허상만 장관 :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농정을 펴는 데 금년 1년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금년 1년 동안에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게끔 우리 농정의 방향이 달라지고 농업정책을 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달라졌다는 인식을 갖게 하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지금 생산자로서 농업인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는 사람들이 충분히 해 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이제는 자기 지역의 농업을 책임져야 될 입장에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농과대학 교수들이 1,500명 정도 되는데 실제 한 500명 정도는 자기 지역의 농업을 위해서 기술개발도 하고 연구도 해야 하고 봉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뜻을 모아서 지방의 농업, 그걸 우리는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의 농업정책을 펴겠습니다.

대신 그 책임은 중앙정부만 지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생산자, 대학 교수님들도 질 수 있게끔 대학 교수님들 한테 충분한 보수 수준의 대우를 중앙정부에서 하겠습니다.

박선규 기자 : 현장의 실정, 얘기를 들어서 현지에 맞는 정책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지금 경쟁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경쟁력 얘기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아까 구조조정 얘기 잠깐 하셨고 인력의 문제도 빼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성진근 교수 : 지금 걱정입니다. 그게 제일 큼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을

세우고 하더라도 그것을 맡아 나갈 사람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지금 200만 명 정도가 농업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농업 종사자가 200만 명인데 그중에 30세 이하가 되는 사람이 5만 명밖에 없습니다. 2.4, 2.5%입니다.

그런데 그게 또 허수가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 중에서도 지방대학 교수 하다 보니까 주민등록이 너희 집으로 되어 있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하니 까 5명이 지방에 가 있습니다. 다 젊은 노동력이 있는데 앞으로 지식기반사회입니다.

우리 농업이 살 수 있는 길은 지식과 자본의 농업이어야지 토지농업은 아닙니다. 공업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할 사람이 IT, BT 할 사람이 2%, 1,000명 중에 20명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인력을 키우는 게 지금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하나는 우리 국회의원이거나 정치권이 고려해야 될 점인데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 지금 개방되면 우선 그만 둡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한 75만 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 개방돼서 그만 두고 도시로 가면 양로원을 지어주어야 합니다.

양로원을 지어 주는 것보다는 농촌에서 살게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인식을 가지고 농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규 기자 : 할 얘기는 참 많은데 얘기가 시간이 부족해서 아쉽습니다. 오늘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못한 말씀이 있으시면 한 30초 범위에서 짧게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장관님…….

허상만 장관 : 지금 성진근 교수님께서 인력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농업의 성패는 결국은 자원, 인력자원으로 결판이 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의 10년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매년 한 4,500명 정도의 농업인력양성을 하겠습니다.

1,000명 정도는 농업관련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또 3,500명 정도는 경영

능력이랄지 사업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충원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과거에는 농업정착금으로써 1억을 줬는데 2억을 줘서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유통인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부터는 전국에 4개의 유통인력양성 센터를 만들어서 물론 대학이 참여를 하고 중앙에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를 할 것입니다마는 6개월 코스로 해서 매년 400명 내지 500명의 유통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그래서 5년 하면 2,000명의 유통인력이 양성되니까 사람들이 농협이나 품목단체에 가서 실질적으로 유통이나 경영을 맡아 줄 것입니다.

박선규 기자 : 농업 전문가, 유통 전문가를 많이 양성 하시겠다는 것이군요.

성진근 교수 : 장관님,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농민들이 절망하는 것은 값싼 해외농산물들이 들어오면 시장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열량자급률을 개념으로 계산하면 4,500만의 절반정도입니다.

2,500만명을 먹여 살리는 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1,000만명 또 나간다면 1,000만명이 다른 데에서 벌어 올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됩니다. 비전을 줘야 됩니다. 일본 아까 말씀하셨죠? 중국에서 1,000만명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을 주십시오. 그렇게 안 하면 농민들은 손을 놓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박선규 기자 :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과연 개방시대는 우리 농촌의 절체절명의 위기인가라는 질문을 던져 봅니다. 또 혹시 우리가 필요 이상의 불안감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자문도 해 보게 됩니다.

개방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대세이고 또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이 분명하다면 개방시대를 맞는 우리의 자세도 분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움츠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농업을 몇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그런 얘기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칠레 FTA 비준에 따른 지원 대책 추진

(KBS-1R, 「강지원입니다」, 2004. 2. 20)

강지원 : 한·칠레 FTA가 일곱 달의 진통 끝에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인데요. 특히 농업인들의 좌절감과 절망감을 잘 수습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허상만 농림부장관을 연결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상만 장관 : 안녕하십니까?

강지원 : 한·칠레 FTA가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소감도 말씀해 주시고, 또 농업인들은 아직도 한·칠레 FTA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한·칠레 FTA에서 특히 농업분야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도 아울러 좀 해 주십시오.

허상만 장관 : 한·칠레 FTA가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그 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협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농정의 책임자로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농정의 책임자로서 지금은 무엇보다도 우리 농업의 장래를 걱정하시는 농업인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칠레 FTA는 결국에 우리 경제의 중남미 진출에 의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과실(果實)이 농업 쪽에도 지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저는 농업인들의 입장에서 농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우리 농업인들도 정부의 지원대책을 믿고 정부와 함께 우리 농업을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는데 앞장 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지원 : 구체적인 내용도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허상만 장관 : 칠레와 FTA를 체결하면서 우리 농업분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정부는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쌀·사과·배 등 주요 과실은 협상대상에서 제외를 했고, 우리 시장에서 민감한 품목인 고추·마늘·양파 등 이런 농가의 소득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373개 품목도 DDA협상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포도를 중심으로 해서 키위, 복숭아 쪽에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런 일부 품목에 대해서도 향후 5년에서 16년간 점진적으로 관세를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포도는 우리와 계절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노지포도는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만, 시설포도가 문제가 되는데 이번 기회에 포도에 대한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우리 포도산업이 경쟁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10년간 (피해를) 조사해 보니까, 최대 피해예상액이 5,860(억)원 정도 우리 과수분야에서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미 7년 동안에 1조 5천억을 투입해서 우리 과수산업을 기술집약 산업으로 육성하는 계기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지원 : 그렇군요. 과수산업에 대해서만 7년 동안 1조 5천억 원입니까?

허상만 장관 : 예.

강지원 : 1조 5천억 원은 어떻게 쓰는 돈입니까?

허상만 장관 : 우선 우리 과수가 경쟁력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쟁력 향상 분야에 1조 3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시설을 현대화시켜야 되겠죠. 과수원의 규모도 키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통과정에서 산지유통 시설을 크게 확대하고요. 이렇게 하는데 1조 3천억이 들어가고요.

만약 포도농가가 폐업을 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3년간의 순소득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포도밭을 매도할 경우는 1년간 순소득을 보상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천 8백억 정도 들어갑니다.

강지원 : 네. 그렇군요. 합쳐서 1조 5천억 정도 된다는 건데, 아까 1조 3천억 부분은 다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

허상만 장관 : 25% 정도가 융자고요. 나머지는 보조나 지원입니다.

강지원 :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 결국 빚더미만 남았다는 소리가 이제 7년 후에 안 나와야 하거든요. 이번에는 정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상만 장관 : 예.

강지원 : 그래서 질문을 했었고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농민단체의 요구사항도 있었고, 또 국회에서도 추가 요구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것들이 상당히 반영이 된 셈이죠?

허상만 장관 :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지원 : 말씀하시죠.

허상만 장관 : 정부는 4대 지원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FTA이행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7년간 1조 5천억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농가부채가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채경감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대출된 정책자금 금리를 4%에서 15%로 인하를 하고 상환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규로 대출되는 정책자금 금리도 4%에서 3%로 내렸고, 지금 문제가 되는 과거의 상호금융대체자금이 6조 8천억, 농업경영개선자금이 2조 천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금리를 6.5%에서 3%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던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대출된 상호금융자금도 농업용으로 대출받은 자금에 대해서는 지금 금리가 평균 8% 수준입니다만, 3% 정도의 이자를 정부에서 보전해 줍니다. 다만, 여기에 혜택을 받으려면 대출 잔액의 10% 정도를 상환하는 농민한테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농촌의 '삶의질향상및지역개발촉진법'을 제정을 해서 앞으로 17조 정도를 투자해서 농촌의 복지, 지역개발의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연금도 2003년에는 매월 7,700원을 지원했습니다만, 2005년에는 22,800원을 지원하고, 건강보험료도 2003년에는 22%를 지원했는데, 8,500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2006년에는 50%인 26,85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특세가 금년 6월에 끝나는데, 이걸 앞으로 10년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2014년까지 매년 2조원 규모, 20조원이 추가로 농촌에 투자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지원 : 그렇게 FTA 지원대책 뿐만 아니라 앞으로 10년 동안 119조원을 투융자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 국내·외적으로 우리 농업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예상을 하시나요?

허상만 장관 : 문제는 정부의 농업에 대한 의지 또 농민들의 정부를 신뢰하는 자세, 이게 제가 먼저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마련된 투융자계획이 실효성 있게 실천이 된다면, 우리 농업·농촌도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걸로 보고요. 이번에 마련된 투융자계획은 과거 11년간 중앙정부에서 투융자된 62조원 규모보다 2배 수준인 119조원입니다.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잘 쓰면 앞으로 우리의 10년이 우리 농업을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혼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지원 : 앞으로 우리 농업이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도 불가피하다는 것이거든요.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계신가요?

허상만 장관 : 지금 우리는 개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국제 환경 속에서도 우리 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우리 농업을 지켜 낼 수 있는 전업농이 육성이 되어야 합니다.

쌀의 경우는 6ha 규모의 전업농을 7만호 육성을 해서 우리 쌀 생산의 50%를 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업은 품질 고급화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품질 고급화에 역점을 두면서 전업농 2만호가 축산물의 85%를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수와 원예산업은 2005년 일본과 FTA협정을 앞두고 앞으로 2년 동안 기술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수출산업으로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문제는 이 전업농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문제인데요. 중소농들은 고품

질 친환경농업으로 틈새시장을 공략을 해서 환경친화적인 농산물을 생산을 해서 경쟁력을 갖도록 하고, 고령·영세농가 이분들이 한 10년 후에는 우리 농촌에서 자연 이농이 될 것입니다만,

이 분들한테는 63세에서 72세 사이에 은퇴를 하면 경영이양직불금을 매년 연금방식으로 주던 것을 매년이 아니라 매달 줍니다. 24만 천 원씩. 그렇게 해서 정부는 나름대로 구조조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지원 : 마지막으로 한·칠레 FTA가 어려움 속에서 통과가 됐는데, 앞으로 농민들의 좌절감이나 절망감을 극복하려면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불신감을 해소할 만한 무슨 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해 주시죠.

허상만 장관 : 그렇습니다. 과거 UR이후 11년간 농업에 투자가 잘못됐다고 그러는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동안 그 정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농업생산성이 향상이 돼서 사시사철 우리 식탁 위에 풍성한 채소, 먹거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투자가 농가의 소득으로 연결돼야 하는데, 생산성은 크게 향상이 됐습니다만, 농가의 소득으로 연결되지 못한 게 문제이고, 이것이 결국 농정의 불신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농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119조원의 투융자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에서 농업정책을 펼 때, 사업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생산자인 농업인, 지방대학,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결정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1년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해로 보고 있습니다. 첫해에 이게 만약 잘못된다면, 2005년에는 늦거든요. 이 참여정부에서는.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금년 일년간 우리가 열심히 하면 농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

가 될 걸로 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지원 : 지켜보겠습니다.

허상만 장관 : 네.

강지원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허상만 농림부장관이었습니다

농협개혁은 자율적인 구조조정으로

(KBS-1R, 『백지연입니다』, 2004. 3. 9)

백지연 : 안녕하세요?

허상만 장관 : 네 안녕하세요?

백지연 : 얼마 전에 폭설이 있었기 때문에 농민들의 피해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대책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부터 여쭙 보겠습니다.

허상만 장관 : 어제까지 피해액이 5,240억 원 정도 됩니다. 주로 농작물 피해 시설 하우스 버섯 재배 축사 가축피해 등인데요. 피해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응급복구와 자금지원을 하고 있고요, 6일에는 정부에서 경영 안정자금을 600억을 지원했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예비비에서 보조금으로 909억원을 보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7일에 현장에 가 봤는데 경찰 군인 공무원들이 열심히 돕고 있는데요. 피해파악이 3월 15일 정도가 되어야지 끝날 것 같습니다. 21일부터 정부에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소비자들께서 과실이나 채소의 수급 문제를 걱정하고 계신데 6일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 이후는 정부가 계약해 놓은 것도 있고 전혀 걱정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백지연 : 지금 추산된 피해액 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까!

허상만 장관 :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피해는 조사가 되면 확정되겠지만 작물의 경우는 가온상태에서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시들어 버리기 때문에 피해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지연 : 우선 농민들의 피해가 걱정이 되고요 장관님께서 수급의 불균형 문제는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만약에 피해액이 늘어나거나 복구가 늦어지게 되면 물가에 비상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문제에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의 탄력적인 대응도 마련하고 계십니까?

허상만 장관 : 네 그렇습니다. 이번 생산지가 충남북으로 한정되어 있고 다른지역 물량이 충분하고 정부에 확보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수급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지연 : 알겠습니다. 일반 농민들의 피해가 가뜩이나 다른 문제와 겹쳐져서 시름이 가중된 상황인데요. 어제 있었던 업무보고를 보면 농림부의 올해 중점 추진과제가 나왔는데요. 우선 올해 쌀 재협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전략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허상만 장관 : 쌀 재협상에 대해서는 지난 1월25일에 WTO사무국에 재협상을 시작하겠다는 통보를 했고요. 5월부터는 쌀 시장에 관심이 있는 미국 중국 등 몇 개 나라와 협상이 진행될 것입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관세화유예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익이 되는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며

이런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국민이 이해를 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지켜보는 과정 가운데 공정성을 가지고 협상을 할 것입니다

백지연 : 정부의 기본 입장은 관세화유예라는 말씀이십니까?

허상만 장관 : 예 그렇습니다.

백지연 : 농민단체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관세화유예 쪽으로 입장이 정해진 것이군요.

허상만 장관 : 예 관세화유예를 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자고 저희가 제안을 한 것이죠.

백지연 : 농업개방시대 농정을 가동한다는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허상만 장관 : 예 그렇습니다. 어제 업무보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앞으로 10년간 사업계획을 세우고 투자되는 돈이 119조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돈을 차질 없이 농민의 부채로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떠한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을 평가하는 과정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쌀 협상은 국민의 공감대 속에서 진행해야 하고 한·칠레 FTA가 있지 않습니까? 이 후속 대책을 철저히 해서 과실 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얘기를 했고 또 가축방역이나 축산물 안전이 중요함에 따라 행정적인 체제를 구축해야 하고 범국가적으로 방역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보고를 드렸고요.

협동조합도 농민이나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개혁을 하겠다는 얘기, 그

다음은 농촌사회의 유지에 관한 것으로 10년 동안 7조원을 투자해서 1권역마다 70억씩 1,000개의 권역을 갖추어서 농촌을 가꾸고 이런 것을 철저히 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백지연 : 전반적인 보고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아야겠는데요, 우선은 쌀 협상에 관련하여서 일단은 정부가 관세화유에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쌀 시장의 개방의 폭이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협상 결과와 관계없이 우리 쌀 산업을 유지시키거나 발전시키는 계획에는 대책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허상만 장관 :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어떻게든 우리 쌀을 지켜야 합니다. 일단 전업농을 7만5천호 정도 육성을 합니다.

우리나라 쌀 생산의 50%정도는 이 전업농 7만5천호가 담당하게 해주고 이 전업농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의 경우 농가의 소득이 보장되어야 하고 특히 후생복지가 되어서 농촌사회의 안전망이 갖추어져야 하므로 연금보험료나 건강보험료를 정부에서 50%까지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쌀농사를 짓고도 소득이 불안정한 분들께서는 쌀 생산의 80%정도를 쌀 소득보전직불제를 시행해서 쌀농사만 지어도 문제가 없도록 하고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농촌에 살아도 기본적인 의료나 교육이 해결돼야 하므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유지하도록 10년 동안 사업을 계획했고 그에 따라 집행을 하게 되면 차질 없이 쌀 산업 유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백지연 : 지금 농민들이 교육이나 의료에는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농민들은 그런 대책과 관련하여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가고 학교 문제가 해결 된다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과수농가가 FTA협상으로 무너지게 되면 전작을 한다든지의 후속 대책 먹고 살 일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책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허상만 장관 : 이번 한 칠레 FTA협상을 하면서 FTA지원법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몇 개의 연구소에 10년간에 피해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의뢰했는데 5,860억원이 제일 크게 잡힌 보고였습니다.

정부가 1조5,000억원을 7년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과수농가의 문제는 해결된다고 보아야겠지요.

그래도 되지 않을 경우 폐업을 한다는 사람들에게는 3년간 평균 소득을 지원하고 확실한 대책을 말씀드릴 수는 없더라도 119조원이 투자가 된다면 능력 있는 농가는 상당한 경제력을 가질 수 있고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농촌의 교육이나 의료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정도는 정부에서 책임지고 지원할 것입니다

백지연 : 어제 나온 개혁안 중에 농협의 개혁안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여쭙볼까 하는데요.

지금까지 농협과 관련한 농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한마디로 농협이 농민을 위한 일은 뒷전이고 돈 장사만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번 농림부가 내놓은 정책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 되겠습니까?

허상만 장관 :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농협도 농림부도 농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으로는 농협개혁에 대한 안을 내고요 17대 국회에서 통과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인 문제는 신경분리에 대한 것인데 신용사업에 너무 치중을 하고 경제지도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검토를 해본 결과 신경분리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만일 분리해보면 신용사업은 은행의 사업이 아닙니까?

이것이 경제 사업 쪽으로 돈이 올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문제인데 신중히 연구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중앙회가 경제사업 중심으로 경영되도록 하고 지방에 있는 단일 조합에 대해서는 조합장 선거에서 부정 문제 등이 문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당장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촉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1,300개의 조합이 난립해서 자생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을 500개정도로 목표를 두어 통합을 해서 이런 단위조합이나 중앙회가 농민들 편에 설 수 있는 형태로 금년 중에 개혁안을 만들고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연 : 지금 신·경 분리 방안을 말씀하셨는데요. 원래 농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라는 것인데 이번에는 빠졌는데 아까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검토 후 향후에 분리할 계획이십니까?

허상만 장관 : 장기적으로는 분리할 계획입니다

백지연 : 일단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것을 빼 놓으시면서 농림부에서 자율적 구조조정으로 대신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율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허상만 장관 : 금년 일년 중에 농협에서 어떻게 보면 농협이 자율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신경분리에 관한 안을 정부에 내어 놓게 되면 정부는 정부대로 검토를 해서 만약에 농협의 안이 농협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농민들 입장에서 문제를 보지 않았을 경우 정부는 농민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지연 : 국고에서 지원되는 융자금에 있고 또 정책자금이 있는데요. 국고에서 지원되는 융자금의 관리 감독을 관리단을 따로 두어서 운영하겠다

고 하셨는데 관리단을 언제 어떠한 형태로 구성할 계획이십니까?

허상만 장관 :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문제가 되어 왔는데요. 정책자금뿐만 아니라 농민에게 가는 모든 자금을 장기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는 기구가 있어야 합니다. 정책자금관리단을 발족을 시키는데 금년 중으로 발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철저한 연구 검토를 해서 정부기관 보다는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공익적으로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지연 : 민간 주도로 구성하시겠다고요? 또 하나는 정책자금의 문제인데요. 지금까지 농협만 취급하던 것을 일반 은행으로 확대하기로 하셨는데요. 구체적인 추진일정은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허상만 장관 : 당장은 2,000억 원을 이미 시행하기로 했고요. 왜냐하면 시중 은행과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골에 있는 단위조합은 고금리인데 요즘 은행들이 대형화됨에 따라서 서비스 경쟁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점진적인 개방을 해 가겠습니다

백지연 : 결국 농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농협을 쇠신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과연 어제 농림부가 내놓은 대안으로 농협이 실질적인 생산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드린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상만 장관 : 생산조직으로 변할 것입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농민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농협이나 정부조직 또 사회조직은 가능하지 않으므로 농협도 그러한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개혁하려고 노력 중

이이고 정부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부도 노력할 것입니다

백지연 : 결국 농협이 제대로 개혁이 되어야지만 농가의 경쟁력의 확보 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어제 농림부가 내놓은 대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상만 장관 : 네 감사합니다.

쌀 관세와 재협상 관련 유리한 조건 최대한 확보

(PBC-R, 『열린세상 오늘』, 2004. 4. 26)

이석우 해설위원 : 우리나라 쌀 시장 개방여부를 다루는 협상이 다음달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우리정부 입장과 전략을 허상만 농림부장관 직접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허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허상만 장관 : 안녕하세요.

이석우 해설위원 : 지금 쌀 개방 재협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런 재협상을 해야 되는지, 좀 전문적인 분야가 돼서 국민들이 잘 모르는데요, 그 이유부터 간략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허상만 장관 :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93년 UR 협상때 모든 농산물은 수입을 자유화했습니다만, 쌀에 대해서만큼은 매년 일정 물량만을 수입하는 특별 예외조치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95년부터 2004년인 올해까지 10년간 관세화 유예조치라는 특별조치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UR협상 당시 받은 관세화유예라는 특별대우를 2005년 이후에도 계속 받을 것이냐에 대해서 협상을 2004년인 올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석우 해설위원 : 시한이 다 됐다는 말씀이군요. 한마디로..

허상만 장관 : 그래서요 관세화 유예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쌀 시장에 관심 있는 나라들과 협상을 통해서 합의를 다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석우 해설위원 : 그래서 지금 관심 있는 나라들을 보면 중국·미국·호주·아르헨티나 8개국 정도 되는 것 같던데요 특히, 미국의 경우는 '쇠고기 금수조치를 해제하라' 이것을 아마 이번 현안에서 협상카드로 들고 나오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도 얘기되던데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허상만 장관 : 지금으로서는 상대방의 요구사항이나 입장파악이 구체적으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기 곤란한 문제입니다만, 아시다시피 WTO농업협정은 관세화 유예를 계속 지속하려면 상대방이 수락 가능한 추가적인 양보, 소위 보상을 해줘야 되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의 내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규정하지도 않고 있고요 그래서 쌀 이외의 요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양자간 협의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상대방 국가의 요구가 드러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 때 구체적으로 대응방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석우 해설위원 : 그리고 관세화 유예를 이번에도 아마 추진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방침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를 보면 관세화 유예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풀어버리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풀어버리니까 막상 쌀 수입증가가 오히려 없었다는 사례가 그 쪽에서 나타났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허상만 장관 : 양쪽 다 각각 장단점이 있어서 어느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경우든지 지금보다 개방 폭이 확대되는 것은 불

가피할 것으로 보고요.

먼저, 관세화 유예시에는 합의된 의무수입량만 수입하게 되기 때문에 연도별 쌀 수입량이 예측이 가능하죠. 이런 장점이 있고요. 관세화 유예 대가로 의무수입량 증량을 포함한 상대방의 과도한 요구에 직면할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반면에 관세화를 한다고 하면 과도한 의무수입량 증량은 피할 수 있지만, 앞으로 국제시장에서 쌀값, 환율변동, 관세감축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입량이 급변할 가능성이 있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따라서 쌀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입장에서 협상과정에서 제기될 상대국의 요구수준, 또 DDA협상에서 결정될 세부원칙,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석우 해설위원 : 그러면 관세화 유예가 우리 정부 방침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까?

허상만 장관 : 기본적으로 저희는 관세화 유예 쪽이 기본방침입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국가적으로 어느 쪽이 더 실리가 있을런지는 협상을 해 가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석우 해설위원 : 이게 상대국마다 다르게 적용할 순 없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의 기본입장을 정해서 동일하게 다른 나라에 적용되는 그런 원칙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허상만 장관 : 그렇습니다.

이석우 해설위원 : 그런데 지금 ‘열린우리당’ 쪽에서는 쌀 관세화 유예 연장을 관철시키고, 그 대신에 최소시장접근 물량을 좀 늘리자……. 6~8%

로 늘리자……. 이게 최선이라는 의견이 나온 것 같은데, 농림부 입장은 어떤 겁니까?

허상만 장관 : 저희도 신문을 보고 ‘열린우리당’에 알아 봤습니다. ‘열린우리당’에서 쌀 협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적은 없다고 확인됐고요. 이미 23일자 일부 신문에도 이 기사에 대해서 ‘열린우리당’에서 해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세화 유예 지속을 위해 보다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고요. 어느 수준이 최선이 될 것이냐는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을 드리기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우 해설위원 : 협상을 지금 앞두고 있어서 자세한 말씀하시기가 좀…….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근데 어쨌든 국제적인 자유무역 추세, 또 압력 때문에 협상결과가 어떻게 하든 쌀 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질 않겠느냐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그러다 보면 농민들의 반발이 계속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대책 또는 설득을 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허상만 장관 : 정부는 쌀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실리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협상과정을 투명하게 설명을 드리고, 특히 농업인들에게는 대화를 통해서 이해와 또 의견을 구하면서 협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농업·농촌 종합대책’에 쌀 산업 종합대책을 수립했습니다만,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추가적인 개방이 되더라도 우리 쌀 농가의 소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국내 대책을 마련하면서도 농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석우 해설위원 :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협상과정 중에 실리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떤 실리를 어떻게 추구를 하시겠습니까?

허상만 장관 : 기본적인 것은 이제 관세화 유예가 정부 방침입니다만, 관세화 유예에서 상대국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할 때는 관세화 유예를 다시 검토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로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이석우 해설위원 : 재검토를 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허상만 장관 : 네.

이석우 해설위원 : 근본적으로 우리 농촌에 경쟁력 강화…….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 이게 참 필요한데, 사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에 지난 '95년부터 우리 농촌에 62조원이나 투입됐습니다만, 경쟁력 여전히 낮거든요. 이런 경쟁력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키워 나가야 할지 좀 실천계획을 한 말씀 해주시죠.

허상만 장관 : 우선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개방화시대 우리 농업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전업농을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업농을 뒷받침할 수 있는 농업 인력을 양성해서 농업의 체질을 강화해 나가야죠.

두 번째는 소비자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고품질·친환경농업을 적극 육성해서 소비자의 신뢰를 받는 농업, 또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농촌마을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앞으로 2013년, 10년 동안 농촌마을을 개발해서 도시민이 농촌을 찾을 수 있고, 도시와 농

촌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이런 사업들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산자인 농업인,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농과대학이 참여를 해서 정책과정에서 처음부터 참여를 해서 이 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지역의 농업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투융자 시스템을 혁신을 해서 농민들로부터 농정신뢰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석우 해설위원 : 지금 농촌의 가장 큰 현안중 하나가 가구당 평균 빚이 2,700만원, 10년 만에 4배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입니까?

허상만 장관 : 5년마다 표본을 다시 설정하고, 5년마다 생기는 단층현상에서 이번에 전년대비 35% 빚이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 3월 5일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개정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중장기 정책자금 금리를 4%로 하던 것을 1.5%로 낮추고요, 상환기간을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했습니다.

상호금융자금도 금리를 5%로 인하했고요. 또 2001년 대책으로 지원했던 상호금융대체자금·경영개선자금의 금리도 6.5%이었는데, 3%로 낮췄고요. 또 농민들이 서로 교차 연대보증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대보증 피해자금에 대한 상환기간도 3년 거치 7년 상환을 3년 거치 17년 상환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이석우 해설위원 : 허상만 장관님, 결론 말씀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허상만 장관 : 그래서 앞으로 농촌·농업에 가는 정책자금이나 모든 지원

되는 자금들은 가능하면 정부방침은 3% 이하의 금리로 장기상환의 그런 체제로 가게끔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이석우 해설위원 : 감사합니다. 허상만 농림부장관님 농정대책에 대해서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장관님.

허상만 장관 : 네. 감사합니다.

쌀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세화 유예 협상

(KBS-2R, 『열린아침 정용석입니다』, 2004. 6. 2)

정용석 : 지금 쌀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허상만 장관 : 미국, 중국, 태국, 호주 전체적으로 9개 나라입니다

정용석 : 지난달 5월만 하더라도 9개 나라와 협상을 한 것입니까 ?

허상만 장관 : 지금 6. 1일까지 5개 나라와 했으며, 6. 3일까지는 1차 협상이 완료될 것입니다.

정용석 : 가장 어려운 까다로운 나라는 어디라고 보고 계십니까?

허상만 장관 : 다들 어렵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협상을 주도할 미국, 중국 이 두 나라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용석 : 지난달 서울에 온 중국의 협상단이 우리 측에 이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의 원칙은 예외 없는 관세화가 아닌가. 그러니 한국시장도 완전히 개방하시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중국은 쌀의 가장 큰 생산국 아닙니까. 지금 협상을 해보니까 중국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허상만 장관 : 중국은 제가 지난 번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FAO회의에

참석해서 중국 농무장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 중국과 한국과의 농업의 발전단계를 봤을 때 좀 큰 협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한중협력사업이라고 할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중국의 농업통계사업 이런 것들을 확대하고 쌀만은 우리나라 입장을 잘 알고 있으니까 조금 이해를 해 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정용석 : 지금 9개국 가운데 5개국은 협상을 했다고 했습니까? 남아 있는 나라가 인도, 캐나다, 파키스탄, 이집트, 아르헨티나입니까 ?

허상만 장관 : 예 그런 나라입니다.

정용석 :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관세화 유예를 받지 않았습니까? 10년간 유예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예기간이 올해로 끝납니다. 내년부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협상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

허상만 장관 : 높은 관세를 물고 쌀이 우리나라시장에 들어오겠죠. 정부는 관세화유예를 자신을 갖고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WTO 규정은 관세장벽을 없애고 수입과 수출이 자유롭게 되도록 하고 있지만 상대국의 농업을 산업을 어렵게 해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쌀이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았던 것인데 그동안 우리는 준비가 부족했어요. 지금부터 10년 동안 국제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쌀을 육성해야 되거든요. 그 기간 동안 유예를 받아 내겠습니다.

정용석 : 지금 쌀이 우리나라에 수입하고 있는 %는 어떻게 됩니까?

허상만 장관 : UR협정당시는 1%였습니다만 2004년 금년에 우리소비량의 4%, 205천 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용석 : 4%는 세금을 내고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까 ?

허상만 장관 : 5%정도니까 거의 세금이 없다고 봐야겠습니다.

정용석 : 내년부터는 이 쌀들도 5%가 아니라 100%수입을 하라는 압력이 아니겠습니까?

허상만 장관 : 그렇게 %로 따지기는 곤란하구요. 하여튼 상대국에서는 낮은 관세로 들어오기를 원할 거구요. 저희들은 높은 관세율을 물고 우리나라에 쌀이 들어와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정용석 : 결국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관세를 유예하는 것이 훨씬 이롭지 않겠습니까?

허상만 장관 : 그렇다고는 꼭 말씀드릴 수가 어렵습니다.

정용석 : 관세화 유예를 하는 것 하구요, 쌀 시장을 개방하는 것하고 어느 쪽이 우리에게 더 유리하겠습니까?

허상만 장관 : 농림부장관으로서는 둘 다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방법은 없습니다. 어느 경우든지 지금보다 개방의 폭이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하며, 먼저 관세화를 유예한다고 하면 합의된 의무수입량만 수입이 되니까 해마다 들어오는 쌀 수입량이 예측이 가능하지요.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상대국에서는 의무수입량을 더 늘려 달라고 할 것이고 상대국입장에서는 우리 쪽에 여러 가지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관세화로 간다면 과도한 의무수입량은 피할 수 있지만 앞으로 쌀값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환율도 어떻게 될 지 모르구요, 금년 말까지 예정되어 있는 DDA협상에서 관세감축이 어떻게 결정될 지도 모르며 그래서 수입량이 급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내시장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정부는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입장에서 상대국의 요구수준, DDA협상결정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판단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정용석 : 최근 정부는 추곡수매가를 4%인하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배경이 무엇입니까.

허상만 장관 : 현재 진행 중인 쌀 협상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 개방폭은 확대될 것입니다. 과거 우리는 지난 10동안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개방확대에 따른 충격을 완화해야 되고 우리 쌀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국내외 가격차를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는 국내사정은 평년작만 된다 하더라도 해마다 250만석정도의 쌀이 추가로 재고로 발생합니다. 국내공급과잉이 되는 것입니다. 이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수매가 인하는 달리방법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쌀값하락에 따른 농가소득이 줄어드는 점을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직불제도를 통해서 보완을 하구요, 장기적으로 우리 쌀을 지키는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이 계획도 농업인들과 손을 잡고 같이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해 가겠습니다.

정용석 : 우리정부는 농촌을 지금 살리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간 농촌에 119조를 지원하겠다고 지난 해 말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문제가 119조원으로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허상만 장관 : 119조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정부가 지난 8월부터 금년 2월까지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세웠습니다. 대통령님의 재가를 얻어서 119조 투융자 계획도 세우구요. 그래서 우리 농촌 사회를 유지하고 농업을 소득이 보장되는 산업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상 이런 일은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농촌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농촌에 계시는 농업인, 특히 지방대학이 같이 손을 잡구요. 우리농촌을 살리고자 하는 노력을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성화시키고 있는 분야에 우리 겸임연구관제를 도입해가지구요. 지역농업사업단을 만들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농업클러스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정부입장에서 책임지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대책을 세워 가겠습니다.

쌀관세와 유예와 쌀 직불제 도입키로

(KBS-1R,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 2004. 10. 7)

박에스더 : 지금 들녘에서는 나락이 익어 가고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었죠. 이미 추수를 시작한 곳도 많은데요. 올해 쌀농사가 유래 없는 풍년을 맞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농촌에서는 풍년가 대신 탄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쌀은 남아 있는데 남의 쌀은 밀려오고 정부에서는 앞으로 추곡수매도 하지 않겠다고 하고 농민들 마음은 벼를 갈아엎기 까지 할 정도로 텅 빈 흉년인데요.

이런 가운데 10년간 유지되어 온 쌀 관세화유예가 올해로 끝날 예정이라서 정부가 9개 나라와 쌀 재협상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협상 태도, 또 농업정책에 대해서 농민들 원성이 높습니다.

이런 원성 정부는 어떻게 듣고 있을까요. 또 쌀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오늘 농림부 장관 허상만 장관을 전화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상만 장관 : 안녕하세요.

박에스더 : 요즘 국정감사 때문에 바쁘셨죠? 아무래도 쌀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인데 원래 올해 말까지 쌀 협상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고 9월까지 마무리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지금쯤은 마무리 단계에 있어야 할 시점인데 지금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허상만 장관 : 지금 9개 나라. 그 중에서 이제 주요국인 미국, 중국, 태국과 5차 협상을 끝냈죠.

박에스더 : 협상내용이 좀 진전이 있습니까?

허상만 장관 : 협상 내용이 진전이 있으니까 지금 협상을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박에스더 : 어떤 정도의 지금 상황입니까?

허상만 장관 : 결국에 우리나라는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더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94년 우루과이 협상 결과 예외 조치로 우리나라의 쌀 경우는 관세화 유예를 받은 것이죠. 앞으로 10년 더 받겠다는 것인데 상대국에서는 WTO 규정이 모든 나라는 국제 가격과 국내가격이 차이만큼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방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위 관세화죠. 심지어는 더 받으려고 하니까 그것을 인정을 안 하려는 것이죠. 지금은 구체적인 유예 기간을 얼마로 할 것이냐. 의무수입 물량은 얼마로 하냐. 민간 수입문제, 상대국들의 쌀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시판 문제. 이런 것들을 놓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어려운 것은 국가간에 요구 수준이 다 다르니까요 이것을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나 금년 말까지는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박에스더 : 금년 말까지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허상만 장관 : 이것 때문에 조정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을 지켜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지금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라

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에스더 : 잘 안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쌀 협상에 대해서 공개를 해 달라. 비공개로 이야기를 하겠다. 공개를 해도 별 내용이 없다.

농민들도 협상내용을 정부에서 정확히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허상만 장관 : 별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대국의 국가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상대국의 요구를 일일이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데 지금 다 밝혀 버리면 의원님들이니까 비밀은 보장해주겠지만 그래도 협상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첨예한 부분만 못 밝혔지 지금 협상의 흐름이라 할지 골격은 다 알려 드렸습니다.

박에스더 : 정부의 기본 입장이에요 아직도 관세화 유예가 기본 목표인가요?

허상만 장관 : 네. 지금 관세화 유예를 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최선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10년간 관세화 유예를 계속하기 위해서. 소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대국들의 요구조건을 들어줘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국의 요구조건을 조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관세화 유예를 받기가 어렵다고 하면 그 때는 지금까지 과정을 국민들에게 알려 드리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협상이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에스더 : 관세화를 10년간 더 유예를 해 달라. 그것이 우리의 요구인데 그것을 들어주려면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것을 들어줘야 한다고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관세화 유예에 대한 조건을 내걸고 있지 않아요? 어떤 조건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나요?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우리나라에서 이행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허상만 장관 : 우리는 10년 해주라고 하는 것인데 또 10년은 너무 길다는 것이고요. 일차로 논란이 되었던 것이지만 이 문제는 10년으로 어느 정도 조정이 되었습니다.

의무수입 물량을 우리가 금년에 4%로 소위 20만 5천 톤을 수입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상대국에서는 과거보다 훨씬 많은 배 이상의 많은 것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간수입문제를 우리는 지금까지 4%인 20만 5천 톤을 국영무역해서 국가에서 사들여 가지고 가공용으로만 사용을 했습니다.

시중에 이제까지는 소비자 식탁엔 안 올라갔죠. 이제는 소비자 시판을 시켜야 된다. 민간이 수입할 수 있게끔 해주라. 이런 것들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박에스더 : 민간이 수입해서 밥으로 먹을 수 있게 해라. 소비자들에게 시판해라. 지금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관세화 유예가 기본조건이긴 한데 그 쪽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너무 가혹하면 관세화 유예를 버리고 관세화를 택할 수도 있다고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이정도 요구 조건은 받아 드릴 수 있지만 이정도 이상이면 우리는 관세화가 더 낫다고 본다. 이 정도의 마지노선을 설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지노선은 어떤 것인가요?

허상만 장관 : 마지노선을 오늘 방송에서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우리 쪽 입장을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결국에는 국회에서도 아셔야 될 것이고 농업인들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에스더 :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노선은 밝힐 수 없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노선보다 더 과한 것을 저쪽에서 계속 요구를 하면서 곱힐 수 없다는 것인가요?

허상만 장관 :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에스더 :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노선 이상을 계속 요구한다면 관세화 유예가 아니라 관세화로 가는 것이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네요.

허상만 장관 : 그때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에스더 : 지금 이렇게 마지노선이 무엇인지 공개가 안 되고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원칙적인 내용들을 더 많이 의무수입 물량을 더 많이 수입을 해라. 민간 수입을 해라. 밥으로 팔아라.

이런 이야기는 원칙적인 것으로 들리는데 그 마지노선이 무엇인지 저쪽에서는 얼마를 요구하는 것인지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하면 관세화로 가겠다는 것인지. 이런 것이 공개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정부에서는 어렵다는 이야기만 하니까 일부에서는 정부가 국민들한테는 관세화 유예가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것은 조금 어렵겠다는 생각을 갖고 협상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많아요.

허상만 장관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은요 상대국 입장과 우리 입장을 밝혀 놓고 협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

습니까? 그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숨졌다 어쩔다 했지만 지금은 숨길 수 있는 세상도 아니고 숨겨서 될 일도 아닙니다. 이 문제는 국민과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점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얼마 안 먼 시점에 국민들에게 다 알려 드릴 것입니다.

박에스더 : 그러면 그 시점은 올해가 가기전이겠네요.

허상만 장관 : 11월 중에는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에스더 : 이 이야기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쌀 재협상이 올해 안에 타결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관세화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농림부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런 주장이 근거가 없다. 올해 안에 협상이 타결이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책임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관세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허상만 장관 : 그것은 정부 쪽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다는 각계 전문가들에게서 나온 이야기 같고요. 정부도 의무가 발생한다는 그 정도 이야기는 했습니다.

원래 아시는 바와 같이 WTO 농협 협상 자체가 전부 관세화로 가자는 것 아닙니까? 무역 장벽을 다 허물자고 한 것인데 우리는 안보차원에서 쌀 문제는 예외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견해는 만약에 이번에 유예를 더 못 받으면 금년에 협상을 시작해서 2004년에 끝내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못 끝내면 의무가 발행하는 것으로 유예 없는 관세 원칙으로 가는 것이죠.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박에스더 : 일반적인 견해는 올해 안에 협상이 타결이 안 된다면 관세화 유예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자동으로 관세화가 된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관세화를 하는 과정에 유예화를 해야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의 기본 원칙을 바뀌어야 될 수도 있겠네요.

허상만 장관 : 지금 현재는 협상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박에스더 : 어쨌든 이 문제는 다음 달이 되어야지 농림부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허상만 장관 : 네

박에스더 :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해서 답변하기 어려우신 상황인 것 같은데요.

허상만 장관 :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야겠는데요. 문제는 관세화를 가든 유예를 하던 간에 쌀 시장 개방 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쌀이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쌀 협상을 어떤 형태가 되든지 끝내고 앞으로 3년, 또 DDA 협상이 끝나는 2년, 이 5년이 우리나라 쌀로서는 중요한 고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짓게끔 특히 쌀농사만큼은 안심하도록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목표 값, 목표치를 설정 하려 합니다. 과거 일정한 기간 동안의 쌀값을 기준으로해서 목표 값을 정하고 직불로서 보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인들과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회, 설명을 통해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하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고

농업인들도 이 대책을 세우는데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쌀 개방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방은 이미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얼마를 더 내주냐 안 내주냐 문제니까 대책을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니까 참여해서 의견을 내주시고 만약에 대책이 부족하다고 하다면 그 때 농업인들의 주장을 정부에 요구하셔야죠. 이런 절차를 밟아서 금년 말까지 앞으로 5년 동안 우리 쌀농사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에스터 : 네 어쨌든 장관님 말씀은 관세화 유예가 되었던 관세화가 되었던 외국에서 들여오는 쌀의 양은 분명히 늘어날 것인데 그에 대한 대책은 충실히 마련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신데,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고정형직불제 하고 변동형직불제요 이것이 추곡 수매제와 공공비축제와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허상만 장관 :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직불 형태로 해서 쌀농사를 짓는 분들이 과거에 3년이라고 할지 이때의 쌀값이 보전이 된다면 사실상 추곡수매제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추곡수매제는 95년에 시작했을 때 1,000만석 정도 우리가 수매를 해줬었거든요.

금년에는 516만석 밖에 수매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생산을 독려하고 가격을 지지했던 정책으로서의 의미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대 환경에 맞게끔 새로운 형태의 소득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게 직불제입니다. 직불제가 농업인이 요구하는 수준을 채워 주냐 못 채워 주느냐에 달린 것인데 정부는 채워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에스터 : 고정형직불제라고 하면 어떤 정해진 가격에 정부에서 쌀을 사 드리는 것인가요?

허상만 장관 : 아닙니다. 지금 논 농업직불제라고 해서 농업 진흥 지역에 금년에 532,000원을 쌀농사를 짓는 모든 분들에게 나눠 드립니다. 이것을 고정형 직불제라고 이름을 바꾼다는 것이죠. 그런데 532,000원까지도 부족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직불형태의 532,000원보다 더 높은 가격을 일률적으로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쌀값이 과거 3년치 평균보다도 부족하다고 하면 부족한 부분은 더 채워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변동형 직불입니다.

박에스더 : 그러면 추곡수매제는 이제 안하시는 것인가요?

허상만 장관 : 그것은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만 이렇게 직불제가 완벽하게 되고 지금은 수매제 자체가 WTO 규정에서는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비축제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대개 600만석 정도는 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정도 수매를 일년에 300만석씩 해서 하면 600만석 안되겠습니까? 이런 형태의 고정형직불로 가는 것이 우리 쌀 장래를 위해서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박에스더 : 추곡 수매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를 하는 방침인데요. 그런데 쌀값이 하락하지 않을까? 영세농들은 타격이 클 것이다, 또 유럽 같은데서는 추곡수매제도를 완전히 없애지는 않고 시기에 따라서 활용을 한다, 그래서 남겨 둘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상만 장관 : 추곡수매제가 아니라 아마 직불제를 조정을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부족한 부분을 변동형 직불제로 보조해 드리겠다고 했죠? 지금 추곡수매 자체는 우리가 직불제를 이제 요구수준만큼 채워 드리려고 하면 추곡수매제에 금년에 들어가야 할 돈을 직불쪽으로 돌려줘야 하

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에스더 : 어쨌든 농림부의 입장은 추곡수매제를 단계적으로 없앤다는 것은 확보하고 그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공공비축제라든가 고정형 변동형 직불제를 마련해 나가겠다. 농민들 생각과 많이 다른 것 같네요.

허상만 장관 :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농민들 요구수준이 직불이 우리가 정부에서 드리는 직불이 수준이 일치하면 농업인들도 추곡수매제를 고집할 이유가 없죠.

박에스더 : 농민들이요. 지금 국민투표로 쌀 관세화 문제를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혹시 11월이 되면 아까 협상 내용 문제에 대해서 공개를 할 수 밖에 없다. 공개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공개를 한 뒤에 필요하다면 국민투표 같은 제안을 받아들이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허상만 장관 : 국민투표를 받아 들어서 우리 쌀 협상에 도움이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쌀을 개방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 마음대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WTO 가입국인 이상은 국가간 합의해서 결정할 문제인데 그런 절차를 본다면 국민 투표는 절차상으로 의미가 없는 것이죠.

박에스더 : 장관님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신데 말씀 하시는 게 더 어려운 것으로 들리거든요. 이 협상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가 어렵네요. 말씀 계속 들으니까요.

허상만 장관 :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고 하면 쌀 협상이 어떤 형태든 간

에 쌀 보전 대책을 만들어야지 않겠습니까. 정부 혼자 만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농민들과 합의를 해야 하는데 그렇고요. 또 한편으로는 쌀 협상을 해야 하는데 상대국들은 다 자기들 이익을 위해 하는 것이니까 어렵죠.

박에스더 : 알겠습니다. 실익을 꼼꼼히 따져서 해주시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허상만 장관 : 고맙습니다.

농업인의 날 의의 및 쌀농가소득방안

(KBS-1R, 『박에스더입니다』, 2004. 11. 11)

박에스더 : 5월 초부터 시작된 쌀 협상 종료 시한이 40여일 남았습니다. 지금 수확을 끝낸 농촌에서는 풍년제에서 볼 수 있는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깃발대신에 쌀 수입 개방 반대라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11월11일 오늘이 9번째 맞는 농업인의 날인데요. 농림부가 농업인의 날을 맞아서 쌀 농가 소득 안정 방안을 발표합니다. 허상만 농림부 장관이 지금 전화에 나와 계신데요 쌀 협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쌀농가소득안정방안'은 무엇인지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허 장관님.

허상만 장관 : 네

박에스더 : 오늘 9번째 맞는 농업인의 날인데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농업인의 날을 오늘로 정한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허상만 장관 : 11월 11일. 11일을 한문으로 표시하면 흙 토 자가 되죠. 그래서 11월 11일은 토월 토일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농업은 흙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흙과 불과분의 관계가 있고 계절적으로도 지금 농업인들이 농사를 다 짓고 수확의 기쁨을 나눠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96년부터 농업인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을 했고요. 금년이 9번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만이라도 온 국민이 우리 농업의 소중함과 농업인의 노고에 대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박에스터 : 11월 11일 그게 한자 11을 합해서 훗 토자 두개가 겹치는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그런데 농업인의 날을 맞아서 지금 같으면 수확의 기쁨을 누려야 할 때인데 농민들이 근심이 큰 것 같습니다.

쌀 개방 관련 협상 때문인데요. 협상 진행 상황들이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이제 정부에서 협상 진행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가질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협상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허상만 장관 : 금년 5월부터 양자 협상을 국가별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등 9개국과 6차 협상까지 마쳤는데요. 현재 쟁점이 되는 것은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하자는 것과 의무 수입 물량을 얼마큼 늘리느냐 하는 문제, 또 소비자 시판등을 놓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상대국들의 제시 조건은 우리들이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입니다. 상대국 요구 수준을 최대한 낮추는데 초점을 두고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에스터 : 저희 그 일전에도, KBS 농림부 출입 기자가 취재한 내용들이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미국이나 호주 등 8개 나라와는 쌀 관세화를 10년 동안 유예를 하고 그 대신 지금 4%인 의무 수입 물량을 8%로 늘리는 선에서 합의를 이뤘다는 이런 내용이 나왔던데요. 그 외에 다른 신문에서도 일부 보도가 되고요. 어떻습니까?

허상만 장관 : 언론에 저도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만 협상을 해 볼 수록 이요, 지금 막바지에 와 있다고 합니다만 상대국의 입장을 그렇게 쉽게 우리가 해석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만 상당히 접근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에스더 : 상당히 내용상으로 접근이 되고 있다. 그 방향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무 수입 물량을 늘리는 대신 관세화를 10년 유예하는 것. 그 대신 이제 수입한 물량. 지금까지는 가공 식품으로만 사용을 했는데 소비자들에게 시판하는 물량이 포함이 되는 것들이겠죠.

허상만 장관 : 의무 수입 물량과 기간과의 연계는 별로 안 되고 있고요. 오히려 시판 문제는 6월 협상 당시부터 줄기차게 이야기가 되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 수입 문제, 우리 시장에 판매하는 문제를 놓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농업인 입장에서 시장에서 쌀을 격리를 시켜 줘야 하거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에스더 : 시판을 다른 나라에서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군요. 관세화의 유예 조건으로.

허상만 장관 : 상대국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박에스더 : 그렇군요. 의무 수입 물량보다도 다른 나라에서 시판량을 늘리라는 요구가 강하다고 받아 드려야겠는데요. 중국과의 협상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관세화 유예는 5년 밖에 못 해주겠다. 그 이후는 나중에 생각하자.

그리고 의무 수입 물량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과의 협상이 가장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까?

허상만 장관 :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협상이라는 것이 국가간의 협상이 시간이 흐른 다음에 또 어떻게 변화될지도 모르고요. 중국에 약간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3일 전에 중국의 주 제네바 대사를 만났습니다.

제가 요구를 했죠. 결국에 한국과 중국은 농산물 뿐 아니라 모든 무역에

서 협조를 해야 하고 서로 공동 시장 아니냐. 큰 차이가 없는데 해결하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미 우리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결과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에스터 :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여론 수렴을 해 나가다 보면 결국 관세화 유예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이 유리할 것인가 아니면 이정도로 상대국들의 요구가 높다면 차라리 관세화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의견을 들을 텐데요. 지금 전문가 집단 같은 경우는 관세화 유예보다 관세화를 해서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8%를 의무 수입 물량으로 한다면 이게 너무 양이 많다. 10년 동안 이만큼은 그냥 관세화를 해서 문을 열어도 8%까지 올라 갈 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관세화가 유리하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허상만 장관 : 정부도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년간 관세화 유예를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 준 다음에 관세화 문제를 생각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농업인들 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결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상 진행 과정. 또 어느 쪽에 유리한지를 놓고 판단 기준이 되는 동등성 연구 결과도 발표하고 의견을 구해서 그런 다음에 정부 입장을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에스터 :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들이 내 놓은 연구 결과라고 하는 것도

공개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런 것을 공개하는데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국내의 쌀 소비가 줄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국제적으로 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8%로 수입 물량을 정해 놓은 게 나중에 한 10년 후가 되면 이게 8%가 아니라 우리 국내 쌀 소비의 10 몇 %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거든요. 쌀 소비가 이렇게 계속 줄다 보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하면 너무 관세화 유예만 기본 입장이라고 하는 것 보다는 다양하게 고려를 해야 한다. 관세화의 실익을 따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허상만 장관 :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은 줄기차게 과거 10년 동안에 4%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것보다는 더 많아 야 한다는 것이 상대국의 요구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한대로 지금 작년에 우리가 일인당 쌀 소비량이 84.2kg이었습니다. 매년 3kg씩 줄고 있거든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히려 수입량보다도 소비량이 줄어드는 것이 훨씬 많은 양인데 그런데 실제 우리가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가장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은 쌀입니다. 그래서 쌀 소비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박에스더 : 쌀 소비를 늘리는 문제인가요?

허상만 장관 : 소비가 감소되는 것을 막는, 소비를 80kg선에서 안정을 시키는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정확히 해 놓고 그런다고 해도 누구도 자신 있게 장래를 예측해보니까 관세화가 낫다. 쉽지 않은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더 고민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토론회 공청회를 한 다음에 그 의견을 놓고 수렴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에스터 : 어쨌든 두 가지를 포함해서 다양한 것들을 고민하는 선상에 놓고 계시겠군요. 무조건 관세화 유예 뿐 아니라 관세화 실익도 따지는 것을 고려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시판을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을 텐데 이게 관세화 유예 가장 큰 조건이라고 하니까요. 개방이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시판이 될 것이고 만약 관세화 유예를 할 경우에도, 시판은 어느 정도 물량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허상만 장관 : 지금 국내 수입은 국영 무역으로 국가가 수입하는 것으로 하고요. 외국에서 수입 할 쌀값이 국내 쌀값보다 낮지 않습니까? 이익금을 마크업 형태로 해서 정부에서 환수하고요.

시장에서 쌀값 차이를 줄이겠다는 것이죠. 우리의 쌀 시장을 안정 시키고 지금 협상이 안 끝나서 상대국에서는 수입량의 30%정도를 민간 시장에 판매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이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얼마정도를 시장에 내 놓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에스터 : 제가 관심이 많아서 계속 어려운 질문을 드리는데 이 협상 내용을 언제 공개를 하시나요?

허상만 장관 : 원래는 11월 17일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아직 조금 협상에서 어려움이 있고 마지막 절충을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달 말은 될 것 같은데 언제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

박에스터 : 이달 말 안에는 하는데 예상 했던 17일 보다는 늦어질 수 있겠네요. 관세화를 하든 관세화를 유예하든 어쨌든 쌀은 시중에 풀리게 되겠고 어느 정도 양은. 관세화를 하면 쌀이 개방이 되는 것인데 농민들 지금 농가 소득에 걱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농림부에서 쌀 농가 소득 안정

방안 발표하신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지요.

허상만 장관 : 결국에 이제 시장 개방 폭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고요 정부가 어떤 경우라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쌀농사만은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정책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선 목표 값을 정하고요 그 목표 값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전하는 것인데 목표 가격은 최근 3년 동안의 평균 산지 쌀값입니다. 거기에다가 논농업 직불제로 40만원 50만원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얻어지는 소득 효과를 보태죠. 그리고 작년에 520만석을 수매를 했는데 수매에서 얻어지는 효과도 합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80kg 한가마니에 17만원이 목표 값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 산지의 쌀값이 목표 값보다 하락하면 하락 부분을 정부가 보전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변동형 직불로서 더 채우겠습니다. 그래서 100% 채우는 것은 아닙니다만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쌀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지금 쌀 농가 소득 안정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에스더 : 쉽게 설명을 하면 80kg 에 17만원 목표를 정해 놓고 만약 산지 가격이 17만원 보다 낮으면 그 부분을 정부에서 돈을 주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허상만 장관 : 그렇습니다. 대개 지금 저희가 계산하는 것을 시산 해보니까 만약에 내년에 쌀값이 금년 11월부터 2월 까지 5%가 하락할 경우를 가 정해 놓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럴 경우는 3,000천 평 농사를 짓는 분에게 60만원을 고정형 직불로 드립니다. 그래도 이제 17만원에 도달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변동형 직불로 3,000평 농사를 짓는 분들께 15,900원을 더 드립니다.

그러면 목표 값의 98.2% 수준이 정부에서 보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다만 이것은 정부의 시안일 따름이고 이 시안을 놓고 앞으로 농업인,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정부의 최종안을 결정을 하고 국회의 논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에스더 : 근데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 것은요, 이런 것은 앞으로 도하개 발어젠다 협상이 마무리가 되면 이런 보조금을 주면 안 될 텐데 이런 보조금은 괜찮나요?

허상만 장관 : 지금 현재 우리가 주고 있는 논농업 직불제는 환경 직불제가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의 지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주려고 하는 고정형 직불은 생산 중립 형태의 직불이 되기 때문에 WTO 규정에 어긋남이 없어요.

그리고 변동형 직불은 WTO에서 허용하고 있는 AMS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박에스더 : 그런데 이것을 계속 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얼마동안 보조금을 주는 것인가요?

허상만 장관 : 정부는 쌀에 관한 뒷받침을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쌀 농사를 짓는 분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끔 좋게 만들고요, 환경적으로 신뢰 하는 그런 농산물도 생산하는 그런 체제로 가야 하는데 그런 기회를 우리가 갖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한 10년은 정부에서 뒷받침 해야 하고요, 10년 후의 상황 변화에 따라서도 쌀에 관한 한 정부에서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박에스더 :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쌀 협상 진행 상황, 그리고 농가 소득 안정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상만 장관 : 네 감사합니다.

쌀소득보전대책 및 새만금 사업 등

(KBS-1R, 『안녕하세요 손관수입니다』, 2004. 12. 1)

손관수 : 쌀 개방 협상 기한이 꼭 한달 남았습니다. 오늘 한·중간에 쌀 협상이 시작되는데요, 진행되는 상황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 등을 들어 보겠습니다. 허상만 농림부장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손관수 : 안녕하십니까?

허상만 장관 : 안녕하십니까?

손관수 : 오늘 협상이 베이징에서 열리지요?

허상만 장관 : 예.

손관수 : 현재 중국과의 쌀 협상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허상만 장관 : 우선 의무 수입량 수준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상대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소비자 시판 등 이런데서 이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손관수 : 중국이 요구하는 의무수입량은 얼마입니까?

허상만 장관 : 8-9%사이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손관수 : 소비자 시판문제까지 요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도 어려울 텐데요, 정부의 선택의 폭이 좁은 게 현실인데, 현재 정부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요?

허상만 장관 : 정부는 누차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세화 유예 연장을 기본으로 해서 유예조건을 최대한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바지입니다. 상대국들의 요구수준이 너무 과도하면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는 결과는 언젠가는 관세화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WTO체제인데, 농업에 미치는 부담이 지금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이것을 후대에 물려주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런 모든 점을 고려해서 협상 마지막을 진행하면서 공청회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의견도 수렴을 하고요, 전문가들이 동등성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쌀을 관세화 했을 때, 관세화 유예 했을 때, 어느 것이 유리 할 것이냐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여러 여건들을 고려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최종 입장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손관수 : 공청회, 토론회를 말씀하셨는데, 공청회도 조금 늦어진 상황이지요?

허상만 장관 : 지난 번 한 번했고요, 11월 30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좀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손관수 : 앞서서 말씀해주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협상이 잘 안될 경우에는 시한에 밀려서 타결을 짓지는 않으시겠다는 생각이시군요.

허상만 장관 : 예.

손관수 : 농민단체들은 지금 여러 시위 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만 국민적인 합의가 없다면 무효이다, 국민투표를 통해서 찬반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이러한 농민단체의 의견은 어떻게 수렴을 하고 계신가요?

허상만 장관 : 기본적으로 우리 쌀은 유예가 되던 관세화로 가든 간에 개방이 확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쌀 보전 대책이 중요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5월부터 시도단위로 농민단체의 의견을 수렴을 했고, 그리고 제가 직접 농민단체를 방문해서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는데 쌀은 이미 개방이 된 것이고요, 물량을 얼마나 늘리냐는 문제만 남았는데, 국민투표를 해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의견 수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손관수 : 쌀 소득 보전대책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습니까?

허상만 장관 :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안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저희가 쌀농사를 짓는 분들의 소득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쌀농사 지시는 분들이 적어도 10년간은 안심을 하고 쌀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을 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입니다. 이날 소득보전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기본 골격은 쌀 농가가 과거에 얻었던 수입을 기준으로 해서 목표 값을 17만 70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당년과 그해의 쌀값과의 차이를 80%까지 정부가 직접지불로 보전을 해줍니다.

그런데 목표가격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평균 산지 쌀값에다가 작년에 추곡 수매를 520만석을 했는데 이것이 시장 값보다 비싸지 않습니까? 이것의 소득효과 그리고 논농업 직불로 받은 수입 등을 전부 합하고 보니

까 17만 7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쌀값이 비교적 높았거든요. 만약에 이번 봄에 쌀값이 작년에 비해서 5% 하락을 한다면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98.2%까지 보전이 되어서 16만 7천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농업인들이 과수와 축산과 달라서 쌀농사를 짓는 분들은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뒷받침을 충분히 할 생각입니다.

손관수 : 앞서서 10년간은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하셨는데요, 10년간이라고 하는 결정이 개방의 파고에 대응할 수 있는 기간으로 설정이 된 것입니까?

허상만 장관 : 10년은 정부에서 뒷받침을 해 드리고요, 우리 쌀농사를 짓는 분들도 자구화 노력도 하고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10년간 정부에서 전문 인력도 양성을 하고 전업농도 양성할 방안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면 경쟁력이 생길 것으로 봅니다.

손관수 : 협상이 종료되면 그렇지만 농민들은 관세화로 바로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요, 정부가 혹시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허상만 장관 : 시안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9월까지 협상을 하고 나머지 3개월간 WTO회원국의 동의를 얻는 것이 저희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12월까지 협상을 마치고 짧은 기간이지만 동의를 얻어내야 하고요. 그러나 결코 서두를 계획은 없습니다.

손관수 : 그렇지만 한·중 쌀 협상이 혹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쌀 협상 자체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허상만 장관 : 협상이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면 관세화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손관수 : 그러면 전면 개방으로 가는 것인가요?

허상만 장관 : 예. 국내 쌀값과 국제 쌀값과의 차이를 관세로서 매기고 저희는 쌀을 들여오는 상황이지요.

손관수 :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군요. 오늘 베이징의 쌀 협상 지켜보도록 하고요, 농협 정책에 관해서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농민들이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서 개혁이 약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던데요, 어떤가요?

허상만 장관 : 지금 정부나 농업중앙회는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라랄지, 농업환경을 봤을 때 농협이 개혁해야 할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국회에 개혁법안을 제출했고 국회에서 1차 심의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업중앙회 회장이 상임이었는데 비상임으로 전환을 하고 대표이사 중심으로 갑니다.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요, 지방에 있는 일선 조합은 경영을 규모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이 1,335개가 되는데 면단위 조합까지 있거든요, 전문화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경제 사업 중심으로 체도를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제도 개선은 법으로 하고 법 이외의 실질적인 개혁을 하기 위해서 금년 말까지 정부와 농협이 힘을 합해서 개혁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개혁으로 우리 농업 협동조합이 사랑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로부터 믿을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겠습니다.

손관수 : 칠레와의 FTA는 이미 체결했고, 싱가포르와도 체결이 되었고

아세안과도 추진한다는 보도인데요, 농업부문이 시급하고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허상만 장관 :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부문에 대한 국내적인 배려와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이 협상 진행과정에서 농업에서는 민감한 품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세를 철폐 하는 기간을 유지하고 특별한 고려를 할 것입니다. 보안대책을 충분히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TA가 반드시 농업에 꼭 불리하게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산물이 수출되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요, 품질 고급화를 수출을 위한 요건이나 이런데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관수 : 특별팀이 구성되어 있나요?

허상만 장관 : 예. 재경부, 외교통상부, 농림부에 특별팀이 만들어져서 준비를 하고 있지요.

손관수 :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어 보겠습니다. 새만금 사업관련 어떤가요?

허상만 장관 : 새만금 사업은 89년에 전두환대통령이 계실 때 설계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91년부터 공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우량 농지를 확보하고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착수된 사업입니다.

지난 13년 동안 1조 5,800억이 투자된 사업인데 지금 공정으로 보면 92%가, 사업비도 85%가 투입된 사업입니다. 방조제도 세계에서 제일 긴 방조제

인 33킬로입니다. 이것이 2.7킬로만 남은 상황입니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물론 내부 이용을 위한 공사도 있지만요. 지방자치단체가 최근에 발표한 골프장 건설계획이 언론에 보도된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중앙정부와 협의가 없는 내용입니다.

손관수 : 지자체의 희망사항이군요.

허상만 장관 :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토지 이용은 정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쪽의 토지가 농업 이외에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산업용으로 또는 다른 용도로 쓰려면 성토를 6미터를 해야 합니다.

그 넓은 면적을 성토를 할 수 있는 방법도 흙도 가져올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용도로 우선 쓰고 10년 후에 후손들이 용도에 맞게 쓸 땅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동북아시아 국내적으로 서해안 시대의 국가 발전의 견인이 되는 아주 중요한 지정학적인 위치의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관수 : 아무튼 기본 취지대로 가신다는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상만 장관 : 감사합니다.

여 백

VI. 농정철학

여 백

□ 신뢰농정 · 참여농정 · 현장농정 구현

- 농업정책이 신뢰를 얻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함. (2003. 8. 15, 국장회의)
- 농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1년이 매우 중요하며 정책 수립단계에서 시·도 협의를 하고 정책이 수립되면, 시·군까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현장중심 농정을 펴기 위해서 각 국장, 과장, 직원들이 현장에 자주 가 보아야 하며, 어느 정도 빈도로 나갈 것인지 판단해 보기 바람. (2003. 8. 25, 국장회의)
- 농정이 신뢰를 받기 위해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소신 있게 정책을 전개해 나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 국장, 산하기관장 책임 하에 정책을 시행해야 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행정을 하기 바람. 사업을 집행하거나 문제 발생시 과 단위로 최소 한 달에 2번 이상은 현장을 확인하는 행정을 하도록 하고, 앞으로 적당한 시기에 이를 확인·점검 하도록 하겠음. (2003. 10. 6, 확대간부회의)
- 농업인들과 함께 하는 농림공직자의 달라진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반드시 현장 확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국장은 책임감과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람. (2003. 10. 11, 확대간부회의)
- 지금까지 제시된 세부원칙과 국제환경 속에서 우리 농업은 더욱 어려워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119조원이 효율적으로 쓰여야 함. 어려운 여건에서 농업인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자신감을 심어 줄 수 있도록 분야별(식량, 원예, 축산 등)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람
 - 최소 1달에 2번 이상은 현장을 방문해 현황파악, 의견수렴도 하고 분야별 대책에 대해 설명도 해서 농업인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2003. 12. 22, 확대간부회의)

- 지난 1년 동안 최선을 다했고 농민단체도 농업·농촌 종합대책이나 투
 용자 계획에 대해 큰 이견은 없다고 보는데 아직 농정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남아 있음. 농정에 대한 신뢰회복은 당장은 힘들더라도 우리가
 하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정도를 가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함. (2004.
 1. 5, 국장회의)
- 정부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는 평가를 받아야 하나 아직 부정적인 의견
 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농정에 대해 신뢰를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검
 토할 필요가 있음.
 - 신뢰는 결국 대화의 부족에서 생기는 것이며, 올해는 새로운 「농정의
 원년」인데 1년간 사업이 제대로 인식되고 뿌리내리는 토양이 만들어져
 야 함. 10년간 농업·농촌 종합대책 중 전업농 육성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개방에 관계없이 분야별(쌀, 원예, 축산 등)로 기술과 경쟁력을
 갖춘 전업농을 지원·육성. (2004. 1. 12, 국장회의)
- 금년은 「새로운 농정의 원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받는 농정이
 며 신뢰받는 농정을 위해서는 현장을 부지런히 다녀야 함. 작은 과라
 하더라도 월 2회는 현장을 가야하고 금년도는 더욱 현장 확인을 잘 해
 야 할 것임.
 - 지자체, 지방대학, 농민(생산자)이 함께 하는 농정을 펴야 하는데 이런
 것은 업무보고에 한 줄도 없었으며 생산자, 지방대학을 어떻게 사업에
 참여시키겠다는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기 바람.
 - 실·국별로 금년도 중요사업이 하나씩은 있어야 하고 그래야 별도로 진
 행상황도 체크하면서 추진해 나 갈 것임. 1년 동안 열심히 하면 우리부
 위상도, 농민들 태도도 달라 질 것이며 그런 기반 속에서 우리부의 위
 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2004. 1. 19, 국장회의)
- 신뢰 농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장 확인, 참여농정이 되어야 함. 각

- 국별로 확인해야 할 것, 대학교수가 건설적인 의견, 비판적인 의견을 내고, 사업 추진의 증인이 되어야 함.
- 교수, 지자체 등과 충분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사후 비판 등이 있을 때 같이 참여한 교수가 증인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각국 사업이 교수, 농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추진되어야 함. (2004. 2. 2, 국장회의)
 - 정책수립시 현장에 가보고 의견도 들어서 정책이 농촌현장에서 실현가능한지 반드시 검토하여 주기 바람 (2004. 9. 6, 국장회의)
 - 과거 농정의 신뢰를 잃게 한 책임이 정치권에만 있지는 않으며 농림부도 상당부분 책임이 있음을 반성해야 함. 정치권의 영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여론 조성이 필요함.
 - 농업·농촌 종합대책, 119조 투융자계획, 쌀농가 소득보전대책 등은 농림부의 의지대로 수립된 계획임. 10년 후에 또 정치권을 탓할 수는 없음. 실국장 책임하에 정책을 추진해야 함. (2004. 12. 6, 국장회의)
 - 농림공직자로서 농정 수행에 책임을 져야 함. 농업인의 참여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농정현장 방문 등으로 농업인과 공직자가 함께하는 통합의 농정을 구현해야 함 (2005. 1. 3, 국장회의)

□ 농업·농촌 종합대책 추진

- 향후 10년간 농업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마련해야 함. 농업, 농촌, 농업인에 대한 농정방향, 비전과 실현 가능한 투융자 계획이 작성되어야 함. (2003. 8. 15, 국장회의)
- 일부에서 농업 투자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데 올해는 종합대책 시행의 첫 해인 만큼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함. 지자체 관계자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현장에 직접 가서 의견수렴도 해야 하며 돈을 못 쓰는 한이 있더라도 엄격히 평가해서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함. (2004. 1. 5, 국장회의)
- 올해는 투융자 사업의 첫 해로 시·도에서 각 사업을 집행할 텐데 실·국별로 지자체, 생산자, 대학 등과 대화가 있어야 함. 담당 국장들이 도단위로 2번 정도 자리를 마련해 사업 취지, 내용 등을 설명하고 의견도 수렴해서 시행계획을 세부적으로 마련해 서로간의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함.
 - 금년 예산에 대해서도 사업논의와 구체적 계획에 대한 의견교환이 필요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논의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해당 실·국장이 시·도에 내려가서 유관기관(농업기반공사, 농협 등), 지자체, 수혜자, 지방대학 교수 등과 함께 올해와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을 한 후 의견도 수렴 하는 것이 필요함. 앞으로 네 주체가 함께 모여서 협의하여 농정을 이끌어 가야하며 각국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할 것임. (2004. 1. 12, 국장회의)
- 올 한해는 종합대책 시행의 첫 해로 매우 중요한 해인데 잘 추진해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장에서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농림부가 되어 주기 바람.

- 각 실·국에서는 올 한 해 동안의 종합대책, 대통령 업무보고 및 보고서 지시사항에 대한 실행계획 및 로드맵을 만들어서 철저히 준비하고 실·국별로 보고해주시기 바람. 실·국장뿐만 아니라 과장, 사무관 등이 역할을 분담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장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2004. 3. 10, 국장회의)
- 종합대책 및 투융자계획 추진에 있어 사업평가를 철저히 하고 성공가능성 있는 곳에만 선택적으로 집중 지원하여야 하며 사업 중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이를 중단하고 시정하여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추진하고 사업평가를 적당히 하는 시·도 및 공무원의 관행 개선이 필요함. (2004. 3. 22, 확대간부회의)
- 이제 농업인의 참여와 농업현장 방문을 중심에 두면서,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큰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야 할 것임. 무조건적 지원이 아닌 '선택과 집중'이라는 사업의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의식도 변화시켜야 할 것임. (2004. 5. 31, 국장회의)
- 올해는 농업·농촌종합대책 및 119조 계획 시행의 첫 해로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내년부터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람, 특히 금년 하반기는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농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종합대책 및 119조 사업계획의 집행에 있어서는 '선심사·후지원'의 원칙을 확실히 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있어서는 특히 시·군 단위의 지자체들이 이러한 집행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스스로 대책을 수립·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2004. 6. 14, 확대간부회의)
- 종합대책 세부시행계획은 업무 담당자, 담당국장, 외부 전문가까지 토론 등을 거쳐 연말까지 마무리해야 함. 특히 지방농대 교수와의 합동워크숍 등을 통해 농정방향을 설명하고 농업·농촌 종합대책 추진 참여 기회를 마련해야 함 (2004. 10. 18, 국장회의)

- 종합대책 세부시행계획과 119조 투융자 실행계획은 담당 실·국이 워크 샵을 통해 실천 가능한 구체적 계획으로 조정해야 함 (2004. 11. 22, 국장회의)
- 금년은 농업·농촌 종합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해임. 금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실·국장을 중심으로 과장·실무자와의 대화를 통해 방안을 모색하고 고민하여 잘 풀어가야 함 (2005. 1. 3, 국장회의)

□ 농촌마을개발 및 농촌관광 활성화

- 농촌을 문화공간 등으로 조성하기 위한 농촌개발의 Master Plan을 구상해야 할 것이며, 농촌관광마을사업은 문학과 등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전통문화와 농촌다움(Rurality)이 유지될 수 있는 정형(모델)을 만들어 추진하여야 함. (2003. 8. 6, 농촌개발국 업무보고)
- 주 5일제, 휴일·레저문화 확산으로 관광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농촌사회 유지를 위해서도 도시인구를 농촌으로 유인해야 하는데 도시근로자와 퇴직자를 포함한 다각적인 도시인구 유입 방안을 강구해야 함. (2003. 10. 6, 확대간부회의)
- 농촌의 Amenity 증진을 위해 우리 부의 녹색농촌 체험 마을을 비롯해 다른 부처에서도 많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중복투자나 농업인의 혼선도 초래하고 있음. 우리부가 선진국의 동향도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모델도 설정하여야 함. (2003. 11. 3, 직원조회)
- 농촌마을을 가꾸는 것은 농외소득증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고 범부처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이 점진적으로 추진되겠으나 앞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함.
 -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개발권역 지정과 관련해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 평가하는 것으로 하는데 평가위원 선정시 젊은 사람들도 많이 포함되도록 하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기 바람. (2004. 1. 12, 국장회의)
- 도시민과 함께 하는 농촌가꾸기에 전문가들(생태, 조경 등)이 많이 참여하고 전문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강구하기 바람. (2004. 1. 19, 국장회의)
- 도시민과 함께 하는 농촌가꾸기 사업을 농지제도 개선, 도시민 고향 되

찾기 운동 등과 연계 시켜야 함. (2004. 2. 2, 국장회의)

- '농촌마을 종합개발'은 총 7조가 들어가는 사업임. 농촌마을의 1/10이 개발되는데 여기에는 문화지식이 들어가야 함. 관광도 자연·역사를 상품화한 관광이 되어야 함. (2004. 4. 19, 국장회의)
- 농촌마을종합개발 자문단이 3년간 운영되도록 운영규정을 수립하고 전국적으로 지명도를 가진 명망가들이 포함되도록 하기 바람. 자문단이 '구례-하동-남원'을 돌아보는 일정을 마련하고, 향후 36개 지정권역을 방문하고 토의한 결과를 녹취하여 자료집으로 발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자문단 등이 기본계획 검토뿐 아니라, 집행상황의 모니터링 등에 계속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주기 바람. (2004. 4. 26, 국장회의)
-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농촌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사업이 추진되고 농촌을 농촌답게 가꾸는 것이 중요함. 농촌사람들이 소외된 채, 농촌 마인드가 부족한 지자체만이 중심이 되어서는 사업이 성공하기 어려움.
 - 현장방문 과정 및 토론내용을 정리·분석하여 앞으로의 접근방향(내용 및 지자체·주민 등의 역할 등)을 계획하여야 할 것임. 개발주체(정주권 개발은 농림부, 오지개발은 행자부)의 구분 등이 사업의 걸림돌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법개정도 검토하여야 할 것임. (2004. 5. 31, 국장회의)
- 농정의 중점대상이 농업에서 농촌으로 변해야 하며 농촌사회의 유지가 관건임. 농업의 비중은 축소되더라도 농촌인구는 유지되어야 함. 농촌의 교육여건을 도시수준으로 개선해나가고, 주5일 근무제 확산, 조기퇴직 경향에 따른 유동인구를 농촌으로 유인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2004. 12. 6, 확대간부회의)
- 농림부의 장기적 정책목표는 국민의 식량문제 해결, 농가의 적정 소득

보장, 농촌을 온 국민의 생활터전으로 보존 하는데 있음. 산재된 농촌 마을의 구조를 개선하여 집단화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여 농촌을 자연에 돌려주어야 할 것임. 농촌의 교육·의료 등 농촌 생활여건 개선도 이와 같은 농촌개발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할 것임. (2004. 12. 27, 국장간담회)

□ 친환경농업 및 농식품안전

- 앞으로 우리농산물은 품질로 승부 할 수밖에 없음. 품질고급화,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다소 원성이 있더라도 안전성검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003. 8. 11, 확대간부회의)
- 농산물 수입물량·품목 증가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고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 단속을 강화해야 함. 부적합한 농산물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성 조사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수입 유기 농산물의 유통에 대비하여 친환경농산물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입 유기 농산물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식품안전성 제고와 관련하여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가 순조롭게 추진되어야 함. (2003. 8. 1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업무보고)
- 식물방역관의 일차적인 임무는 검역현장에서 국내에 없는 병해충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임. 따라서 중요 병해충을 식별할 수 있는 전문 지식과 숙달된 검사기법을 갖추어야 하는바 자기개발을 위한 노력과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노력이 필요함. (2003. 9. 6, 국립식물검역소 업무보고)
-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와 개방화에 대비한 품질고급화의 지름길은 품종 개발에 달려 있음. (2003. 9. 6, 국립종자관리소 업무보고)
- 국내외시장에서 우리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해 소비자를 설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소비자를 포함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2003. 10. 6, 확대간부 회의)
- 농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농진청, 전문가, 소비자들이 함께 모여서 중

합적인 대책을 신중히 마련하기 바람. 생산과정의 중간점검을 비롯해 모든 소비자와 농업인도 공감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2003. 12. 22, 확대간부회의)

- 소비자들은 농산물 안전성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체제가 갖추어져야 하며 소비자 단체에게도 정부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알려야 함.
- 원산지 단속, 생산이력제 도입 등은 쉽지 않은 일이나 앞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이 매우 커질 것이며 계획을 세우고 착실히 실행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철저히 준비해야 함. (2004. 1. 12, 국장회의)
- 원산지 둔갑관련 농협에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농협만큼은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함. 인삼에 농약이 검출되어서는 안 되고 품질로 인정을 받아야 하며 한약방에 대한 원산지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함. (2004. 2. 2, 국장회의)
- '친환경농업/안전농산물 생산'은 소비자의 요구임. (2004. 4. 19, 국장회의)
- 환경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확산을 개방화 시대 우리 농업의 새로운 경쟁력의 근간으로 삼아야 함. 이를 위해 친환경 농업 육성과 안전농산물 공급에 농정의 기본목표의 하나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2004. 8. 26, 광주일보 인터뷰)

□ 농촌인력육성

- 농과대학 교수를 농촌지도 요원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우리부가 수당을 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2003. 9. 8, 국장회의)
- 3~6개월간의 유통교육 프로그램 마련, 유통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을 국내외 마케팅 선진지를 시찰하도록 하고 경제사업담당 농협조합장, 상무 등을 유통전문가로 육성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유통전문가를 적극 양성해야 함. (2003. 9. 8, 국장회의)
-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시대에 맞는 정책 전개를 위해 대학교수, 농업인, 소비자가 포함된 인력 pool 유지가 중요하며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이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 (2003. 10. 6, 확대간부회의)
- 전업농 육성, 시장에서 고부가가치 창출 등에도 인력 양성이 매우 중요하고 유통부문에서도 이를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해주기 바람. (2004. 1. 12, 국장회의)
- 각계각층의 관심이 큰데 전문과정 수료 후 농산물 유통에 대해 자신을 갖도록 해야 함. 유통교육 공모 강사진은 대학을 초월해야 하며 교수, 민간전문가 등이 강사로 참여 하도록 하여 전문가는 전체 교육원에 다니면서 강의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대학도 서로 하려고 할 것이므로 대학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한 지역에 하나만 하지 말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2004. 2. 2, 국장회의)
- '전업농'이 생산을 책임지는 체제 구축을 해야 함. 126만 농가 전체를 생각하는 농업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됨. 20만호 정도의 전업농이 생산을 책임지고, 나아가 수요를 확대하고 수출도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2004. 4. 19, 국장회의)

- 농업 외에서 교육을 시켜 정착시키는 방안, 농업 내에서 교육시키는 방안 등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교육예산을 효과적으로 집중시키는 방안, 대학 활용 방안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 해 주기 바람. (2004. 10. 18, 국장회의)
- 2005년에는 정예농업인력 육성에 획기적인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함 (2004. 11. 22, 국장회의)
- 인력육성대책 수립은 인력육성기관인 대학과 실무자간 논의를 통해 인력육성 방법·수단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확정하여야 함 (2004. 12. 20, 국장회의)

□ 협동조합 개혁

- 농협개혁의 기본방향은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임. 일선조합은 규모화를 통한 산지유통을 중심으로 개편을 해야 되고, 농협중앙회는 경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합사업의 지원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되어야 함 (2004. 2. 5, KBS-1R 시사플러스 인터뷰)
- 농협의 개혁에 있어 농협중앙회와 지역조합이 스스로 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며, 구체적 계획과 일정을 가지고 이를 추진하여야 할 것임. 이를 위해 언론, 학계 및 농민단체의 지원도 필요함 (2004. 6. 14, 확대간부회의)
- 농협개혁이 중요하고도 어려운 업무인 만큼, 전 농림공직자를 비롯한 산하기관 및 관련단체들까지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다 같은 의견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004. 6. 28, 국장회의)
- 협동조합이 농업인에게 실익을 주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은 농업계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임. 농협은 농업인이 있기에 존재의 미가 있는 만큼, 무엇보다 농협 스스로가 농업인에 봉사하는 조직으로 변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임 (2004. 8. 9, 농업전문지 인터뷰)
- 농협이 주인인 농업인의 의사에 반해 개혁을 소홀히 할 경우 정부로서도 강한 개혁의지를 갖고 농업인과 함께 개혁을 요구할 것임 (2004. 9. 10, 코리아플러스 인터뷰)
- 농협 조합장 보수를 은행 지점장과 비교하는데 조합원들에게 이익배당이 없는데 일부 임원들이 높은 월급을 받는 것은 문제임.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은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단, 신용부분의 이익이 경제사업으로 이전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2004. 11. 1, 중앙일보)

인터뷰)

- 협동조합 개혁에 있어 농업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협동조합 자체의 내부혁신이 가장 중요함. 내년 1월 중에 우리부와 농협이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도록 하기 바람 (2004. 12. 20, 국장회의)

□ 농지제도 개선

- 농지제도개선에 대한 철학을 정립해야 함. 농업진흥지역 및 진흥지역 밖이라도 우량농지는 절대 보전하고, 농지의 유동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농지은행제도가 필요함. 비농민 소유농지면적의 확대는 도시민의 농촌에의 관심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며, 부동산 투기가능성이 있다면 이의 해결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임. (2004. 3. 22, 확대간부회의)
- 농지제도는 농민의 입장에서 검토 되어야 할 것임. 증산목적에서 벗어나, 인구와 통일 등을 대비한 적정면적을 도출하고 정부가 농지를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우량농지는 보전하고 정비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그 외 농지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농업경제학자 뿐 아니라, 농민들과 일반경제학자의 의견도 반영해야 할 것임. (2004. 4. 12, 국장회의)
- 농민의 입장 고려하여 농지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 되어야 함. 도시자본이 농촌으로 유입되기 위해서 비농민의 농지소유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농업의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농민의 입장도 생각하여 농지제도를 개선하여 주기 바람. 건교부와 협의하여 농지규제를 단계적으로 풀어 주어야 할 것임. (2004. 4. 26, 국장회의)
- 농지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농지자문단 뿐만 아니라 생산자 및 농지소유자(농업인) 등의 의견도 수렴하여 고려해 주기 바람 (2004. 5. 17, 국장회의)
- 우리 농업은 생산비가 높고 규모가 영세해 가격 경쟁력이 낮음. 농촌이 지금처럼 활력이 없어서는 안 됨. 정부가 향후 10년간 119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현재 농지제도로는 힘들.

농지를 전문적으로 농사짓는 농민에게 집중시켜 주고 도시자본이 농촌으로 유입되어 농촌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2004. 11. 1, 중앙일보 인터뷰)

□ 농업클러스터

- 지역 산·학 협력 Cluster 조성방안 마련해야 함.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병행하여 우리부 나름대로 지역 농업Cluster 조성방안을 검토 해야 할 것임. (2003. 10. 20, 국장회의)
- 농업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계획은 잘못하면 현실과 괴리될 우려가 크므로 우리부 나름대로 지역 산·학 협력 Cluster 육성, 인재양성과 관련한 준비를 잘 해주기 바람. (2003. 11. 3, 직원조회)
- 지방의 농대교수 활용방안과 산학연 cluster를 조성해 지역농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 해야 할 시기임. (2003. 12 .22, 확대 간부회의)
- 장기적으로 ‘농촌의 인력(지도자) 양성’이 중요하고 지역의 클러스터와 연계되어야 함. (2004. 4 19, 국장회의)
- 지역농업클러스터는 지역농업을 계획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유통·마케팅을 중심에 두면서 지역농업을 책임져야 할 것임. (2004. 4. 26, 국장회의)
- 지역농업클러스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함. 내년부터 추진되는 지역농업클러스터에 대해 지침을 정확히 마련하여 주기 바람
 - 유통·판매·수출 및 새로운 품종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전문가의 참여에 있어 소속지역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며 외국의 전문가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주기 바람. 목표 수에 얽매이지 말고, 가능성 있는 것만 인정·지원하여 사업에 실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2004. 7. 26, 국장회의)
- 지역농업발전에 있어 지방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대학과 지속적인 연계를 강화하여야 할 것임 (2004. 11. 22, 국장회의)
-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 대상 선정 및 사업추진에 있어 생산자 조

직과 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아울러 지자체의 농업인력 확보문제, 대학참여 문제 등도 잘 검토하여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
(2004. 12. 27, 국장회의)

□ DDA 농업협상 및 FTA 추진

- 한·칠레 FTA 비준을 위해서는 결국 농림부가 대안을 제시하여 비준을 보여주고 농업·농촌 종합대책으로 설득해야 함 (2003. 10. 11, 확대간부회의)
- 한·칠레 FTA 비준을 연내에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중인데 농민단체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부대책과 비준의 필요성에 대해 협조를 구하는데 소홀함이 없기 바람 (2003. 12. 22, 확대간부회의)
- 한·칠레 FTA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과수산업의 앞으로 7년간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보고 바람. 각 품목별로 생산자·학계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설 및 품질 등에 대해 계획수립하고 시행되어야 함 (2004. 3. 22, 확대간부회의)
- FTA관련 지원은 정부에서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작목별로 스스로의 계획이 있어야 지원이 될 것임 (2004. 5. 17, 국장회의)
- 쌀, DDA협상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이에 대해 '정부는 최선을 다했음'을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협상과정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며 협상결과에 따른 대책을 철저히 수립·시행하는 것도 중요함 (2004. 7. 26, 국장회의)
- DDA협상 결과 및 대책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널리 홍보하여 정부가 협상에 있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준비·반영하였음을 알리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여 주기 바람. 국회, 국무위원, 시도지사, 시장·군수, 농민단체, 학계, 언론 등에 대해 널리 홍보하여 성의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함. (2004. 8. 2, 국장회의)
- FTA 추진에 있어 농업부문에 대한 국내적인 배려와 대책이 있어야 함.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철폐하는 기간을 유지하고 특별한 고려를

할 것임. 그리고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수립하고 있음
(2004. 12. 1, KBS-1R 손관수입니다 인터뷰)

여 백

VII. 농정일지

여 백

■ 2003년

날 짜	내 용
7.24	○ 허상만 제54대 농림부장관 취임
7.24~26	○ APEC 농업기술협력위원회(ATCWG)회의(발리) ○ 한·중·일 FTA 합동연구 워크숍(강원)
7.25	○ 축산물등급판정소 신축청사 준공
7.28	○ 새만금사업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민주당)
7.28~7.30	○ DDA 협상관련 Montreal 각료회의(국제농업국장) - 농업 등 DDA 협상 주요분야 주요국 입장 조율 ○ 아세안식량안보시스템(AFSIS) 구축관련회의(방콕)
7.29	○ 제3차 벼 공매 실시(452천석)
7.29~7.30	○ 한·싱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통상협력과장, 싱가포르)
7.29~7.31	○ '03 한국농업인경영인연합회 도별 농업경영인대회 - 충북·경북(7.29~7.31), 충남(7.30~7.31)
7.30	○ 상반기 정부업무평가 보고회(장관, 중앙청사) ○ 쌀소득보전직불제 약정체결 완료 : 165천농가 151천ha
7.30~7.31	○ 우즈베키스탄 농업연수생(243명) 첫 국내도착 및 교육실시 ○ 농업용수 수질개선 한·일 공동연구 세미나
7.31	○ 새만금 현장방문(장관) ○ 5~6월중 집중호우 및 우박피해 복구지원계획(안) 확정시달 ○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참석(장관, 국회) ○ 2003년산 하곡수매 완료 - 보리 425천석, 맥주보리 341천석 수매
8.1	○ 수입식물등의 검역병해충 추가지정 및 제외 고시 - 검역병해충 : 1,924 → 1,957종(추가 36, 제외3)
8.1~8.30	○ 제242회 임시국회
8.1~8.2	○ 참여정부 국정토론회(장관, 중앙청사)
8.1~8.17	○ 쌀소비 촉진 Love米 가족체험캠프 개최(장관) - 경주(8.1~3), 양평(8.8~10), 김제(8.15~17)
8.4	○ 농민단체장 초청 오찬간담회(장관)
8.4~8.9	○ 중앙재해대책본부 주관 중앙합동 피해 현지조사 - 7.21~25기간중 호우피해 큰 충남·북, 전북, 대전

날 짜	내 용
8.5	○ 대중국 수출홍보대사 위촉장(장관, 조수진 중국어어로빅스타)
8.5~8.9	○ '03 한국농업인경영인연합회 도별 농업경인대회 - 경기(8.5~7), 전북(8.6~8), 경남(8.7~9)
8.7	○ 아·태식물보호위원회(APPPC)회의(쿠알라룸푸르) ○ 농업성공사례연구보고회(장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주한 일본대사 면담
8.9	○ 돼지콜레라(경북 상주) 방역추진
8.11	○ 추석대비 민생안정점검 당정협의(국회) ○ 한여농 임원진 간담회(장관실) ○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시달
8.12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위촉장 수여 ○ 한국마사회 회장 임명장 수여(장관)
8.13	○ 인도적차원 대북분유지원(전지분유 100톤)
8.13~8.14	○ 농림업무심사평가위원 현장점검 실시(영주, 예천, 의성)
8.13~8.20	○ 국제통계기구(ISI) 제54차 회의(농업정보통계관)
8.14	○ 농어촌종합대책관련 관계장관회의(장관, 국무총리실) ○ 쌀 협상 실무준비팀 제2차 심의(통상정책관)
8.17	○ 한·칠레 FTA 관련 과수품목연합회 조합장 간담회(차관보)
8.17~8.23	○ APEC 제3차 고위급회의 및 관련회의(푸켓) - WTO 기여방안, 무역원활화 행동계획 및 선도사업 등
8.18	○ 제3차 고위당정 정책조정회의(장관) - 농업·농촌종합대책(안) 보고 ○ 호우피해(7.22~25) 복구지원계획 확정 시달 - 농경지 유실·매몰 180ha, 수리시설파손 104개소 등 ○ 농업인의 날 행사 기본계획 보고
8.18~8.22	○ 추석대비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추진 - 과일류 수급불안 우려, 주산지별 작황 확인 및 수급상황 점검
8.18~9.17	○ 가을철 전국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 실시
8.19~9.7	○ 우유홍보 램핑카 운영(Milk Car 홍보단)
8.19	○ 제4차 벼 공매 실시(570천석) ○ 사단법인 민족농어업연구소 설립 허가

날 짜	내 용
8.19	○ 한·칠레 FTA 관련 과수농협연합회 간담회(차관보),
8.20	○ 주요 농민단체대표 초청간담회(장관) ○ 배, 고추 등 작물생육상황 현지 점검(차관, 안성·음성) ○ 학교급식현황 및 우수농산물 사용 지원방안 보고 ○ DDA 협상관련 수입 6개국 공동제안 제출 - 관세상황 설정 및 의무적 TRQ 증량반대, 개도국 우대반영 등
8.25~8.30	○ '02 수해복구 미완공 사업장 중앙합동 점검
8.21	○ 돼지콜레라(충남당진) 방역 추진 - 비육돼지 전문사육농장 특별관리 지시
8.21~23	○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 참석(장관, 말레이시아) ○ 한·일 양자회담(8.22)
8.21~8.31	○ 우유홍보운동단 구성·운영(Milk Revolution)
8.22	○ 주한 몽골 참사관 면담(장관) ○ '04년산 보리 생산계획 보고
8.24	○ 벼 및 과수 생육상황점검 등 농정현장방문(장관, 아산)
8.25	○ 새만금 사업 서울행정법원 소송 증인 신문
8.25~8.30	○ 한·칠레 FTA 관련 시·도 순회설명회 및 의견수렴(농산물 유통국장)
8.26	○ 백제문화권 개발 지원 위원회 참석(국무총리실) ○ 축산단체, 축협조합장·축산관련학계 대표 면담(차관)
8.26~9.4	○ 추석대비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 추진, 축산물부정 유통 및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 농산물수급안정대책실 설치·운영
8.27	○ 농작물 생육상황점검 등 농정현장방문(장관, 거창) ○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대회(장관, 창녕)
8.27	○ 농업통상정책협의회(차관) - DDA 농업협상대책, FTA 추진현황 및 대책
8.27~9.2	○ 축산업등록제 시행방안 시·도 설명회 개최
8.28	○ 농정현장방문(장관, 경북) ○ 유기농 재배단지 방문 및 농업인과 면담(장관) ○ 호우피해(8.5~6) 복구지원 계획 확정 ○ 새만금사업관련 수질개선기획단 부단장 새만금 사업현장 방문

날 짜	내 용
8.19	○ 한·칠레 FTA 관련 과수농협연합회 간담회(차관보),
8.20	○ 주요 농민단체대표 초청간담회(장관) ○ 배, 고추 등 작물생육상황 현지 점검(차관, 안성·음성) ○ 학교급식현황 및 우수농산물 사용 지원방안 보고 ○ DDA 협상관련 수입 6개국 공동제안 제출 - 관세상환 설정 및 의무적 TRQ 증량반대, 개도국 우대반영 등
8.25~8.30	○ '02 수해복구 미완공 사업장 중앙합동 점검
8.21	○ 돼지콜레라(충남당진) 방역 추진 - 비육돼지 전문사육농장 특별관리 지시
8.21~23	○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 참석(장관, 말레이시아) ○ 한·일 양자회담(8.22)
8.21~8.31	○ 우유홍보운동단 구성·운영(Milk Revolution)
8.22	○ 주한 몽골 참사관 면담(장관) ○ '04년산 보리 생산계획 보고
8.24	○ 벼 및 과수 생육상황점검 등 농정현장방문(장관, 아산)
8.25	○ 새만금 사업 서울행정법원 소송 중인 신문
8.25~8.30	○ 한·칠레 FTA 관련 시·도 순회설명회 및 의견수렴(농산물 유통국장)
8.26	○ 백제문화권 개발 지원 위원회 참석(국무총리실) ○ 축산단체, 축협조합장·축산관련학계 대표 면담(차관)
8.26~9.4	○ 추석대비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 추진, 축산물부정 유통 및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 농산물수급안정대책실 설치·운영
8.27	○ 농작물 생육상황점검 등 농정현장방문(장관, 거창) ○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대회(장관, 창녕)
8.27	○ 농업통상정책협의회(차관) - DDA 농업협상대책, FTA 추진현황 및 대책
8.27~9.2	○ 축산업등록제 시행방안 시·도 설명회 개최
8.28	○ 농정현장방문(장관, 경북) ○ 유기농 재배단지 방문 및 농업인과 면담(장관) ○ 호우피해(8.5~6) 복구지원 계획 확정 ○ 새만금사업관련 수질개선기획단 부단장 새만금 사업현장 방문

날 짜	내 용
8.29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연구소 개소 및 민족농어업연구소 개소식 참석(장관)
8.29~9.2	○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관리실태 합동점검
8.30	○ 제7회 아시아 그린투어리즘 네트워크 한국대회 개최 ○ 제13회 일가상 시상식(기획관리실장) ○ 「농·정 실무협의회」 개최
8.30~9.8	○ 우리농산물·전통식품 직거래 행사
9.1	○ 인터넷 「농림부 뉴스」 서비스 개시 - 정책속도, 보도자료, 포토뉴 코너 등 신문기사형식 개시 ○ 새만금사업특별위원회 제5차회의 개최 ○ 주한 호주대사 면담(통상정책관) ○ 당면현안관련 관계장관회의(국무총리) - 농특세 지원예산 통합관리 방안 등 ○ 「삶의질향상특별법안」 관련부처 의견조정 결과 반영 수정 보고
9.1~12.9	○ 제243회 정기국회
9.2	○ DDA 농업협상관련 간담회(국제농업국장) - 농민단체장, 학계전문가 등 대상으로 칸쿤각료회의 농업계 입장 전달 및 토론
9.2~9.6	○ 8.23~8.25 기간중 호우피해 중앙합동조사
9.3	○ 전국농촌진흥기관장 연찬회(장관) ○ 시·도 농정국장회의(장관, 농림부 대회의실) ○ 주한미국대사(Thomas C. Hubbard) 면담
9.3	○ 주한 멕시코대사 면담(국제협력국장) ○ 패화석비료 토양개량제 공급 - '04년 경남도 석회 배정물량 28천톤중 10천톤공급
9.4	○ 제9차 농협개혁위원회 개최 ○ 한·칠레 FTA관련 시·도 농정국장회의 ○ 고추 수입안정을 위한 고추 전국협의회 운영위원회 개최(음성) ○ 마늘 정부비축물량 방출 - 비축마늘처리협의 결정에 따른 5,200천톤 방출

날 짜	내 용
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수급안정대책 추진 - 백색우유팩 용량증대, 낙농가 특별경영안정 지원사업 대출기한 연장 등
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 방문(장관) ○ 추석맞이 우리농산물 직거래 큰장터 방문(장관) ○ Love 米 홍보대사 위촉(장관) - 타악 김대환, 의복 이영희, 무용 정재만 ○ 주한이스라엘대사(Uzi Manor) 면담 ○ 「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개최(국무조정실) ○ 캐나다산 쇠고기 부정유통 관련 대책 추진
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명령제 지침 수립·시달 ○ 축산업등록제 낙농가 요구사항 검토 보완대책 수립 보고 ○ 돼지콜레라 예방대책 수립 보고 - 방역의식 홍보, 발생농장 과태료부과 및 살처분 보상금 차등지급 ○ 전통소싸움 경기시행허가 기본계획 보고
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 벼 냉해관련 현장방문 및 대책협의(차관)
9.10~9.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칸쿤 농림장관 회의참석(장관, 멕시코)
9.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석 “쌀 축제 한마당” 생방송(MBC) - 쌀의 사회, 문화, 환경적 중요성 및 쌀 소비 확대 홍보
9.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 “매미”로 인한 농작물 피해대책 추진 ○ 태풍 “매미” 피해 복구상황 현장방문(차관, 진주) ○ 태풍 “매미” 피해 복구상황 현장방문(차관보, 여수·고흥·보성)
9.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카이 총리 방한관련 총리회담(차관)
9.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 “매미” 피해 농가 지원 - 피해 경미과실 팔아주기 - 낙과품 가공용 매입(2,59톤) 및 자금지원(63억원) - 낙과피해 농가 일손돕기(16,526명) - 태풍피해농가 중 수급안정사업 참여농가 지원 - 딸기 등 비닐하우스 재해복구 지원조치 - 피해 우심지역 방역차량(1,862대), 인력(9,223명), 소독약(8톤)지원 - 피해 축산농가 사료 긴급지원(15톤) - 가축공제 가입농가 공제금 신속지원

날 짜	내 용
9.16~9.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해국제박람회 참가 - 홍보대사 조수진 활동 및 김치요리교실, 사이버 홍보관 운영 (한국관 29업체 참가)
9.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정현장방문(장관, 중부내륙 및 낙동강 유역, 울산)
9.18~9.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한국인의 날' 기간중 농산물 특판전 개최
9.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회 전국 한우인의 날 행사 개최(차관보, 경주)
9.20~1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산 보리 계약생산 약정체결 - 계약물량 178천톤(겉보리 28, 쌀보리 67, 맥주보리 83)
9.21~9.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회 아시아 양돈 수의사 대회(교육문화회관)
9.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국정감사 ○ 인터넷 "농립부뉴스"에 '농정리포터(명예기자)' 운영 추진 - 농립관련기관, 농업인 단체, 농업계 대학생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농정리포터" 선정·위촉
9.22~9.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호 각료급 경제공동위원회
9.22~1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국정감사 - 농림부 과천청사(9.22), 종합감사(10.10, 국회)
9.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성공사례 보고 ○ 정부보유 보리공매 - '03년산 겉보리 및 쌀보리 117천가마 ○ 한·불 경제공동위원회 참가 ○ 「5郡2村」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방안 보고
9.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민돕기한마음장터(장관, 양재동하나로마트) ○ 전국농민연대단체장 간담회(장관) ○ 제16기 양곡유통위원회 1차 전체회의(장관) ○ 칸쿤 WTO 각료회의 후속대책 관련기관 회의(차관) - 소관 부처별 DDA협상 및 FTA 추진 국내대책 · 농업농촌종합대책과 투융자 계획, 직불제 등 ○ 제1차 여성정책조정회의 참석(장관)
9.24~9.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욕 Korean Night 개최, 고국 농특산물박람회 참가
9.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DDA 자문위원회」 개최 ○ 태풍 "매미" 피해 복구 현장방문(차관, 남원) ○ 새만금사업관련 2차 항고심(서울고법)

날 짜	내 용
9.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사회 54주년 창립기념행사(장관, 마사회) ○ 제3회 영·호남 축산분야 공동심포지움(장관) ○ '04 정부쌀 품질고급화 추진계획 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4년산 정부수매 품종을 시·군별 3개이내 선정 ○ 한국포도생산자협의회 사단법인 설립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조금사업을 통한 자율적 수급조절 및 판매촉진 도보(41개) 주산지 대표
9.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 “매미” 피해복구 현장방문(장관, 여수, 보성) ○ 사유시설 복구비 개산급 1,765억원 지원 ○ 태풍 “매미” 피해시설 항구복구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경지 5,068ha, 수리시설 3,235개소, 방조제 82개소
9.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한 캐나다 대사(Denis Comeau) 면담 ○ '04년 토양개량사업 추진계획 수립·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량 674천톤(규산 368, 석회 306)
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칸쿤 각료회의 결산 세미나 ○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세부추진방안 수립 ○ 제9회 한우협회 창립기념식 및 한우인의 날 행사(장관)
9.30~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회 우수농축산물 산지·소비자 한마당 행사(aT 센터)
9.30~1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입법예고
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RS 방역 대책 민·관협의회(장관, 국무총리실)
10.1~1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PC 2003년산 산물벼 수매(1,935천석) ○ 가을철 농촌일손돕기 추진
1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 각료회의 후속대책 2차 회의
1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정지문단회의(장관, 농림부)
10.6~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시·도청 소재지 친환경농산물 홍보장터 운영
10.6~1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돼지콜레라 발생관련 예방접종 중앙합동 점검
1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협상관련 설명회(국제농업국장, 경북도청) ○ 대일수출 파프리카 안정성 관리요령안 일본 후생노동성 통보
10.7~1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ECD 농업용수 전문가회의 개최(국제농업국장, 경주)
10.7~1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유사랑대축제(농협 안성교육원)
1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농촌 종합대책 보고(국무총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DA 농업협상 동향과 전망(통상정책관, 한국농업전문학교)

날 짜	내 용
1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 “매미: 피해 원예·특작분야 피해복구비 지원 - 비닐하우스(1,705ha), 인삼시설(106ha), 벚꽃재배사(209동), 기타(2,491동)에 1,691 소요
1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종합감사 ○ 제16기 양곡유통위원회 2차회의 개최 ○ 수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개장 ○ 돼지콜레라 발생지역 방역조치 및 예방접종 지시(울주, 경주)
10.10~1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 서울국제원예기술전 개최(aT 센터)
1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순환형 축산분뇨처리대책 수립계획 보고 - 축산분뇨 자원화, 퇴·액비 이용 등
10.11~'0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농 캠페인」 TV 공익광고 개시
1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농업기술예측과 로드맵작성 추진상황보고
1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인삶의질향상법 실무조정회의(국무조정실)
10.14~1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EC 정상회의/각료회의/SOM회의(통상협력과장)
1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산농촌문화상 시상식(장관, aT센터)
10.16~11.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 국화 페스티벌 개최(코엑스)
10.17~1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민단체와 실무 워크숍 개최 - 농업·농촌발전 종합대책(안) 내용 협의
10.17~1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3서울건강식품박람회 우수소비홍보추진(aT 센터)
1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의 날 기념식(장관, 정부대전청사)
10.18~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3회 전국 국화경진대회(에버랜드)
1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 통상장관 면담 ○ Love 米 공익광고 캠페인 ‘장인편’ 방송 - 이영희, 정재만편 방송(SBS, MBC)
10.20~1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농산물(GAP) 홍보·판촉행사 및 세미나(양재동, 농협 하나로클럽)
1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보유 보리공매 - 상장량 141천가마 ○ 중국 국가양식국 부국장 방문 ○ 2003 사과경쟁력제고 시범사업 평가회 개최 - FTA, DDA 등 개방화 대응, 650명 참석

날 짜	내 용
10.21~10.25	○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지원실태 점검
10.22	○ 가을철 농촌일손돕기 실시(용인)
10.22~24	○ 아시아태평양 농정포럼 개최(장관, 수원)
10.23	○ 호우피해 농경지 등 농정현장방문(장관, 강원도)
10.23	○ 농업개혁 자문단 전체 2차회의 개최
10.23	○ GAP 파프리카 관리기준 등 통보
10.24	○ 농민단체 대표와 농정토론회(장관, 농업기반공사)
10.24	○ 최근 ‘DDA협상동향’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장 보고(통상정책관)
10.24	○ 양곡유통위원회 3차 전체회의 개최
10.24~10.26	○ 2003 농산물 파워브랜드 전시회 개최(aT센터)
10.25	○ 전주국제발효식품 EXPO(장관, 전주)
10.25	○ 가을하늘과 꽃돼지 축제(한국마사회)
10.27	○ 몽골식품농업부장관 한·몽 농업협력 약정서명
10.27~10.31	○ WTO/SPS 정례회의(제네바)
10.28	○ 베트남공산당 정치국원 겸 수석비서 면담
10.28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강의(장관)
10.28	- 농업정책의 과제와 발전방향
10.28	○ 농어업인삶의질향상 특별법 제정안 국무회의 상정
10.28	○ 농가부채경감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10.28	○ 「구제역방역실시요령(농림부 제2003-47호)」 제정고시
10.28	- 예방활동, 의사환축 및 발생시 조치, 종식후 후속대책 등
10.28~11.29	○ 가을철 대북비료지원 추진
10.28~11.29	- 복합비료, 요소 등 10만톤 지원
'03.10.28~	○ 감귤유통조절명령 발령
'04.4.30	- 1번과 이하, 9번과 이상 감귤 강제착색감귤 등에 대한 국내시장 출하 제한
10.29	○ 제3차 경제민생 점검회의 참석(장관)
10.29	○ 2003년 상추 우량품종경연대회 평가
10.29	- 17개 품종 참가, 상위 5개품종 선정
10.29	○ (사)새만금범국민협의회 설립인가
10.30	○ 중국검역총국장 면담

날 짜	내 용
11.14~11.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 서울국제식품전시회 개최 및 시상(장관, aT 센터) - 259업체(국내 211, 해외 48), 농·수·임산물 및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음료 및 주류, 식품관련 정보
11.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농지제도 개선방안 보고 ○ 친환경농산물 품평회 개최 ○ 한국유기농업 대회 개최
11.17~1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 통일원산지 회의참가(제네바)
11.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질랜드 농림부차관 면담(차관) ○ 정부보유 보리 공매 - (상장)1905천가마(겉보리 90, 쌀보리 100), (낙찰) 135천가마 ○ 마사회 특별적립금 사용방안 수립 ○ 소 부루세라병 방역대책 공청회 개최 - 예방접종 및 혈청검사 강화 등 주제발표 및 토론 ○ 식품안전종합대책 및 학교급식개선대책 관련 관계장관회의(국무총리)
1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회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시행계획 공고 - 1차 필기시험('04.2.8), 2차 실기시험('04.4.11) ○ 새만금사업 항고심 4차 심리 ○ 홍보지구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인가 - 친환경적인 공사시행을 위해 2010년까지 연장
11.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DA 농업협상 소규모 및 G-10 비공식회의 참석(통상정책관) ○ 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 수질대책 추진상황 현장 점검
1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정개혁자문단 제4차 회의 - DDA 대비 품목별종합대책 논의(쌀, 원예, 축산) ○ "Love 米 광고공모전 일간스포츠 광고최우수상 수상 ○ '03년산 RPC 산물벼 수매완료 - (계획) 1,35천석, (실적) 1,883 천석
11.2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우수농산물 전시판매(하나로마트)
1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소비촉진행사" 실시(축산국장, 축산신문사 주최)
11.23~1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7차 한일농림수산물기술협력위원회 개최(일본) - '03년 수행 24개 공동연구과제 실적평가 및 기술정보 교환
11.24~1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벼냉해 및 집중호우 피해복구자금 배정 - 복구소요액 225억원

날 짜	내 용
10.30	○ 벼 냉해 및 8월중 집중피해 복구지원계획안 수립 - 냉해 169억원, 집중호우 84억원
10.31	○ 태풍 “매미”피해 공공시설 복구지원액 확정 - 농림부문 4,073억원(국고 2,050, 지방비 2,030) ○ 대북 비료지원 1항차 출항 - 총지원 10만톤 중 요소비료 5천톤 출항 ○ 미곡종합처리장 경영혁신 추진계획 수립 - 선 경영평가후 지원체제로 전환, 우수 RPC 집중 지원, 경영효율을 위해 통합·합병 RPC 인센티브 부여 등
10.31~11.2	○ '03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 및 전시회(서울농업무역센터)
11.1	○ 제2회 남도농업박람회(장관, 나주)
11.3	○ 농림어업인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공청회(국회)
11.6	○ 세계농업기술상시상식(장관, 한국프레스센터) ○ 농림업무심사평가위원회 전체회의 ○ 새만금 사업관련 항고심 3차 심리
11.6~11.17	○ 중국 농업통계공무원 방한 연수(17명)
11.7	○ 농업·농촌재정투융자계획협의(장관, 재경부) ○ 농업인홈페이지 경진대회 시상식 및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경남 농업기술원)
11.8~11.14	○ 제35차 OECD 농업정책 및 시장작업반회의 참석(파리)
11.9	○ Love 米 마라톤대회(장관, 월드컵경기장)
11.9~11.21	○ 오사카 Foodex 기간중 한국산 닭고기 프로모션
11.7~11.8	○ 농정개혁 자문단 전체회의 개최(서울교육문화회관) - 농정비전과 품목별 종합대책
11.10~11.13	○ ASEM 농업협력 고위급회의 참석(차관)
11.11	○ 농업인의 날(장관, 농촌진흥청 대강당)
11.12	○ 제6회 대한민국농업과학기술상 시상
11.13	○ 제2회 농촌마을가꾸기경진대회 및 농촌체험수기 공모전 시상
3	○ 농업·농촌 중장기 투융자계획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보고
11.14	○ 페비닐·폐영농자재 수거 행사(화성) ○ '04 가을착수 경지정리 예정지조사 계획 시달 - 사업량 대구획 4천ha

날 짜	내 용
'03.12~'0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실류 해외 판촉행사 - 미국, 캐나다, 홍콩 등 1,000여개의 현지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판촉행사 실시
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포매립지 매매계약 체결 - 농업기반공사 매입 김포매립지 487만평 중 313만평 매각
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금속 오염농경지 토양개량 대책 수립·시달
12.3~1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년 직거래 추진실적 평가·시상
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4년 농림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접수기간 : '03.12.29 ~ '04.1.12 - '04년 기획연구과제 연구팀 모집 및 자유공모과제 등
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 제2감귤 가공공장 준공 - 처리능력 30천톤, 부지 7,419평, 시설 1,727평, 사업비 143억원
12.7~12.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의 다원적 기능관련 ASEAN+3 세미나(도쿄)
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DA/쌀재협상 대비 쌀산업대책 간담회 개최 - 전업농 및 RPC 관계자 대상
12.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주택 취득시 세금감면을 위한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 호주대사(Colin Stuart Heseltine)면담 ○ 4당 정책위의장 정책협의회(국회) ○ 농수산물 표준코드 개정 - 농수산물 관련 기관간 자료관리 표준화 및 정보공유를 위한 농림수축산물, 가공품 등 12,389개 품목 ○ 가금인플루엔자 의사환축 발생에 따른 대책추진(음성)
1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관련 연석회의(국회) ○ 「농정개혁자문단」 제5차 전체회의 - 농업·농촌종합대책 중 소득정책과 복지 및 지역개발분야에 대한 종합토론 ○ 「농촌사랑 공동선포식」 개최(농협유통 양재점) - 소비자, 농업인, 경제단체, 농협조합장 등 6,000명
1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농정심의회(장관, 대회의실) -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심의, 종합대책(안)과 '04년 예산(안) 보고 ○ 「農 사랑 詩 사랑 - 아름다운 농촌 詩」 우수작 5편 선정 - 우수작 선정 수상자 상패 및 부상 전달(12.19)

날 짜	내 용
12.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군장병위문(수도방위사령부) ○ 농작물재해보험 손실액 특별지원방안 보고 ○ 쌀농가 소득안정방안 관련 간담회(차관보)
12.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농촌종합대책(안) 설명 및 토론회(장관, 대전청사) - 시장·군수, 시·군의회 의장, 농정국장 등 350명 ○ 대북 쌀 40만톤 지원완료 ○ 시중유통 브랜드쌀 평가 결과 발표 - 소비자단체연합회 주관 12개 우수브랜드 선정
12.15~12.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 일반이사회 참석(제네바, 통상정책관)
12.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류독감 발생 농정현장방문(장관, 음성) ○ 보리 공매실시 - 계획 200천가마/40kg조곡(겉보리 100, 쌀보리 100) ○ 「농지제도개선추진현황」 국무회의 보고
12.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과계대학 학당 간담회(장관, 팔레스호텔) ○ 제1회 농식품안전자문단회의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본위원회 참석(장관) ○ 「한국 농업·농촌 100년사」 용역보고서 보고
12.18~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벼 추가 수매실시 - 추가 수매신청량 : 67천가마/40kg 조곡
12.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금인플루엔자 열린우리당 설명(국회)
1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정현장방문(장관, 배상면 주류연구소)
12.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금인플루엔자 관련 장관회의참석(총리실)
12.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닭고기·오리고기 시식회(장관 방배동 영양센터) ○ 농림부 가금인플루엔자 상황실 국무총리방문 ○ 가금인플루엔자 농정현장 방문(장관, 천안) ○ 제주도 소전염병 청정화 선언 선포식(제주컨벤션 센터)
12.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농촌종합대책토론회(장관, 대회의실)
12.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금인플루엔자 농정현장 방문(장관, 나주)
12.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관계장관회의 참석(총리실)
12.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금 인플루엔자 수급안정 대책 추진 - 살처분 보상금 127억원 지원 및 계안정 자금 지급지침 시달, 추가수매방안 검토

날 짜	내 용
1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민생점검회의(정부과천청사) ○ 양곡유통위원회 '04년산 추·하곡가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하곡(1등기준) '03년 대비 4%인하 건의 · 추곡 58,020원/40kg 조곡, 하곡 겉보리 30,230, 쌀보리 34,260
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3년산 추곡수매 완료(수매량 5,209천석) ○ '04 비료계정 운영방향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정운영 부족자금 차입방안 및 차입금 이자율 조정 등 ○ '04년 녹색농촌체험마을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조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국 32개마을 선정 ○ '04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계획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별 8개소 추천(제주·광역시 각 1개소)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방문(장관)

■ 2004년

날 짜	내 용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유소비확대를 위한 군납우유 급식용량확대 - 200ml/일→250ml/일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무식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의사 광우병 발생에 따른 조치 및 대책수립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신년인사회(장관, 교육문화회관) ○ '04 가을착수 경지정리에정지 조사설계 지시 - 조사설계사업량 4,917ha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Coex) ○ 「농지제도개선 추진현황」 국무회의 보고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인 신년교례회(장관, 마사회) ○ '04년 논농업직불제 중점추진 계획 시달
1.7~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대비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 추진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4년도 논농업직불제 추진계획 시달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하기관 기능혁신 방안보고 -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마사회 ○ '04 농약안전사용 교육·홍보 계획 시달 ○ 월동배추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수립 ○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성과 평가계획 시달
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 농업식품부 장관(Bobspeller) 면담 ○ '04 농림기술개발사업 과제 심사 - 기획연구 6개과 16개 연구팀, 자유응모 563건
1.12~1.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4년도 농업기계화 시책교육 실시 - 지자체 농기계 담당자, 농기계 사후 봉사업체 등 1,700명 대상
1.12~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4년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신청 및 접수
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보리공매 실시 - 상장량 185천가마/40kg(겉보리 95, 쌀보리 90), 낙찰량 100천가마 ○ 쌀 협상관련 농민단체 간담회(차관)
1.13~1.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 식량관계관 회의 ○ 가금 인플루엔자 관련 전국 닭·오리 농장 합동 소독실태 점검
1.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현장방문(장관, 양재종합유통센터) ○ CODEX(이사회) 개최 관련 관계부서 대책회의 - 인삼, 된장, 고추장 등 CODEX 신규규격화 포함 등

날 짜	내 용
1.14	○ 「농협개혁위원회」의 건의안 반영 농협법 개정(안) 마련
1.14~1.19	○ '04년 설맞이 우리농산물·전통식품 직거래 장터개설 - 전통식품, 농수산물, 농가 민예품 등 150개 업체
1.15	○ 정책고객관리시스템(PCRM) 구축 - 68개 정책분야에 대한 총 4520명 등록 ○ 「고창복분자주」 지리적 표시 등록(국내등록 3호)
1.16	○ 정부업무평가보고회(중앙청사)
1.17	○ 농촌개발사업의 종합적 전략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 농촌관광 등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도시민과 함께하는 농촌가꾸기 종합대책」 수립
1.19	○ 닭고기소비 촉진을 위한 닭고기체인점 업체 회의 ○ 제7회 우량품종경연대회 개최계획 수립 ○ WTO에 쌀 협상 개시 의사 통보
1.20~3.19	○ 우유 비수기 소비촉진을 위한 「114 안내전화」 공익광고 홍보
1.21~1.25	○ 설 연휴기간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1.21~1.22	○ 2004 “세계 쌀의 해” 특별기획 프로그램 방송 - 러브米 공익광고, 소비촉진 캠페인 추진
1.24	○ 가금인플루엔자 농정현장 방문(장관, 양산)
1.26	○ 가금인플루엔자 농가안정대책 추진 - 중고생 학자금 감면, 각종 제세 공과금 납부 연기 지원대상자 통보
1.27	○ 미국 농무부 차관(J.B Penn) 면담
1.29	○ 민관합동방역대책회의(중앙청사) ○ 새만금 사업 항고심 결정(서울고등법원) - 1심(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취소 ○ 농업전망 2004 발표대회(장관, aT 센터) ○ 2003년 경지면적 조사결과 발표 - 총경지면적 1,846.0천ha(논 1,138.4, 밭 724.2)
1.29~3.4	○ '04년 인삼안전성 조사요령 교육(도별 순회) - 인삼경작농가, 관계공무원, 제조업체, 인삼조합 직원 등
1.30	○ 인삼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간담회 개최(금산) - 2006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대비, 자율적 유통질서 확립 등 여건 조성
1.30~2.4	○ 대보름 맞이 원산지 둔갑판매 집중 단속 실시

날 짜	내 용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 안전 종합대책 세부 추진계획」 시·도 설명·토론회 개최 - 농산물 45개 과제로 세분, 세부추진계획 작성 ○ 재해대책경영자금 대출마감일 연장(1.31→3.31) - '03년도 태풍 “매미” 피해 및 벼 냉해농가 ○ '04년 과수가지검은마름병 방제지침 시달
2.2~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 농업협력위원회 개최(서울) - DDA 농업협상 동향 평가 및 양국공조방안 논의 - “쌀협력 분과위원회” 설치합의
2.2~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WEPF 설립준비회의 참석(농촌용수과장, 동경)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전염병 관련 관계부처 제도개선 대책회의(국무조정실) - 음식점의 식육 원산지표지제 도입, 공익수의관제도 도입 등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4년도 할당관세 추가적용 협의 - 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사료용 원료 10품목 추가확대 ○ '04년 고품질쌀 생산·유통대책 시달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정책자금관리단 설립위원회 구성 ○ 가축전염병 관련 관계부처 제도개선 대책회의(국무조정실)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업등록제 시행을 위한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 전원마을 조성사업 시행지침 시·도 시달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4년도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1차필기시험
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협상관련 보고 ○ 닭고기·오리고기 먹는 날(정부과천청사 구내식당)
2.11~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 일반이사회 개최(통상정책관, 제네바) - 농업위원회 의장선임 및 향후 협상방향 논의
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 브랜드육성 대책” 보고
2.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질랜드 농림 및 통상교섭장관 (Jim Dutton)면담
2.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의장 면담(의장공관) ○ 대한의사협회 닭고기 시식회(토속촌)
2.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칠레 FTA 국회비준 ○ 닭고기 소비촉진 전국 캠페인 실시 ○ 한·일 FTA와 한국농업 세미나 개최(aT 센터)
2.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만금사업 환경대책 실무위원회 개최(국무총리실)

날 짜	내 용
2.17~2.19	○ 방콕협정 제3라운드 협상 타결 - 농산물 중국 등에 대해서는 양허대상 대상품목에서 제외
2.19	○ 구제역 대책회의(대회의실)
2.20	○ 하림 농정현장방문(익산)
2.21~5.15	○ 봄철 산불대책상황실 설치 운영
2.23	○ 농업·농촌종합대책보고
2.23~2.25	○ 한·일 제2차 FTA 협상 참석(동경)
2.24	○ 축산물브랜드 육성 추진계획 수립보고
2.25	○ 강서도매시장 개장식 참석(장관) ○ 가금인플루엔자관련 소비촉진을 위한 과천청사 닭고기 시식회
2.26	○ 2004 농협정기대의원회 참석(장관) ○ '04년도 제9회 경매사 자격시험 실시(용산공고) ○ '04년 제1차 한·미 통상점검회의 - 검역, 조류독감 등 통상관련 안건 논의
2.29~3.3	○ APEC 고위관리회의 및 관련회의
3.1~3.5	○ 제1차 한·몽골 농업협력위원회(몽골)
3.1~	○ 닭·오리고기 안정성 TV 공익광고 실시
3.3	○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2차 10년 계획 수립 - 1차('94~'04) 계획에서 제외된 50호 이하 소규모 자연마을 대상, 3,000개소, 사업비 5,100억원(국고 4,080, 지방비 1,020)
3.4	○ 농지신탁·은행제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 ○ 제1회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2차실기 시험계획 공고
3.5	○ 전통민속주업계 간담회(장관) ○ 신지식인농업인장 수여식(장관, 농업연수부) ○ 지역재단창립식(장관, aT 센터)
3.6	○ 폭설관련 관계장관회의(중앙청사) ○ 쌀 협상토론회 개최(aT 센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관)
3.7	○ 농정현장방문(장관, 부여)
3.8	○ 가락동 도매시장 방문(장관) ○ ASEAN+3 심포지움 및 실무협의회(태국)
3.9	○ 재해특위관련 보고(장관, 국회)

날 짜	내 용
3.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총리 및 4당 정책위의장 정책협의회 ○ 농업인 고교생학자금 및 영유아 양육비 지원 확대 지침 시달 - 지원대상 : 농지소유 1ha미만 →1.5ha미만 확대
3.10~3.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4 동경식품박람회 참가 - 신선농산물, 김치, 인삼, 김 등 120개 품목
3.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 농림기술개발사업 기술료 사용계획 확정 ○ 폐업지원 대상품목의 대설 피해시 지원방침 통보 ○ '04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사업대상자 확정 - 68개 신청 지구대상 34개지구 확정·통보
3.11~3.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만금 환경대책실무위원회 수질분과 현지점검
3.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자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공포 - 종자관리사 자격기준 정비 및 유통질서 위반자 벌칙 강화 등
3.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화 및 미래사회 대책팀」 구성 및 운영계획 보고
3.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설피해현장 방문(장관, 창원, 논산)
3.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보전협회창립총회(장관, 서울프레스센터) ○ 농업기계용 면세석유류 공급요령 고시 - 연간 한도량 범위내에서 지역농협별 배정관리 ○ 세계 쌀의 해 세부추진계획 수립
3.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협상 대책 실무 추진단 1차 회의
3.16~3.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농촌종합대책, 쌀 협상 지역별 설명회 개최
3.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용공동브랜드사업 추진계획 보고 ○ Top-down 제도 도입에 대응, '05년 예산편성 추진계획 수립 시달
3.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브랜드활성화심포지움(장관, aT 센터) ○ 국경검역현장방문(장관, 인천항)
3.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금인플루엔자 방역 추진(경기 양주) - 발생농장 닭 살처분, 3km이내 닭·오리 살처분, 이동통제 및 특별관리지역 설정 등
3.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행사(과천청사) ○ 산불조심 캠페인(관악산) ○ 「수입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개정
3.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금인플루엔자 관계회의(장관)

날 짜	내 용
3.22	○ 재해대책유공자포상
	○ 가금인플루엔자 농정현장방문(장관,양주)
3.22~3.26	○ WTO 농업위원회 특별/정례회의
	- DDA 농업협상 관련 양자, 그룹 및 그룹간 회의
3.23~3.30	○ DDA/쌀 협상 종합대책 지역설명회 개최
3.24	○ 인터넷 중앙일보 On-Line 토론
3.24~3.26	○ 한·싱 FTA 제2차 협상 개최(서울)
3.25	○ 고품질쌀생산유통대책추진본부현판식(장관)
	○ 환경농업관련 보고
	○ 페비닐·페영농자재 수거의 날 캠페인 행사
3.26	○ 산불관계관 회의참석(장관, 삼척시청)
3.26	○ 산불진화시범훈련 참관
	○ 태풍 “루사” 피해지 산림복구 시찰(장관, 강릉)
3.27	○ 농정현장방문(장관, 대관령 원예농협 APC)
	○ 한우농가 방문 및 간담회(장관, 평창)
3.29	○ '04년 시장접근물량 증량 확정·시행
	- 옥수수, 대두, 감자 등 사료가공용 원료 및 수급조절용 13개 품목
3.29~4.1	○ 한·중 쌀 협력분과위원 개최
3.29~4.3	○ DDA/쌀 협상 종합대책 관련 간담회
	- 시장·군수 및 관련기관·농민단체 임직원 등
3.30	○ 사단법인 「한국농촌관광경영인협회」 설립허가
	○ 유전자변형공환경유해성심사 승인 보고
	○ FTA 특별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상정
	○ 친환경농업대상 제정계획 수립
	○ 남북 농기계 교류 협력사업 검토 보고
	-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생생시설에 지원
3.31	○ 농어업농어촌특별회의 본회의참석
4.1	○ 농업종합자금 사업시행지침 개정·시행
	○ FTA 특별법 시행령 공포·시행
4.2	○ 농과계 확장 간담회(장관)

날 짜	내 용
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설 복구 관련 관계부처 추가 협의 - 과수방조망 등 4개시설을 지원대상에 포함
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협상 실무 협상대책팀 회의(외교통상부) ○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지자체 추진실태 조사결과 보완대책 시달 ○ '05년 예산편성 지침 및 기금운용계획 시달
4.4~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리밭 축제(장관, 여의도공원 문화마당) - 쉼표 음악회, 보리화분 분양, 보리밭 사잇길로, 소원카드 매달기 등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9회 식목일 행사(장관, 국립수목원) ○ 제59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양평)
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업정책관련 보고
4.6~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농산물 박람회 남경신제품 전시회 참가 - 김치, 인삼 등 22개 품목
4.7~4.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노이종합박람회 참가 - 개성인삼농협 등 신선농산물, 음료 등 42개품목
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소비촉진확대 관련 2004년도 시중유통 브랜드 쌀 평가 ○ 도·농교류센터 개소식 및 1사1촌운동 활성화 계획 수립
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분뇨관리·이용대책 추진기획단 현판식 ○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개정 시행 - 사업별 기준요율에 대한 일정비율 특례조항 삭제 및 기준요율 하향 조정
4.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꽃박람회(장관, aT 센터) ○ 쌀 협상 실무협상팀 전체회의
4.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회 농산물품질관리사 2차 실기시험 ○ 가금인플루엔자 방역대책관련 전국 양계농가 소독철저 및 예찰강화 지시
4.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기반정비 시설표준도 제작·보급 ○ 4대강·새만금 유역 등 수계단위 대규모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방안 검토 보고
4.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의생산자리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4.13~4.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방역 ARS 홍보실시(47,479 농가·업체 등)
4.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직불제 확충방안」 연구용역 보고

날 짜	내 용
4.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장관간담회(과천청사) ○ '04 봄철 대북비료 지원추진(20만톤)
4.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 서부도매시장 개장식 참석(장관, 광주)
4.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단체대표 간담회(장관, 농업기반공사) ○ 우리가족부채파악운동캠페인 참여 ○ 고양꽃박람회(장관, 고양)
4.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리포수목원 준공식(장관, 충남)
4.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클러스터 보고 ○ FTA 이행지원위원회 참석(장관)
4.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실천다짐대회 시사회(장관실) ○ 제주도산 돼지고기 일본수출 검역 재개
4.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정현장방문(장관, 안성) ○ 농·축산물 원산지 비교 전시 및 소비자 교육 실시(한국마사회) - 국내외산 50품목 100점 비교 전시 및 소비자 단체 회원 400명 교육
4.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환21, 친환경 안전농산물의 시대로」 선포식(장관, aT 센터) ○ 농정현장방문(장관, 함평나비축제) ○ 쌀 협상 워크숍 개최(aT 센터, 농림부, 외교부 출입기자 대상)
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농업 클러스터 협의회(장관, aT 센터)
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농교류센터 개소식 및 1사1촌 자매결연식(장관, 농업기반공사) ○ 친환경쌀생산을 위한 돈 분뇨액비 시연회(장관, 이천 도드람양돈조합)
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협상연구회」 구성 창립총회 및 토론회 개최 ○ 감귤산업발전토론회(장관, 제주)
5.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협상 관련 국내대책팀 회의(재경부 등 7개부처)
5.10~5.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루세라병 검진우 거래제도」 관련 순회교육 - 전국 한우농가·지역축협·가축방역사 등 1,850명
5.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돈현장 농정간담회(장관, 홍성) ○ 고품질 쌀 생산 연시대회(안동)
5.12~5.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관련 한우농가 전국순회 교육
5.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농촌홍보관련 KBS 표창 및 시장간담회
5.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승의 날 강의(장관,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날 짜	내 용
5.14	○ 총채보리 수확 연시대회 개최(영강)
5.16~5.23	○ 미국내 광우병 방역실태 조사
5.17	○ 쌀 협상 국민대토론 개최(aT 센터)
5.18	○ 5월 보리 공매실시 - 상장량 314.5천가마, 낙찰량 161천가마
5.19	○ 주부교실중앙회 식생활개선실천결의대회(장관, 교육문화회관) ○ 재단법인 농업정책자금관리단 설립허가
5.19~5.21	○ 한·싱 FTA 제3차 협상
5.19~6.7	○ 지방언론 대상 쌀 협상 및 대책 순회 설명회
5.20	○ 2004년도 도·농교류협력사업 추진 단체 선정 - 공모지원 66개 단체 주 41개 단체 심의 ○ 쌀농가소득안정방안 중앙 토론회 개최
5.20~5.24	○ 제27차 아태지역 FAO 총회 및 농업장관 워크샵 참석(장관, 북경) ○ ACD 회의
5.20~10.15	○ 여름철 농업재해방지 대책 추진 - 농촌진흥청, 시·도, 농협, 농업기반공사에 재해대책상황실 설치·운영
5.21	○ 제1회 농산물품질관리사 2차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 살처분가축등보상금지급요령 개정고시
5.22	○ 쌀 관세화 관련 전업농 중앙회·도연합회 간부 간담회
5.24	○ FTA 지원특별법 시행규칙 및 소득보전직접지불 폐원지원 대상품목 고시
5.25	○ 칠레농업장관(Jaime Campos) 면담 ○ 쌀 관세화 관련 시·군 농정담당자, 농협 지역본부장·시군 지부장 연찬회 (350명)
5.26	○ 삶의질향상특별법, 비료관리법, '04 FTA 기금운용계획 국무회의 심의 ○ 우유사랑 대축제(낙농육우협회) - 우유요리 경연대회, 미술대회, 우유마시기 대회
5.27	○ 세계 쌀의 해 기념식(장관, aT 센터) - 주제 : 쌀은 생명이다(Rice is Life) ○ 제2회 농식품자문단회의(장관, 대회의실)

날 짜	내 용
5.28	○ 세계 쌀 산업발전 국제학술심포지움(장관)
5.29	○ 광양 농산물수출물류센터 개장(장관, 광양)
5.29~5.30	○ 도농교류 및 농촌지역개발자문위원회 농정현장 방문(장관, 남원, 구례, 하동)
5.31~6.6	○ WTO/DDA 농업특별위원회 참석(제네바)
5.31~7.31	○ 2004년산 보리수매계획 수립 보고
	- 수매물량 조곡 200천톤(겉보리 33, 쌀보리 77, 맥주보리 90)
6.1~6.20	○ 봄배추 산지수매·폐기 실시
	- 수매·폐기 120ha, 648백만원, 24개조합
6.2	○ 베트남 노동부장관(Nguyen Thi Hang) 면담
6.3	○ 국방대학교 강의(장관)
6.4	○ 사과산업 발전토론회(장관, 영주)
	○ 금호국제과학상시상식(장관)
6.5	○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수립계획보고
6.6	○ 농어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 시행령 공포·시행
6.7	○ 제17대 국회개원식(국회)
	○ 캐나다 알버타주 수상(Ralph Klein) 면담
6.8	○ 1사1촌차매결연발대식(장관, 홍천군)
	- 농협·경제5단체 주관
6.8~6.9	○ 쌀농가소득안정방안 지역순회 토론회
	- 충남·북(6.8, 대전), 전남·북(6.9, 나주)
6.8~6.10	○ 한·칠레 FTC(자유무역위원회) 회의 참석
6.8~6.14	○ 쌀 관세화 1차 협상결과 설명 및 간담회
	- 농협(6.8), 한농연(6.9), 쌀대책연구회(6.11), 전농·전여농(6.14)
6.8~6.24	○ 포장양곡표시제 특별단속 실시
6.9	○ 중앙공무원교육원강의(장관)
	○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장관, 대회의실)
	○ 2004 한국농업과학 심포지움 특강(장관, aT 센터)
6.10	○ 쌀전업농 육성지원 종합대책(시안) 중간보고
	○ '04 산지축산물 생산유통사업 지원계획 보고
	- 브랜드사업 지원(28개소), 인센티브자금 지원(3개조합), 축협 경제활성화 사업
	지원(48개소)

날 짜	내 용
6.10~6.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한·아세안 FTA 공동연구회 참석 ○ 한국 우수농산물 수출상담회(aT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업체 55개 바이어 1,00명
6.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안전강화대책회의(장관, 대회의실) ○ 강서시장도매인제 매장 개장(서울)
6.14~6.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관련 간담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도별로 수출업체·농가를 대상으로 애로상 등 의견 청취
6.15~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쇠고기 특별할인판매행사 및 시식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관련 138개 매장
6.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림준공식 참석(장관, 익산)
6.16~6.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개정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6.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 우수농수특산물전 상품설명회(장관, aT 센터)
6.17~6.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이페이 식품박람회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8개 업체(농산물20, 수산물 8), 31개 품목
6.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쇠고기소비촉진 시식회(장관, 양재동 하나로 클럽) ○ 열린우리당 의원 간담회(국회)
6.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안전종합대책 협의회(국무조정실)
6.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정개혁자문단회의(장관, 대회의실) ○ 농업재해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개정 고시 ○ 삶의질향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계획 마련
6.22~7.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 농식품 브랜드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및 전시회
6.22~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dex 집행위원회 및 총회 참석(제네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삼, 된장, 고추장 규격을 심의할 분과위원회 선정 심의
6.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벼 공매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량 600천석, 낙찰량 544천석
6.23~6.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차 한·일 FTA 협상(동경) ○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제네바)
6.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농가 소득안정방안 경남·북 지역순회토론회 ○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 역학조사위원회(최종) 개최
6.24~7.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도 농지관리위원 쌀 관세화 관련 교육(6회, 1,200명)
6.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경영체 활성화 방안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제지원, 진입제한 완화 등

날 짜	내 용
6.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업단지 농정현장 방문(장관, 양평) ○ '04년산 추곡수매 약정체결 및 선금지급 완료
6.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용면세유류 구매전용카드 관리지침 시달
6.28~7.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읍·면장 쌀 협상 특별교육
6.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회는 대표이사 중심의 전문경영체제, 일선조합은 전문화·규모화·경제사업 활성화에 역점 ○ 농어촌숙박시설(펜션) 관련 국무회의 보고 ○ 과수 품목별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주산지 토론회(단감, 창원)
6.29~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브랜드 사업추진 워크숍 개최(농업연수부, 300명)
6.29~7.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정현장방문(장관, 화성 21C 영농조합법인)
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창립기념식(장관, 농협대강당) ○ 인삼산업법 개정법률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검사품 유통시 처벌 강화, 시중 부적합품 압류·수거 등 부정유통 방지 ○ 농어민건강보험료 추가 경감대상자 확정·지원 ○ 「면세유류 구매전용카드」 도입 실시
7.1~7.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협상 관련 각 도별 읍·면장 설명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7.1), 충남(7.6), 충북(7.7), 경북(7.9), 전북(7.13), 경남(7.14), 제주(7.20)
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관세화 관련 쌀 연구회 토론회(무주)
7.4~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DDA 농업협상관련 G-10 각료회의 참석(장관, 제네바)
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농촌문화답사기 공모계획 수립
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정 협의(열린우리당사)
7.9~7.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차 한·아세안 FTA 공동연구회(서울)
7.13~7.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브랜드활성화 전국 순회 세미나 개최(축산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강원(7.13), 충청(7.15), 호남(7.20), 영남(7.21)
7.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회 농림축산물 수출탑시상」 및 수출대책회의(장관, aT 센터) ○ 농촌지역개발 실무자문위원단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경기, 강원)

날 짜	내 용
7.14~7.18	○ WTO/DDA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참가(제네바)
7.14~8.15	○ 쌀 홍보 관련 '농촌체험캠프' 실시(1천명)
	- 리더캠프(7.14~16, 130명), 가족캠프(7.21~8.15, 200가족)
	· 보은(7.21~23), 경주(7.28~30), 양평(8.7~9), 원주(8.13~15),
7.15	○ 농정현장 체험학습프로그램 수립·시행
7.19	○ 인삼, 된장, 고추장의 codex 규격안 제출
7.20	○ 농지제도 개선방안 국무회의 보고
	○ 꿀 홍보 관련 양봉농가 농축산경영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대환대출 실시
7.20~7.30	○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및 일반이사회 참가(제네바)
7.20~7.31	○ 화훼농가돕기 장미 특판행사
7.21	○ 농협법 개정관련 공청회(국회의원회관)
	○ 쌀전업농육성 종합대책 수립
7.21~7.23	○ 한·싱 FTA 제4차 협상(제주)
7.21~8.18	○ 초·중등학생 대상 「식물검역 체험행사」 개최(400명)
7.23	○ 농어업농어촌특별회의 본회의 참석(장관)
	○ 아산방조제 배수갑문 확장 예비타당성조사 중간 보고
7.26	○ 농지제도 개선방안 및 농지법 개정안 공청회(농업기반공사)
	○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 종합대책 설명회(차관)
	- 시·도, 생산자, 소비자, 학계 등
7.26~7.30	○ 지역개발 주체역량 강화 마을리더/시장·군수 워크숍 개최
	- 경기·강원(7.26), 충청권(7.27), 호남(7.29), 영남(7.30)
7.27	○ 멕시코산 수입쇠고기 검역중단 및 출고정치 조치
7.27~7.28	○ WTO/DDA 일반이사회 참가(제네바)
7.28	○ DDA 초안관련 초찬간담회(국회)
	○ FAO 디우프 사무총장 면담
7.28~7.30	○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재해 현장 방문
	- 새만금현장, 광양신항, 부산신항, 유기농 단지 등
7.30	○ '03~'04년 가금인플루엔자 발생 역학조사 결과 보고
7.31	○ 부채대책 신청기간 연장
	- 중장기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상호금융 대체자금 추가지원(9.30일까지 연장)
	- 연대보증피해자금 상환기관 연장(12.31일까지)

날 짜	내 용
8.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지역 혁신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장관, 원주) ○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장관, 농림부)
8.21~8.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농촌지역 개발자문위원 현장방문(장관, 단양, 안동, 문경)
8.23~8.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차 한·일 FTA 협상(경주)
8.23~8.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2차 AARDO 집행위원회 참석(가나)
8.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 국민연대주관 「2004 쌀 협상의 진로」 토론회 ○ 가축방역종합대책 발표
8.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지역 혁신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장관, 제주)
8.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술 페스티벌 기념행사(장관, 인사동, 아트센터)
8.27~8.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차 한·아세안 FTA 공동연구회 참석(자카르타)
8.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농정국회의(장관, 대회의실)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개선방안 보고
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50회 정기국회 개회
9.1~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닐라 식품박람회 참가
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협상 국내대책 보고
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법 개정안 공청회
9.6~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멜번식품박람회 참가(오스트레일리아) - 10업체 36개 품목
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우협회 창립기념식 및 한우인의 날 행사(차관, 하동)
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확후 관리기술 표준메뉴얼 발표 - 양파, 양상추, 파프리카, 단감 등 4개 품목
9.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닭고기 및 계란 소비홍보 행사(서울 명동)
9.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차 한·미 쌀 관세화 관련 협상(워싱턴)
9.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인삼·약초요리 경연대회 개최(금산)
9.13~9.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벼 학술회의(장관, 교육문화회관) - 주제 ; 인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지향적 쌀 생산기술 논의 · 식량안보, 친환경, 부가가치 증대,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4개분야
9.13~9.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4 아시아·태평양 종자협회(APSA) 총회
9.13~9.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석대비 농축산물 수급안전대책 추진 - 쌀, 쇠고기 등 10개 중점품목 등 수급안전대책 및 농산물원산지 표시 일제단속

날 짜	내 용
9.13~1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석대비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실시 ○ '05년산 보리계약 생산 약정체결 추진 - 계약물량 191천톤(겉보리 31, 쌀보리 74, 맥주보리 86)
9.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SA 서울총회(장관, 잠실 롯데 호텔)
9.14~9.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해식품박람회 참가(30업체)
9.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벼 예상량 조사 ○ 도·농 상생교류 촉진대회(구미) ○ 제1회 코리아플라워 페스티벌 개최
9.15~9.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 소비확대를 위한 대국민 홍보(농협 양재동 하나로마트) - 세미나 개최, 배요리 시범, 배 가공품 전시·판매
9.16~9.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과학기술대전(장관)
9.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사랑 국회장터 개설(여의도 둔치운동장)
9.17~9.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석맞이 전통식품 직거래장터 개최(aT 센터)
9.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해현장방문(장관, 제주)
9.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석 농산물 수급점검(장관, 강서 도매시장, 고양물류센터) ○ 가을철 영농기 농촌일손돕기 계획 시달
9.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농업클러스터 워크숍 개최(장관, 안면도) ○ 농정현장 방문(장관, 예산)
9.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석선물 전달식(장관)
9.22~9.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칠레 FTA 상품무역위원회 및 SPS위원회 참가
9.23~9.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0차 FAO 식량안보 위원회 참가
9.23~9.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DDA 농협협상 정례회의 참석(제네바)
9.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정현장방문(장관, 파주)
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마사회 55주년 창립행사
10.1~1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PC 2004년산 추곡수매 실시 - 약정수매량 4,937천석 중 산물벼 수매량은 1,600천석 ○ 가을철 영농기 농촌일손돕기 추진
1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감사(대회의실)
10.4~1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싱 FTA 제6차 협상(싱가폴)
1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전문교육과정 교육생 토론회(장관, aT 센터) ○ 한국농업전문학교 초청 특강(장관, 대강당)

날 짜	내 용
8.2~8.13	○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용자 추가 신청 공고
8.3~9.2	○ DDA협상 기본골격 설명회 및 간담회 - 전업농중앙회(8.3), 농협(8.24), 한농연(8.26), 전농(8.27), 전업농(9.2)
8.4	○ 새만금 토지이용계획보고 ○ 한·ASEAN FTA 공청회 ○ 축산물의표시기준(포장육) 개정고시 ○ 축산물가공처리법령 개정 시행 - 자체위생관리기준 의무적용 대상 모든 작업장 및 업소로 확대 ○ 육우고기 요리전시 시식회 및 할인판매
8.4~8.6	○ 제9회 전국농업경영인 대회(장관, 안동)
8.9	○ 새만금소송관련 국무총리보고
8.10	○ 쌀 협상 관련 수매제, 공공비축제 등 양정제도 개편 보고
8.11	○ '04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 지도자 과정 교육계획 수립
8.11	○ 제3회 농촌마을가꾸기 경진대회 개최계획 공고
8.11~8.13	○ 한·EFTA FTA 제1차 공동연구회(제네바)
8.11~8.31	○ 전업농 주관 쌀 전업농 육성 종합대책 지역별 순회 토론회 개최 - 경북(8.11), 전북(8.17), 강원(8.20), 경기(8.25), 충북(8.26), 경남(8.27), 충남(8.30), 전남(8.31)
8.12	○ 농민신문창간 40주년 기념식(장관, 세종문화회관) ○ 김포원예단지조성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 최종보고
8.13	○ 21C 농정포럼(장관, aT 센터) ○ '04년산 보리 수매 완료 - 수매 계획 200천톤(겉보리 33, 쌀보리 77, 맥주보리 90), 수매실적 181천톤 (일반보리 107, 맥주보리 74)
8.16	○ 농어촌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총회(장관, 국회 헌정기념관)
8.16~8.20	○ 초등학교 교사 농촌체험 행사(여주)
8.16~9.15	○ '04 가을철 전국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
8.19	○ 쌀 관세화 관련 농민단체장 간담회(장관, 대회의실) ○ 쌀 관세화 관련 도 농정과장 회의(차관보) ○ 우리술 페스티벌 자문회의(장관)
8.19~8.26	○ 축산물브랜드 전문판매점 개장행사

날 짜	내 용
1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보호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표 - 동물학대행위 처벌강화, 반려동물 판매업 및 사육자 등록제 도입 등 ○ 수출농산물 공동대표브랜드(Whimori) 런칭쇼(동경)
10.6~1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DDA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제네바) - G-10, G-33 그룹활동 및 EU, 개도국그룹 공조방안 모색
10.7~1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차 ASEAN+3 농림장관회의참가(미얀마) - 벼농사·물관리 자동화 연수과정 신규제안 등
1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정회의(국회) ○ 캐나다 농식품부 장관 면담(장관)
1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산 농촌문화상 시상식(장관, aT 센터) ○ IUFRO 학술심포지움(장관, 교육문화회관) ○ 감귤 유통조절명령제 추진 - '명령기간 및 대상지역 : '04. 10.14~'05. 4. 30, 전국
1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상경제연구원 초청 특강(장관, 한국일보)
10.13~1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EFTA FTA 제2차 공동연구회 참가(서울)
1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농촌문화답사기 시상식(장관, aT 센터) ○ 공동마케팅조직 선정 공고 - 무이자 자금·판촉비·운영비 등 지원 및 공동선별기 지원 등 우대
1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업대상 사생대회·백일장 개최(양평)
10.15~1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잡사박물관 개관식(장관, 청주) ○ 농업·농촌종합대책 워크샵(장관, 농업연수부)
10.15~1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5회 전국 국화경진대회 개최(서울대공원)
10.16~1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유 소비촉진홍보 행사 개최(서울대공원)
10.16~1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 원산지 협상 참가(제네바)
1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봉인의 날 행사(장관, 담양)
10.17~1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리 식품박람회 참가
1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한미국대사 Hill 면담(장관)
10.18~1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EAN+3 농업금융 워크샵 개최(서울)
1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농연 방문(장관) ○ 조류인플루엔자 예방대책 관련 시·도 농정국장회의(장관)

날 짜	내 용
10.19~10.22	○ 제37차 OECD 농업정책 및 시장합동작업반회의 참석
10.21	○ 전통식품 Best5 선발대회(장관, aT 센터)
10.21~10.23	○ 제7회 한우능력평가 대회 개최(aT 센터)
10.21~10.23	○ 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 및 전시회(장관, aT 센터) -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시연, 축산물브랜드 요리대회 등
10.22	○ 종합감사(국회)
10.23	○ 농촌 어메니티 환경설계 공모전(장관, aT 센터)
10.23~11.7	○ 제3회 사과와의 날 행사 개최(마로니에 공원)
10.23~11.7	○ 한국식품 로드쇼 개최 - 동경(10.23~24), 오사카(10.30~10.31), 삿포로(11.6~11.7)
10.25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국무총리 보고
10.25~10.27	○ 아시아·태평양 수의사총회 개최(서울)
10.26	○ 인삼검사필증 공모 심사계획 수립
10.27	○ 당정간담회(국회)
10.28	○ 전업농중앙회 방문(장관)
10.28	○ 미 농무부 차관 면담(장관)
10.28	○ '04 우수농축산물대전(장관, aT 센터)
10.28	○ 농단협 방문(장관)
10.28	○ 농촌지도자대회(장관, 수원)
10.28~10.29	○ 한·싱 FTA 실무협상(방콕)
10.29	○ 한국영농학생진전대회(장관, 강진)
10.29	○ 제3회 농업박람회(장관, 나주)
10.31	○ LOVE 米·농촌사랑 마라톤대회(장관, 월드컵경기장)
10.31~11.4	○ 제6차 한·일 FTA 협상 개최(서울)
11.1	○ 여성농업인 정책토론회(장관, 국회의원회관)
11.2	○ 양곡관리법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11.2	○ 농어촌민박사업 관리강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발표
11.3	○ '제1회 돼지고기 축제행사(장관, 잠실 주경기장)
11.3	○ 쌀농가 소득안정 및 쌀산업 국내대책 관련 당·정협의
11.4~11.7	○ 2004 서울국제식품전시회 행사 개최(장관, aT 센터)
11.4~11.7	- 300여개국 208개 업체

날 짜	내 용
11.5	○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행사(장관, 과천청사)
11.6	○ 주요국 주 제네바 대사 면담(장관) - 미국·EC·일본·중국·호주대사, WTO 사무국장
11.7	○ 당·정·청 경제워크숍(장관, 중앙공무원교육원)
11.8	○ 우수농산물 한마당 큰잔치(장관, 성내동)
11.9	○ 제10회 세계농업기술상 시상식(장관, aT 센터) ○ 한국 4H 창립50주년 기념식(장관, 올림픽파크텔) ○ '흙의 날' 기념식 및 심포지움 개최(차관) ○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대책 국무회의 보고
11.10	○ 「쌀농가소득안정방안」 정부시안 발표 - 목표가격제 실시 및 양정제도 전면 개편 등
11.11	○ 농업인의 날(장관, 코엑스) ○ 시중유통 브랜드쌀 평가 및 소비자실천결의 대회
11.11~11.14	○ 우리농 엑스포 행사 개최(코엑스)
11.12	○ 경제장관간담회(재경부) ○ 마산 농산물 수출물류센터 개장 ○ 제24회 농어촌청소년대상 시상식(차관, 서울신문사 주관)
11.12~11.17	○ 서울 국제농업기계박람회(장관, 코엑스) - 18개국 269업체 3,107점 전시 및 학술 심포지움
11.13~11.25	○ 가을무·배추 수급안정을 위한 수매 추진 - 수매량 : 가을무 26천톤, 가을배추 52천톤
11.14	○ 제3차 농촌지역개발 자문위원단 농촌마을 방문 - (장관) 경기 이천, 강원 화천
11.15~11.19	○ WTO/DDA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참석(제네바) - 농업위 Groser의장 주재 기술적 협의 및 그룹간 비공식 협의
11.16	○ 페비닐 및 폐영농자재 수거의 날 캠페인(화성, 120명)
11.17	○ 쌀 협상 최종입장 결정관련 국민대토론회 개최(농협 서울지역본부) - 농어업농업촌특별대책위원회·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관, 농업인·농민단체, 소비자·소비자단체, 학계 등 250여명 참석
11.17~11.21	○ 제1회 「'04 대한민국 농수산식품 대전」 행사 개최 - 농수산식품, 건강기능보조식품, 지자체 특산물 등

날 짜	내 용
11.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TV 대추나무사랑걸렸네 제작팀 장관사상 ○ 우유 소비촉진을 위한 세미나 개최(aT 센터) - 우유제품 소비실태, 우유가 건강에 미치는 의학적 고찰 등 주제 발표, 주부·영양사 등 300여명
1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주 장단콩 축제(장관, 임진각) ○ 쌀 관세화 관련 제7차 한·중 협상
1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슴 만성소모성질병 방역 추진
1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 개최(차관) - 중앙도매시장 시장 도매인제 도입 방안 등 ○ 쌀 생산량 조사결과 발표 - 3,473천석으로 전년보다 382천석, 평년보다 112만석 증가 ○ 한국마사회 경마혁신방안 마련 ○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에 관한 통합지침 제정
11.22~1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7차 한·일 농림수산물기술협력위원회 개최(도쿄)
11.22~1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27차 FAO 이사회 참가(로마)
1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협상관련 전국 시장·군수, 시·군 의회의장 초청 토론회(장관, 대전청사) - 쌀 협상 내용설명, 쌀농가 소득안정방안 및 양정제도 개편방안 ○ 제45회 전국농업기술자 대회(전주대학교)
11.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관세화 관련 한·미 제7차 협상
11.24~1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 농수산물기술협력위원회(일본) - 농림수산업의 현실과 기술행정심의과제 등 11개 의제 논의
1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상위계층 정부미 할인 공급계획 수립 - '04.12~'05.2월말까지 한시 공급('03년산 일반미) ○ 농림어업인 복지 등 실태조사 결과 보고
11.25~1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도 FTA 기금사업 3단계 평가 - 지방자율사업 46개 사업 1,574억원, 재평가 3단계 21개사업 672억원
1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협상 및 쌀 소득보전 대책관련 설명회 - 전업농 주관 토론회(농업기반공사), 경상북도 주관 심포지움(안동)
11.26~1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산물 한마당' 행사(농협하나로클럽)
1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1단계 평가 완료

날 짜	내 용
11.29	○ 민생경제 침해사범대책회의(중앙청사)
11.29~12.10	○ 농협법개정안에 대한 농림해양위 공청회 개최
11.30	○ 가을 무·배추 수급안정대책 추진
11.30~12.2	○ 새만금사업 수질개선 가능성 관계국장회의
11.30~12.2	○ 농산물품질관리사 시험관리 종합대책 마련
11.30~12.5	○ OECD 농업위원회 회의 참석(파리)
11.30~12.5	- 농업위원회, 농정개혁 워크샵, 글로벌 포럼 등
11.30~12.8	○ 실내식물전시회 개최(현대주택전시관)
11.30~12.8	- 아파트 규모별 실내식물 전시 모델
12.1	○ 산지공동마케팅 조직선정 방침 확정 및 공모
12.1	- 광역 및 품목조합, 연합판매조직, 영농법인
12.1~12.2	- 원료구입자금, 무이자자금, 홍보비, 공동선별비 우대 지원
12.1~12.2	○ 쌀 관세화 관련 제8차 한·중 협상
12.1~'05.3.15	○ 제83차 IFAD 집행이사회 참가(로마)
12.2	○ 겨울철 재해예방대책 추진상황실 운영
12.2	○ '05년 농림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12.3	- 핵심전략기술개발과제 연구팀 및 자유과제 공모
12.3	○ 농약·비료 가격표시제 시행
12.3	○ 2005년도 농산물도매시장 평가계획 보고
12.4	- 개설자 31개소, 도매시장법인 81개소
12.4	○ 전통식품 명인지정서 수여식(장관)
12.8	○ 직접지불제 중장기 추진방안 전문가 및 농민단체 토론회
12.8	- 1차(12.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관), 2차 (12.14, 한농연)
12.10	○ 농림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12.10	- 농림 투융자사업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고, 농림관련 전산시스템을 연계·운영
12.10	○ 농민단체장 간담회(장관, 대회의실)
12.11~12.19	○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 수립
12.11~12.19	- 경쟁력 있는 200천호 정예인력 육성
12.11~12.19	○ WTO/DDA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참가(제네바)
12.11~12.19	- G-10그룹회의, MF6그룹 협의
12.11~12.19	- 관세감축공식, AMS 상한, 비종가세 증가세상당치 전환 등 기술적 쟁점 논의

날 짜	내 용
12.13~12.17	○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참석
12.14	○ 초등학생농촌관광체험기 공모전 시상(교보빌딩)
12.15	○ 올해의 도농교류상 시상식 및 도농 교류심포기움 개최(aT 센터)
12.15~12.18	○ 미국 쌀 관련 협상 출장(장관, 위싱턴)
	- 한·미 쌀 관세화관련 고위급 회담
12.16~12.24	○ 조류인플루엔자관련 시·도 합동 점검
	- 도축장, 부화장, 농장 등
12.17	○ 농림부·환경부 합동 「가축분뇨관리·이용대책」 시·군 설명회 개최
	○ 제3회 농업벤처 창업경연대회 시상(한국식품개발연구원)
12.20	○ 중앙농정심의회(장관, 대회의실)
	- 농업·농촌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 등
12.20~12.21	○ 아세안+3 조류인플루엔자 실무팀 회의(싱가폴)
12.20~12.30	○ 연말연시 설대비 농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12.21	○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역대장관 초청 간담회
12.22	○ 새만금사업 환경대책위원회 개최(국무총리실)
	○ 한우고기 소비촉진 캠페인(명동)
12.23	○ 농업인단체장 간담회(장관, 대회의실)
	- 쌀 협상 추진상황 보고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토론회(장관, 농업기반공사)
	○ 농촌마을가꾸기 경진대회 시상(농협)
	○ 2005년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계획 수립
	- 63품목군(190개품목) 8,842천톤
12.24	○ 2005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및 농림사업실시규정 개정
12.27	○ 농업·농촌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 수립
12.28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신종질병연구동 준공(장관)
12.29	○ 농산물 수출 20억불 달성 기념식(장관, aT 센터)
	- 대통령축하메시지 대독, 감사패 수여 등
12.29	○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 보고

날 짜	내 용
1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4고품질 쌀생산·유통 유공자 시상식(장관, 대회의실) ○ 직접지불제 중장기 추진방안 마련 ○ 2005 농정시책 교육·홍보 영상물 제작·보급
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무식

▣ 2005년

날 짜	내 용
1.3	○ 시무식 및 신년인사회
1.4	○ 이임식(대회의실)

여 백

농림부장관 주요 자문위원회

여 백

1. 농정개혁자문단

성명	소속	주소	전화 (핸드폰)
김완배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교 무부학장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9동 산 5 6-1 (우151-742)	02-880-4503 (016-363-6043)
김태균	경북대 농경제학과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370 (우702-701)	053-950-5771 (011-812-3136)
양승룡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우136-701)	02-3290-3036 (017-246-3036)
윤석원	중앙대 산업과학대학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우156-756)	031-670-3047 (011-766-1728)
양병우	전북대 농업경제학과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우561-756)	063-270-2636 (016-605-2636)
황용수	충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자원학부	대전시 유성구 궁동 220 (우305-764)	042-821-5738 (011-9819-2000)
이병오	강원대 농업자원경제학과	강원 춘천시 효자2동 (우200-701)	033-250-8662 (016-342-8662)
최수명	전남대 생물산업공학과	광주 북구 용봉동 (우500-757)	062-530-2154 (011-9667-7552)
황연수	동아대 사회과학대학 금융학과	부산시 사하구 하단 2동 840 (우604-714)	051-240-2716 (016-566-6240)
박성재	농경연 기획조정실장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우130-710)	02-3299-4238 (019-208-3076)
민승규	삼성경제연구소 정책연구본부 수석연구원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국제센 터빌딩 2가 (우140-702)	02-3780-8155 (019-271-8155)
최태동	한국식품연구원 책임연구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산 46-1 (우463-746)	031-780-9195 (011-9892-9195)
진길부	도드람양돈조합장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가산리 50 0-5 (우467-861)	031-636-0715 (011-320-0715)
정운천	해남참다래 (한국참다래유통 사업단 회장)	전남 해남군 화산면 방축리 585 (우563-892)	061-533-5577 02-403-3501 (011-9605-2577)

2. 농촌지역개발 자문위원회

성명	소속	주소	전화
이어령교수	예술위원회, 前 문화부장관, 前 이화여대 교수	서울 중구 순화동 7번지 중앙일보사 이어령 교문실 (우100-759)	0) 02-751-5200
조정래교수	소설가, 동국대 국어국문학과 석좌교수	경기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368-3, 중앙하이츠 빌리지 208-201 (우463-470)	HD 031-716-3254
문국현대표	유한킴벌리대표이사, 생명의숲기꾸운동공동운영위원장, 대통령자문사람입국 신경쟁력특별위원회위원장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2, 혜성 1빌딩 13층 비서실 (우135-725)	0) 02-528-1720
최대열대표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환경재단 상임이사, 前 환경정책협의회위원장	서울 용산구 도원동 삼성래미안 102-1802(우140-070)	0) 02-725-4884
장명국대표	내일신문 대표, 前 YTN 대표이사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96-8 연희오크빌 202호 (우120-110)	0) 02-732-9236
이형모대표	시민의신문 사장, 시민운동 정보센터이사장, 前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회장	서울 성북구 삼선동 415 코오롱 APT 104-302(우 136-760)	0) 02-766-7521
이석우본부장	前 KBS아트비전 대표이사사장, 前 KBS 제작본부 본부장	서울 동작구 노량진 1동 323, 우성APT 101-309 (우156-751)	HD 02-815-3484
윤형두대표	도서출판 범우사 대표, 한국출판학회 명예회장, 한국도서서관협회 이사	서울 마포구 구수동 21-1, 범우사 (우121-130)	0) 02-717-2121
박진도교수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지역재단 상임이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36-14, I 파크 102-1402 (우137-070)	0) 042-821-5526
유홍준장	문화재청장, 명지대교수, 명지대 문화예술대학원 원장, 미술평론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102-14호 (우135-010)	0) 042-481-4604
정영호교수	단국대 석좌교수, 석주선기념박물관장	서울 동대문구 창랑리동 미주 APT 3동 103호 (우130-781)	0)02-709-2185-6
서정욱교수	순천대, 명지대 석좌교수,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이사장, 前 과학기술부 장관	서울 서초구 양재1동 10-13, 미라보빌라 303호 (우137-130)	HD 02-578-1155
송인성교수	전남대 경제학부 지역개발전공 교수,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장	전남 담양군 창평면 유곡리 852-3 (우517-881)	0) 062-530-1563
정기용대표	기용건축연구소 대표, 문화연대 공동대표	서울 종로구 명륜동 1가 7-19, 르노와르5, 502호 (우110-521)	0) 02-3675-0866
임승달장	한국농업전문학교 학장, 前 강릉대 총장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11-1 (우 445-893)	0) 031-229-5002

3. 지역개발실무자문위원회

성명	소속	주소	전화 (핸드폰)
주대관	새건축사협의회, 엑토종합건축 대표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321 오리엔트 부동산 2층 엑토종합건축사사무소 (우136-823)	02-745-6140 018-261-3300
박시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130-050)	02-3299-4343 016-871-9356
임승빈	서울대 조경학과 교수	서울 관악구 신림9동 서울대학교농업 생명과학대학 (우151-921)	02-880-4876 011-9933-4251
엄서호	경기대 관광학부 교수, 한국공인휴양학회 편집위원장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경기대학교 (우443-760)	031-249-9519 011-749-1875
김성일	서울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서울 관악구 신림9동 서울대학교농업 생명과학대학 (우151-921)	02-880-4756 010-3427-0001
김경량	강원대 농업자원경제학 과 교수	강원 춘천시 효자2동 강원대 농업자원 경제학과 (우 200-701)	033-250-8663 017-370-8185
최수명	전남대 생명과학공 학부 교수	광주 북구 용봉동 (우 500-757)	062-530-2154 016-683-7552
유정규	지역재단 사무국장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65-8 예크 B/D 3층 지역재단 (우137-881)	02-585-7731 017-399-0367
황대권	생태공동체운동센터 소장	서울시 성동구 행당1동 128-22 철성B/D 5층 생태공동체운동센터 (우133-864)	02-2298-7719
임경수	(주)이장 대표이사	강원도 춘천시 후평2동 838-7 (주)이장 (우200-961)	033-256-0763 011-784-6865
김재현	건국대 생명자원 환경과학부 교수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국대학교 생명 자원환경과학부 (우143-701)	02-450-3735 018-208-3735
이종호	건축사, 한양대건축 대학원 전임교수, 스튜디오 메타 대표	종로구 동숭동 1-49 동숭B/D 4층 스튜디오 메타 (우110-809)	02-747-8836 011-213-4535
조순재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 원과장	경기 수원시 서둔동 250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우441-707)	031-299-0500 017-233-5705

4. 우슬모 공동위원장

성명	소속	주소	전화
정광모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서울 용산구 한남동 272-1 한국소비자연맹 (우140-210)	02-794-7081
김성훈	전농림부장관, 경실련공동대표	서울 종로구 동성동 50-2 (우110-809)	02-765-6400
최불암	여의도예술문화원이사장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2 국민일보 빌딩 708 (우150-968)	02-783-1001
현명관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310 태평로 빌딩 5층(우100-767)	02-2145-2010
조정래	동국대 국어국문학과 석좌교수	서울 중구 필동3가 26번지 동국대 학교 (우100-715)	031-716-3254

5.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

성명	소속	주소	전화
강문규	대북지원민간단체협의회 회장	서울 마포구 마포동 236-1 덕성빌딩 B1	02-734-7070
		대북지원민간단체협의회장 (우121-050) 서울 종로구 윤리동 가든타워 1002호 지구촌나눔운동 (우110-795)	02-747-7044
강정일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서울 송파구 잠실동 305-21 (우138-220)	02-3431-4490 011-777-1998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01-34 제중빌딩 501호 (우137-060)	
김성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상지대 총장	서울 종로구 동숭동 50-2 경실련 회관 (우110-809)	02-765-9731
		서울 강남구 삼성동 64-9 형우빌라 503 (우135-030)	011-999-3000 02-549-7878(가) 033-730-0101(과)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 12층 현대아산 물류팀 (우110-793)	02-3669-3820
문국현	평화의 숲 공동운영위원장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2동 207 국립산림과학원 (우130-712)	02-960-6004 011-253-5410
서경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서울 마포구 마포동 236-1 덕성빌딩 B1 (우121-050)	02-734-7070 011-266-0476
이상만	북한경제전문가100인포럼 회장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동북아연구센터 (우150-973) 서울 강남구 대치동 66 쌍용아파트 2동 107호 (우135-280)	02-787-7840 011-215-2146
황민영	농특위 위원장 겸 통일농수산포럼 이사	서울 서초 양재동 AT 센터 803호	02-6300-2100 011-283-1255
손정수	농촌진흥청 청장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50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 (우441-707)	031-299-2281
조연환	산림청 청장	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우302-701)	042-481-4088
안종운	농업기반공사 사장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1031-7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 북한농업연구실 (우426-170)	031-400-1893
정귀래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2 aT센터 농수산물유통공사 남북교류협력추진반 (우137-787)	02-6300-1802
정대근	농협중앙회 회장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협중앙회 해외협력실 (우100-707)	02-397-5271

성명	소속	주소	전화
이정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4-10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농업연구팀 (우130-710)	02-3299-4255
김영수	현대아산 물류팀장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 12층 현대아산 물류팀 (우110-793)	02-3669-3969 017-320-4663
김완수	익산농기계 대표	전북 익산시 왕궁면 쌍계리 541-11 (우570-945)	063-835-8048 011-672-7255
김운근	통일농수산정책연구원 원장	서울 강남구 수서동 713 현대벤처빌 1208호 (우135-884)	02-2040-6454 011-888-8561
박창민	월드비전 사업본부장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2 (우150-877)	02-783-5161 011-9951-5372
박현홍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 대북협력팀장	서울 마포구 상수동 95-3 사회교육관 4층 (우121-828)	02-338-0448 010-4200-9191
소창호	바이오산업개발소장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2 at센터 901호 (우137-787)	02-6300-8800 016-439-3730 (주호삼)
손병기	한국ITS 북한개발위원회사무장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85-16호 (우137-874)	02-587-8995 011-9845-3353
안약천	남북농업발전협력 민간연대 사무총장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2 aT센터 1201호 (우137-130)	02-6300-8671 011-221-6281
이기현	국제옥수수재단 사무국장	서울 마포구 창전동 5-5 동북이세빌딩 5층 (우121-880)	02-741-5145 011-264-1427
이용선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 사무총장	서울 마포구 마포동 236-1 덕성빌딩 B1 (우121-050)	02-734-7070 011-338-9282
이종열	새마을운동중앙회 국제협력부장	서울 강남구 대치3동 1008-4 (우135-851)	02-2600-3661 011-483-7851
이해극	한국농민발명가 협회 회장	충북 청원군 남이면 대련리 50-5번지 (우363-811)	043-648-1221 011-481-6387
조민성	평화의 숲 사무국장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2동 207 국립산림과학원 (우130-712)	02-960-6004 011-778-6662
진길부	통일농수산포럼 이사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가산리 500-5 도드람양돈협동조합 (우467-861)	031-636-0715 011-320-0715
탁명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서울 송파구 가락동 71번지 한농연회관 2층 (우138-160)	02-3401-6543 011-9035-9828
김경량	강원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	강원 춘천시 효자2동 192-1 강원대학교 (우200-701)	033-250-8663 017-370-8185
남성욱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서울 광진구 구의동 삼성체르빌 302호 (우143-200)	041-860-1273 011-9708-5502

농림부장관 주요 자문위원회

성명	소속	주소	전화
박효근	서울대학교 원예학과 교수	서울 관악구 신림9동 산 56-1 서울대학교 (우151-742)	02-880-4563 011-284-0612
성미경	숙명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서울 용산시 청파동 2가 53-12 숙명여자대학교 (우140-742)	02-710-9453 016-9710-9395
임정빈	경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 경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우660-701)	055-751-5455 016-778-3136
김제규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장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50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 (우441-707)	031-299-2281
최병암	산림청 국제협력담당관	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우302-701)	042-481-4088
정해창	농업기반공사 농 어촌연구원 북한 농업연구실장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1031-7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 북한농업연구실 (우426-170)	031-400-1893 018-293-5516
신노생	농수산물유통공사 국영무역처장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2 aT센터 농수산물유통공사 남북교류협력추진반 (우137-787)	02-6300-1802 016-360-5303
류근원	농협중앙회 해외협력실장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협중앙회 해외협력실 (우100-707)	02-397-5282 016-485-3705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 원 선임연구위원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4-102 한국농촌경 제연구원 북한농업연구팀 (우130-710)	02-3299-4255 010-6259-3299

6. 중앙농정심의회

성명	소속	주소	전화
정대근	농협중앙회 회장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우100-707)	02-737-4415 02-397-5141
최준구	대한양계협회 회장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16-5 축산회관 5층 대한양계협회 (우137-871)	588-7651~4 011-9897-8994
서정의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회장	서울 송파구 가락동 71 한농연회관 2층 (우138-160)	02-3401-6543~8
엄성호	전업농중앙회 회장	서울 서초구 방배2동 450-10 성도빌딩 3층 302호 (우37-818)	585-5562
이태근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회장	서울 서초구 방배2동 446-2 농수축산빌딩 204호 (우137-710)	584-2614
정운천	한국신지식농업인회 회장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서울청과 3층 114호 (우138-701)	403-3504 011-9605-2577
김인호	前한국여성농업인 중앙연합회 회장	서울 송파구 가락동 71 한농연회관 2층 (우138-160)	02-3401-9204, 011-804-8829
정광모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서울 용산구 한남동 272-1 (우140-885)	02-794-7081 011-242-1780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상무	서울 용산구 동자동 12 게이트웨이 타워 10층 (우140-709)	02-316-3442
이동희	경기도 안성시 사장	경기 안성시 봉산동 31-3 (우456-701)	031-678-2002~3
이정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우130-710)	962-7211
김경량	강원대 농업자원 경제 학과 교수	강원 춘천시 효자2동 192-1 (우200-701)	033-250-8663 017-370-8185
김완배	서울대 농생명 과학대 교수	서울 관악구 신림9동 산 56-1 (우151-921)	02-880-4503 016-363-6043
홍은주	MBC 해설주간	서울 여의도동 31 (우150-728)	02-780-0011

7. 양곡유통위원회

성명	소속	주소	전화 (핸드폰)
염주영	대한매일 논설위원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APT 102동 403호	011-9983-0908
엄성호	전업농중앙회 회장	수원시 장안구 화서2동 436-3 농민회관 1층	017-481-5000
최도찬	대한곡물협회부회장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7차 아파트 301-210	011-288-7574
김세환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이사	수원시 장안구 화서2동 436-3 농민회관 1층	011-9829-2854
이성봉	함안 평화농 RPC고문	경남 함안군 대신면 평립리 365-4	011-876-7474
이건호	농협중앙회 양곡자재상무	서울 송파구 오륜동 올림피아파트 104-1204호	011-439-6011
김연화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원장	서울 서대문구 홍제2동 한양아파트 107동 1203호	011-241-9644
최충대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서울 서초구 양재동 249-8 양재빌리지 401호	016-251-5395
양금숙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사무총장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 타워팰리스 D동 1003호	011-9055-7439
강광파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상임이사	경기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양지마을 건영빌라 109-303호	019-357-0783
사공용	서강대학교 교수	서울 송파구 문정동 웨미리 아파트 307-1001호	018-265-3483
이강현	한국소비자보호원상임 이사	경기 안양 동안구 갈산동 샘마을 우방apt 506-405	011-9944-1587
윤석진	영광 백수농협조합장	전남 영광군 백수읍 대전리 387번지	011-620-5971
허길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4-10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016-9292-6420
양일선	연세대학교 교수 (대한영양사협회장)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한강맨션 아파트 27동 405호	011-719-0261
노재선	서울대학교 교수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9동 산 56-1번지 농경제학부	011-9038-6423
박영배	한국경제 논설위원	서울 송파구 가락동 197-13 시티빌 101동 301호	011-9266-2013
서종석	전남대학교 교수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번지	019-573-5699
탁명구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사무총장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1 한농연회관	019-528-9828
박홍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29번지 이두빌딩 4층	
성명환	농경연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4-10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011-896-0525

8. 여성정책자문회의

성명	소속	주소	전화 (핸드폰)
김인호		경북 상주시 이안면 양범2리 552	(휴)011-804-8829
최성희	(사)농가주부모임 전국연합회장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 254-21	(사)02-397-5614, (휴)011-497-4187
정순희		제주시 봉개동 847-1	(휴)011-693-2727
윤금순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회장	경북 성주군 대가면 홍산2동	(사)02-529-6349, (휴)016-9477-4875
최돈숙	(사)고향을생각하는 주부들의모임회장	인천시 서구 심곡동 337-9	(사)02-738-1250, (휴)011-278-2480
이윤자	(사)전국주부교실 중앙회장	서울 광진구 광장동 135-1 현대리 버빌 A동 102호	(사)02-2265-3628, (휴)011-222-3334
정명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기 용인시 수지읍 상현 롯데아 파트 108동	(사)02-3299-4000, (자)031-308-5317
장하진	여성부장관	정부중앙청사	(휴)010-8555-0043
이호철		死亡	
조옥라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1-115, 하안 빌라 202호	(사)02-705-8369, (휴)011-223-8369
변우혁	고려대학교 환경생 태공학부 교수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고 려대 산림자원환경과	(사)02-3290-3013 (휴)017-246-3096
임순분	독농가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393	(자)054-932-6731 (휴)017-513-6731
송기숙	독립가(대전대학교 지역협력원 연구원)	충남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333	(자)041-754-2256 (휴)011-451-2327
최봉섭	안성의료소비자생활 협동조합사무국장	경기 안성시 당왕동 주운청실㉔ 101-1404	(사)031-672-6121 (휴)019-258-6121
김근화	(사)여성자원금고 이사장	서울 마포구 신수동 250-30	(사)02-3665-1305 (휴)011-264-4271

9. 농민단체

소 속	직위	성명	주 소	직장전화 (자 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서정의	충남 천안시청수동 극동A 205/1505	02)3401-6543~8 041)552-0999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	전남 보성군 노동면 거석리 258	02)529-6347 061)852-7906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장	강춘성	경남 사천시 곤양면 석내리 155번지	02)794-7270 055)853-0068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이승호	경기 여주군 능서면 매류2리 299	588-7055~6 031)882-5056
대한양계협회	회장	최준구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무갑리 585	02)588-7651~4 031)762-1624
대한양돈협회	회장	최영열	경남 거창군 고제면 궁항리 1715	571-9751~5 055)942-3461
전국한우협회	회장	남호경	경북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02)525-1053 054)773-0823
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	엄성호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상사리 54-2	031)292-5562 033)452-2938
한국유기농업협회	부회장	정진영	경기 용인시 동천읍 135-1 삼성세르빌 102/104	02)406-4462 031)266-1250
전국새농민회	회장	목찬균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27	02)397-5602,5553 033)335-5021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강대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09 장미마을A 831/406	031)292-4911 031)707-5340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회장	윤금순	경북 성주군 대가면 홍산2동	02)529-6349 054)932-4875
생활개선중앙회	회장	정순희	제주도 제주시 봉계동 847-1	031)299-2683 064)721-2715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김인호	경북 상주시 이안면 양범2리	02)3401-9204 054)541-5448
농가주부모임	회장	최성희	서울 서초구 원지동 254-21	02)397-5616 02)574-9303
한국기독교농민회	회장	신대길	경기 안성시 고삼면 가요리 644-2	061-452-3648 031-673-3569

소 속	직위	성명	주 소	직장전화 (자 택)
한국포도회	회장	박태균	경기 안성시 공도면 양기리 산 19	031)240-3718 019-359-3562
한국민속채소 생산자협회	회장	정경진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26-1	02)409-2090 031)792-8744
전국버섯생산자협회	회장	류영삼	전북 정읍시 쌍암동 584 내장산 월령버섯	063)536-3206 063)536-3310
한국양록협회	회장	김수근	대구시 수성구 범어1동 897-6	969-6600 053)741-4021
한국양봉협회	회장	정해운	서울 양천구 신정6동 328 목동A 1331/1201	031)291-6622 02)2648-4356
한국관광농원협회	회장	류재춘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오원1리 새말관광농원	033)344-6248 033)344-6248
한국가톨릭농민회	회장	정재돈	경기 인천 연수구 연수3동 풍림1차 A 103-1403	2635-6493,4 032)212-0993
한국오리협회	회장	김규중	경기 고양시 일산구 풍동 1127-1 쌍용A 103/501	031)225-1158 031)919-4355
우리마을양파지키기 전국운동본부	회장	나남수	전남 목포시 대양동 554-3	061)454-9797 061)454-1277
한국사이버농업인 연합회	회장	이민우	충남 아산시 음봉면 의식리 43번지	011-458-5740 041)581-5740
진국채소생산자 연합회	회장	황창주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가목리 100	02)712-3696 033)563-3669
신지식농업인회	회장	정운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주공5단지 501/706	403-3504 2226-8256
한국4-H중앙연합회	회장	오정훈	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 1687-3	031-299-2667 064)732-5256
한국4-H본부	회장	이영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87 한신A 127/903	02)428-0451~3 031)701-5442
귀농본부	회장	이병철	경남 함안군 산인면 입곡리 414	02)742-4611 031)332-4580
한살림	회장	박재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장미A 20/906	02)3498-3704 사)766-7521
정농회	회장	강대인	전남 보성군 벌교읍 마동리 821	02)597-2147 061)857-5959

10. 전국농과대학 학장단

대학명 농과대학	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주소
강릉대학교 생명과학대학	김상무	033-643-6618	210-702 강원 강릉시 지변동 123
강원대학교 산림과학대학	김지홍	033-251-0137	200-701 강원 춘천시 효자2동 192-1
강원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연규석	033-261-5256	200-701 강원 춘천시 효자2동 192-1
강원대학교 동물자원과학대학	이정구	033-241-6995	200-701 강원 춘천시 효자2동 192-1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강창원	02-404-3080	143-701 서울 광진구 화양동 1
건국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경석현	02-3437-3711	143-701 서울 광진구 화양동 1
건국대학교 수의과학대학	장병준	02-450-3040	143-701 서울 광진구 화양동 1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정재동	053-762-2155	702-701 대구 북구 산격동 1370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추호렬	055-752-6607	660-701 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
경희대학교 생명과학대학	김영채	031-262-6125	449-701 경기 용인시 기흥읍 서천리1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박용근	02-3290-3422	136-701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김종옥	041-332-6171	340-802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히리 1
국민대학교 산림과학대학	차재경	02-996-7080	136-702 서울 성북구 정릉동 861-1
단국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김정우	041-555-1401	330-714 충남 천안시 안서동
대구가톨릭대학교 자연대학	오형택	053-850-3251	712-702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1리
대구대학교 생명환경대학	권태호	053-214-6146	712-714 경북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15

대학명 농과대학	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주소
동국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이명훈	031-817-1836	100-715 서울 중구 필동 3가 26
동아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최용락	051-206-5178	604-714 부산 사하구 하단2동 840
목포대학교 생명공학부	박양균	062-681-1951	534-729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61
밀양대학교 식물자원학과	박현철	055-261-2491	627-702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청학리 50
배재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조창호	042-520-5674	302-735 대전 서구 도마2동 439-6
상명대학교 산업대학	이규민	02-2636-6294	330-720 충남 천안시 안서동 산98-20
삼육대학교	김종근	02-3399-3587	139-742 서울 노원구 공릉2 26-21
상주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김진호	053-754-4336	742-711 경북 상주시 가강동 386
상지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이승배	033-745-1080	220-702 강원 원주시 우산동 660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이무하	02-3452-3339	151-921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서울시립대학교 문리과학대학	김제훈	02-572-1354	130-743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90
서울여자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이동선	02-970-5654	139-774 서울 노원구 공릉2동 126
선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권중성	041-530-2200	336-708 충남 아산시 탄정면 갈산리
성균관대학교 생명공학부	이수원	031-704-7156	110-745 서울 중구 종로구 명륜동 3가 53
순천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양승열	061-752-6392	540-070 전남 순천시 매곡동 315
안동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오세명	054-821-1624	760-740 경북 안동시 송천동 388

대학명 농과대학	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주소
연세대학교 문리대학 자연과학부	지대선	033-760-2204	220-710 강원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234
영남대학교 자연자원대학	권오욱	053-793-2964	712-749 경북 경산시 대동 214-1
우석대학교 이공대학	한경식	063-290-1515	565-701 전북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490
원광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박운점	063-855-7688	570-749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박준근	062-527-6557	500-757 광주 북구 용봉동 300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강진하	063-244-2702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제주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송창길	064-702-5622	690-756 제주 제주시 제주대학로 66
중부대학교 이공대학	장경호	041-750-6822	312-940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산2
중앙대학교 산업과학대학	윤석원	031-717-1728?	456-756 경기 안성시 대덕면 내리 72-1
진주산업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박상현	055-752-8325	660-758 경남 진주시 칠암동 150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김태철	042-482-5821	305-764 대전 유성구 궁동 220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김내수	043-252-8010	361-763 충북 청주시 개신동 12
한경대학교 농업과학생명대학	윤승길	031-672-3427	456-749 경기 안성시 석정동 67
한국방송대학교 자연과학부 농학과	류수노	02-864-0176	110-791 서울 종로구 동숭동 169
호남대학교 보건의료대학	최명규	062-940-5200	506-714 광주 상당구 서봉동 59-1

허상만 농림부 장관 연설 대담집

未來를 여는 새로운 農政

2005년 5월 일 인쇄

2005년 5월 일 발행

발행처 : 농림부 홍보관리관실

인쇄처 : (주) 경 성

(비매품)

< 표지 및 본문 사진 : 농림부 홍보관리관실 김인득 >